

IDI 도시연구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Urban Research

2017

통권 제11호



CONTENTS

기획논단

- 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육성 방안.....모종린·강예나 07
- 청계천 전자상가, 복제의 기술문화, 디지털문화의 형성조동원 37

일반논문

- 인천시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요인
– Juhn–Murphy–Pierce 분해기법을 통한 실증분석 –조성철 81
- 사회적기업과 노동조합의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 청주시 사회적기업 삶과환경 사례를 중심으로 –장효안 107
- 시나리오별 부산시 연안 침수 분석 및 피해규모 산정 연구여성준·이창현 143
- 서울 강남지역 부모의 공감적 양육 및 청소년 자아탄력성에 대한 실태 분석박신영·양미라 175
- 지속가능한 사회와 문화예술
–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 뮤지엄의 역할 –민정선 215
-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가로경관 선호도 분석
– 남태령 가로경관을 사례로 –허한결·김호결·김승호 251
-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인천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신상준 285

도시 리포트

- 통합창원시의 인구변화: 인구구조, 이주, 교통량을 중심으로임동근 319
- 지방도시 도야마 시의 도전: 공공교통 친화 도시윤혜영 341

서 평

- 『확장도시 인천』 (박해천 기획, 마티, 2016).....한수경 359

『IDI 도시연구』 규정

- 『IDI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371
- 『IDI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377
- 『IDI 도시연구』 논문심사 규정..... 380
- 『IDI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 386

『IDI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 『IDI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394

기획논단

| 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육성 방안

모종린 · 강예나

| 청계천 전자상가, 복제의 기술문화, 디지털문화의 형성

조동원



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육성 방안*

모종린** · 강예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II. 라이프 스타일 산업의 개념과 분류

1. 개념 정의
2. 라이프스타일 산업 범위 및 분류

III. 인천 라이프스타일 산업 현황

1. 부가가치 기준 계층별 · 영역별 라이프스타일 산업 현황
2. 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IV. 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생태계 조성

1. 해외 사례
2. 인천 해양 뷰티 브랜드 개발
3. 뷰티 라이프스타일 상권 조성
4.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기반 조성

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이 논문의 라이프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 산업의 개념은 미래부 지원으로 수행한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개념과 이론을 학술 논문 기준으로 수정한 것이다. 논문의 연구방법과 내용은 미래부 보고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박사과정, 교신저자(E-mail: yaena0504@naver.com, Tel: 02-2123-848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83년 제물포 개항 이후 인천은 다양한 물자가 공급되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근대 상업 활동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오늘날 물류와 교통의 메카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제조업 중심 도시로 꼽힌다. 인천의 성장 모델은 서울에 집중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생산 및 물류 유통 시설을 갖춘 입지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대량 생산과 유통에 최적화된 도시 기반이 인천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경제 구조와 사회 가치의 변화는 새로운 미래 성장 모델을 요구한다.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는 물질주의 기반 사회가 저물고, 독특한 가치관과 문화, 개성이 중요한 산업 요소가 되어 혁신적인 산업을 이끄는 탈물질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사고의 전환이 시급하다.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에서는 가치 중심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인천에 특화된 산업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 논문은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인 라이프스타일 산업 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인천에 집적된 라이프스타일 산업 영역별 비중과 업종을 파악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산업을 도출한 후, 육성을 위한 정책적 보완점을 모색한다. 정책 보완적 고도화 전략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주체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안한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인천만이 잘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육성하고 나아

가 라이프스타일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지역에 집적된 라이프스타일 연관 업종들을 파악하고, 그 중 문화 정체성의 접목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산업이 무엇인지 도출한 후 그 산업의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가 새롭게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정의하고 산업 범위를 정립한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진 산업 범위에 따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활용해 의·식·주·레저 영역별 라이프스타일 연관 업종을 추출했다.

3장에서는 부가가치 기준 지역별 라이프스타일 산업 현황을 토대로 인천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도출한다.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의 매출액 기준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추출하고 지역별·부가가치 계층별 라이프스타일 연관 업종의 집적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인천에 집적된 라이프스타일 연관 업종 중에서 인천의 정체성을 접목시켜 고도화할 수 있는 산업을 도출한다. 고도화 전략 수립을 위해 인천 내 관련 산업 현황과 정책을 파악하고 보완점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관련 해외 사례와 3장의 정책적 보완점을 토대로 고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생산, 소비, 상권의 공간적 집적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주체들의 역할을 제시한다. 지역 정부·기업·대학·소비자가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체성 발굴 및 사업화, 로컬소비, 산업 융·복합, 산학 협력 강화 전략을 수립한다.

II. 라이프스타일 산업의 개념과 분류

1. 개념 정의¹⁾

19세기 말 산업화가 진행되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문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베블렌(Veblen)은 산업화와 분업으로 인해 신흥 자본주의 계층인 레저 계층이 생겼고, 미국 소비재 산업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한다. 짐멜(Simmel)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소비가 도시 정체성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채니(Chaney)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일정 행동의 패턴들이라고 라이프스타일을 정의했다. 알레이스트(Allaste)는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개개인의 선택을 반영하는 문화적 변화로 라이프스타일을 설명한다. 사회적 위치에 자신의 정체성을 맞추기보다는 개인의 차별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LG경제연구소, KT경영경제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조사, 라이프스타일 키워드 도출, 소비 행태 분석이 시작되었다. 개별 소비자들의 기호가 중요해짐에 따라 새롭게 소비자를 분류 및 정의하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형태가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활발해졌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의해보면 라이프스타일이란 환경적·역사적·사회적 요인에 따라 특정 소비를 추구하는 정체성 또는 가치관이다. 라이프스타일 개념을 토대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식·주·레저 산업이다. 문화 정체성을 산업 비교우위로 사용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

1) 라이프스타일 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는 미래부 지원으로 수행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다. 라이프스타일 도시는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도시로, 지역 정부·기업·소비자들이 협력하여 라이프스타일 창업을 촉진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어메니티, 기술, 관용 등 글로벌 도시가 공통적으로 보유한 인프라로 창조인재와 산업을 유치하는 창조도시와 달리 라이프스타일 도시는 고유의 문화와 장점에 기반을 둔 산업, 생태계, 기업, 공간 디자인을 도시 경쟁력으로 활용한다. 라이프스타일 도시 전략을 추진하는 지역 정부는 혁신적이고 개성 있는 라이프스타일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성을 확립하고, 이를 드러내는 도시 자원에 투자해야 한다.

현재 지역 문화를 활용한 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선행 연구들(한상일 2000; 전영옥 2004; 김현호·한표환 2004; 임지혜·윤희진 2010)²⁾을 살펴보면, 문화와 산업의 융합을 통한 지역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역 향토문화의 보존과 개발에 집중되어 지역 산업에 접목시키기 위한 정책 제안은 부족하다. 최근 연구³⁾의 경우 의·식·주 문화자원과 시장자원을 생활문화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접목시키는 산업을 지역 문화관광으로 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에 집적된 라이프스타일 산업에 문화 정체성을 접목시켜 그 산업의 고도화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2) 한상일(2000)은 민속문화자원의 보존 및 복원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분석했다. 고유성을 지닌 지역 민속 문화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공동체적 가치를 창출하고 수용지역주민들 간 공평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영옥(2004)은 문화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면 일반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이 보유한 문화 이미지에 따라 강화, 개선, 혹은 창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발 유형에 따라 개발 가능한 문화자원의 발굴, 문화자원과 공간과의 연계성 강화, 문화공간의 복합화 추구, 지역의 문화 브랜드 등의 전략을 도출했다. 김현호·한표환(2004)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정 지역 고유의 유·무형 자원으로 향토자원을 정의하고 지역 특산물 중심의 지자체별 향토자원을 파악해 향토자원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전담기구와 법제도 정비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임지혜·윤희진(2010)은 향토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창조한 전통성과 역사성을 지닌 일체로 향토문화를 정의하고 지역 발전의 매개로 활용해 인천 검단지역을 중심으로 향토문화자원의 콘텐츠를 가공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 최경은(2013), 「문화융합형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생활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2. 라이프스타일 산업 범위 및 분류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가치관과 정체성에 따라 이루어지는 소비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포함하기 위해 의·식·주·레저 영역별로 라이프스타일 관련 업종을 도출했다. 먼저 1단계 광의의 라이프스타일 산업은 의·식·주·레저 영역에서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이 소비에 영향을 끼치는 산업이다. 개인 소비자들의 특정 가치관이 소비에 반영될 수 있는 최종 소비재의 생산과 유통, 서비스로 한정된다. 1단계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분류된 업종은 의복, 잡화, 액세서리, 화장품, 음·식료품, 가구·장식품·음향·조명기기, 오락용품·운동용품·서적·예술품·공연 등의 제조·유통·서비스업이다.

라이프스타일이 영향을 끼치는 영역들 외에 기반 산업인 1차 산업, 광업, 화학원료 제조업 등은 제외됐다. 또한 특정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한다고 보기에 힘든 건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됐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선택적 소비가 아닌 일상생활의 필요에 의한 수리업이나 가정용 난방기기와 같은 업종 역시 제외됐다.

2단계 협의의 라이프스타일 산업은 1단계 산업 중 엄격한 라이프스타일 소비 기준을 적용해 추출한 업종이다. 1단계 산업은 특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소비될 수 있지만, 2단계 산업은 개인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반드시 소비 패턴에 반영되는 업종만 포함한다. 의복·잡화·액세서리·화장품, 식품·음식점, 침구·가구·장식품·인테리어, 사진·낚시·여행·예술활동·스포츠 등의 제조·유통·서비스업이 2단계에 속한다.

유아용 내복, 잠옷, 작업복, 가발, 치약·세제, 침대·매트리스 제조업종

은 필요에 의한 소비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제외됐다. 조미료·장류 제조, 도배·실내장식·건축마무리공사 업종은 최종 소비재지만 요리, 인테리어 디자인과 같은 최종 서비스의 중간재이기도 하므로 제외됐다. 레저 영역에서는 야외에서 꾸준히 즐겨야 하는 활동을 추출한 반면, 서적·화초·악기·인형·장난감 제조업과 같은 실내 업종은 단순히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한 소비와 혼재되어 있으므로 제외됐다.

〈표 1〉 라이프스타일 산업분류

단계	포함업종		제외업종	
1	의	의복, 잡화, 액세서리, 화장품 등의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1차 산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섬유, 화학물질,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일반제재
	식	식료품, 음료 등의 제조·가공·저장처리, 도소매, 서비스업	중간재	염료·직물·합성피혁·합성고무·판유리·곡물도정·주정·전자부품·시멘트
	주	직물·가구·유리·장식품·음향·조명·실내건축 등의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산업 인프라	건설, 전기·기계장비제조, 부동산임대, 사업시설관리
	레저	오락용품·운동용품·서적·문구·예술품·공연 등의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	필수 소비	수리업, 세탁물공급, 가정용 난방기·전기기기·컴퓨터 제조
2	의	성인용 의복, 모자, 양말, 핸드백, 지갑, 신발, 안경, 화장품, 귀금속 장신구, 우산, 지팡이	필수생활 소비 포함업종	유아용의복, 내의·잠옷, 작업복·근무복, 가발·유사제품, 치약·세제 제조
	식	식품, 음식점	최종	조미료·장류제조
	주	침구, 커튼, 가구, 장식품, 인테리어	서비스 중간재	침대·매트리스 제조, 도배·실내장식·건축마무리공사
	레저	사진·낚시·여행·예술활동·스포츠	소극적 레저	서적·화초·악기·인형·장난감 제조

III. 인천 라이프스타일 산업 현황

인천의 라이프스타일 산업 집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장의 1·2단

계 산업 범위에 따른 의·식·주·레저 영역별 산업분류코드를 추출했다. 2014년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전문과 학기술서비스업조사를 사용해,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기준으로 통계청 한국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들의 부가가치⁴⁾ 계층별·영역별·각 지역 전산업 대비 라이프스타일 산업 집적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부가가치 기준 계층별·영역별 라이프스타일 산업 현황

먼저 부가가치 계층별로 살펴보면(〈표 2〉), 전국 라이프스타일 산업 대비 인천 비중은 1·2단계(3.9, 3.8) 모두 서울(37.7, 38.4), 경기(20.4, 20.0), 부산(5.9, 5.9)에 비해 확연히 낮았다. 서울과 경기는 계층이 올라갈수록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인천과 부산은 감소했고, 상위 10% 계층에서만 인천이 부산보다 높았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1·2단계(7.1, 6.9) 모두 서울(68.4, 69.2), 부산(10.7, 10.7) 다음으로 세 번째다.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서울만 증가추세를 보였고, 전국기준과 마찬가지로 상위 10%에서만 인천이 부산보다 높았다. 지역 전산업 대비 라이프스타일 산업 비중에서 인천(9.5, 7.4)은 서울(13.6, 11.1), 부산(12.6, 10.2)보다 낮고, 경기(9.1, 7.1)보다는 높았다. 상위 10%에서 부산보다 전산업 대비 비중이 높았지만, 전국 전산업 대비 부가가치 계층별 비중보다 높은 계층은 없었다.

라이프스타일 영역별 비중에서(〈표 3〉) 인천은 전국기준 1·2단계에서 주 영역을 제외하고 의·식·주·레저 영역이 서울, 경기, 부산보다 낮았다. 특·광역시 기준에서는 1·2단계 주 영역이 부산보다 높고 서울보다 낮았으며, 나머지 영역은 모두 서울과 부산보다 낮았다. 지역 전산업 대비 1단계(1.5, 2.6, 1.3, 4.1)와 2단계(1.3, 1.7, 1.3, 3.2) 모두 의·레저 영역은 서울

4)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가가치액은 각각 '생산액-주요중간투입비(원재료비+전력비+용수비+외주가공비+수선비+연료비)', '영업이익+인건비+임차료'로 산출된 것이다.

과 부산보다 낮았다. 식 영역은 부산과 경기보다 낮았고, 주 영역만 서울, 부산, 경기보다 높았다.

요약하면, 인천 라이프스타일 산업은 전국 대비 부가가치 계층별 비중에서 약 3%를 차지하고, 수도권 및 부산보다 비중이 적다. 특·광역시 순위에서는 서울과 부산보다 낮고, 인천 전산업 대비 부가가치 계층 평균 비중이 1·2단계 모두 약 5%에 불과해 전국 전산업 대비 계층별 평균 비중보다 낮았다. 영역별로는 전국 및 특·광역시 기준 모두 주 영역만 부산보다 높았고 의·식·주·레저 영역은 모두 낮았다. 지역 전산업 기준 1·2단계에서 인천의 주 영역은 서울, 경기, 부산보다 높았고, 전국 전산업 대비 비중보다 높았다.

인천 라이프스타일 산업의 취약성은 의외의 결과다. 원도심의 근대문화 자산, 동북아 핵심 도시와 연결된 해운과 항공 네트워크, 동북아 국제기구·글로벌 교육·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송도 신도시⁵⁾ 등 라이프스타일 산업 육성에 활용될 수 있는 정체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해양 및 항구 정체성을 강화해 발전시킬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산업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인천에 일정 수준 집적된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현재 인천에서 비중이 높은 라이프스타일 산업 영역과 업종을 파악하기 위해, 인천 라이프스타일 산업의 의·식·주·레저 영역별 비중과 인천에 집적된 상위 부가가치 계층의 라이프스타일 연관 업종들을 파악했다.

5) 모종린(2016), 『라이프스타일도시』, 조선비즈, p. 138.

〈표 2〉 전국/특·광역시/지역전산업 기준 부가가치계층별 라이프스타일 산업 비중

계층별 전국 라이프스타일 산업=100
계층별 특/광역시 라이프스타일 산업=100
계층별 각지역 전산업=100, 단위 : %

기준	분류 단계	지역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평균
전국	1	서울	45.8	45.6	45.7	50.5	49.4	46.7	42.1	39.0	38.2	37.7	44.1
		경기	26.7	20.9	21.8	17.1	17.3	18.3	19.1	20.3	20.4	20.4	20.2
		부산	2.6	5.9	5.2	6.7	6.4	6.0	6.0	5.8	5.8	5.9	5.6
		인천	2.7	3.1	3.0	3.3	3.2	3.5	3.9	3.8	3.9	3.9	3.4
	2	서울	47.5	48.1	48.6	52.3	52.9	49.0	43.9	40.0	39.1	38.4	46.0
		경기	26.7	20.2	20.5	15.4	15.5	17.5	18.4	19.9	20.0	20.0	19.4
		부산	1.6	5.3	4.9	7.0	6.7	6.2	6.2	5.9	5.8	5.9	5.6
		인천	2.8	3.3	3.2	3.6	3.5	3.6	3.9	3.8	3.9	3.8	3.5
특·광역시	1	서울	78.2	72.9	73.8	75.0	74.7	73.4	70.7	69.7	68.9	68.4	72.6
		부산	4.5	9.4	8.4	9.9	9.7	9.4	10.1	10.4	10.4	10.7	9.3
		인천	4.7	4.9	4.9	4.9	4.9	5.5	6.5	6.9	7.0	7.1	5.7
	2	서울	80.6	74.3	74.6	74.7	75.2	74.0	71.6	70.4	69.6	69.2	73.4
		부산	2.7	8.2	7.6	10.0	9.5	9.4	10.1	10.4	10.4	10.7	8.9
		인천	4.7	5.1	5.0	5.1	5.0	5.5	6.4	6.7	6.9	6.9	5.7
	지역전산업	서울	1.9	3.9	5.4	9.1	10.5	12.1	12.6	12.9	13.4	13.6	9.5
		경기	1.4	2.2	3.2	3.8	4.5	5.8	7.1	8.3	8.9	9.1	5.4
		부산	0.7	3.0	3.7	7.2	8.1	9.3	10.8	11.5	12.1	12.6	7.9
		인천	0.8	1.8	2.4	4.0	4.7	6.1	7.9	8.6	9.3	9.5	5.5
		전국*	1.3	2.7	3.6	5.6	6.5	8.0	9.2	10.2	10.9	11.1	6.9
지역전산업	1	서울	1.8	3.5	4.9	8.1	9.2	9.9	10.3	10.5	11.0	11.1	8.0
		경기	1.2	1.8	2.5	2.9	3.3	4.4	5.3	6.5	6.9	7.1	4.2
		부산	0.4	2.3	2.9	6.4	6.9	7.5	8.6	9.3	9.7	10.2	6.4
		인천	0.7	1.6	2.2	3.7	4.1	5.0	6.2	6.8	7.3	7.4	4.5
	2	서울	1.2	2.2	3.1	4.7	5.4	6.2	7.3	8.1	8.7	8.9	5.6
		경기	1.2	1.8	2.5	2.9	3.3	4.4	5.3	6.5	6.9	7.1	4.2
		부산	0.4	2.3	2.9	6.4	6.9	7.5	8.6	9.3	9.7	10.2	6.4
		인천	0.7	1.6	2.2	3.7	4.1	5.0	6.2	6.8	7.3	7.4	4.5

자료 : 통계청

*전국 전산업 대비 부가가치 계층별 비중

〈표 3〉 전국/특·광역시/지역전산업 기준 영역별 라이프스타일 산업 비중

영역별 전국 라이프스타일 산업=100
영역별 특/광역시 라이프스타일 산업=100
영역별 각지역 전산업=100, 단위 : %

기준	분류단계	지역	의	식	주	레저
전국	1	서울	60.6	18.8	32.5	39.3
		경기	13.5	28.2	38.8	16.5
		부산	6.7	7.1	4.5	4.9
		인천	2.9	3.7	9.5	3.8
	2	서울	64.0	21.1	33.2	35.9
		경기	13.0	27.3	37.0	16.9
		부산	6.4	7.6	4.6	4.9
		인천	2.8	3.4	10.0	3.7
특·광역시	1	서울	78.4	48.5	60.9	71.6
		부산	8.6	18.3	8.5	8.9
		인천	3.7	9.6	17.8	6.9
	2	서울	80.5	50.6	60.5	70.2
		부산	8.0	18.2	8.3	9.6
		인천	3.5	8.1	18.2	7.2
지역전산업	1	서울	4.7	1.9	0.6	6.3
		경기	1.3	3.6	0.9	3.2
		부산	3.1	4.4	0.5	4.6
		인천	1.5	2.6	1.3	4.1
	2	전국*	2.4	3.2	0.6	4.9
		서울	4.3	1.6	0.6	4.5
		경기	1.1	2.5	0.8	2.6
		부산	2.6	3.4	0.5	3.7

자료 : 통계청

*전국 전산업 대비 영역별 라이프스타일 산업 비중

인천 내 라이프스타일 산업 영역별 비중을 살펴보면(〈표 4〉), 의 영역이 상위 부가가치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인천에 분포하는 1·2단계 라이프스타일 산업은 부가가치 상위 20%에서 의 영역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표 4〉에서 의 2단계 부가가치 상위 20%에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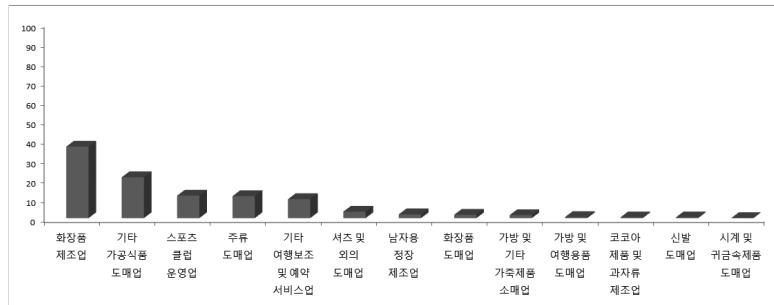
한 의·식·주·레저 영역별 비중(46.1, 32.6, 0.0 21.3)을 토대로, 세부 연관
업종들의 비중을 살펴보면(〈그림 1〉) ‘화장품 제조업’이 가장 높다.

〈표 4〉 인천 라이프스타일 산업 영역별 비중

인천 라이프스타일산업=100, 단위: %

분류 단계	영역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평균
1	의	91.7	42	40.4	25	24.9	18.9	16.1	15.2	16.3	16.2	30.7
	식	8.3	39	45.3	33.1	34.1	32.1	30.2	28.3	27.4	27.3	30.5
	주	0.0	0.0	0.0	0.2	2.1	4.9	15.5	14.5	13.5	13.3	6.4
	레저	0.0	19.0	14.3	41.7	38.9	44.1	38.2	42	42.8	43.2	32.4
2	의	100	46.1	43.5	25.8	27	22.4	18.2	16.7	17.5	17.3	33.5
	식	0.0	32.6	41.0	30.7	28.1	31.0	25.5	23.3	23	23.4	25.9
	주	0.0	0.0	0.0	0.2	2.3	6.0	18.7	18.3	17.1	17.0	8.0
	레저	0.0	21.3	15.5	43.3	42.6	40.6	36.6	41.7	42.4	42.3	32.6

자료: 통계청



〈그림 1〉 인천 라이프스타일 산업 연관업종 비중
(전국 기준 부가가치 상위 20%에 속하는 인천 라이프스타일 업종 = 100, 단위: 100%)

따라서 인천에 집적된 화장품 제조 기반에 문화 정체성을 접목시켜 뷰
티 산업을 고도화하는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뷰티산업은 소비자가 추구
하는 아름다움의 성향이 소비의 기준이 되고,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소

비한다는 점에서 라이프스타일 산업이다.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이나 스포
츠클럽 운영업⁶⁾도 비중 있는 업종이지만, 뷰티산업은 현재 인천시가 추진
하고 있는 8대 전략 산업⁷⁾ 중 라이프스타일 산업 고도화 전략을 통해 성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2. 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인천의 상위 부가가치 계층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화장품 제조업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 산업에 뷰티 산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
할 때 대표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최적 산업이다. 인천 뷰
티 정체성을 접목시켜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고도화하는 전략을 제안하
려면 인천 뷰티 산업 현황과 정책을 파악해 보완점을 도출해야 한다.

인천광역시⁸⁾에 의하면, 화장품 제조업체 수는 전국 1,666개 중 154개로
세 번째로 많은 9.2%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규모는 3,001억 원, 업체당 생
산규모 19.5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3.76%를 차지해 특·광역시 기준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 2014년 통계청 도소매업·서비스업 조사에 의하면, 인
천 화장품 도매와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은 사업체 수 1,315개, 종사자
수 3,178명, 매출액 3,500억 원으로, 특·광역시 기준 업체당 매출액(2억

6)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기타 가공 식품도매업은 과일·채소 가공식품, 커피·차류, 식용유지, 곡물가루, 국수·인스턴트 면류 등의 도매업을 의미한다. 스포츠클럽 운영업은 프로축구단·야구단·농구단, 동계스포츠클럽·실업경기단체, 체스·사격클럽, 프로게임단, 싸이클경기단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한다. 2014년 통계청 도소매업·서비스업 조사에 의하면 인천의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은 사업체 수 567개, 종사자 수 2,613개, 매출액 1조 760억 원으로 특·광역시 기준 업체당 매출액(18억 9,700만 원)이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 스포츠클럽 운영업은 사업체 수 5개, 종사자 수 126명, 매출액 485억 7,600만 원으로 특·광역시 기준 업체당 매출액(97억 1,500만 원)이 네 번째였다.

7)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뷰티, 항공, 물류, 관광, 녹색기후금융.

8) 인천광역시(2015), 「인천 미래 성장동력 8대 전략산업 육성 방안」.

6,600만 원)이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 뷰티서비스 관련업종⁹⁾은 사업체수 7,203개, 종사자 수는 1만 1,722명, 매출액 3,622억 4,500만원으로 특·광역시 기준 업체당 매출액(5,000만 원)이 서울·광주·대전·부산 다음 다섯 번째였다.

인천시는 뷰티 메카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2018년까지 뷰티산업 인프라를 구축, 2025년까지 공동브랜드의 글로벌화, 제조 및 서비스 클러스터 고도화, 뷰티 산업 창업 및 교육지원, 뷰티서비스 육성 및 관광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50년까지 뷰티 융복합 첨단단지, 뷰티 테마파크, 코스메틱 벨트를 구축함으로써 뷰티 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 현재 뷰티 산업의 주요 육성 전략은 인천의 16개 우수 화장품 업체가 공동 참여해 만든 공동브랜드 어울(Oull)의 브랜드 제고, 화장품 기술 역량 강화, 해외 판로 개척이다.

어울의 브랜드 제고를 위해 시는 2016년 8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제품 개발, 품질검사, 해외인증, 브랜드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화장품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인 CGMP 인증시설을 지원한다. 인천 중소기업청과 인천시는 CGMP 인증 컨설팅 및 맞춤형 자문을 지원해주는 어울림지원단 사업을 실시해 지역 화장품 제조업들의 인증을 돕고 있다. 인천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뷰티산업지원팀은 판로 개척을 위한 화장품 제조사 지원 사업을 추진, 기업들의 홈쇼핑 진출을 통한 제품 판매를 돕고 있다. 2017 화장품 태국 토탈마케팅 지원 사업은 품질이 우수한 인천 브랜드를 선정, 태국의 무역 기관과 협업체 신규 바이어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한다.

뷰티 메카 도시 비전을 달성하려면 미적 가치와 경험을 중시하는 탈물

질주의적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인천 고유의 뷰티 정체성을 활용해 매력적인 뷰티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전략이 보완되어야 한다. 제품 역량 강화와 판로개척에 집중된 육성 전략은 내수 시장 활성화 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수출 의존적 전략은 2015년 6월 메르스 위기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자 어울의 매출이 90% 감소하는 등 한계를 드러낸 바 있으므로, 중장기적 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탄탄한 내수 시장 확보가 중요하다.

IV. 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생태계 조성

라이프스타일 산업 고도화 전략은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주체들의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모델을 제시한다. 라이프스타일 산업 생태계는 생산, 소비, 상권의 공간적 집적을 통해 지역 경제 활동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도시와 산업을 동반 성장시킨다.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이 모여 생산과 생활환경을 구분하지 않는 복합 산업단지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라이프스타일 산업 생태계는 집적 기준이 산업이 아닌, 문화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정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의 집적을 통해 창의적인 생산과 다양한 소비가 촉진되므로, 라이프스타일 생산자 및 소비자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 지역 정부는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해 라이프스타일 생산과 상권 기반조성, 지역 기업은 경쟁력 있는 라이프스타일 상품·서비스 생산, 지역 소비자는 꾸준한 로컬 소비를 통해 생태계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시와 공공기관은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생태계의 지원자로서 해양 뷰티 정체성 발굴을 지원하고 뷰티 상권 및 연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의 인재와 기업인은 뷰티 라이프스타일 생산자로서 인천 뷰티 정체성의 발굴·창업·기업전략화를 도모해야 한다. 인천 소비자들은

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뷰티 라이프스타일 소비를 통해 상권의 지속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인천시 뷰티 전략산업 정책을 보완하고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클러스터 구성과 산업 융·복합을 통해 뷰티 산업을 성장시킨 해외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고, ‘인천 해양 뷰티 브랜드 구축’, ‘뷰티 라이프스타일 상권과 지속적인 로컬 소비 창출’, ‘뷰티 산업 다각화와 뷰티 연구의 다양화’를 라이프스타일 산업 고도화 전략으로 제안한다.

1. 해외 사례¹⁰⁾

뷰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인천이 참고해야 할 해외 사례는 프랑스 ‘코스메틱 밸리’와 일본 ‘팜 도미타’의 성공 전략이다. 1980년대 프랑스 유명 화장품 브랜드인 겔랑이 사르트르에 화장품 공장을 설립하면서 화장품 기업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파리 주변의 임대료가 오르고 공장 용지가 부족하자 정부는 1990년대부터 교통이 편리한 사르트르에 화장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세금 감면 및 저렴한 임대료의 인센티브를 제공, 뷰티 산업 인프라 조성해 1994년 프랑스 코스메틱 밸리가 구축되었다.

프랑스 정부는 2005년부터 10년 간 ‘Competitive Clusters’ 정책을 실시, 코스메틱 밸리에 약 280백만 유로를 지원했다. 800여개 기업과 200여개의 연구소가 모여 175개의 화장품 관련 R&D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함으로써 제품 개발 및 연구 기반 경쟁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프로젝트 규모와

내용에 따라 연구비의 30~45%를 지원했으며, 중소기업 및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연구 성과의 홍보 및 프로젝트 진행 등 총체적인 관리 기능을 담당했다. 화장품 제조 생산 기반과 함께 코스메틱 밸리의 또 다른 경쟁력은 집적된 전문 연구 자원이다. 80여개의 화장품산업 관련학과를 보유한 8개 대학과 15개 교육기관이 모여 전문 연구 역량을 기르고 인재를 양성했다. 136개에 이르는 직업훈련기관은 젊은이들이 현장 업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해 숙련도를 높였다. 현재 코스메틱 밸리는 프랑스 수출품목 3위인 화장품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약 2억개의 상품을 생산, 프랑스 경제를 이끄는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코스메틱 밸리가 정부 주도적인 화장품 산업 자원 집적을 통한 클러스터 모델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라면, 일본 팜 도미타는 지역 특화 상품을 활용해 지역 주도적으로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발전시킨 사례다. 일본 홋카이도 가운데 위치한 후라노 지역의 팜 도미타는 1948년 화장품용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해 1958년부터 향료용 라벤더를 생산, 현재에는 라벤더 농장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1970년대 일본경제의 부흥으로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자, 팜 도미타 주민들은 단순 재배업에서 벗어나 꽃밭과 오두막, 다양한 휴게 시설 등을 갖춘 디자인 농장으로 변모시켰다. 1984년 라벤더로 만든 자체 상품의 향수 ‘후라노(FURANO)’가 개발되었고, 1987년에는 화장비누를 생산하기 시작했다.¹¹⁾ 지역 농업을 활성화 하면서 재배되는 특산품으로 화장품을 개발하고, 음식점 및 관광서비스 산업을 접목시키는 등 팜 도미타는 지역 기반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했다. 농장 경관을 정비하고 추출물을 이용한 식품과 화장품을 개발함으로써 라벤더를 후라노 지역의 경쟁력으로 활용해 화장품 제조·농업·관광·식품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선도했다.

10) 프랑스 코스메틱 밸리 사례는 황순욱 외 2명(2008), 「주요국의 화장품산업 정책·제도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90호; 이권형(2010), 「인천 화장품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 IDI 연구보고서 제4호, 인천발전연구원; 이미혜(2017), 「화장품산업 신성장 동력화 연구」,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내용을 참조. 일본 팜 도미타 사례는 강승진(2011), 「디자인농업을 통한 제주농업·농촌 발전방안 구상」, 제주발전포럼 제38호, 제주발전연구원을 참조하였다.

11) 강승진(2011), 「디자인농업을 통한 제주농업·농촌 발전방안 구상」, 제주발전포럼 제38호, 제주발전연구원, p. 78.

프랑스 코스메틱 벨리와 일본 팜 도미타 농장은 각기 다른 전략으로 뷰티 산업을 발전시킨 사례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로 화장품 제조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대학 등을 유치해 화장품 연구 인력 및 기업인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도모하고 연구 개발에 기반을 둔 고품질 상품 개발에 주력한 코스메틱 벨리는 R&D 역량 극대화와 효율적 산·학·연 연구 프로젝트 협력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다. 지역 특산 작물이었던 라벤더에 착안해 농장을 재정비하고 라벤더 추출물을 이용한 식품, 향수, 비누 등 지역 특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관광명소로 거듭난 팜 도미타는 지역이 자생적으로 지역 특화 산업을 고도화한 사례다.

2. 인천 해양 뷰티 브랜드 개발

인천은 섬을 통한 뷰티 정체성 확립을 통해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인천의 아름다움은 160여개가 넘는 섬들이 자아내는 자연 경관이다. 섬마다 독특한 풍경을 가진 하늘과 바다, 언덕, 바위들은 훌륭한 경치를 만들고 휴식처를 제공한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강화 갯벌, 동백나무 숲이 우거진 대청도, 100년이 넘는 소나무들이 많은 덕적도 등은 인천이 가진 천혜의 미적 자원이다. 인간이 살지 않거나 거의 찾지 않아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의 미가 살아있는 섬들마다의 특색 있는 바닷가, 바위모양, 하늘, 언덕길, 나무 등에서 영감을 얻어 뷰티산업에 인천의 색깔을 입혀야 한다.

해양 뷰티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국내 브랜드는 1994년 출시된 아모레퍼시픽의 리리코스다. 바다의 생명력과 에너지를 브랜드의 미적 가치와 연결하고, 해조, 미역, 감태, 굴 등의 바다 원료를 사용해 피부에 활기를 불어넣는 K-마린 스타일을 추구한다. 2012년부터 한국해양연구원과 협력해 마린 바이오 lab을 운영하면서 해양 바이오 소재를 연구하고 마린 바이오

기술을 개발해, 혁신적인 기능성 화장품을 출시하고 있다. 청정한 바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상품화할 뿐만 아니라 바다숲 조성 프로젝트, 바다 미술제 후원 프로젝트, 바다 보호 프로젝트 등 해양 캠페인을 실천함으로써 해양뷰티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한다.

리리코스의 브랜드 전략이 바다와 해양 자원에 집중했다면, 인천은 각각의 섬들이 가진 아름다움을 활용해 특색 있는 뷰티 라이프스타일을 정립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다. 섬들의 자연친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화장품 디자인, 마케팅·홍보 전략을 구축하고 섬의 전설과 역사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 화장품과 섬의 이름을 딴 인천 화장품 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섬을 중심으로 해양뷰티의 가치를 상품화해야 한다. 백령도, 연평도, 덕적도 등 섬마다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이야기와 천연 자원, 자연 환경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새로운 소재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는 인천 내 마케팅·홍보·컨설팅 기업 및 연구원과 협력해 인천 해양 뷰티 정체성의 상품화 전략을 수립하고 독창적인 해양 뷰티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다.

인천시와 공공·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한 해양뷰티 정체성 강화와 함께 뷰티 산업이 지역 경제를 이끌어 갈 성장 동력이 되려면 인천 소비자들이 뷰티 라이프스타일을 생활화해야 한다. 인천 대학 인재 및 기업인들은 섬을 뷰티 산업 자원으로 인식하고, 섬 뷰티 관광을 비롯해 혁신적인 화장품 서비스 창업 모델을 구상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인천 해양·섬 전문가, 공공기관, 기업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사업화할 수 있는 해양뷰티 아이템을 발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뷰티 라이프스타일 브레인스토밍과 사업전략 구체화를 촉진하는 뷰티 라이프스타일 전문 창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양 뷰티 정체성을 결합한 기업 전략 수립과 전문성 있는 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창업을 위해 기업인·대학 인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각 섬에서 1일 관광과 함께 체험하는 머드팩, 바닷물과 바다 추출물, 조약돌을 이용한 마사지, 섬 경관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파 프로그램 등 인천의 섬들만이 제공할 수 있는 뷰티 서비스는 좋은 아이템이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섬에서 즐기는 요가와 필라테스 등은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고 아름다운 신체를 가꾸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섬의 해양 자원을 활용해 비누나 향수를 만드는 뷰티 공방 역시 인천 해양 뷰티 라이프스타일 창업 아이디어로 제안할 수 있다.

3. 뷰티 라이프스타일 상권 조성

해양 뷰티 정체성을 활용한 라이프스타일 상품·서비스 생산을 지지하는 내수가 뒷받침 되려면, 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상권이 조성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뷰티 라이프스타일을 생활화하고 상품을 소비해야 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해외 고객 및 관광객들도 매력을 느끼게 된다. 지역 기반의 뷰티 라이프스타일 창업이 집적될 수 있는 뷰티 테마 거리를 조성해 뷰티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테마 거리 조성은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건축, 디자인, 조경 등을 포함한다. 인천의 아름다움을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 조형물, 공원 등을 배치해 화장품 소비를 넘어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상권이 만들어져야 한다. 각 섬을 주제로 한 섬 공원, 바위와 굽이진 언덕길을 테마로 한 조형물이나 거리 디자인, 가게마다 바다의 색감이나 울창한 섬 숲, 청정 해수욕장 등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 섬이 상징하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시각화한다면 뷰티 테마 거리는 인천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기초적인 뷰티 정체성 구현과 세부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관광공사 등이 참여해야 한다. 산학연관 전문가 20여 명이 모여 인천 뷰티 산업의 발전 방안을 주도하는 모임인 인천테

크노파크 산하 인천뷰티코스메틱협의회는 뷰티 라이프스타일 상권 조성 사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인천의 뷰티 테마 거리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지역은 부평역이다. 부평역 지하상가는 2011년까지만 해도 20여 개가 넘는 화장품 가게들이 밀집되어 있어 인천을 대표하는 뷰티 상권이었지만, 대규모 복합쇼핑몰 및 마트가 들어서면서 쇠락해 가고 있다. 지자체가 나서서 상권 기반을 마련하더라도, 지역 소비자들이 뷰티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고 소비하지 않으면 상권은 유지되기 어렵다. 부평역의 소상공인과 인천 소비자들은 상업 커뮤니티를 마련해 뷰티 라이프스타일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유·거리 홍보·지속적인 상권 가꾸기를 의논하고, 로컬 소비 진작을 주도해야 한다.

4.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기반 조성

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고도화를 위한 마지막 전략은 컨벤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뷰티 산업의 다각화와 뷰티 연구 역량 강화다. 먼저 뷰티 산업 다각화를 위해 인천 해양뷰티 정체성을 강화한 박람회를 개최해야 한다. 인천 ‘코리아 뷰티 & 코스메틱 EXPO’는 2016년부터 개최되는 산업 교류 행사다. 박람회가 개최되는 송도는 국제도시로 호텔, 해외대학 캠퍼스,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 글로벌 기업 등이 대거 집적되어 있어 세계적인 컨벤션 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송도 컨벤션 기반 시설을 활용해 인천시는 뷰티 박람회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시는 아시아의 뷰티 산업 관련 바이어들을 초청해 K-뷰티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격을 높여야 한다. 유럽 및 미국의 세계적인 뷰티 전문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패션잡지사들을 초청, 뷰티 트렌드 강연, 메이크업 세미나 등을 마련해 인천이 뷰티산업의 중심지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인천 섬들을 배경으로 하는 뷰티 사진전, 인천 해양 자원을 식재료로 활용한 레시피나 푸드 스타일링, 인천의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신개념 뷰티 음악회 등 창의적이고 독특한 행사로 기획해야 한다. 인천의 전통적인 섬들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으로 뷰티 박람회를 활용하고, 인천의 해양뷰티를 널리 알리는 뷰티 쇼를 만들어야 한다.

박람회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다른 지역의 뷰티 엑스포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충북 오송도 바이오산업에 기반을 두고 화장품 산업을 육성,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제주 역시 ‘천연 화장품 & 뷰티 박람회’를 개최, 청정 환경과 1,400여 종이 넘는 생물자원을 활용해 천연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인천, 오송, 제주의 뷰티 박람회는 각각 6월, 9월, 11월경으로 기간이 겹치지 않지만, 해외 고객이 중복 초청될 수 있고, 국내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두 개 이상의 박람회에 참여할 경우 행사 준비 여력의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려면 지자체가 협력해 하나 또는 두 개의 행사로 통합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인천은 두 지역보다 화장품 제조 기반이 강하고, 전통적인 화장품 생산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지자체 협력을 주도할 수 있다. 송도 국제도시의 뷰티 박람회를 다른 도시들과 공동 개최함으로써 인천 해양뷰티와 K-뷰티 브랜드를 제고, 한국 대표 뷰티 라이프스타일 도시로서 기능해야 한다.

다음으로 뷰티 연구 역량 강화는 K-뷰티 연구 자원을 집적시켜 뷰티 산업 연구와 개발 역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안 뷰티 클러스터 사업을 토대로 스마트테크노 타워와 뷰티산업 지식산업센터의 쾌적한 연구 환경과 입주 인센티브를 제공해 뷰티 관련 연구기관을 집적시켜야 한다.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를 활용, 파격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천대와 인하대, 인천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등은 패션, 신소재, 디자인,

경영, 생명과학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들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뷰티 박람회 및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J 밸리는 뷰티예술고등학교, 인천재능대학교, 미용학원 등 뷰티케어에 특화된 인천 교육기관의 젊은이들이 아이디어와 학문적 지식을 교류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문화, 예술, 디자인, 생명과학, 바이오, 경영, 해양 등 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뷰티 지식서비스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문화 정체성을 접목시켜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식·주·레저 산업인 라이프스타일 산업은 문화 정체성을 산업 경쟁우위로 활용해 발전할 수 있다. 지역 정부·기업·인재·소비자의 협업을 통한 라이프스타일 발굴, 사업화, 안정적인 로컬 소비 확충으로 지역 라이프스타일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라이프스타일 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인천에 집적된 라이프스타일 연관 업종을 파악한 결과 상위 부가가치 계층에서 화장품 제조업이 높게 나타났고, 인천 전략 산업에 뷰티 산업이 포함되어 있어 뷰티 정체성 강화를 통한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고도화 전략을 모색했다. 전략 도출을 위한 정책적 보완점은 탈물질주의 시대 미적 가치 중심 수요에 부응하는 인천 해양 뷰티 정체성의 상품화와 내수 강화 전략이다. 구체적인 고도화 전략을 위해 인천 발전의 주체인 인천시·기업·대학·소비자의 역할을 제시하는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인천은 제조와 유통 기반의 화장품 산업 자원과 인천 고유의 미적 가치

를 활용해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고도화해야 한다. 섬 중심의 해양 뷰티 정체성을 인천 고유의 뷰티 산업 자원으로 인식하고 창의적인 뷰티 라이프스타일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해양 뷰티 정체성이 드러나는 테마 거리를 조성하고 인천 소비자들은 뷰티 라이프스타일을 생활화해 지속적인 로컬 소비를 창출해야 한다. J밸리의 뷰티산업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성 있는 뷰티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탄탄히 해야 한다. 인천시는 세계적인 뷰티 문화 행사로 아시아 뷰티 박람회 개최를 주도함으로써 뷰티 메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인천 정체성을 연구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계속 강조한 산·학·관 협력의 체계적 실천 방안도 필수적이다. 인천 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하고 사업화하며 도시 발전을 주도해야 할 주체가 바로 인천 자체이기 때문이다. 해양 뷰티 정체성뿐만 아니라 인천의 경쟁력 있는 정체성을 추가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인천 라이프스타일 보육 정책에 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접수)일 : 2017. 05. 05 심사(수정)일 : 2017. 05. 29 게재확정일 : 2017. 06. 14

참 고 문 헌

- 강승진(2011), 「디자인농업을 통한 제주농업·농촌 발전방안 구상」, 제주발전포럼 제38호, 제주발전연구원.
- 김현호·한표환(2004),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모종린(2014), 『작은도시 큰기업』, 서울: RH코리아.
- _____(2016), 『라이프스타일 도시』, 서울: 위클리비즈.
- _____(2017), 「지역 라이프스타일 산업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 미래부 용역보고서.
- 모종린 외(2017), 「대한민국이 본 부산의 미래」, 부산발전연구원.
- 박정현(2011), 「한국 소비자들의 7가지 라이프스타일」, LG 경제연구원.
- 신승철(1994), 「1990년대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현대경제연구원.
- 이권형(2010), 「인천 화장품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 IDI 연구보고서 제4호, 인천발전연구원.
- 이미혜(2017), 「화장품산업 신성장 동력화 연구」,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임지혜·윤희진(2010),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문화자원 활용방안 연구: 인천 김단 지역 향토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산업학회 학술대회: 93-99.
- 인천광역시(2016), 「인천 미래 성장동력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
- 전영옥(2004),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활성화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최경은(2013), 「문화융합형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생활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상일(2000), 「지역문화요소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방향」, 민속연구 제 10호.
- 황순옥·민경민·최은정(2008), 「주요국의 화장품산업 정책·제도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Allaste, Airi-Alina. 2013. *Back in the West: changing lifestyles in transforming societies*.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AG.
- Chaney, David. 1996. *Lifestyles*. New York: Routledge.
- Florida, Richard. 2005.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New York: Routledge.
- Simmel, Georg. 1970. First published 1903. "The Metropolis and Mental Life",

In *On Individuality and Social Form*, edited by Donald Levin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Veblen, Thorstein. 1925. First published 1899.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An Economic Study of Institutions*. London: Allen & Unwin.

리리코스 www.lirikos.co.kr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https://www.ibitp.or.kr>

인천경제자유구역 <https://www.ifez.go.kr>

인천광역시 <http://www.incheon.go.kr>

인천관광공사 http://www.travelicn.or.kr/open_content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 문 초 록

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육성 방안

모종린(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강예나(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박사과정)

본 연구는 문화 정체성을 활용한 라이프스타일 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방안을 제시한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식·주·레저 산업인 라이프스타일 산업은 문화 정체성을 접목시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인천 고유의 정체성을 활용해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인천은 라이프스타일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인천에 집적된 라이프스타일 산업의 영역별 비중과 업종을 파악한 결과, 뷰티 산업은 인천 해양 뷰티 정체성을 활용해 고도화될 수 있다. 인천 전략 산업인 뷰티 산업의 정책적 보완점은 해양뷰티 정체성의 상품화 및 내수 시장 강화다. 구체적 고도화 전략을 위해 지역 정부, 기업, 대학, 소비자의 역할을 제안하는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인천은 섬들이 보유한 미적 가치를 토대로 고유의 해양 뷰티 정체성을 구현하는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뷰티 라이프스타일 상권 조성과 꾸준한 로컬 소비는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 중심의 상업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컨벤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뷰티 산업 다각화와 뷰티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기반을 탄탄히 해야 한다.

주제어 : 인천광역시, 문화 정체성,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Abstract

A Study on Supporting Beauty Lifestyle Industry in Incheon

Mo, Jongryn(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Kang, Yena(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suggests a strategy for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through accelerating lifestyle industry, utilizing cultural identity. Lifestyle industry, made up of high value-added clothes·food·shelter·leisure fields, can be strengthened by applying cultural identity. Incheon will be advanced as a lifestyle city by promoting lifestyle industry with intrinsic identity of Incheon.

As a result of grasping the areal proportion and business of lifestyle industry in Incheon, beauty industry is able to be upgraded by using Incheon marine beauty identity. Incheon's strategic policies for the beauty industry can be supplemented by commercializing the marine beauty identity and expanding the domestic market. Establishing the beauty lifestyle industrial ecosystem is necessary for concrete acceleration strategy, which suggests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enterprise, university, and consumer.

First, Incheon should develop a brand, materializing the marine beauty identity based on the aesthetic value of Incheon islands. Second, the beauty commercial district and the constant local consumption should be facilitated by the commercial community, composed of local small

businesses and consumers. Lastly, diversification of beauty industry, combining with the convention sectors, and reinforcement of the research capacity are the foundation for the beauty lifestyle industry.

Key words: Incheon Metropolitan City, Cultural Identity, Beauty Lifestyle Industry

청계천 전자상가, 복제의 기술문화, 디지털문화의 형성*

조동원**

조
동
원

I. 서론

II. 디지털, 디지털문화, 전자상가

1. 디지털과 기술문화
2. 청계천 전자상가의 역사
3. 청계천 전자상가의 특성

III. 전자상가의 기술문화와 디지털문화의 형성

1. 전자오락기 복제, 오락의 전자화, 상호작용적 미디어의 경험
2. 애플 II 복제, 컴퓨터의 대중화, 능동적 참여 이용자
3. 전자상가, 동아시아 기술문화 교류의 관문
4. 디지털문화의 전개와 청계천 전자상가의 쇠락, 그리고 재생

IV. 결론

I. 서론

기술과 도시가 관계를 맺는 최근의 추세는 대체로 기술이 도시를 재규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것은 ‘스마트시티’에서 보듯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낳은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식의 접근이다. 이 글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2321).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교신저자(E-mail: post@informachine.net)

은 반대로, 기술이 문화로 자리잡도록 매개하면서 도시가 기술을 형성시킨 역사에 주목한다.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도 특정한 도시공간이 그 기술을 도입하고 변형하며 토착화시켜 고유의 디지털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다. 어떻게 도시가 디지털문화를 형성했다는 것인가? ‘가상세계’나 ‘사이버스페이스’라는 용어가 유도하는 오해와 다르게 디지털문화가 현실세계의 물리적 공간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때(기어 2006; Huhtamo & Parikka 2011; Schafer 2011), 한국에서는 대중문화에 디지털 기술을 처음 도입하고 보급하기 시작한 곳인 청계천 전자상가¹⁾를 디지털문화가 형성된 도시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 하에 이 글은 청계천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초기 디지털문화 형성 과정을 추적한다.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에서 주로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서 디지털문화, 특히 디지털 하위문화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예컨대 기설·이재현 2010; 이길호 2012; 조한혜정 외 2007), 그 역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사실 전자오락,²⁾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기기과 같이 디지털문화를 매개하는 기술적 구성물이 대부분 서구에서 개발되고 한국에 전해져 수용된 것임에 따라 한국의 디지털문화연구는 그 수용 이후의 이용 단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부분 디지털문화의 기점을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해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때에 맞춰 잡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에 디지털 기술의 정수인 컴퓨터가 언제 처음 왜 도입되었는지, 어떻게 이용되기 시작했는지에 관한 연구가 거

의 없고(서현진 1997; 조동원 2015), 서구의 역사는 종종 소개되지만 한국의 고유한 디지털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나보라 2016; 윤호영 2011; 조동원 2017).

한국의 디지털문화사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디지털문화를 전자오락이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정보 기술이 특정한 사회 변화와 복잡하게 얽히며 수용되면서 나타난 문화로, 특히 전자상가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었다고 본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디지털문화의 개념을 의미, 기호, 상징을 이산적 신호 체계로 변환해 처리하며 나타나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행동·생활 양식으로 정의한다. 또, 전자상가란 완제품뿐만 아니라 공구, 재료, 부품을 함께 유통하고, 각종 제품의 중고 매매와 수리가 가능하며, 기존 제품을 조립, 복제, 변형하여 새로 제조하거나 주문에 따라 필요한 제품을 개발해 내는, 그럼으로써 온갖 전자·정보 기술이 처음 도입되고 퍼져나가는 출처가 된 기술 시장을 가리킨다.³⁾

한국 디지털문화사의 유적지라고 할 만한 청계천 전자상가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그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가 상당히 적은 편이다. 물론 세운상가에 대한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연구는 많다. 세운상가라는 건축물이 갖는 역사적 의의와 상징성 때문에 이 일대가 세운상가로 통칭해 불렸고, 이 지역을 다룬 연구도 건축학, 도시공학, 도시계획 분야에서 주로 나왔고(손정목 2007; 안창모 2005), 이 도시 건축물을 근대성의 문제로 논의한 연구도 여럿 있다(이동연 2009; 이세영 2005; Kwak 2002). 반면, 청계천 전자상가의 역사와 그 기술시장으로서의 특성은 거의 연구

1) 통상 세운상가로 불리는 청계천 전자상가는 종로구 장사동 일대의 전기·전자 업체와 매장이 모여 상가를 이룬 일대를 가리킨다. 1968년 세운상가가 건립되기 전부터 이 곳에 전기·전자 업종이 밀집해 있었고, 전자상가의 기술자나 업주가 흔히 ‘청계천’이나 ‘시장’으로 줄여 부르는 관행에 따라 이 글에서는 주로 ‘청계천 전자상가’나 ‘청계천’이라고 쓰고, 그 건축물을 지시할 필요가 있을 때 ‘세운상가’로도 쓴다.

2) 이 글이 디지털문화 초기사에 초점을 두는 만큼 ‘게임’(아케이드 게임) 대신 당시의 명칭대로 ‘전자오락’으로 지칭한다. 필요한 곳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일반화된 ‘게임’(산업)을 병행해서 쓴다.

3) 청계천 전자상가와 용산전자상가가 이에 해당하는 반면, 테크노마트나 하이마트는 단순히 가전제품의 유통·판매·소비를 위한 전자쇼핑센터로 이 글이 주목하는 역사적 전자상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디지털문화의 초기 형성이 나타났던 1970-1980년대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이 글의 주요 대상을 청계천 전자상가로 한정한다. 용산전자상가는 정부의 도시 계획과 재개발 정책 하에 용산 청과물 시장이었던 자리로 1987년에 청계천에서 용산으로 전자상가의 이전을 시작해 1990년대에서야 주요 전자상가로 기능했기 때문에 제외한다.

된 바 없다. 전자상가의 역사를 일부분으로 다룬 연구가 있고(서울역사 박물관 2010; 송도영 2009; 정현암 2006), 세운상가에 기반을 둔 청년 하위문화나 지하문화에 주목했던 문학작품과 문화비평이 다소 있지만(유하 1995; 이교동 2000), 대중문화나 디지털문화 차원에서 청계천 전자상가에 주목한 본격적인 문화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부분적이나마 김일림 2015; 조동원 2014). 아마도 전자상가에 ‘복제의 천국’이라는 오명이 따라 붙다보니 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과 평가가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연구를 저조하게 한 요인이 아닌가 한다(조형래 2014 참조).

한국의 초기 디지털문화 형성 과정을 규명하려는 이 글은, 흔히 지구적 디지털 기술이 지역에 도입된 후, 예컨대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후반부터, 디지털문화가 나타났다고 보는 기존의 관점에 도전하면서, 지역의 특정한 도시공간에서 복제의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으로서 고유의 기술문화가 만들어진 역사를 고찰한다. 이 연구는 한국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형성된 고유의 디지털문화의 형성에 관심을 둔 것으로 기술시장의 도시공간, 놀이문화를 위한 전자산업의 발단, 복제를 통한 기술 도입 관행, 이용자 문화의 역동이라는, 정부나 기업 주도의 정보사회 추진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 자율적이고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기술의 수용과 변용의 디지털문화 초기 형성사를 규명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제기하고 답을 찾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문화의 역사적 형성이 어떻게 특정한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를 위해 디지털의 특성을 살펴보고, 기술문화의 영역에 주목하고, 그것이 특정한 도시공간에서 발생하고 발단하여 전개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한 도시공간으로서 청계천 전자상가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괄하면서 한국의 디지털문화 형성의 근거지가 된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청계천 전자상가에서 디지털문화의 형성

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앞선 논의에 따라 전자상가 기술문화의 핵심에 복제가 있다고 보고, 청계천 전자상가에서 처음 나타난 전자오락과 개인용 컴퓨터의 복제가 어떻게 시작되고 전개되었는지, 또 그 디지털 기술의 초기 이용자 하위문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본다. 더 나아가 전자상가의 기술문화와 이용자문화가 한국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의 유사한 경험이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디지털문화의 초기 형성이 정부·기업이 주도한 것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그리고 초국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들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특히 아래로부터의 디지털문화 형성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술문화연구에 기댄다. 우선, 기술문화란 기술에 특정된 의미, 이용, 가치의 문화적 규범이 있다고 보면서, 기술을 중심에 놓고 형성되는 정체성, 공동체, 하위문화의 요소를 다루면서도(Haring 2006, 7)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기술의 설계(생산)와 이용(소비)단계 모두에서 벌어지는 여러 행위자의 의미화 실천과 상호작용을 아울러 함의하는 개념이다. 이 기술문화에 관한 연구이자 기술의 문화연구인 기술문화연구는 과학기술학과 미디어문화연구를 아우르는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과학기술학이 발전시켜 온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송성수 1995; 바이커·로·휴즈 1999)을 문화연구가 주로 주목해 온 미디어 수용연구(이은미 외 2003; 나미수 2001)에 접목하는 것으로, 기술이 설계·개발의 단계에서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용되는 단계에서도 법·제도·정책·관행의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특히 이용자가 변용·응용하며 수용하는 문화적 차원에서 기술이 계속해서 재구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에 더해 본 연구는, 기술문화의 역사적 역동이, 디지털 컴퓨터가 그렇듯이 처음부터 편재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서 먼저 응축되면서 확산돼 나갔다는 차원에서 도시공간연구를 결합시킨다(구동희 외 1995). 디

지텔문화 형성사 규명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 전자상가는 이러한 방법론의 고안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전자상가라는 연구 대상 자체가 유도하는 인식론적 연구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에 제한되지 않으면서 도시공간(사), 기술문화사, 하위문화연구, 동아시아 지역연구를 연루시키고, 더 나아가 이 모두를 관통하며 대중의 기술문화적 실천에 천착하는 아래로부터의 디지털문화사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기술문화의 도시공간 연구를 위해 이 글은 자료 조사 방법으로서 2014년 11-12월과,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의 면접 조사 및 현장 조사⁴⁾를 수행하고, 문헌 조사를 병행했다. 우선, 면접 조사는 이 기간 동안 청계천 전자상가의 숙련 기술자와 상인 총 28명의 심층 면접의 수행이었다. 또, 현장 방문 조사는 문헌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청계천의 기술문화적 특성을 포착하기 위한 조사 방법으로 채택했다. 전자상가 일대에 대한 현장 방문과 답사를 통해 기술문화의 지리를 파악하고, 기술의 도입과 유통, 이용의 공간적 흐름에 대한 체험적 이해를 도모했다. 덧붙여, 동아시아 전자상가의 공동 경험 및 역사의 비교를 위해 2014년 하반기에 일본, 대만, 홍콩, 중국 선전의 전자상가를 방문 조사하였다.⁵⁾ 전자상가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이차 문헌보다는 일차 문헌의 조사에 집중했는데, 전자산업 및 컴퓨터 관련 대중 잡지의 기사와 당시 일간지의 뉴스 기사를 조사해 참조했다.

4) 2016년 12월부터의 면접 및 현장 조사에 함께 참여한 박이현에게, 그리고 당시 조사 활동을 일부 지원해 준 메타기획컨설팅에도 감사드린다.

5) 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 아카이브 프로젝트, “한국·일본·대만·홍콩의 전자상가와 동아시아 디지털문화 형성”(2014년 8월 ~ 2015년 2월)에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할 때 수행한 것이다. 아시아문화정보원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II. 디지털, 디지털문화, 전자상가

1. 디지털과 기술문화

디지털 기술에서 디지털의 핵심은 자료(data)를 이산적 신호 체계로 변환해 처리하는 데 있고 그림으로써 자료의 조작가능성이 이전의 연속적 체계와 비교해 상당히 높아진다는 데 있다(Ensmenger 2012, 768-769; Peters 2016, 94, 104).⁶⁾ 단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코드를 작성한 후에도 계속 고쳐 쓰며 손쉽게 갱신하면서 그 용어 그대로 유연성(plasticity)과 자료 조작의 행위유도성(affordances)이 높다. 일단 자료가 디지털 형태(format)을 띠게 되면, 이용자나 기계 자체가 자료를 복제하고 변환하고 전송하는 데 상대적으로 용이해지는 것이다(Ensmenger 2012, 769). 이때 자료 조작의 기본 형태는 무엇보다도 복제라고 할 수 있고, 복제가 되면서 변환되거나 전송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디지털 기술의 핵심은 자료의 손쉬운 조작가능성에 있고, 자료의 조작은 복제를 기본으로 한다.

그렇다고 할 때, 디지털문화는 무엇보다도 디지털 기술이 문화 생산물의 복제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손쉽게 복제에 관여할 수 있게 된, 디지털 기술과 대중문화의 결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Parikka 2008, 75-76). 디지털 복제 기술, 혹은 디지털 기술이 대중문화와 결합하는 초기에는 새롭게 등장한 그 기술 자체를 수용하며 탐색하는 특정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기술문화가 있다. 동시대 미디어문화

6) 엔즈메nger(Ensmenger 2012, 769)에 따르면, 자료가 디지털화되면 숫자 형태를 띠지만, 그렇다고 디지털화가 양화와 동일한 것은 아닌데, 양화는 측정을 위한 것이라면 디지털화는 조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리의 디지털 자료 형태의 일종인 엠펙쓰리(MP3)의 경우, 이것의 의미는 소리의 측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형으로서 포착, 저장, 통신, 분석, 변형이 용이하도록 하는 조작가능성에 있다는 것이다.

혹은 디지털문화에 있어 기술문화는 전자공학취미, 마이크로컴퓨터, 비디오게임, 전자게시판, 오디오·비디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복제에서 잘 나타났다. 단적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경우 무선통신이나 수신기 조립·제조를 했던 땀장이(윤상길 2011; 순야 2005, 5장; Haring 2006; Takahashi 2000), 개인용 컴퓨터를 복제·조립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전자게시판을 운영하는 해커 이용자(조동원 2013; 2014; 터클 2003; Tinn 2011), 게임을 복제·변형하거나 새로 프로그래밍해서 제작하는 게임 놀이자(Consalvo 2013; Katzenbach, Herweg & Roessel 2016)가 초기 디지털문화의 형성에 기여한 기술문화를 만들어온 행위자들이다.

일반 대중의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수용 문화 이전에 그 디지털 기술 자체를 두고 먼저 초기 이용자의 기술문화가 형성되는 패턴을 놓고 볼 때, 그와 같은 기술문화를 통해 디지털문화의 초기 형성사 규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문화 형성에 있어 기술문화의 의의는 크게 두 차원에 있다. 한 편에 디지털 기술·미디어의 대중적 보급이 있다면, 다른 한편 그에 참여하는 능동적 이용자와 그들의 창조적 문화생산이 있다. 한마디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 대중적 이용 방식을 창안하는 초기 이용자의 기술문화적 실천을 거치며 대중문화로 자리잡는 것이다. 이때 그러한 기술문화적 실천의 집단화와 집적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정한 공간의 매개가 존재해 왔고, 이를 새로운 대중 기술이 처음 보급되고 그러면서 초기 이용자가 모여드는 곳으로서 전자상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동아시아의 대표적 전자상가인 일본 도쿄의 아키하바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오타쿠문화의 성지로 자리 잡았는데, 그 이유를 모리카와는, 아키하바라에 1970-1990년대 라디오나 컴퓨터의 기인(geek)

하위문화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봤다.⁷⁾ 오타쿠문화를 분석한 아즈마(2007, 24) 역시 오타쿠문화의 형성에 아키하바라라는 기술문화적 공간의 역사가 중요한 토대가 됐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문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복제와 수집과 공유의 오타쿠문화 역시 이전의 기술문화에 역사적으로 뿌리를 둔 것이고, 그 행위자와 실천을 모아낸 기술문화의 도시공간으로서 아키하바라가 기술문화와 오타쿠문화 간 역사적 연속성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Nobuoka 2010; 김일림 2015). 한국의 경우, 기술문화의 특정 공간이 디지털문화 형성을 매개한 역사가 청계천 전자상가에 있다.

2. 청계천 전자상가의 역사

서울의 종로3가 인근 청계천변에 전기·전자 제품이 모여 기술시장이 형성된 것은 1940년대까지 거슬러 간다. 이 곳은 일제 강점기 말에 전쟁 시 미군 공습에 대비해 소개공지(疏開空地)로 비워졌고, 해방 직후에는 이 부근에 몰려든 고물상을 통해 일제의 공장 잔재에서 흘러나온 공구들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또, 한국전쟁을 전후해 미군부대의 미군용판매회사(PX)를 통해 상당량의 군수 물품 및 공구 장비와 함께 진공관, 콘텐서, 저항과 같은 각종 전기·전자 부품이 이 곳에 집중해 유입되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미국의 군용 무선기와 부품을 비롯해 각종 전기·전자 기술물을 취급하는 노점상이 즐비한 기술 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서정욱 1996, 41; 송도영 2009, 88; 전자산업 50년사 편찬위원회 2009, 263).

7) "... PC를 즐기는 마니아의 집중에 의해 발생했다. 그리고 PC를 즐기는 사람은 아니메 그림 같은 캐릭터를 좋아하고, 그러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아니메와 게임, 조립 모형도 애호하는 경향이 있다. 오타쿠 취미의 구조다"(森川喜一郎, 趣都の誕生—萌える都市アキハバラ, オタク的想像力のリミット—〈歴史・空間・交流〉から問う, 筑摩書房, 2014, 213; 김일림 2015, 137에서 재인용).

청계천 전자상가는 장물과 중고와 폐품이 거래되는 암시장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다가 점차 라디오, 전축, 텔레비전을 수리하고 거래하는 전자상가의 모습으로 변모했다(전자산업 50년사 편찬위원회 2009, 48). 특히, 1959년 독일제나 일본제의 3극 5극 진공관식 라디오의 조립이 이루어지고 1961년 흑백 텔레비전이 대중에 보급되면서 공구, 기계, 부품뿐만 아니라, 가전 제품을 사고파는 상가의 중심지가 됐다. 그러면서 1950년대 말을 전후해 아세아상가, 황금상가, 광도상가와 같이 전용 상가 빌딩이 생겨난 듯하다. 아세아전자상가나 광도전자상가가 처음부터 전자상가로 불린 것이 아니라, 당시 진공관을 비롯한 라디오, 텔레비전 관련한 전기 부품과 제품의 백화점이라 하여 ‘아세아 라디오 백화점’과 같이 백화점이라 불렀다(경향신문 1961.04.01; 동아일보 1961.04.02).⁸⁾ 또, 당시 이 곳에 모여든 전기업체와 기술자들은 아세아상가 뒤쪽의 황금상가 옆길을 ‘라디오골목’ 혹은 ‘녹음기골목’으로, 광도백화점 자리의 옆길을 ‘무전기골목’으로 부르기도 했다.

1966년 8월 10일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이 ‘세계의 기운이 이곳으로 모이라’는 뜻을 담은 세운(世雲)으로 이름을 결정하며 세운상가 건립계획을 발표하고 준비한 무허가 건물의 강제철거 소동을 벌인 후 1968년에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 이 곳에 세워지며 현대식 전자상가가 들어서게 되었다(동아일보 1983.11.29). 1970년대에는 외제 가전과 함께 라디오와 텔레비전, 오디오 전자제품이 주종을 이루었고 수익이 좋았다(서현진 1997, 211). 세운상가가 들어선 이후에 그 전부터 있었던 전기·전자 부품상가를 포함한 기술시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장사동 일대에서 지속되었다.

그런데 첨단 가전제품 상점을 포함한 주상복합의 최첨단 소비공간으로

세운상가가 전성기를 구가한 것이 채 10년이 되지 못했다. 그 사이 명동의 백화점들이 재단장하고 강남이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세간의 발길이 끊기고 인기가 식더니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불쌍사나운 건물군”으로 간주돼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손정목 2007, 280-281). 지금까지도 이 일대의 도시 재생 사업을 알리는 언론 보도에 ‘도심 속 흉물’이라는 식상한 묘사가 등장하고 있다(단적으로, “방치된 ‘도심속 흉물’ 벗고 창조문화중심지로 뜰까”, 머니투데이 2015.02.10.).

반면 청계천 기술시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운상가 건축으로 주변에 밀려났던 기존의 자생적 기술시장이, 세운상가조차 가전 쇼펍상가가 아닌 기술시장으로서의 전자상가가 되면서 되살아났다. 우선, 입주해 살던 주민도 점차 빠져 나가며 임대료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5층 이상의 아파트가 사무실이나 창고, 소규모 작업장으로 바뀌고 세운상가 건물 전체가 전자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시장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때 마침 세계적인 유행을 타기 시작한 일본 전자오락기의 조립과 복제를 중심으로 게임기 시장이 열리면서 청계천이 그 제조와 공급의 근거지가 되기 시작했다. 그에 이어 개인용 컴퓨터의 복제와 제조 역시 청계천 전자상가가 최전성기를 맞는 데 중요한 산업적·사업적 기반이 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청계천 기술시장은 전자상가로서의 세운상가 혹은 세운전자상가라는 정체성과 인지도를 확고히 세웠다. 요컨대 1970년대 후반 서울 도시공간의 변화, 전자산업의 세계적 확산, 디지털 기술의 대중화가 교차하며 최초 주상복합의 세운상가가 쇠퇴하는 동시에 자생적 기술시장이 부상하는 역동적 맥락이 청계천 전자상가가 아래로부터 디지털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특수한 도시공간이 되도록 만든 셈이다.

8) 그런 관행이 적어도 1980년대까지 이어져 “컴퓨터 백화점, 서울 종로 세운상가”에서 보듯 컴퓨터 상가의 호칭에도 쓰였다(동아일보 1984.08.08; 매일경제 1988.12.13).

3. 청계천 전자상가의 특성

이와 같이 반세기 넘게 자생적 기술시장으로 살아남아 있는 청계천 전자상가는 고유의 기술문화를 발전시켜왔다.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자면, 우선 이 곳은 온갖 신기술 도입의 비공식적 통로로 기능했고, 몸으로 익힌 기술 지식이 축적되어 있다. 청계천 시장 일대에 여러 기술품으로서 전기, 전자, 정보 기술 관련 부품과 제품, 공구, 기계가 적어도 1980년대 말까지 신제품이든 중고든 밀수든 이 곳을 거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곳에 터를 잡고 기술을 익힌 사람들은 새로운 기기와 장비와 부품과 제품을 손수 만지고 뜯어보고 고치면서 체득한 숙련된 기술 지식을 수년에서 수십 년간 축적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대체로 이들은 처음에는 라디오 수신기와 텔레비전 수상기의 수리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이를 응용해 오디오 기기를 수리하고 조립·제조하거나 전자오락기와 개인용 컴퓨터의 제조까지 ‘손을 댄’ 이력을 엿비슷하게 가지고 있다.⁹⁾

둘째, 온갖 부품이 갖춰져 있고 금형 관급이 가능한 철공 업체도 인근에 자리잡아 이 곳에서 곧바로 제조의 완성까지 가능하다. 이미 1962년에 한양대 공학 교수였던 이만영이 아날로그 컴퓨터(전자계산기)를 손수 제작할 때 다른 곳이 아닌 청계천에서 온갖 부품을 구할 수 있었고, 1964년 개국을 앞둔 동양방송의 텔레비전 제작 시스템 일부가 이곳에서 제조되기도 했다.

컴퓨터를 제작하는 동안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각종 부속품을 입수하는 일이었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부속품을 구하기 위해 고물상들을 모조리 뒤져야

9) 더 심도 깊은 실증 조사를 통해 이러한 패턴이 유의미한 경향성을 띠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들 전자상가 기술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그들이 수리하고 조립·복제해서 내놓은 기술 제품의 차원에서, 미디어 기술 및 디지털 정보기술의 역사는, ‘전자혁명’이나 ‘디지털시대’와 같은 수사가 압시하는 단절보다는, 이전 미디어 기술문화사의 연속선상에서 재인식될 수 있다.

만 했다. …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제작에 착수했던 것은 나의 전공인 제어공학 부문을 활용해보고 대학원생 강의에서 실습하기 위해서였다(전업건설신문 1964년 6월 1일자; 서현진 1997, 22에서 재인용).

… 필요한 부품을 청계천의 장사동의 고물시장에서 구하여 조립 제작해야 했다. … 주위 모은 부품에 맞추어서 새시를 만들어야 했다. 새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은 청계천에 딱 한 군데 있었다. 물론 이 공장도 반노천이었다. 스튜디오 카메라의 바디도 이 판금공장에서 제작했다. 16밀리 영사기, 35밀리 영사기는 미군이 불하한 영사기를 TV용으로 박남식 씨가 개조했다. TV송신기와 S-T링크용 마이크로웨이브 송수신기는 김상립 씨가, TV송신 안테나는 정만영 박사가 을지로 기계공장을 뛰어다니며 제작했고 내부 회로도 잘 동작했다(전자산업 50년사 편찬위원회 2009, 266-268).

사실상, 청계천변 일대는 전기·전자 제품과 부품의 유통, 수리, 제조, 신제품의 개발이 가능한 업체뿐만 아니라, 인근의 기계 및 공구상가, 재료상가, 철재가공업체가 상호 간 “광범위한 산업연계”의 입지 이점을 가지며 함께 하나의 제조 단지를 유기적으로 구성해 온 것이다. 즉 설비, 공구, 재료, 부품, 제품을 구매하고, 산업용 기계나 가전제품을 수리할 수 있고, 신제품의 개발도 의뢰할 수 있는, 제조업 지원 중심의 기술시장으로 자리잡은 것이다(강우원 2009, 144; 김용창 1997; 송도영 2009, 96).

그러나 도심에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네트워크 생산체계로서 청계천의 상공업이, 점차 변모하는 서울 도심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서울의 인구 과밀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내 공장 이전, 교육기관의 재배치와 수도권 정비, 임시 행정수도 건설과 같은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는데, 청계천 전자상가도 1977년에 ‘도심 부적격 기능’으로 지정되고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농수산물 시장이었던 용산으로의 이전 계획이 마련되었다(정현암 2006, 44). 다시 논의하겠지만, 바로 그 시기가 전자오락과 컴퓨터의 복제를 통한 청계천 전자상가의 전성기였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청계천 전자상가의 세 번째 특성으로, 앞서 언급한 대로 새로운 기술이 제일 처음 입수되는 장소라는 특성에 따라 이 곳은 또한 그 새로움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단적으로, 십대 어린이·청소년 및 기술 공작에 취미를 가진 이들이 전자 키트나 부품을 사서 전자 기기를 조립하며 제작해 보는 전자 기술 하위문화가 형성됐다(송재희 외 1995, 134; 경향신문 1983.08.02; 경향신문 1986.10.20; 매일경제 1983.12.23). 라디오, 디지털 시계, 인터폰, 멜로디카드 등을 조립하는 각종 부품과 전자 키트를 사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이 청계천을 드나들면서, “지난 겨울에 전자 키트를 사러 세운상가에 갔을 때 우연히 4층의 컴퓨터 백화점이란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컴퓨터학습 1984.08, 110-111)라는 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접하고 또 빠져들면서, 이 곳에서 발빠른 그리고 열성적인 디지털 이용자가 형성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1980년대 외국 팝 음악에 매료된 사람들은 세운상가나 인근에서 ‘뽕판’이라고 불린 복제 음반을 파는 레코드 가게를 찾아다니며 희귀 음반을 구할 수 있었다(송은영 2009, 320; 이교동 2000). 성적 환상을 좇은 사람들이 음란 비디오를 구하러 다니고 영화팬들이 해외의 고전·예술 영화를 구해볼 수 있었던 곳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가정용 비디오 방식(VHS)의 비디오 테잎 복제와 총판이 이루어진 청계천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청계천 전자상가는 전자 및 디지털 복제 기술에 힘입은 새로운 대중문화가 자연스럽게 발단한 곳이 되었다.

Ⅲ. 전자상가의 기술문화와 디지털문화의 형성

지하경제 형태로 자연발생한 기술시장이자 기술 하위문화가 발달한 도시공간인 청계천 전자상가에 197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 부품을 비롯한 최신의 전자·정보 기술 제품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미디어 기술로서 전자오락과 개인용 컴퓨터가 복제품의 형태로 대중에게 저렴하게 보급되기 시작하며 전자상가는 디지털문화 초기 형성의 근거지가 될 수 있었다. 그 시작은 전자오락산업이었다.

1. 전자오락기 복제, 오락의 전자화, 상호작용적 미디어의 경험

전자오락은 1970년대 말부터 시내 중심가에서 동네 어귀까지 성업한 전자오락실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새로운 놀이거리로 일순간 큰 인기를 모았다. 전자오락산업은 독재 체제 하의 과학기술정책과 경제개발 계획이 한창 수립되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특이하게도 국가가 계획하지 않은 채 시작된 산업이었다. 정부가 1960년대 후반부터 주목한 전자공업은 수출주도 경제의 새로운 분야였고(서현진 1997, 119-121), 1980년대 들어 정부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포착된 정보산업은 강력한 국가-대기업의 연계 속에서 추진되었지만(강상현 1996, 12장), 특이하게도 전자오락산업은 그런 계획과 연계의 밖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는 바로 청계천 전자상가의 중소기업체가 일본의 전자오락기관과 오락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전자오락기를 제조하면서 발달한 일이었다. 일부 중소기업체들이 해외에서 전자적 게임이 유행하면서 국내 시장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며 일본에서 개발한 전자오락을 무단 복제의 방식으로 전자오락기

의 제조와 유통 사업을 개시한 것이다.¹⁰⁾ 1977년을 전후로 청계천에 전자 오락기 제조업체가 문을 열기 시작해 1983년에 3백 여 업체가 밀집해서, 일본 등에서 도입한 오락 프로그램이 100여 종이 넘었고, 급속히 개설된 전국 3만 여 전자오락실에 공급하면서 청계천 전자상가는 “국내 최대의 오락기 생산지로 발돋움”했다(경향신문 1983.5.30; 매일경제 1983.8.26; 서현진 1997, 185).¹¹⁾

기실 전자오락의 중요성은 이것이 한국 게임사의 첫 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 변화의 결정적 계기의 하나였다는 점에 있다. 1960-1970년대 여가문화의 활성화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국내 관광 및 레저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는데(송은영 2013b), 전자오락산업도 그러한 경향의 일환이었다고 할 때, 전자오락산업의 특수한 발단 과정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지시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전자오락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 새로움을 잘 함축하고 있다. 한편으로, 전자오락은 오락을 목적으로 전자 기술의 기능을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전자산업 이었고 뉴미디어, 멀티미디어 혹은 디지털 미디어가 대중문화로 자리잡기 시작한 최초의 계기로 볼 수 있다. 물론, 전자 기술과 전자공업에 기반을 두고 오락 기능을 포함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이 이미 대중화되고 있었지만(임종수 2008; 백미숙 2011), 순전히 오락용으로 저변에 널리 확산된 전자 미디어는 전자오락이 처음이었다. 다른 한편, 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도 전자오락은 말 그대로 전자 기술이 적용된 놀이의 새로운 형식이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 대두하는 한국 사회의 소비자본주의 문화(백옥인 2008, 201-207; 송은영 2013a; 2013b)를 뉴미디어 기술 차원에서 건인했

10) 일본의 경우도 1970년대 초기에 미국의 게임을 정식 라이선스를 얻어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게임 개발을 시작했다(Picard 2013).

11) 1980년대 초반부터 영등포 유통상가로 상당 부분 이전해 갔지만, 현재도 청계상가와 대림상가에 여전히 전자오락기 제조·유통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1970년대부터 일하기 시작했던 기술자는 소수가 남아 있는 정도지만, 공간적 배치와 특성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는 데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순조로운 일이 아니었고, 당시는 여전히 경제개발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한 노동 지고와 근검절약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교육열과 출세 욕망이 강력히 사회를 조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송은영 2013a; 2013b; 주윤정 2016),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자오락은 그야말로 사회적 ‘철퇴’를 맞았다. 전력 낭비, 학생의 공부 방해, 청소년 비행 온상, 사행성 조장, 왜색, 무단 복제와 같은 이유로 전자오락은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역사적으로도 무시를 당했다(윤형섭 외 2012; 나보라 2016).¹²⁾ 뒤집어 보면, 이는 곧 전자적 오락·놀이 문화가 그만큼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사회문화적 변화를 담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전자오락에 대한 국가·사회적 억압과 제약이 처음부터 강했는데, 전자오락산업이 1980년대에 정부의 지원은커녕 통제를 견디며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십대 놀이자의 열띤 호응이 만들어낸 전자오락문화(게임문화)가 크게 작용했고, 이러한 사회와 문화의 갈등을 매개하고 조율한 청계천의 기술문화적 실천이 있었다.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는 단적으로, 반교육적 오락성 질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용 게임으로의 위장이나 교육용 게임의 실질적 개발 시도, 지나친 청소년 보호 논리에 따른 규제가 심해지자 개인용 컴퓨터의 복제·개발로 전업하거나 아예 사행성 게임 개발로 진출하는 대응, 왜색 비난과 반일 감정의 여론이 일자 이를 우회하기 위한 일본 게임의 서사 구조나 배경의 변경, 복제를 금지하는 법제도 강화 및 단속에 따라 혹은 게임 제조 기술력의 축적과 여건의 성숙에 따라 자체 게임 개발과 해외 수출의 시도가 있었다. 다른 한편, 전자

12) 그래서인지 게임 역사·산업·문화에 관한 기존 연구도 대체로 게임의 (부정적) 효과에 집중하고, 산업적으로 성공한 온라인게임에 집중되어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문화산업으로 재인식되고 ‘전자오락’ 대신 ‘게임’이라는 명칭을 씌으로써 생겨난 인식론적 단절(나보라 2016, 8) 역시 그러한 초기사 연구를 더욱 요원하게 만들었다.

오락실의 게임 놀이자의 폭발적 반응과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이루어진 청계천의 기술적 실천은 예컨대 놀이자의 놀이 기술의 숙련도가 높아지자 게임 난이도 및 놀이 시간을 조작한다거나, 흑백에서 칼라로 텔레비전 수상기를 재활용하고 고가더라도 음향효과를 내는 칩을 입수해 조립해 넣는 식으로 시청각적 상호작용성의 경험을 달리 구성하면서 제조·개발의 기술을 발전시킨 점을 들 수 있다.¹³⁾

이와 같이 복잡하게 발단한 전자오락산업을 두고 볼 때, 한국의 디지털 문화는 197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대두한 자본주의 소비문화, 정보사회, 지구화와 연동하며 나타나기 시작한 역사적 산물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전자오락은 본 연구자를 포함해 당시 수많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여가 및 놀이 문화로서, 그리고 디지털문화로서 “새로운 문화 형식”을 체험하는 일이었다(Swalwell 2012b, 67). “디지털문화의 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기어 2006, 245)은 곧 전자오락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전술한 대로 ‘전자오락’의 등장은 전자기술을 오락 미디어 영역으로 확장시키며 대중문화로 디지털 기술 진입의 포문을 연 사건이었던 것이다.

물론, ‘디지털문화’가 전면화되고 그런 변화를 문제삼고 다루는 용어와 담론이 넘쳐난 일은 1990년대에 벌어졌지만, 이미 1970년대 말의 전자오락과 함께 상호작용적 뉴미디어 경험(전경란 2015, 135; Haddon 1988), 능동적 이용자 주체성(윤태진 2007; Swalwell 2012a), 정보산업-문화산업(허준석 2006)과 연동된 디지털문화로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정부나 대기업이 주도하지 않은 산업으로서 전자오락산업이 청계천 전자상가에서 처음 전자오락기 복제를 통해 대중에 보급하면서 시작되었고, 전자오락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문화적 호응을 조율한 전

13) 이와 같은 청계천의 기술문화적 실천은 기존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안들인데, 사회와 문화 간 갈등의 조율로서 각 기술문화적 실천의 세부적인 분석은 차후 과제로 삼는다.

자상가의 기술적 실천이 초기 산업 발전을 뒷받침한 것이었으니, 청계천 전자상가를 디지털문화의 싹이 자생적으로 발아한 도시공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 애플 II 복제, 컴퓨터의 대중화, 능동적 참여 이용자¹⁴⁾

전자오락산업의 발단과 불과 3·4년 간격을 두고 ‘개인용’을 표방한 컴퓨터의 대중화가 새로운 변화를 본격적인 추세로 몰아갔다. 컴퓨터 대중화의 시작을 알린 사건은 초소형 컴퓨터(micro-computer)의 대중적 상징이었던 애플 II의 복제와 조립이었다. 최초의 시장 판매용 개인용 컴퓨터로서 1975년 엠아이티에스(MITs)가 개발한 알테어 8800(Altair 8800)은 그것을 구매한 이용자가 직접 조립을 해서 쓸 수 있는 키트 형태였고, 아마추어 해커공동체의 일원일 때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조립한 형태로 만들어 판매한 애플과, 그에 이은 애플 II가 대중 소비 시장을 열게 된 것이었던 만큼 복제와 조립은 개인용 컴퓨터의 제조와 이용의 주요한 초기 형태였다(Söderberg 2008, 17; 백옥인 2013, 34·35).

애플 II는 1980년대 초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최초의 대중 컴퓨터였고 당시 국내에서도 예외 없이 큰 반응을 얻었다(곽동수 1993, 258). 애플 컴퓨터가 한국의 대중 이용자와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청계천 전자상가였다. 이 컴퓨터는 기능의 확장성, 고속의 화상처리,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가용성을 장점으로 가지면서, 그 복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컴퓨터학습 1985.3). 청계천에서 이전부터 라디오와 오디오 기기를 비롯한 전자 부품과 제품을 취급했거나 특히 1970년대 후반에 전자오락기를 복제·조립하던 업체들이 하드웨어 차원

14) 이 장의 서술은 연구자의 이전 연구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더 자세한 논의는 조동원(2014; 2015) 참조.

에서는 제작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의 제조로 눈을 돌리며 컴퓨터 사업을 시작했다. 그 시초에는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나 일본을 오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반입해 오거나 주한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개인용 컴퓨터를 청계천의 몇몇 업체들이 손을 대면서 컴퓨터 전문 매장이 하나둘씩 생겨났다(서현진 1997, 212; 경향신문 1983.7.19). 1982년까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세운상가에 근거지를 둔 50여 개 중소기업체에서 애플 II 복제품을 제조·판매해 인기를 모았다(컴퓨터학습 1985.3; 서현진 1997, 261-262). 대기업을 경우 1983년 이전까지는 국내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너무 작아 북미와 유럽 수출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컴퓨터 보급을 청계천의 중소기업체들이 복제품을 가지고 주도했던 것이다.¹⁵⁾

1980년대 초반 당시 컴퓨터를 복제 조립해 제조한 업체는 대략 10-20여 개가 있었고, 판매만 한 업체는 50-60개였다가 많을 때는 2백 여 개까지 늘기도 했다(매일경제 1983.08.31; 1985.06.20). 처음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1983년의 개인용 컴퓨터 열풍 덕에 크게 수익을 낸 중소기업체들이 있었고 석영전자, 홍익전자, 희망전자 등 6개 회사는 종업원 50명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경향신문 1984.07.31). 그러면서 세운상가 건물 내 주로 컴퓨터 판매장들이 있던 4층이 ‘한국 컴퓨터 시장의 메카’로, ‘서울의 애플거리’로, ‘한국의 아끼하바라’ 혹은 ‘한국의 실리콘 벨리’로 불렸고, 이때 세운상가가 일반 대중에 널리 인지되기 시작했던 것이다(동아일보 1983.11.29).

컴퓨터산업은 곧바로 대기업을 중심에 둔 정부의 정보산업 지원 정책에 육성되었지만, 최초에는 청계천 전자상가가 대중 이용자에게 개인용

으로 컴퓨터가 주어진 핵심적인 통로였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이전까지의 중대형 컴퓨터의 도입 과정과 대비해 보면(서현진 1997; 조동원 2015), 개인용 컴퓨터가 지구적 시장의 형성과 확산이 이루어질 때 외국산의 수입을 통한 수용이 아니라 우선 복제를 통해 자생적인 방식으로 제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그것을 복제·조립해서 매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었고 그러므로써 컴퓨터 대중화가 비교적 일찍 이루어질 수 있었다. 앞서 전자오락산업이 그랬듯이, 개인용 컴퓨터 제조 산업 역시 자생적으로 청계천 전자상가에서 처음 시작된 셈이고, 비록 제대로 조사된 바 없지만 “적어도 90년 초반까지 국내 PC 사용 환경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외국제품을 들여와 토착화하는 과정이 대부분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서현진 1997, 213)로 통한다.

복제·조립된 개인용 컴퓨터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뒤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를 모았다(경향신문 1983.5.30). 당시 가격은 애플 II 복제품이 30만원 내외, 보다 복잡하고 기능이 다양해 업무용으로 인식된 일본 엔이씨(NEC)사의 피씨8001(PC 8001)이 50-60만 원선으로 그 시기 내수 시장에 쏟아진 컬러텔레비전 수상기 값과 비슷했다(경향신문 1982.12.28). 사실, 1980년대 초중반에 컴퓨터 수용 방식으로서 복제가 필요했던 특수한 조건의 하나는 당시 제품이 비싸고 불편했다는 점이다(조동원 2013, 209). 완제품으로 수입된 개인용 컴퓨터는 너무 비쌌고, 소프트웨어 역시 국내에서 개발된 것은 아직 쓸 만한 것이 없어서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쓸 만한 수입 소프트웨어 역시 비쌌을 뿐만 아니라 한글 구현이 되지 않는 접근성의 문제가 있었다. 이때 초기 이용자를 포함한 청계천 기술자들의 컴퓨터 복제·조립과 소프트웨어 복제·개발은 새로운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컸기 때문이지만, 당시 조건에서 대부분의 대중 이용자에게는 쓰고 싶어도 비싸서 쓰지 못하는 가격의 장벽, 접근성의 문

15) 정부가 정보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1983년을 정보산업의 해로 선포하고, 그 전 해부터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포함한 컴퓨터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을 국내 개인용 컴퓨터 공급이 시작되었다.

제, 그리고 사용하면서 겪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에 잘 맞아떨어진 기술문화적 실천이었다. 실제로, 이전까지 개인용 컴퓨터의 이용자가 교수나 연구원과 같은 특수 계층이었다가(서현진 1997, 184), 1980년대 초반 저렴한 가격과 함께 백여 개가 넘는 컴퓨터 게임과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대중보급형의 8비트 애플 II 복제품이 나오면서, 초중고 학생층이 처음으로 컴퓨터 이용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컴퓨터가 보통 사람들의 손에 닿고 쓰이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는 일반 대중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오락, 업무, 교육, 창조를 위해 사용되는 범용 기술로 수용되었는데, 디지털문화의 형성과 관련해 볼 때, 가장 주목할 사안은 컴퓨터의 개념이 상호작용적 미디어로 변모하고 이용자는 이를 이용한 자료의 조작 능력을 가지게 된 점이다. 이제 일반 대중이 디지털 기술과 직접 대면하여 상호작용하면서 자료를 변형하며 조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 대중 이용자가 실제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을 보면, 당시 8비트 컴퓨터로 게임을 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게임을 단순하더라도 직접 프로그래밍할 수 있었다. 또, 게임뿐만 아니라 사무용이거나 교육용이면서 멀티미디어를 구동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어느덧 컴퓨터가 신속한 데이터 처리와 통계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픽과 사운드가 갖춰진 게임을 하고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컴퓨터는 이제 대중문화 속에 안착한 보편적 개인 미디어로 개념이 잡히기 시작한 것이다(조동원 2015, 204). 컴퓨터가 계산기에서 미디어로 형질변화한 것의 핵심에 상호작용성과 이용자의 능동적 행위능력이 있다고 할 때(Huhtamo 2000, 107), 한국에서 개인 미디어로서 컴퓨터가 도입된 시점은 곧 상호작용적 미디어와 이를 통한 참여적 문화생산 경험이 본격화된 시발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디지털문화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용자 행위능력도 청계천 전자상가에서 처음 발견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때인 1980년에 세운상가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컴퓨터를 보자마자 그에 매료되었다는 장만

길(2011.9.9: 면접)은 청계천 전자상가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회상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전자오락기를 가지고 놀았고 전자 제품의 분해와 조립을 취미로 했기 때문에 ... 자연스럽게 청계천에 왔다갔다 하다보니깐, ... 얼마나 많이 왔다갔다 했냐면, 거짓말 조금 보태면, 껌자국이 몇 개 있는지 알 정도로 제가 다녔으니까요. [그러다가] 전자회로 취급, 선풍기, 전축 파는 가게들 사이에, 텔레비전 갖다놓고, 키보드, 타자기 같은 거 갖다놓고 이게 컴퓨터다 하면서 팔기 시작하더라구요. 두 군데가 시작할 때부터 내가 봤어요.

그렇게 들락날락 거린 초기 열성적 이용자들은 전자상가에서 일을 거들며 기술을 익히기도 했다. 당시 컴퓨터잡지에 실린 한 업체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그러한 이용자 기술문화를 키워낸 청계천 전자상가의 공간적 특성을 엿볼 수 있다. 1979년부터 세운상가에서 일하기 시작한 희망전자의 김태영 대표는 본인이 느끼는 세운상가의 매력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컴퓨터학습 1984.11, 38).

제가 세운상가와 인연을 맺은 것이 1979년 3월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고 전혀 지루한 감을 받지 못해요. 가장 큰 매력은 이 곳에서는 시너지(synergism: 상승작용)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1 + 1 = 2$ 가 아닙니다. 그것은 3, 4, 5,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무한대로까지의 가치창출이 가능한 곳입니다. ... 컴퓨터를 구입하러 나왔다 뜻이 맞아 함께 연구하여 새로운 기종을 발표하는 학생도 있어요. 또 대학생 정도 되면 서로의 지식을 교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점의 주문과 연결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

당시 애플 컴퓨터를 복제해 판매한 업체를 운영했던 이강전(2014.11.

20: 면접) 역시 비슷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 학교 학생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컴퓨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세운상가에 많이 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세운상가가 진짜 활성화되어 있었죠. 왜냐면, 가게에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배울라고. 자기네들이 와서 도와주면서 일하고, 카피도 막 하고. 게임 들어온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카피해서 손님들 주고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고, 와서 배우는 거예요. 컴퓨터에 대해서 전부. 학생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밥은 거의 매일 사줬죠. 일해주고 그러니까. 그때는 일들이 바쁘니까.

전자상가의 컴퓨터 복제에, 전문 업체에 속한 기술자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지만 그들보다 뛰어나기도 했던 일부 초기 이용자가 깊게 관여했고, 그것이 또한 전자상가에서 공유되거나(“청계천에 나가 아는 가게에 가면 구할 수 있었다”) 유통·판매되기도 했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컴퓨터에 빠져들어서 컴퓨터광으로 불린 초기 열성적 이용자가 전자상가의 가게 일을 대신 봐주기도 하고, 조립이나 프로그램 개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들은 전자상가를 거점으로 해서 모이고 길러진 것이다. 단적으로, 대학생이었던 이찬진은 동료들과 함께 개발한 아래아한글을 1.5 판본까지, 그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며 아르바이트를 했던 세운상가 소재의 리블리컴퓨터에서 판매했다(서현진 1997, 213).

이와 같이 복제 기술의 학습과 공유의 장이었던 전자상가는 그 어디보다 먼저 최신의 정보기술과 문화 생산물을 입수할 수 있는 곳이었고, 초기 이용자 하위문화가 싹틀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즉 초기 디지털문화의 형성에는 컴퓨터 복제의 기술문화가 중요하게 자리 잡았고, 한국에서, 더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그와 같은 문화가 촉진되는 데 전자상가가 주요한 공간적 매개로 기능한 것이다.

3. 전자상가, 동아시아 기술문화 교류의 관문

흥미롭게도 전기·전자·정보 기술의 부품과 완제품을 조립하고 제조하며 팔면서 활기를 띤 전자상가의 형성과 발전은 동아시아 권역의 동시적 현상이었다. 동아시아의 탈식민, 전쟁, 냉전, 권위주의체제, 경제개발, 산업화, 정보화의 압축적 현대사의 질곡과 함께 부침한 역사가 비단 한국 서울의 청계천 전자상가에만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도쿄의 아키하바라(秋葉原)나 오사카의 텐텐타운, 대만 타이페이의 중화상창(中華商場)과 광화상창(光華商場), 홍콩 산스이포(深水埗) 지역의 압리우거리(鴨寮街)와 황금상창(黃金電腦商場), 중국 베이징의 중관촌(中關村) 및 선전(深圳)의 화치양베이(华强北)가 전자상가로서 서로 다르면서도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이동연·조동원·김일립 2015). 단적으로 대만 타이페이의 경우, 마치 청계천 전자상가와 용산전자상가의 관계와 유사하게 중화상창과 광화상창이 있는데, 재개발의 여파가 더 심해 둘 다 보존되지 않고 주변부 일부만 남아 있거나 새로 건립된 상태다. 중화상창은 1950년대부터 라디오를 비롯한 음향기기를 취급하는 상점들로 시작되었고 1991년에 도시 재개발로 철거되었다. 그리고 1973년에 조성된 광화상창은 전자제품 상가 골목들이 있고, 여전히 골동품을 파는 곳들이나 헌책방,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를 파는 곳들과 어우러져 있다. 이 두 곳 모두에서 처음 애플 컴퓨터가 복제되어 대중에 보급되었고 한국과 닮은 초기 열성적 이용자가 줄곧 드나들며 새로운 세계를 탐색했다(Tinn 2011).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의 디지털문화 형성사 혹은 비교사 연구는 추후 과제로 삼아야겠지만, 여기서는 전자상가가 갖는 역사적 의의가 일국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전자상가는 개별 국가 내 기술문화 및 대중문화 형성의 요람이 된 것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권역 차원에서 공동(共動)의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주요

매개이자 관문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말 아직 개발도상국으로서 원천 기술 개발이나 문화산업이 성숙하지 못한 조건에 있던 한국, 대만, 홍콩에서 전자상가는 선진국의 최신 문물을 입수하고 취급한 전자·정보 기술 부문의 국제 시장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기술적 차원에서 복제 기술의 동아시아 내 흐름은 당시 개인용 컴퓨터와 가장 유력한 소프트웨어였던 게임 프로그램이 미국과 일본에서 원천 기술과 원본으로서 생산되고 대만, 홍콩 그리고 한국을 거쳐 중국으로 공식·비공식적으로 유통되었던 양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만의 전자산업은 일본과의 기술 제휴가 활발했고 1980년대 한국과도 교류가 빈번했는데, 한국과 대만과 홍콩 등이 복제 기술을 서로 배우고 기술 지식을 교환했던 것으로 보인다(전찬수 2014.12.1: 면접; 이강전 2014.11.20: 면접; Chesterman & Lipman 1988, 61).¹⁶⁾ 더 나아가 중국을 중심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성행한 휴대폰 복제는 그러한 동아시아 권역의 기술 문화적 관행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단적으로 중국 선전의, “여기에 없는 제품은 세계 어딜 가도 없다”(매일경제 2015.4.14)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가인 화치양베이에서 애플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를 복제하고 변형해 제조하는, 이른바 산짜이(山寨)의 복제 관행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 이때 “예전의 대만 광화상창의 복제 문화를 알고 싶다면, 지금의 중국 선전을 가보면 된다”는 증언은 동아시아에서 복제의 기술문화가 갖는 역사적 연속성을 암시한다(광화상창발전위원회 이사장 2014.10.24: 면접). 1980년대의 한국과 대만, 홍콩의 컴퓨터 복제가 2000년대 중국의 대규모 전자상가에서 모바일 기기 복제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¹⁷⁾

16) 청계천 전자상가의 여러 증언에 따르면, 한국에 처음 애플 복제 컴퓨터가 등장한 것이 그 복제 기술을 대만에서 배워오면서였다. 반면 전자오락기 복제는 한국이 앞섰다는 주장이 중론이다.

17) 두 시기 간 복제의 대상이 컴퓨터에서 휴대폰으로 바뀌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복제에 대한 관

다른 한편, 문화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내 대중문화의 비공식적 흐름 역시 위와 같은 기술문화에 뒤이어 혹은 동시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사실상 오늘날 한류가 인터넷을 매개로 한 바이러스 마케팅과 팬문화의 형성에 힘입어 활발하게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인터넷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적어도 한두 세대 전부터 지속돼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정치적 검열로 수입 금지된 문화생산물에 포함해 일본의 게임과 애니메이션, 홍콩의 무협소설과 느와르 영화가 수입되어 무단 복제되고 유통되면서 동아시아 공통의 대중문화로 자리 잡아 왔다. 1980년대 락 음반, 예술 영화, 포르노 도서나 비디오 등의 회귀하거나 최신의 문화 복제물이 전자상가 한 켠의 지하시장에서 활발하게 유통된 만큼, 전자상가는 인터넷이 없었던 1970-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중반까지도 문화산업 대기업을 아니라 저변의 군소업체나 일반 대중이 직접 나서서 초국적 문화 교류를 가능하게 했던 근거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전자상가의 기술 복제와 이용자 하위문화가 부분적으로나마 일류, 중류, 한류의 역사적·대중적 토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연속성보다는 디지털문화의 본격적인 전개에 따른 단절이 더 크게 작용했다.

4. 디지털문화의 전개와 청계천 전자상가의 쇠락, 그리고 재생

1980년대 말을 지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수익 창출에 있어 더 중요해지고, 전자계시판의 피씨통신과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정보산업·정보문화는 “무게 없는” 혹은

넘도 변화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당시에는 이전의 관행대로 무단 복제를 하던 일이 점차 불법화된 반면, 현재는 여전히 그 법제가 엄존하면서도 지난 수년 동안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중국의 온갖 정보기술과 디지털문화 생산물의 복제 관행으로서 산짜이(山寨) 기술문화가 중국식 기술혁신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Keane & Keane 2012; Lindtner & Li 2012).

“마찰 없는” 가상세계라는 가상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게이츠 1995).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피씨통신, 그리고 대중화되기 시작한 인터넷을 통해 펼쳐진 (비물질적인 것으로 선뜻 지각된) 가상공간 혹은 사이버공간의 출현에 따라 디지털문화가 사이버문화나 인터넷문화와 동의어처럼 여겨졌다.

디지털문화 초기 형성의 물질적 토대로서 청계천 전자상가도 그런 흐름 속에서 서서히 쇠락했다. 우선, 전자오락과 컴퓨터 복제를 통한 전성기가 오래가지 않았다. 미국이 1976년 대대적인 저작권법 개정을 감행하고 일본 역시 그에 앞장서면서, 이른바 지적 재산권 체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강화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미국이 1984년 무역법 개정에서 지적 재산권을 301조에 포함시키고 한국에 처음 적용하여 1986년 한미지적재산권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한국에 저작권법 및 특허법 개정과 함께 프로그램보호법이 신설되었다(임근영 2003, 132). 이제 복제가 공식적으로 불법화되고 그 인식상의 큰 변화가 발생했다. 그에 따라 전자상가는 법제나 윤리적 논란이 시작되는 곳이었고 강화된 지적 재산권 법제에 따른 무단 복제 단속이 집중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또, 청계천 전자상가는 용산전자상가로의 이전 이후에도 강변 테크노마트와 문정동 가든파이브로 그 이전 사업이 몇 차례 더 추진됐는데, 그 원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도심에 부적합한 도심 제조·상업 기능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청계천의 유사 업종 간 근접 입지의 자연발생적 도심 제조업 단지는, 그곳이 기술의 메카가 되도록 만들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교통체증과 주차난, 낙후된 시설, 쾌적함을 저해하는 미관상의 문제를 근거로 끊임 없는 재개발과 이전의 부침을 겪게 된 것이다. 서울의 자본주의적 고도화가 추진되면서 그 초기 단계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이 도심 제조업이 이제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된 셈이다. 그러나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한 청계천 전자상가 일대는 현재까지도 전면적인 재개발에 실패하고, 일부가 변경

되면서도 대체로 예전의 모습대로 유지되고 있다. 촘촘한 토지의 소유·임대 관계에 따른 보상의 규모 및 절차의 복잡함과 어려움이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손정목 2007, 285), 앞서 언급한 그 자연발생적 제조업 생태계가 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복제의 불법화와 도시 재개발 정책에 따른 수차례 상가 부지 이전이 청계천 전자상가의 쇠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전자상가에 나가 들어본 여러 증언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은 전자상가의 경쟁자가 나타난 일이었는데, 바로 인터넷이었다. 한마디로 인터넷이 제품과 부품의 유통 가격을 공개해 시장 경기가 기울었다는 것이다. 그에 더해, 물리적 이동의 필요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키며 도심의 유연한 네트워크 산업 체계적 입지의 이점을 무화시키는, 복제의 불법화에도 불구하고 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성행하고 확산되도록 한 인터넷을 청계천 전자상가의 기술문화가 당해내지 못한 것이다. 이는 곧 인터넷이 없던 시절 전자상가가 오늘날의 인터넷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운상가의 재생사업에는 흥미롭게도 최신의 디지털문화로서 제작문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단적으로 손수 해보기(DIY, Do It Yourself) 공작을 위한 시민 참여적 기술문화공간(랩랩, 창의제조허브 등)이 세운상가에 문을 열고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청계천 전자상가는,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된 제작문화운동(maker movement)이 부상하기 훨씬 전부터 자연 발생한 제작문화의 토착적 도시공간이었다. 세운상가군의 전면 철거 후 ‘스마트’ 기술을 장착한 첨단 건물과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재개발 사업에서 물러선 것은 다행이지만, 서울시의 도시 재생사업이 이미 반세기 넘게 디지털 기술과 제작문화를 자생적으로 만들어온 청계천 전자상가의 기술문화사에 근거를 둔다기보다, 그 이미지는 차용하면서도, 서구의

최근 흐름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고유의 디지털문화 형성의 역사적 유산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IV. 결론

이 글은 디지털 기술과 대중문화가 복제의 기술문화적 실천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매개로 결합되면서 한국의 디지털문화가 아래로부터 초국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밝혔다. 디지털문화 초기 형성의 도시공간이 바로 전자상가였다. 기실 전자상가는 역사적으로 기계 복제, 전자 복제, 디지털 정보 복제를 모두 아우르는 복제 기술 시장이자 복제품 시장에 다름 아니다. 전기·전자·정보 기술의 제조 공구와 부품과 제품을 비공식적인 경로로 거래한 기술 시장이었고 또 그렇게 생산된 온갖 복제품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최신의 대중적 기술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왔다. 그래서 또 전자상가는 대중의 기술적 문화 생산수단이 만들어지고 제공된 곳이었다. 이에 모여 들어 최신의 기술을 처음 접한 이용자들은 곧 라디오 조립, 전기·전자·제어 공작에 이어 전자오락, 컴퓨터, 음반·비디오 기기와 그 생산물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문화의 첫 번째 세대가 되었다. 그것이 오늘날 디지털 문화의 기술문화적 토대가 된 것이다. 더 나아가, 디지털 복제 기술의 효율성에 힘입어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내 부품·기기·콘텐츠의 공식·비공식적 교환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디지털문화는 흥미롭게도 개별 국가를 넘어 처음부터 동아시아 권역 차원의 초국적 문화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전자상가는 단지 낡고 쇠락해 가는 상가, 단지,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 동시대 문화 변동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현대문화 유산이자 역사적 보고다.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한 현대 대중문화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연구는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의

디지털문화를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본 연구는 청계천 전자상가의 당시 기술자와 초기 이용자의 진술과 사료를 근거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했는데, 한국 디지털문화의 전면적 형성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서는 1970년대 이래 국가 정책, 산업 발전, 국제 관계의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적으로, 이 글에서는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전자오락산업 및 컴퓨터산업의 발단과 전개가 한편으로 한국 내 도시공간적 특정성에 기반을 두고, 다른 한편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동아시아 권역 차원의 초국적 영향 및 교류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는 과제가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문화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 문화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시청각 미디어 기술이 청계천 전자상가와 같은 도시공간을 통해 어떻게 수입, 전유, 변용되었는지를 고찰하는 기술문화 지리학적 심화 연구도 필요하다.

동시대 한국의 도시, 기술, 문화, 역사를 엮는 미답의 여러 연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예비적 시도로서 본 연구는 디지털문화를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에 국한시키지 않고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연속선상에서 고찰했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이는 서두에 언급했듯이 도시의 디지털화 경향에 대해서도 시사적이다. 증강현실 게임이나 위치기반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스마트시티’와 같이 디지털 정보기술을 통해 도시를 재규정하며 여러 정책과 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반대로 도시가 디지털 기술을 형성해 온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도시가, 적어도 기술 생산과 유통과 이용을 위한 특정한 도시공간이, 그와 같은 첨단 디지털 정보기술이 도입되고 도시민의 삶과 공간의 맥락에 맞게 그들에 의해 변형되며 이용되기 시작한 역사적 과정이 있다고 할 때, 신기술의 적용에 따른 도시의 재규정을 위해서도 이러한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이 도시의 변

화를 결정하는 관점에만 머물지 않고, 도시 역시 기술을 바꾸는 상호 형성의 관점이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더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투고(접수)일 : 2017. 05. 10 심사(수정)일 : 2017. 06. 02 게재확정일 : 2017. 06. 14

참 고 문 헌

- 강상현(1996), 『정보통신혁명과 한국 사회』, 서울: 한나래.
- 강우원(2009), 「세운상가의 40년 존재담론」, 『淸溪川, 청계고가를 기억하며』, 전우용·김기호·송도영·강우원·오유석·진양교·송인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서울: 마티.
- 경향신문, 「친정 뚫고들어와 「라디오」 등 절취」, 1961.04.01.
- _____, 「전자상가 개인용컴퓨터 조립 째짤한 재미, 청계천서 개화하는 마이컴 시대」, 1982.12.28.
- _____, 「電子오락技術 尖端산업화시급」, 1983.05.30.
- _____, 「컴퓨터 모르면 직장 떠나라」, 1983.07.19.
- _____, 「컴퓨터가 물려온다 (1) 中部시장 과일商의 ‘情報通 1號」」, 1983.08.02.
- _____, 「사양길 걷는 ‘한국실리콘밸리’ 세운상가 대기업 진출에 밀려」, 1984.07.31.
- _____, 「淫亂비디오 誘客」, 1986.10.20.
- 곽동수(1993), 『안녕하세요 컴퓨터이야기』, 서울: 정보문화사.
- 구동회 외(1995), 『공간의 문화정치 - 공간 문화 서울』, 서울: 현실문화연구.
- 기설·이재현(2010), 「‘탈옥’ - 아이팟터치와 새로운 디지털 참여문화」, 한국언론학보 54 (4): 276-98.
- 김용창(1997), 「서울시 토지이용에서 위치이용의 지역적 특성과 도심부 소규모사업장의 존재양식」, 지리학논총 별호.
- 김일림(2015), 「세운상가와 아키하바라의 공간학 - 전자상가로 보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문화·대중문화·제작문화」, 인문콘텐츠, 39: 125-60.
- 나미수(2001), 「홈컴퓨터의 소비를 통해 본 젠더와 테크놀로지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6 (1): 72-115.
- 나보라(2016), 「‘게임성’의 통사적 연구: 한국 전자오락사의 이론적 고찰」, 학위논문 (박사), 서울: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 동아일보, 「춤추는 강력범죄」, 1961.04.02.
- _____, 「서울 단면 청계천상가 〈상〉 한국형 「실리콘 밸리」」, 1983.11.29.
- _____, 「컴퓨터 백화점 서울종로 세운상가」, 1984.08.08.
- 머니투데이, 「방치된 ‘도심속 홍물’ 벗고 창조문화중심지로 뜰까」, 2015.02.10.
- 매일경제, 「「청계천 경제」…그 실태 발전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해본다 〈3〉 전자

오락기 생산지」, 1983.08.26.

_____, 「청계천 경제... 그 실태 발전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해본다 <6> 퍼스컴의 개발...」, 1983.08.31.

_____, 「초중고생 科學熱氣」, 1983.12.23.

_____, 「대기업 질주에 중기 '몸살' 난전 양상의 16비트 퍼스컴 시장」, 1985.06.20.

_____, 「하루 빨리「컴퓨터백화점」을」, 1988.12.13.

_____, 「中 IT산업의 용광로' 선전 가보니」, 2015.04.14.

백미숙(2011), 「1950년대 생방송 텔레비전 HLKZ - '미국화'와 '잡종화」, 한국 방송의 사회문화사-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방송학회 편, 과주: 한울.

백옥인(2008), 「한국 소비사회 형성과 정보사회의 성격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77: 199-225.

_____(2013), 『컴퓨터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역사박물관(2010), 『세운상가와 그 이웃들: 산업화의 기수에서 전자만물시장까지』,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서정욱(1996), 『미래를 열어온 사람들: 통신과 함께 걸어온 길』,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서현진(1997), 『처음쓰는 한국컴퓨터사』, 서울: 전자신문사.

손정목(2007),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1』, 과주: 한울.

송도영(2009), 「청계천 공구상가의 형성과 변화」, 『淸溪川, 청계고가를 기억하며』, 전우용·김기호·송도영·강우원·오유석·진양교·송인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마티.

송성수 편(1995),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기술론 입문』, 서울: 녹두.

송은영(2009), 「문화 생산으로서의 자기현시 - 인터넷 문화의 기원, PC통신과 하이텔의 마니아들」, 작가세계.

_____(2013a), 「1970년대 여가문화와 대중소비의 정치」, 현대문학의 연구 50: 39-72.

_____(2013b), 「1960년대 여가 또는 레저 문화의 정치」, 한국학논집 51: 71-98.

송재희·신동윤·박영주(1995), 『정보사회가 오면 난 어떻게 되지? 사이버 세계의 놀이와 아름다움』, 서울: 지식공작소.

안창모(2005), 「세운상가 - 태평양전쟁의 사생아, 광복 60년 극단의 도시 삶이 펼쳐졌던 곳」, 건축과 사회 2: 248-58.

유하(1995), 『세운상가 키드의 사랑: 유하 시집』, 서울: 문학과지성사.

윤상길(2011), 「1960년대 한국 라디오 테크놀로지의 '부락화」, 『한국 방송의 사회문화사 -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방송학회, 과주: 한울.

윤태진(2007), 「텍스트로서의 게임, 참여자로서의 게이머 - 디지털게임의 문화연구적 접근」, 언론과 사회 15 (3): 96-130.

윤희섭 외(2012), 『한국 게임의 역사: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게임의 기적』, 성남: 북코리아.

윤호영(2011), 「한국 인터넷의 특징: 소통기반 정보축적 및 유통 문화」, 한국사회학 45 (5): 61-104.

이교동(2000), 「세운상가 '뽕판' 그리고 록 마니아의 창시자들」, 월간 말.

이길호(2012), 『우리는 디씨』, 이매진.

이동연(2009), 「세운상가의 근대적 욕망 - 한국적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변형과 굴절」, 사회와 역사 82: 249-82.

이동연·조동원·김일립(2015), 『한국·일본·대만·홍콩의 전자상가와 동아시아 디지털 문화형성 결과 보고서』, 아시아문화정보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이세영(2005), 「세운상가, 한국근대성의 공간적 알레고리」, 문화과학 41: 194-215.

이은미 외(2003), 『디지털 수용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임근영(2003), 「한미 지식재산권 협상의 역사적 고찰」, 창작과 권리 30: 126-51.

임중수(2008), 「1970년대 텔레비전, 문화와 비문화의 양가성」, 언론과 사회 16 (1): 49-85.

전경란(2015), 「게임의 도입과 게임문화의 형성 맥락에 대한 고찰」, 한국웹니스학회지 10 (1): 127-37.

전자산업 50년사 편찬위원회(2009), 『기적의 시간 50: 1959-2009 대한민국 전자산업 50년사』, 서울: 전자신문사.

정현암(2006), 「도심 부적격 상업기능의 재배치계획에 관한 연구: 청계천변 전자·전기상 이전계획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조동원(2013), 「능동적 이용자와 정보기술의 상호구성: 전자계시판 이용자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1 (1): 184-237.

_____(2014), 「이용자의 기술놀이: 개인용컴퓨터 초기 이용자의 해킹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2 (1): 224-72.

_____(2015), 「한국의 디지털 문화사 - 컴퓨터의 도입과 대중화를 중심으로」, 사

- 회와역사 106: 183-216.
- _____(2017), 「1980년대 한국의 인터넷 기술 도입과 개방·공유·참여의 디지털문화 형성」, 언론과 사회 25 (1): 97-140.
- 조한혜정 외(2007), 『인터넷과 아시아의 문화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조형래(2014), 「컴퓨터의 국가 - 1980년대 한국의 PC 생산을 둘러싼 기억과 신화」, 한국문화연구 47: 433-73.
- 주윤정(2016), 「교육열과 출세: ‘치맛바람’과 ‘개천에서 용나는 꿈’을 통해 본 한국의 가족」, 『주제어로 본 한국 현대사』, 박명규·김태호·조석곤·정근식·주윤정·강명구·서호철·임동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컴퓨터학습, 「장사동 아이들의 여름」, 1984.08.
- _____, 「이달의 인터뷰: 정보화 사회의 교량역 - 세운상가 희망전자」, 1984.11.
- _____, 「발행인의 편지: 한국형 PC개발에 거는 기대」, 1985.03.
- 허준석(2006), 『재미의 비즈니스: 경제학으로 본 게임 산업』, 서울: 책세상.
- 게이츠, 빌(1995), 『(빌게이츠의) 미래로 가는 길』, 이규행 옮김, 서울: 삼성.
- 기어, 찰리(2006), 『디지털 문화: 튜링에서 네오까지』, 임산 옮김, 루비박스.
- 네그로폰테, 니콜라스(1995), 『디지털이다』, 백옥인 옮김, 광명: 커뮤니케이션북스.
- 바이커, 위비, 존 로, 토마스 휴즈(1999), 『과학 기술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송성수 옮김, 새물결.
- 순야, 요시미(2005), 『소리의 자본주의: 전화, 라디오, 축음기의 사회사』, 송태욱 옮김, 서울: 이매진.
- 아즈마, 히로키(2007),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오타쿠를 통해 본 일본 사회』, 파주: 문학동네.
- 터클, 세리(2003), 『스크린 위의 삶: 인터넷과 컴퓨터 시대의 인간』, 최유식 옮김, 서울: 민음사.
- Chesterman, John, and Andrew Lipman. 1988. *The Electronic Pirates: Do-It-Yourself Crime of the Century*. Routledge.
- Consalvo, Mia. 2013. “Unintended Travel: ROM Hackers and Fan Translations of Japanese Video Games.” In *Gaming Globally*, edited by Nina B. Huntemann and Ben Aslinger, 119–38. Palgrave Macmillan US.
- Ensmenger, Nathan. 2012. “The Digital Construction of Technology: Rethinking the History of Computers in Society.” *Technology and Culture* 53 (4): 753–76.
- Haddon, Leslie. 1988. “Electronic and Computer Games: The History of an Interactive Medium.” *Screen* 29 (2): 52–73.
- Haring, Kristen. 2006. *Ham Radio's Technical Culture*. The MIT Press.
- Huhtamo, Erkki. 2000. “From Cybernation to Interaction: A Contribution to an Archaeology of Interactivity.” In *The Digital Dialectic: New Essays on New Media*, edited by Peter Lunenfeld. The MIT Press.
- Huhtamo, Erkki, and Jussi Parikka, eds. 2011. *Media Archaeology: Approaches, Applications, and Implications*. 1st 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tzenbach, Christian, Sarah Herweg, and Lies van Roessel. 2016. “Copies, Clones, and Genre Building: Discourses on Imitation and Innovation in Digital Gam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0 (0): 22.
- Keane, Michael, and Elaine Jing Zhao. 2012. “Renegades on the Frontier of Innovation: The Shanzhai Grassroots Communities of Shenzhen in China's Creative Economy.”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53 (2): 216–30.
- Kwak, Heui-Jeong. 2002. “A Turning Point in Korea's Urban Modernization: The Case of the Sewoon Sangga Development.”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Lindtner, Silvia, and David Li. 2012. “Created in China: The Makings of China's Hackerspace Community.” *Interactions* 19 (6): 18–22.
- Nobuoka, Jakob. 2010. “User Innovation and Creative Consumption in Japanese Culture Industries: The Case of Akihabara, Tokyo.”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92 (3): 205–18.
- Parikka, Jussi. 2008. “Copy.” In *Software Studies: A Lexicon*, by Matthew Fuller. MIT Press.
- Peters, Benjamin. 2016. “Digital.” In *Digital Keywords: A Vocabulary of Information Society and Culture*, edited by Benjamin Pete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icard, Martin. 2013. “The Foundation of Geemu: A Brief History of Early Japanese Video Games.” *Game Studies* 13 (2). <http://gamestudies.org/1302/articles/picard>.

- Schafer, Mirko Tobias. 2011. *Bastard Culture! How User Participation Transforms Cultural Production*. Amsterdam University Press.
- Söderberg, Johan. 2008. *Hacking Capitalism: The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Movement*. Routledge.
- Swalwell, Melanie. 2012a. "The Early Micro User: Games Writing, Hardware Hacking, and the Will to Mod." In. *Proceedings of DiGRA Nordic 2012 Conference: Local and Global—Games in Culture and Society*.
- _____. 2012b. "Questions about the Usefulness of Microcomputers in 1980s Australia." *Media International Australia*, Incorporating Culture & Policy, no. 143 (May): 63–77.
- Takahashi, Yuzo. 2000. "A Network of Tinkerers: The Advent of the Radio and Television Receiver Industry in Japan." *Technology and Culture* 41 (3): 460–84.
- Tinn, Honghong. 2011. "From DIY Computers to Illegal Copies: The Controversy over Tinkering with Microcomputers in Taiwan, 1980–1984." *IEEE Annals of the History of Computing*.

국 문 초 록

청계천 전자상가, 복제의 기술문화, 디지털문화의 형성

조동원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이 글은 한국의 디지털문화 초기 형성의 도시공간적 토대로서 1970-1980년대 청계천 전자상가에서 벌어진 기술문화의 역동을 고찰한다. 아래로부터의 디지털문화 형성 과정으로서 전기·전자 부품, 제품, 기기와 시청각 미디어 콘텐츠의 복제·조립·제조·판매가 이루어진 전자상가에서 중소기업 기술자와 초기 이용자가 벌인 전자오락기,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변용, 개발의 기술문화를 추적한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의 특성을 살펴보고 기술문화(론)의 의미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처음 나타난 특정한 도시공간으로서 전자상가에 주목한다. 청계천 전자상가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괄하면서 한국의 디지털문화 형성의 근거지가 된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제시한다. 그에 이어, 청계천 전자상가가 1970년대 후반부터 전자오락기와 개인용 컴퓨터를 복제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처음 보급하고, 그와 같은 신기술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전자·정보 기술 취미를 갖는 이용자를 키워내는 동시에, 동아시아 대중문화 흐름의 비공식적 관문으로 기능한 바를 살펴보면서 이 곳이 디지털문화 초기 형성의 기술문화적 도시공간이었음을 주장한다. 결국 한국의 디지털문화는,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이 대중화된 이후 사이버공간과 같은 비물질적인 공간에서가 아니라, 청계천 전자상가라는 역사적이고 물질적인 도시공간을 토대로 형성되었고, 전자상가는 새로운 기술이 대중문화로 자리잡게

하는 공간적 매개로 기능했다.

주제어 : 청계천 전자상가, 디지털문화, 기술문화, 전자오락, 개인용 컴퓨터

Abstract

Cheonggyecheon electronics market, a technical culture of copying, and the shaping of digital culture in Korea

Jo, Dongwon(Postdoctoral researcher,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ungkonghoe University)

This research argues that Korean digital culture has taken place and sprung up in the Cheonggyecheon electronics market, also known as Sewoon Sangga, in Seoul, South Korea. It is a physical and material space where popular electronic/information technologies as a means of technical cultural reproduction had first been diffused and the early digital user had come into being by late 1980s. The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First, I discuss the characteristic of the digital,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chnical culture and the electronics market. Then I trace the brief history and features of Cheonggyecheon electronics market; for the second part, I investigate how the popular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electronic game and personal computer were introduced and distributed by Cheonggyecheon technicians' copying and modifying them, and how the early digital, active user appeared on the horizon around the markets in the 1980s. It also includes a discussion of how the electronics markets in East Asia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as an informal port to facilitate the technical cultural flows in the region, while preceding, and setting up the foundation of, the current Asian cultural flows. I conclude that the digital culture in Korea has emerged, rather than out of immaterial space like cyberspace since the Internet has been introduced in the mid-1990s, on the material and physical

space of Cheonggyecheon electronics market, while this unique place has spatially mediated the configuration of new digital technology in the popular culture.

Key words: Cheonggyecheon electronics market, digital culture,
technical culture, electronic game, personal computer

일반논문

- | 인천시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요인
- Juhn-Murphy-Pierce 분해기법을 통한 실증분석 - 조성철
- | 사회적기업과 노동조합의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 청주시 사회적기업 삶과환경 사례를 중심으로 - 장효안
- | 시나리오별 부산시 연안 침수 분석 및 피해규모 산정 연구
여성준 · 이창현
- | 서울 강남지역 부모의 공감적 양육 및 청소년 자아탄력성에 대한 실태 분석 박신영 · 양미라
- | 지속가능한 사회와 문화예술
-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 뮤지엄의 역할 - 민경선
- |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가로경관 선호도 분석
- 남태령 가로경관을 사례로 - 허한결 · 김호걸 · 길승호
- |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 인천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 신상준

인천시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요인

- Juhn-Murphy-Pierce 분해기법을 통한 실증분석 -

조성철*

조
성
철

I. 서론

II. 성별임금격차의 요인분해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 횡단면 성별임금격차의 요인분해
2. 시점 간 성별임금격차 변화의 요인분해
3. 본 연구의 목표

III. 연구방법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IV. 분석결과

1. 성별 · 시점별 임금회귀식 추정결과
2. 2008년-2016년 인천시 성별임금격차 변화의 요인분해

V. 논의 및 결론

I. 서론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는 임금이나 경제활동참여율, 관리직 비중 등 다양한 노동시장 지표에서 일정 수준의 양성평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는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남성에 비

.....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 교신저자(E-mail: sccho@krihs.re.kr, Tel: 044-960-0153)

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수치가 바로 성별임금격차일 것이다. 2017년 1월 인천시가 발표한 「2016 인천 성인지 통계」 보고서는 인천시의 성별임금격차가 긍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윤연숙·양성욱 2016).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은 남성 평균임금의 63.9%만을 받고 있다. 성별임금격차는 직종마다 큰 편차를 갖고 있는데, 서비스종사자나 판매종사자 중에는 여성의 남성대비 상대적 임금이 90% 수준을 상회했던 데 반해, 기능직종에서는 남성이 100% 임금을 수여할 때 여성이 45.8%만의 임금만을 평균적으로 수여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인천의 성별임금격차 추이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인천시는 성별 임금격차,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정규직근로자비율 격차로 측정된 경제활동분야 성평등 지수에서 하위 다섯 개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저조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같은 연구의 2010년 지표 기준 평가에서도 인천은 경제활동분야 측면에서 성평등 지수가 하위 세 번째로 열악한 광역시도에 꼽히는 등 여성근로자가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인 지역노동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이상의 수치는 인천의 성별임금격차가 양호하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정책 개선의 방향을 지시하기에는 구체성이 떨어진다.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간 인천시 성별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해온 요인이 무엇이며, 임금격차의 완화를 제약하고 있는 요인은 또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위에 언급한 보고서들은 인천시 여성근로자의 임시직 비율이 매우 높다거나, 관리자 직급 여성비중이 저조하다는 등의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어떠한 요인을 개선함이 인

천시 여성근로자의 상대적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일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변수 간의 관계를 통제하는 구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의 임금근로자 표본을 이용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인천시 성별임금격차 변화 추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다. 해당 기간 인천시의 성별임금격차는 노동자의 숙련 특성과 직종 특성을 통제한 조건에서 5.7% 가량 완화되었다. 본 연구의 목표는 5.7%의 완화를 이끈 주요한 동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며, 임금격차 완화가 더 확대되는 것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조직된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선행연구의 흐름이 고찰될 것이고, 장의 말미에 본 연구의 접근이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바가 무엇인지 제시될 것이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하는 임금회귀식 모형의 논리 및 이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 자료의 설명이 뒤따른다. 다음으로 연구의 4장에서는 분석결과 및 수치에 대한 해석이 제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주요한 발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이 논의된다.

II. 성별임금격차의 요인분해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 횡단면 성별임금격차의 요인분해

노동경제학 문헌은 관찰된 성별임금격차에서 어느 만큼이 진정한 의미의 차별이라 규정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에 오랜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 같은 접근의 효시로서 Oaxaca(1973)는 성별간 임금격차에서 교육

이나 경력 등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숙련 (또는 생산성) 격차로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분해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overline{\ln W^M} - \overline{\ln W^F} = \hat{\beta}^M(\overline{X^M} - \overline{X^F}) + \overline{X^F}(\hat{\beta}^M - \hat{\beta}^F) \quad (1)$$

위 식에서 M과 F는 각각 남성과 여성을 표시하며, W는 임금, X는 교육년수와 경력년수 등 근로자의 숙련을 대표하는 설명변수의 벡터, β 는 설명변수에 대응하는 계수 값의 벡터를 각각 의미한다. 좌변은 로그값을 취한 성별 평균임금의 차분이므로 남성의 상대적인 임금 프리미엄을 뜻하게 된다. 이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근로자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개인이 보유한 숙련에 대해 동일한 보상수준($\hat{\beta}^M$)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순수하게 남성과 여성의 숙련특성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격차의 부분이다. 이어서 우변의 두 번째 항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숙련수준($\overline{X^F}$)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보유한 숙련에 대한 보상수준(계수값)이 성별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금격차의 부분을 의미한다.

이 같은 분석에 기초해 Oaxaca(1973)는 숙련 격차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 다시 말해 동일한 숙련을 보유했더라도 남성이 여성에 비해 누리는 임금 프리미엄을 노동시장에서의 차별(discrimination)이라 규정했다. 이 같은 구분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숙련 격차로 설명되는 부분이 성별임금격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성별 간 인적자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 투자와 유인 설계에 정책적인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동일 숙련을 보유했더라도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상이한 보상이 주어지는 ‘차별’이 성별임금격차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면 차별의 제도적·문화적 기제를 해소하기 위한 더 신중한 접근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분석적 장점에 힘입어 Oaxaca(1973)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경제학 문헌에서 가장 많은 인용 수를 기록한 연구의 하나가 되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문헌이 Oaxaca(1973)의 방법론을 적용해 지역노동시장의 성별 임금격차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허식 2003; 정진화 2007; 최강식·정진화 2007). 어떠한 자료로 노동자 표본을 수집하는지에 따라, 또 어떠한 지표를 사용해 노동자들의 숙련이나 기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특성을 통제하는지에 따라 분석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최강식·정진화(2008)의 연구에서는 교육년수나 경력년수 등의 숙련 조건으로 설명되지 않는 성별임금격차의 비중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진화(2007)는 설명되지 않는 임금격차 비중이 직종마다 상이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직종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범위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추정값을 보고하고 있다.

2. 시점 간 성별임금격차 변화의 요인분해

이상의 문헌은 성별임금격차의 요인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에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횡단면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어 시간에 따른 임금격차의 변화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Juhn, Murphy & Pierce(1993)는 Oaxaca(1973)의 기본적인 논리를 계승하되 시점 간 성별임금격차의 변화를 설명하는 분해식을 제시한다. 이들이 제시한 수식의 주된 구조를 표현하면 아래 식 (2)와 같다.

$$D_t - D_{t-1} = (\Delta X_t - \Delta X_{t-1})\hat{\beta}_t + \Delta X_t(\hat{\beta}_t - \hat{\beta}_{t-1}) + (\Delta \hat{\theta}_t - \Delta \hat{\theta}_{t-1})\hat{\sigma}_t + \Delta \hat{\theta}_t(\Delta \hat{\sigma}_t - \Delta \hat{\sigma}_{t-1}) \quad (2)$$

위 식에서 좌변의 $D_t - D_{t-1}$ 은 t기의 성별임금격차에서 t-1기의 성별임금

격차를 감한 값, 다시 말해 $t-1$ 기에서 t 기 사이의 성별임금격차 변화분을 의미한다. 이어서 우변의 $\Delta X_t - \Delta X_{t-1}$ 는 t 기의 성별 간 숙련변수(교육년수나 경력년수 등) 격차에서 $t-1$ 기의 숙련격차를 감한 값이다. 즉, 첫 번째 항은 성별 간의 숙련격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 혹은 확대되었는지에 따라 발생한 성별임금격차의 변화분을 의미한다. 이제 두 번째 항의 $\widehat{\beta}_t - \widehat{\beta}_{t-1}$ 는 시점 간 숙련에 대한 회귀계수 값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뜻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번째 항은 남성과 여성의 숙련이 변화 없이 동일하다고(ΔX_t) 가정할 때, 숙련에 대한 시장의 보상이 시점 간 변화함에 따라 발생한 임금격차의 변화량이라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설명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교육년수라 하자. 교육년수는 노동자의 임금에 정(+)의 계수 값을 갖는다. 만약 지난 10년 동안 남성에 비해 여성의 교육년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탓에 임금격차가 완화되었다면 이 효과는 위 식 (2)의 우변 첫 번째 항에 포착될 것이다. 본 연구는 Juhn, Murphy, & Pierce (1993)의 용어를 빌어 효과를 ‘관측된 자원효과(observed endowment effect)’라 칭할 것이다. 반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교육수준이 $t-1$ 기에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때, 고학력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남녀를 불문하고) $t-1$ 기에서 t 기 사이에 증가함에 따라 성별임금격차가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면 이는 식 (2)의 우변 두 번째 항에 포착된다. 이는 ‘관측된 가격효과(observed price effect)’라 명명된다.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은 앞의 두 항에 비해 그 의미하는 바가 덜 직관적이다. 먼저 셋째 항의 의미를 수리적으로 해석하면, 앞의 두 항에서 관측된 근로자 특성이 통제된 뒤에 남성근로자 임금 잔차항 분포에서 여성근로자 임금 잔차항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Juhn, Murphy & Pierce(1993)는 이 세 번째 항을 모형에서 측정되지 않는 남성 근로자 및 여성근로자의 특성차이 변화가 성별임금격차 변화에 미친 효과라고 해석한다. 반면에, 식 (2)의 네 번째 항은 관측되지 않는 근로자 특성

이 동일하더라도($\Delta \hat{\theta}_t$) 이러한 잠재된 특징에 대한 시장의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성별임금격차의 변화분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교육수준이나 경력년수 등의 관측변수로 포착되지 않는 근로자 개인의 창조성이 임금을 설명하는 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분석기간 동안 남성에 비해 여성 근로자의 평균적인 창조성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가 완화되었다면 이는 식 (2)의 세 번째 항에서 포착된다. 다시 만약에 분석기간 동안 근로자의 창조성에 대한 시장의 보상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t-1$ 기 기준 남성보다 더 높은 창조성을 평균적으로 갖고 있던 여성 집단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증가했다면 이는 식 (2)의 네 번째 항에서 포착되는 효과일 것이다. Juhn, Murphy, & Pierce (1993)의 용어를 빌어, 본 연구는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각각 관측되지 않는 자원효과와 가격효과로 명명한다.

Oaxaca(1973)류의 횡단면 분석만큼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JMP(Juhn-Murphy-Pierce) 분해식 역시 일련의 국내외 문헌에 적용되어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의 시점 간 변화를 해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Blau & Kahn (1997)은 1979년에서 1988년까지 미국에서 전개된 성별임금격차의 완화를 JMP 분해식을 통해 설명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성별임금격차 완화의 가장 높은 비중은 여성노동자들의 교육수준 및 경력 증가에서 기인했으며, 다음으로 노동조합 가입자 비중의 감소 등 남성근로자가 집중된 제조업 부문에서 진행되었던 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남성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을 감소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보다 최근의 사례로서 Bacolod & Blum (2010)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의 성별임금격차 완화 추이를 분석하는 데 JMP 분해식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성별임금격차 완화의 80% 이상이 앞서 정의한 ‘관측된 가격효과’, 다시 말해 근로자가 보유한 숙련에 대한 노동시장 보상체계가 변화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Bacolod & Blum

(2010)은 기술변화 및 세계화의 영향으로 기계를 다루는 신체적인 숙련(motor skills)의 가치가 하락한 반면, 자료를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의 인지적 숙련(cognitive skills)의 가치는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을 관찰했다. 따라서 신체적 숙련에 상대적으로 높게 특화되어 있었던 남성근로자의 상대적 임금은 감소한 반면, 인지적 숙련에 대한 특화 경향이 높은 여성근로자들의 상대적 임금은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해석이다.

3. 본 연구의 목표

일반적으로 통계모형은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 비해 설명되는 부분이 많을수록 좋은 모형이라 평가받는다. JMP 분해식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JMP 분해식이 관측되지 않는 특징의 변화에 따른 임금격차의 변화를 구분하고 있으나, 관측되는 효과에 비해 관측되지 않는 효과의 해석이 훨씬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JMP 분해식을 적용한 그간의 연구들은 근로자의 임금을 설명해낼 새로운 요인들을 모형에 추가하려 애썼는데, 본 연구는 직종변수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고자 한다.

성별임금격차를 설명함에 직종의 중요성을 조명한 논의의 흐름은 노동경제학보다 경제사회학 문헌에서 두드러진다(England 1992; Huffman 2004). 이들 문헌은 남성에게 어울리는 직종과 여성에게 어울리는 직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어떻게 제약하는지를 분석해왔다. 이들 문헌에서 반복된 관찰은 남성들의 비중이 높은 관리직이나 기술직 등의 직종에서 여성근로자의 임금 패널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반면에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사회적으로도 '여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라는 편견이 존재하는 서비스·판매 직종의 경우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 경향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는 관찰이 다수 축적되어 있다

(Martin 1980; Zimmer 1988; Cohen, Huffman & Knauer 2009). 이렇게 직종 성비에 따라 엇갈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제도적 차별의 기제는 성별에 따른 직종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을 부추기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기회를 제약하고 성별임금격차를 고착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같은 관점은 인천시 성별임금격차의 추이를 설명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앞서 소개한 「2016 인천 성인지 통계」는 서비스·판매 직종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낮은 반면, 남성중심 직종인 기능직에서는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임금을 수여하고 있다는 패턴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는 경제사회학의 직종분리 가설에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추세라 여길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임금회귀식 모형에 직종변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분석 모형을 설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직종에 따른 성별임금격차의 차이가 과거에 비해 심화되었는지 혹은 완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추세가 인천시 노동시장 전체의 성별임금격차를 변화시키는 데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모형

JMP 분해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별·시점별 임금회귀식이 추정되어야 한다. 임금회귀식은 교육년수와 경력년수를 통해 자연로그값을 취한 시간당 임금을 설명하는 Mincer(1974)의 식을 기본으로 하되,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설명력이 검증된 근로자 속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

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근로자의 직종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분석모형의 열개는 다음과 같다.

$$\ln W_i = \beta_0 + \beta_1 EDU_i + \beta_2 EXP_i + \beta_3 TEN_i + \beta_4 REG_i + \beta_5 MAR_i + BO + \epsilon_i \quad (3)$$

위 식에서 W는 노동자 개인의 시간당임금을 의미한다. 노동경제학에서는 시간당임금을 근로자가 공급하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으로 해석하는데, 일반적으로 임금분포가 긴 꼬리 형태의 고소득자 분포를 드러내는 형태로 편포(skewed)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보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자연로그값을 취한다. 종속변수에 자연로그값을 취할 경우, 우변 설명변수의 계수값 해석이 더 직관적으로 분명해지는 효과 역시 있다. 이어서 우변에는 Mincer(1974)의 기본적인 논리를 계승해 교육년수(EDU)와 경력년수(EXP), 근속년수(TEN)를 포함시켰다. 경력년수는 노동자가 최종교육을 수료한 이후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 전체를 의미하는데 ‘연령-교육년수-6’의 식으로 계산하고, 근속년수는 현 직장에서 노동자가 근로한 기간을 직접적으로 측정한다. 이어서 근로자 임금과 강하게 상관되어 있다고 예상되는 통제변수로서 정규직 여부(REG)와 결혼여부(MAR)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변 마지막의 O와 B는 각각 근로자가 소속된 직종더미벡터와 이에 대응되는 계수값의 더미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제 식 (3)의 회귀식을 성별·연도별로 추정han 이후, 앞서 소개한 Juhn, Murphy, & Pierce (1993)의 분해식인 식 (2)를 따라 성별임금격차의 변화량이 관측된 자원효과·가격효과 및 관측되지 않는 자원효과·가격효과로 구분할 것이다.

2. 분석자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앞 소절에서 소개된 모형을 검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이 집계·보고하는 「지역별 고용조사」의 인천시 근로자 표본을 분석할 것이다.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JMP 분해식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두 개 시점의 자료가 필요하며, Juhn, Murphy, & Pierce (1993)를 비롯한 주요 선행연구들은 대개 15년에서 20년 사이의 성별임금격차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역별 고용조사」의 전국 표본을 매년 수집해 공개하고 있는데 자료가 최초 공표된 시점은 2008년이며 가장 최근의 공개자료는 2016년 조사자료이다. 2008년 자료와 2016년 자료는 표집방식이나 조사도구 측정방식에 있어 완벽하게 호환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금격차의 변화 추이를 가용자료 범위에서 최대한 분석에 포함하기 위해 2008년과 2016년 자료를 분석에 사용할 표본자료로 선정하였다.

지역별 고용조사의 2008년 전국 표본 전체에서 인천시에 거주하는 표본의 수는 10,964명이며, 2016년 전국 표본에서 인천시 거주자 표본의 전체 수는 13,657명이다. 2008년과 2016년 조사 모두 지역별 주민등록인구수에 기초한 비례할당표집이 이뤄졌다. 다만, 2016년 조사의 표본 수가 많은 것은 2008년 조사에 비해 2016년 조사에서 전체 표본의 수가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는데,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여기서 본 연구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떠한 형태든 경제활동에 참여해 소득을 발생시킨 근로자만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소득 집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나 가사노동자·군인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만을 분석한다. 더불어 교육년수와 근속년수 등 주요 변수에 결측값을 갖고 있는 표본을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실증분석에 포함된 근로자 표본의 수는 2008년 표본에서 4,188명, 2016년 표본에서 6,093명으로 합계 10,281명이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노동자의 소득 자료를 포함하는 대규모의 표본이라

는 점에서 공표 이래 다수의 국내 문헌에 활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연구 사례는 김정우·김기민(2015)의 연구를 언급할 수 있다. 이들은 지역별 고용조사의 인천시 거주 임금근로자 표본을 활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요인을 분해했다. 분석방법은 앞서 소개한 Oaxaca (1973)의 임금격차 분해식이 적용되었다. 즉, 본 연구처럼 시점간 임금격차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한 시점에서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발생요인을 분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김정우·김기민(2015)에서 특기할 점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와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비교했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지역별 고용조사의 적합성이 충분히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자료의 성별·연도별 기술통계량을 비교한 결과이다. 2008년과 2016년 모두 남성근로자의 교육수준·경력년수 평균이 여성근로자의 수준을 상회했으나, 시점 간 상승 폭은 여성근로자의 경우에 더 두드러졌다. 근속년수의 경우에는 여성근로자에 비교한 남성근로자의 우위가 현저했는데, 이 역시 상승률은 여성근로자의 경우가 남성근로자의 경우보다 소폭 높았다. 정규직 여부의 경우에도 2008년과 비교할 때 2016년에 인천시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비중이 남성근로자의 수준을 상당 부분 따라잡은 것이 관찰되나 여전히 성별 간 격차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직종 비중에서는 먼저 관리직 비중의 현격한 성별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역시도 여성근로자의 임금 증가 폭이 남성근로자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사무직 비중에서는 남성근로자의 경우 시점 간 비중이 감소한 반면 여성근로자는 비중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반대로 기술직 비중에 있어서는 남성근로자의 시점 간 비중이 증가하고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소폭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표 1〉 분석자료의 성별·연도별 기술통계량 비교

변수명	2008년				2016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로그시간당임금	9.088	0.562	8.670	0.504	9.464	0.530	9.103	0.480
교육년수	12.888	2.948	12.084	3.137	13.496	2.738	12.825	2.978
경력년수	22.272	12.745	21.170	14.505	23.947	13.578	23.275	15.289
근속년수	5.545	7.182	2.938	4.454	6.366	7.824	3.892	5.312
정규직 여부	0.706	—	0.504	—	0.769	—	0.627	—
결혼 여부	0.704	—	0.577	—	0.675	—	0.563	—
관리직 여부	0.019	—	0.002	—	0.022	—	0.003	—
전문직 여부	0.167	—	0.205	—	0.185	—	0.215	—
사무직 여부	0.203	—	0.225	—	0.187	—	0.245	—
서비스·판매직 여부	0.100	—	0.247	—	0.124	—	0.265	—
기술직 여부	0.297	—	0.155	—	0.324	—	0.147	—
표본 수	2,473		1,715		3,466		2,627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08년 표본과 2016년 표본에서 임금 및 주요 속련변수에 결측값을 갖지 않은 인천시 거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표 2〉 성별·연도별 임금회귀식 추정 결과

변수명	2008년		2016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교육년수	0.043***	0.046***	0.037***	0.043***
경력년수	-0.003***	0.001	-0.002***	0.001
근속년수	0.022***	0.026***	0.022***	0.027***
정규직 여부	0.180***	0.134***	0.180***	0.148***
결혼 여부	0.250***	0.044**	0.166	0.046***
관리직 여부	0.392***	0.407**	0.618***	0.463***
전문직 여부	0.197***	0.285***	0.302***	0.279***
사무직 여부	0.211***	0.285***	0.263***	0.263***
서비스·판매직 여부	-0.022	0.046	0.043*	0.042**
기술직 여부	0.060***	0.008	0.147***	0.01
모형 설명력 (R2)	0.408	0.377	0.457	0.45
표본 수	2,473		3,466	

자료 : 지역별 고용조사 2008년 표본과 2016년 표본에서 임금 및 주요 속련변수에 결측값을 갖지 않은 인천시 거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직종 변수의 준거 집단(reference group)은 단순노무직임

주 : ***, **, *은 각각 신뢰수준 99%, 95%, 9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임을 나타냄

IV. 분석결과

1. 성별·시점별 임금회귀식 추정결과

〈표 2〉는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를 연도별로 구분한 임금회귀식의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모형이 시간당임금의 분산을 설명한 비중은 적게는 37.7%에서 많게는 45.7%를 기록했는데 이는 여타 연구의 임금회귀식 추정결과와 비교해 대등한 수치라 판단된다.

대부분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기록한 가운데, 2008년과 2016년의 경우 모두에서 교육년수 및 근속년수가 시간당임금에 기여하는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근로자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16년의 경우를 비교할 때, 교육년수가 1년 증가할 때마다 여성근로자의 시간당임금은 4.3% 증가한 데 비해 남성근로자의 시간당임금은 3.7% 증가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근속년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16년의 분석결과에 기준할 때, 근속년수 1년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률은 여성의 경우가 2.7%, 남성의 경우가 2.2%로 무시하기 어려운 차이를 드러냈다.

반면 임금수준에 강한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되었던 정규직 여부 및 관리직 여부 변수의 효과는 시점마다 엇갈리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2008년에는 두 변수 모두 남성근로자보다 여성근로자의 임금 증가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 추정되었으나, 2016년의 경우에는 남성근로자의 임금 증가에 더 뚜렷한 효과를 드러냈다. 사무직 여부의 경우에는 2008년 분석에서 여성근로자의 임금 증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드러냈으나, 2016년 분석에서는 성별 간 대등한 수준의 효과가 추정되었다. 이어서 서비스·판매직 여부는 2016년의 경우에만 신뢰수준 90%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의 효과를 드러냈으나 효과의 정도는 매우 약했다. 마지막으로 기술직 여부는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만 뚜렷한 정(+)의 효과를 드러

냈을 뿐, 여성근로자에게는 의미 있는 임금증가 효과를 기록하지 못했다.

2. 2008년-2016년 인천시 성별임금격차 변화의 요인분해

앞 소절에서 제시한 회귀식 추정결과에 기초해 성별임금격차 변화의 요인분해를 수행한 결과가 〈표 3〉부터 〈표 5〉까지 정리되어 있다. 먼저 〈표 3〉은 임금격차의 변화를 관측된 효과(설명변수의 성별격차와 회귀계수 값의 성별격차로 인한 효과)와 관측되지 않은 효과(모형에서 설명되지 않는 잔차항의 분포 변화에서 기인하는 효과)로 구분해 제시한다. 먼저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발생한 성별임금격차의 완화 폭은 5.7%로 추정되었다. 여기서 관측된 효과에 기인하는 완화 폭은 3.3%인데 이는 전체 완화 폭의 약 58%에 해당한다. 이어서 관측되지 않은 효과에 기인하는 완화 폭은 전체의 약 42%에 해당하는 2.5%로 추정되었다.

〈표 3〉 JMP 분해를 통한 인천시 성별임금격차 변화(08~16) 요인분해 결과

구분	임금격차의 변화	관측된 효과 (E)	관측되지 않은 효과 (P)
총계	-0.057	-0.033	-0.025

본 연구는 관측된 효과에 대한 요인분해 결과에 해석을 집중할 것이다. 이제 〈표 4〉는 성별임금격차 완화에 대한 관측된 효과를 변수별로 분해해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관측된 효과로 인한 완화 폭 3.3%중에서 자원효과로 인한 완화는 2.5%이며 가격효과로 인한 완화는 0.8%라 추정되었다. 이 중에서 교육년수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완화 폭은 관측된 효과가 1.0%, 관측되지 않은 효과가 0.6%이다. 이를 예시로 들어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년수의 관측된 자원효과가 1.0%라는 것은 남성근로자에 비해 여성근로자의 교육년수 증가 폭이 더 빠르

〈표 4〉 성별임금격차 완화에 대한 관측된 효과의 요인분해 결과

구분	관측된 효과 (Q+P)	관측된 자원효과 (Q)	관측된 가격효과 (P)
총계	-0.033	-0.025	-0.008
교육년수	-0.01	-0.006	-0.004
경력년수	0.003	0.002	0.001
근속년수	-0.002	-0.003	0.001
정규직 여부	-0.011	-0.011	0.00004
결혼 여부	-0.013	-0.004	-0.009
관리직 여부	0.005	0.001	0.004
전문직 여부	-0.002	0.001	-0.003
사무직 여부	-0.011	-0.008	-0.003
서비스·판매직 여부	-0.009	-0.0001	-0.009
기술직 여부	0.018	0.002	0.015

〈표 5〉 성별임금격차 완화에 대한 관측되지 않은 효과의 요인분해 결과

구분	관측되지 않은 효과	관측되지 않은 자원효과	관측되지 않은 가격효과
총계	-0.025	-0.001	-0.024

게 전개된 까닭에 성별임금격차가 1.0% 좁혀졌다는 의미이다. 교육년수의 관측된 가격효과가 0.6%라는 것은 2008년에 비해 2016년에 고학력자에 대한 노동시장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했는데, 이러한 보상 체계의 변화로 인해 성별임금격차가 0.6% 좁혀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원효과보다는 가격효과가 성별임금격차의 완화에 기여한 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는 정규직 여부 변수에 대한 해석에서 두드러지는데, 가격효과는 미미한 반면 자원효과로 인한 성별임금격차의 완화 폭이 1.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서 기술통계량 추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대비 2016년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비중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설명되는 성별임금격차의 완화 폭이 1.1%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달리 말하면, 2008년과 비교해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비중에 변화가 없었다면 성별임금격차의 완화 폭은 5.7%가 아니라 4.6%였으리라

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일부 변수의 효과는 오히려 성별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경력년수의 경우 자원효과와 가격효과 모두가 성별임금격차의 확대에 소폭 기여했으며, 근속년수의 경우에도 가격효과로 인한 성별임금격차 확대 폭이 약 0.1%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회귀식에서 경력년수의 계수 값이 부(-)의 기호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력년수의 자원효과는 여성근로자의 경력년수 증가 폭이 남성근로자에 비해 두드러졌던 까닭에 오히려 성별임금격차의 완화가 제약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서 경력년수와 근속년수의 가격효과가 성별임금격차 확대에 기여했다는 의미는 경력과 근속이 증가함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이 여성보다 남성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성별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직종변수 중에서는 관리직 여부와 기술직 여부 변수가 인천시의 성별임금격차의 완화 추이를 제약한 주된 요인임이 드러났다. 특히 기술직 여부의 가격효과로 인한 성별임금격차 확대 폭은 1.5%에 달해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즉, 기술직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남성에게는 유리하고 여성에게는 불리한 보상구조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성별임금격차가 1.5%나 확대되었다는 의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직에 종사함으로써 인천시의 남성근로자는 임금 프리미엄을 누리지만, 여성근로자는 오히려 임금 패널티를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구조의 차별은 2008년에 비해 2016년에 훨씬 더 악화된 것으로 관찰된다. 제조업이 집중된 인천시 경제권에서 기술직에 대한 보상구조의 현격한 차이가 성별임금격차를 확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력 등의 기본적인 숙련 특성이 통제된 가운데 추정된 결과임을 감안할 때, 이는 기술직 및 생산직이 종사하는 현장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제도적인 진입장벽이나 조직적인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여부 변수에서는 성별임금격차의 완화에 기여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먼저 자원효과 측면에서는 사무직 여부 변수에서 높은 효과가 추정되었는데, 이는 여성근로자의 사무직 비중 증가가 빠르게 이뤄진 까닭에 성별임금격차가 0.8% 완화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격효과 측면에서는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여부 변수 모두에서 완화 효과가 관찰되었다, 즉, 이들 직종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을 분석결과로부터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5>는 관측되지 않은 효과에 대한 요인분해 결과를 보고한다. 관측되지 않는 효과는 설명변수별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표 4>와 달리 총계만 보고했다. 대부분의 효과는 자원효과보다는 가격효과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잠재적 특성(오차항의 분포 변화로 관측)에 대한 시장의 보상수준이 변화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가 2.4% 완화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효과는 말 그대로 관측하지 못한 효과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2.4%의 완화 효과를 발생시킨 주된 요인은 여성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보유했을 수 있는 능력(e.g., 예술성, 창의력, 기획력)에 대한 시장 보상이 증가한 데서 기인했을 수 있다. 혹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이끌었던 관찰되지 않는 특징에 대한 노동시장의 임금 패널티가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탓에 발생한 효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특징에는 가사노동에 대한 여성근로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이나, 여성근로자의 리더십에 대한 조직적인 편견 따위가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인천시 임금노동자의 성별임금격차가 완화된 까닭을 JMP 분해기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분석의 방법론은 학술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인천시 근로자 표본에 집중해 분석을 설계했다는 점에 실증적인 가치가 있다. 더불어 Oaxaca(1973)류의 횡단면 요인분해 방식과 비교할 때 JMP 분해기법과 같은 시점 간 임금격차의 요인분해는 시도된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문헌의 흐름에 의미 있는 기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이나 경력년수 등의 관측변수에 집중했던 기존 문헌들의 흐름과 달리, 직종변수의 도입을 통한 분석모형의 보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간의 이론적 논의를 확대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주요한 발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천시의 지난 10년 성별 임금격차 완화 추이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효과는 여성근로자 정규직 비중의 확대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천시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비중은 여전히 남성근로자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여성가족부(2015, 68)에 따르면, 인천시 여성근로자의 상용직 비율은 71.8%로서 전국평균인 77.6%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2008년에서 2016년까지 인천시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비중이 12%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이 성별임금격차 완화에 매우 효과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비중이 남성근로자와 대등한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다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이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임시직·파트타임 고용 비중이 높다는 문제는 단순히 조직의 차별과 편견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의 문제를 포함하는 거시적인 문제임을 인식하는

관점 역시 중요하다.

둘째로, 인천시의 성별임금격차 완화 추이를 ‘제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기술직 및 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남성에게 유리한 형태로 재편된 데에서 기인함이 드러났다. 즉, 남성 근로자는 동일한 직급 및 숙련을 갖춘 여성근로자에 비해 기술직·관리직에 종사함에 따른 임금 프리미엄을 더 높게 누리고 있는데, 그 격차가 2008년보다 2016년에 더 확대되었다는 의미이다. 기술직과 관리직은 대표적인 남성중심(male-intensive) 직종이다. 다시 말해 남성근로자의 비중이 여성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직종이다. 경제사회학자들은 이러한 남성중심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를 ‘Token’이라는 용어로 칭하며 이들 Token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물질적·비물질적 차별의 종류와 양상을 오랜 기간 연구해왔다. 예를 들어, Cohen, Huffman & Knauer(2009)는 관리직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이 남성근로자에 비해 받는 임금 패널티를 미국의 대규모 표본자료를 통해 분석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Zimmer(1988)와 Martin(1980)은 각각 교도소 교관과 경찰관이라는 남성중심적인 직종에서 여성근로자가 받는 패널티를 분석한 사례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이들 문헌과 달리 특정 직종에 분석을 집중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직무환경의 맥락을 짚어내기 어려우나, 큰 틀에서는 비슷한 현상을 지지하는 분석 결과라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천시에서 관리직과 기술직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남성근로자에게만 매우 높은 폭으로 증가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향후 연구는 구체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이며 이에 개입된 노동시장 차별의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탐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모형에서 실제 경력년수 대신 연령과 교육년수를 이용한 잠재적 경력년수를 사용했다는 점이 중요한 한계로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는 경력 단절을 고려한 실제 경력년수를 집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경제학 문헌들이 일반적으로 따르고 있는 관행이나, 남성에 비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이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의 편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경력년수의 효과를 해석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둘째로 본 연구가 분석한 지역별 고용조사는 노동조합 가입여부, 사업체 규모, 직종 세세분류 등 기존 문헌에서 임금과 의미 있게 상관되어 있다고 관찰되었던 변수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인천시 지역노동시장의 근로자 표본을 대규모로 확보하고 있는 희소한 자료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만, 한국노동패널 같은 자료와 비교할 때 조사도구의 폭이 협소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향후 더 다양한 노동시장 변수를 포함하는 대규모 표본자료로 본 연구의 모형을 재추정한다면 설명되는 효과의 비중이 증가할 뿐 아니라, 개별 추정치의 편의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접수)일: 2017. 05. 10 심사(수정)일: 2017. 05. 26 게재확정일: 2017. 06. 14

참 고 문 헌

김정우·김기민(2015), 「인천지역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분해」, IDI 도시연구 제 10호.
 여성가족부(2015),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윤연숙·양성욱(2016), 「2016 인천 성인지 통계」,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진화(2007), 「한국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변화」, 노동경제논집 제30권 제2호.
 최강식·정진화(2007), 「성별 소득격차의 분해 :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비교」, 경제학연구 제55권 제4호.
 허식(2003), 「산업과 직종에서의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원인분석」, 응용경제 제5권 제3호.

Bacolod, M. P., and B. S. Blum. 2010. Two Sides of the Same Coin Us “Residual” Inequality and the Gender Gap. *Journal of Human Resources* 45: 197-242.
 Blau, F., and L. Kahn. 1997. Swimming Upstream: Trends in the Gender Wage Differential in 1980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5: 1-42.
 Cohen, P. N., M. L. Huffman, and S. Knauer. 2009. Stalled Progress?: Gender Segregation and Wage Inequality among Managers, 1980-2000. *Work and Occupations* 36: 318-342.
 England, P. 1992. *Comparable Worth: Theories and Evidence. Social Institutions and Social Change*. New York: Aldine de Gruyter.
 Huffman, M. L. 2004. Gender Inequality across Local Wage Hierarchies. *Work and Occupations* 31: 323-344.
 Juhn, C., K. Murphy, and B. Pierce. 1993. Wage Inequality and the Rise in Returns to Skil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 410-442.
 Martin, S. E. 1980. *Breaking and Entering: Policewomen on Patrol*.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incer, J. 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Human Behavior and Social Institu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Oaxaca, R. 1973, The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the Urban Labor Market,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4: 693-709.

Zimmer, L. 1988. Tokenism and women in the workplace: The limits of gender neutral theory. *Social Problems* 35: 64-77.

국 문 초 록

인천시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요인

- Juhn-Murphy-Pierce 분해기법을 통한 실증분석 -

조성철(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인천시 성별임금격차 변화 추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다. 해당 기간 인천시의 성별임금격차는 노동자의 숙련 특성과 직종 특성을 통제한 조건에서 5.7% 가량 완화되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 같은 완화를 이끈 주요한 동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며, 임금격차 완화가 더 확대되는 것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의 임금근로자 표본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설계하였다. 연도별로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임금회귀식을 추정한 이후, Juhn-Murphy-Pierce 분해기법을 적용해 임금격차 변화의 방향 및 이에 기여한 각 요인들의 효과를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인천시의 지난 10년 성별임금격차 완화 추이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효과는 여성근로자 정규직 비중의 증가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인천시의 성별임금격차 완화 추이를 제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기술적 및 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남성에게 유리한 형태로 재편된 데에서 기인함이 드러났다.

주제어 : 성별임금격차, 인천지역노동시장, 임금회귀식, JMP 분해기법

Abstract

Decomposing the Shrinking Gender Wage Inequality in Incheon Metropolitan Area

Cho, Sungchul(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closing of the gender gap in earnings in Incheon Metropolitan Area. Applying the decomposition techniques developed by Juhn, Murphy, Pierce, I attempt to parcel out the factors of changes in the gender gap in pay into a component due to women's relative improvements in productivity-related characteristics and a component due to changing price structures in the regional labor market. To this aim, the Regional Employment Survey data from 2008 to 2016 a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the evidence suggests that the decline in the gender wage gap in Incheon is largely attributed to female workers' increases in the share of permanent positions. Second, improvements in women's productivity-related qualifications – such as education, tenure, experience, and related skills – are found to be an additional factor contributing to a closing of the gender wage gap. Finally, results also show that male workers' higher wage gains from engaging in managerial or technical occupations have played a major role in retarding women's relative progress during this period. The study concludes by discussing the policy implications drawing from major findings in the context of Incheon Metropolitan Area.

Key words: Gender Wage Inequality, Incheon Regional Labor Market, Wage Regressions, JMP Decomposition

사회적기업과 노동조합의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 청주시 사회적기업 삶과환경 사례를 중심으로 -

장효안*

장
효
안

I. 서론

II. 이론적 검토

1. 사회적기업의 특성
2. 노동조합 역할에 대한 이론적 검토

III. 사회적기업 삶과환경과 노동조합

1. 일반 현황
2.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삶과환경과 노동조합

IV. 결론

I. 서론

사회적기업은 국가별로 처한 시대 상황과 역사적 배경속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는 개념이지만 한국의 경우 2007년 7월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 인증받은 조직을 사회적기업이라 칭하고 있다. 법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지만 주요한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혹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는 기업이다.¹⁾

* 한신대학교 국가와시민사회(협) 박사수료, 교신저자(E-mail: irisian99@hanmail.net)

1) 이를 위해 법은 사회적기업에서 발생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강제하

이 외에도 법은 사회적기업으로 하여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민주적 운영을 지향하도록 하고 있다.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이 주요 기구로 갖춰져 있으며 노동자 및 서비스수혜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구조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을 통제하고,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다. 핵심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노동자 역시 이 구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2017년 3월 현재 인증받은 1,709개 사회적기업 중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이 1,186개로 전체 사회적기업의 70%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노동문제는 사회적기업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²⁾

그렇지만 참여적 의사결정구조의 존재가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관련한 연구나 실태조사가 미비해 현황에 대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역적인 정보들이 존재할 뿐이다. 의사결정기구 중 노사협의회의 비중이 매해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015년 현재 약 179만원으로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인 230만원의 78%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은 131만원으로 57% 수준³⁾에 머무르고 있다는 정보 등이 그것이다.

본 논문은 사회적기업이 고유의 사회적목적 지속적으로 성취하고 조

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긍정적 가능성에 착목하였다. 노동조합은 기업에 있어 견제와 협력의 주체로 존재하는데, 특히 본 논문에서 사례로 분석한 삶과환경의 경우 사회적기업 고유의 사회적목적과 민주적 구조가 노동조합의 역할과 만나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험과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청주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삶과환경을 분석하여 노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함께 성장한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표와 1회, 노동조합 전 사무장과 2회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2차 자료로써 2015년 발간된 삶과환경 10주년 자료집에 수록된 삶과환경 노동자 8인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인, 연구자 1인의 인터뷰 내용을 활용했다. 분석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동종 산업에 미친 영향,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의 세 개 범주로 구성되며, 이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노동조합의 상호 영향이 미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검토

사회적기업과 노동조합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신원철(2008)이 사회적기업을 통한 새로운 산업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회적기업 육성 과정에서, 각 산별노조 및 연맹차원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적극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정도가 전부다(신원철 2008, 9). 그런 이유로 2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3장을 통해 실제 사례속에서 사회적기업과 노동조합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점들을 분석한다.

고 있으며, 이것이 정부로부터의 재정 및 세제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지원을 받는데 있어 주요한 근거가 된다.

2) 출처: 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알림마당-기타), 2017년 3월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3) 출처: 사회적기업 임금 정보는 고용노동부(2016), 임금근로자 임금정보는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증감'의 2015년 8월 현황.

1. 사회적기업의 특성

사회적기업은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68운동과 같은 사회구조적 변동과 함께 찾아왔는데, 각 국의 복합적인 요인들과 연계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사회적기업의 국제적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영미의 경험과 유럽의 경험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는 1980년 빌 드레이튼(Bill Drayton)이 사회적기업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했다. 이 전통에 의해 미국에서는 사회적기업가 개인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비영리성에 주목한다. 그러나 보다 보편적으로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광범위한 정의를 수용한다. 결국 미국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과 시장에서의 경제적 목적의 균형 정도에 따라 조직을 규정하고 범주화하고 있다.⁴⁾ 반면 유럽의 경우 멀리 19세기 초 사회주의 운동에서부터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오랜 전통과, 발전의 과정에서 제도화되고 정형화된 쇠퇴의 경험, 다시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발전하기 시작한 최근 몇 십년의 경험까지 사회적기업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토대가 비옥하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비영리성에 주목하는 미국과 달리 사회적기업을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속에서 역동하는 조직으로, 그 역할은 지역에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부터 정치적 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포함시키고 있다. Defourny와 Nyssens은 유럽 15개국의 경험을 취합하여 아래 <표 1>의 9가지 사회적기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⁵⁾

4)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범주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lter, K. (2007), Alter, K. (2010), Young, D.R. & Lecy, J. (2012) 등 참조.

5) 최근 유럽에서도 영국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가의 특징을 강조하거나 사회적기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조직을 보다 확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런 경향에 대해 Defourny와 Nyssens은 9개 기준 중 높은수준의 자율성,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기업

<표 1> 사회적기업의 기준

범주	기준
경제적·기업가적 범주	• 지속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활동 • 높은 수준의 자율성 • 의미있는 수준의 경제적 위험 • 최소한의 유급 고용
사회적 범주	• 지역사회에 유익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 • 시민들에 의한 시작과 주도 •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권 • 기업의 활동에 의해 영향받는 다양한 그룹의 참여적 속성 • 제한적인 이윤 배분

출처: Defourny, J. & Nyssens, M. (2006): 5-6 표로 정리

한국에서 사회적기업 논의가 전면화된 것은 2005년 일부 국회의원과의 노동부에 의해 사회적 기업지원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법육성법이 제정되었고 이는 제 3섹터를 활용한 사회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이라는 사회정책의 결과로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문보경 2008, 28).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서구 각국의 모델의 다양한 강점을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유럽 대륙국가들로부터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원칙을 수용하였으며, 영국으로부터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조직형태를 확대 개방하는 조치를 수용하였으며, 미국으로부터는 수익모델과의 접목가능성을 강조하는 노력을 수용하였다(노대명 2008, 36).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정부에 의해 인증받은 형태로 육성되고 있다. 정부는 <표 2>의 7가지 조건을 인증요건으로 요구한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사회적기업은 정부로부터 사업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금융 및 세제 등의 지원을 받을

의 활동에 의해 영향받는 다양한 그룹의 참여적 속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별도의 범주로 나눠 '참여적인 거버넌스'를 더욱 강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자세한 내용은 Defourny, J. & Nyssens, M. (2012) 참조.

수 있다.

〈표 2〉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인증요건	개요
1.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6.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이상의 인증 요건 중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는 주요 내용은 3, 4, 7에 있다. 사회적기업은 고유하게 설정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며, 이에 대한 지표 중 하나로 이윤의 2/3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적목적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의 5가지 유형이며, 2017년 3월 현재 전체 1,709개 사회적기업 중 각각 69.4%, 6.3%, 4.1%, 9.9%, 10.3%의 비율을 차지해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⁶⁾

또한 사회적기업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하도록 규정하면서 민주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서 활용하는 의사결정기구(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

이며, 2015년 현재 전체 1,046개 사회적기업 중 총회를 의사결정기구로 활용하는 곳이 637개로 61%, 이사회를 활용하는 비중이 100%, 운영위원회를 활용하는 비중이 563개 54%,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는 비중이 44개 0.4%로 나타났다. 이 중 총회를 활용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사회를 활용하는 비중은 급증하여 2015년 현재 모든 사회적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다만 노사협의회 활용 비중은 2013년 113개에서 2014년 51개, 2015년 44개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한국노동연구원 2016, 36).

2. 노동조합 역할에 대한 이론적 검토

노동자는 자신의 권익 증대를 위한 교섭력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을 구성한다. 이때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기업의 생산성 증대와 비용 최소화를 목표로 하며, 임금인상과 노동자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고 노동규칙과 계획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능한 많은 권한을 가지려고 한다(최정운 2012; Noe et al. 2010 재인용). 이렇듯 사용자와 노동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우선순위가 다르고 각각 재산권과 노동권으로 외화되는 대립적 구조에 노동조합은 놓여있다. 이와 같은 갈등구조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권한을 제한하고자 하고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감시와 견제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양하다. 웹(Webb, S)은 경제적, 복지적, 정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김석현, 정재훈은 노동조합의 기능을 경제적 규제기능과 직무규제적 기능, 사회개혁기능과 자아성취 기능으로 분류한다(박봉휘 2001, 7). 박홍규(2008)는 그의 논문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경제

6) 출처: 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알림마당-기타), 2017년 3월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적 규제와 직무규제, 사회 혹은 정치적 변화,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 자아성취기능의 5가지로 분류해 김석현, 정재훈의 분류와 유사하게 분류한다.

첫째, 경제적 규제는 생활수준이나 고용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노동조합은 임금과 고용에 관한 효양이나 만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시간 단축, 임금인상, 작업장에서의 부당한 권리침해 방지와 해결, 작업환경의 개선, 보건 안전, 기숙사 시설 정비, 해고 반대, 부가 급여, 퇴직금의 향상과 지급보장, 노동조합 그 자체의 법적 보호나 지급보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박봉휘 2001, 9).

둘째, 직무규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권에 대한 전횡을 막아 영향력을 제한하여 회사 내의 권위구조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규칙의 시스템으로 바뀌어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조직적인 관계로 규제되도록 한다(박홍규 2008, 21).

셋째, 노동자의 이익은 사용자와의 교섭뿐만 아니라 법령 예규나 정부의 경제정책, 사회전체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노동조합은 이러한 측면에 대한 활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크게 신장할 수 있다. 이러한측면에서 노동조합이 담당하는 일체의 기능을 정치적 기능이라 부른다(배무기 1992, 400).

넷째, 노동조합은 개인노동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합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활동을 주로 가리키며 공제기금, 장학기금,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 사업 등을 통한 복지 후생의 증대를 말한다(박봉휘 2001, 10). 그러나 현실에서 노동조합에서 개인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사측과의 협력을 통해 제공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성취 기능은 노동조합 자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면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종업원 신분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를 통한 자아성

취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박홍규 2008, 23). 즉, 조합원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과정을 강조하며, 조합원들의 정극적 개입이야말로 집합적 이해관계를 강제하고 조정되는 결정적 수단으로 본다(김승호 2012, 7; Aronowitz 1998; Fosh & Cohen 1990 재인용).⁷⁾ 이 경우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한 경험에 없는 노동자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회의규칙, 회의 운영방식, 의사소통 방식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사회적기업 삶과환경과 노동조합

1. 일반 현황

1997년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고 2005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 처리 제도가 시행되었다.⁸⁾ 청주시 대행업체 선정 일정이 잡히면서 2004년 8월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실업 빈곤 계층에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폐기물 정책 전반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토대로 대행업체 선정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제 관계자들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을 위한 컨소시엄⁹⁾을 구성하고 사회

7) 김승호(2012)는 노동조합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을 소비자 노조주의(consumer trade unionism), 자유주의적 다원주의(liberal pluralism), 조합원 중심 현장주의(grass-roots activism), 개인 책임주의(individual accountability)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본고에서는 조합원의 참여를 강조하는 조합원 중심 현장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승호(2012) 제2장 노동조합 민주주의에 관한 선행연구 참조.

8)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경우 악취, 해충 및 침출수 발생 등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매립지 사용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 개정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었다. 개정법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은 직매립하는 대신 소각,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를 거쳐서 매립할 수 있게 되었다.

9) 컨소시엄 참여단체는 충북실업극복협의회(사업진행 총괄), 사회적기업 미래자원(장비 및 기술자문, 가정폐기물 관련 조사), 청주자활후견기관(취약계층 인력 연계), 청주시 노인종합복

적기업 삶과환경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삶과환경은 2004년 11월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업체로 선정되고 2005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한다. 청주시는 4개 구역(2008년 6개)으로 음식물 수집·운반 사업을 위탁했고, 2013년 청주시와 청원시가 통합된 후 관할 구역은 8개 구역으로 증가했다. 이후 평가방식을 통해 업체와 3년씩 계약을 진행했으며, 2014년부터 입찰방식을 통해 2년씩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¹⁰⁾ 삶과환경은 구성원이 행복한 기업,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사회적 기업과 함께하는 기업을 모토이자 사회적 목적으로 하여 2008년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았다.

삶과환경에서 운용하고 있는 의사결정구조는 법적으로는 주주총회-이사회의 구조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총회-운영위원회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1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총회-운영위원회 구조를 안착시켰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법에서 요구하는 조직구조이다. 삶과환경은 전체 노동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주총회가 아닌 총회를 주요 의사결정기구로 안착시켰고, 같은 이유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회 구조가 아닌 노동조합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¹¹⁾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는 노동자들의 실질적 참여의 장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이며, 후에 노동조합중심의 작업장 통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중요한 동인으로 파악된다. 총회는 실질적으로 삶과환경

의 주요사항을 전체 노동자와 결정하는 가장 상위기구이며, 총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일상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는 월 1회 회의를 진행하며, 대표, 노동조합분회장 및 사무장, 팀별 1인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삶과환경 구성원은 대표, 총무 및 현장직 12명으로 총 14명이다. 현장직은 운전원과 수거원이 1:2의 비율로 4개 팀으로 운영된다. 노동조합¹²⁾은 현장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월 2회 회식 및 현장회의를 진행하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이하, 충북지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평균 2개월에 한 번씩 진행한다.

삶과환경 노동조합은 2007년 노동자협의회로 설립되었고 2014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수행했다. 특징적인 것은 2014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삶과환경의 현장 운영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직무자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현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모두 노동조합이 전담하고, 월 1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경영진과 소통하기 때문에 자치수준과 현장통제수준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삶과환경과 노동조합

1)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주지한 것처럼 사회적기업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의사결정기구로 어떤 것이 활용되는지, 평균 몇 회를 개최하는지 등의 기본정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삶과환경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이런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관(노인일자리 연계)의 네 곳이며 컨소시엄에서 팔호 안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0) 8개 구역은 관할 범위와 예상매출액이 각각 다르고 입찰시 동시입찰 및 입찰 개시일과 마감일을 같은 날로 지정하기 때문에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및 입찰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모든 업체는 8개 구역 모두에 입찰서류를 일괄 제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 이후 각 업체들은 기존에 관리하던 구역을 다시 맡게 되지 않는 한 최종 입찰 받은 구역에 따라 인원수가 증감기도 하고 심한 경우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수도 있는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다.

11) 초기 삶과환경도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운영하였으나 기업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현실적 참여가 어렵다는 점, 주요한 주체인 노동자들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구조로 변경하였다. 현재는 외부활동은 대표가, 현장운영은 노조가 중심으로 역할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12) 공식명칭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 삶과환경분회이다.

삶과 환경의 거버넌스는 현재 총회-운영위원회 구조를 중심으로 작동한다. 이 구조가 안착되는 과정에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2005년 말에 진행된 직원 면접조사와 연관된다. 면접조사 질문은 삶과 환경이 향후 지향해야 할 기업구조, 급여체계 및 수당, 내부 의견수렴 체계, 복지 체계 등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의사결정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구는 총회이지만, 이 중 참여자들 내부의견 수렴 체계는 반장 1인을 전 참여자 직선제로 선출하는 안과 대의원단 직선(수거팀 대의원: 수거팀에서 2인 직선, 운전팀 대의원: 운전팀에서 1인 / 반장은 대의원단에서 선출)하는 안이 엇갈렸다. 최종적으로 수거팀, 운전팀 등을 대표하는 1년 임기의 대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직책수당을 지급했다(삶과환경 2015, 47). 이렇게 구성된 대의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운영위원회 자체가 회사운영체계 안에 포함되다 보니 선출직으로 뽑힌 대의원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소통하는 통로가 되기 보다 임명직처럼 회사 운영방식을 전달하는 전달자 기능을 함으로써 현장 직원들 간, 현장과 경영진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최초 대의원으로 간 건 임기를 어떻게 하고 ... 회사 운영체계 안에서 대표랑 짜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수당도 나갔고요. (회사시스템에서 작동하다보니) 완장이 되버렸어요. 선출직이면 나를 뽑은 사람의 의견을 취합, 정리해서 논의하는 중간다리 역할인데, 대의원 포지션이 애매해졌어요. 마치 간부처럼. 스스로를 간부로 인식하는 방식이 (한국사회 회사라는 조직에) 더 익숙하기도 한 거죠. 개인의 경험과 역량의 문제와 주식회사라는 조직 특성이 동시에 작동했어요. 개인이 혼련이 되어 있다면 업무지시와 현장 의견 전달을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했을텐데 의견을 모아 대표하는 법을 배운적도 경험한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회사의 업무지시 시스템은 너무 익숙한 것이고(대표)’

대의원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5차 대의원 회의를 마지막으로 폐지되고 이후 현장 내 의사소통 방식은 작업팀-팀장회의 등 일반적인 업무 조직 구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2014년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현장의 사안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월 1회 진행되는 운영위원회에서 경영진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즉, 기존에는 현장 운영에 대한 사항도 회사시스템 내 간부인 현장반장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이후 노동조합 구성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즉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현장과 노동과정에 대한 직접적 통제 기능이 강화된 것이다.

‘전엔 현장 관리가 경영라인이었죠. 현장반장 밑에 나머지가 있는 거. 총회에서 아무리 현장 불만 얘기해도 현장에 가면 반장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영라인이니까. 그걸 이제 현장반장이 통제하는게 아니라 다수 의견을 통해 운영해보자고 구조가 바뀐거죠(전 사무장)’

‘지금은 운영위원회가 회사체계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라는 현장 자치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고 회사에서는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해 (독립된 두 주체가 만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거죠. (전의 대의원 제도와 달리) 노조 내에서 분회장이나 사무장 임기를 몇 년을 하든 회사가 터치할 부분이 아닌거죠(대표)’

현재 노동조합에는 현장직 노동자 12명 전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분회장, 사무장, 팀별 1인으로 구성된 대의원을 중심으로 비정기적으로 월 1~2회 현장회의를 진행하고 월 1회 대표와 운영위원회를 진행한다. 인원이 적어 유연하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노동조합 중심의 운영은 팀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조로 바뀐 이후 민원 처리가 조금 늦어지

거나 차량 관리 등이 전에 비해 잘 안되는 팀이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자치구조로 운영한지 3년이 지난 지금 일상적 현장업무에서 태도변화나 방만함 등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 중심의 자치가 삶과환경의 민주적 운영의 핵심일까? 노동조합 이후 기업이 보다 더 민주적이 되었을까?

‘그렇진 않다. 우리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총회를 통해 임금 결정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할지,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지 초기부터 같이 결정했다. 대표가 안을 서너개 만들어 오면 조별로 얘기하고 총회에서 토론해 결정해왔다. 노조가 생겼다고 이 부분이 바뀌거나 더 나아지거나 그런 건 없다(전 사무장)’

즉 사회적기업으로서 총회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던 방식이 10여년의 경험을 통해 안착되었고, 이런 의사결정 방식은 노동조합 자치를 통해 자기 결정권을 높여 직접적으로 현장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삶과 환경노동자들에게 이 과정은 정태적인 교육이나 학습으로서가 아닌 총회나 대의원제도 등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으로 체득되었다. 즉 논리적으로 이해했다기보다 10년이 넘는 경험을 토대로 감각적으로 체득한 것이다. 또한 대표의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노력 또한 중요한 점이다. 다만 삶과 환경에서 이런 방식이 가능한데 있어 전체 노동자수가 적었다는 점, 이 방식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삶과 환경이 청주시와의 계약을 토대로 예측가능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동종업계에 미친 영향

삶과환경과 노동조합이 동종업계, 즉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업계에

미친 영향은 입찰계약에 있어 평가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확산한 과정과 타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된 측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 번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주시의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영역 전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주시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8개 구역에 대해 입찰을 통한 위탁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사업 구역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05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 청주시내 구역은 4곳 이었다. 2007년 이 중 2개 구역을 담당하던 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하면서 반으로 축소하고 반으로 쪼개진 구역을 새로운 두 개 업체가 담당하게 했는데 그 결과 두 개 구역만 구역이 반으로 축소된 6개 구역으로 정비되었다. 이듬해부터 6개 구역 크기를 동등하게 조정했고, 이후 2014년 청주, 청원 통합 후 청원에 있던 2개 구역을 포함 현재의 8개 구역(청주 6, 청원 2)으로 재편되었다.

다음으로 계약방식은 2013년까지 평가방식에 기초한 계약방식이었던, 2014년부터 입찰방식을 통한 계약방식으로 전환되었다.¹³⁾ 2014년 첫 입찰에서는 기존의 8개 업체가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일부 기업의 경우 구역 변동으로 인해 매출액변화에 따른 인원 증감을 경험했고, 2016년 입찰에서는 기존 업체 중 한 개가 탈락하고 새로운 업체가 분야에 진입하게 된다. 입찰은 낙찰금액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요소들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이렇듯 2년에 한 번 재계약하는 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낙찰금액이 아닌 사업 전반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삶과환경은 입찰방식이 아닌 평가방식에 의한 계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13) 공공입찰방식에서 인건비 등이 이미 책정되기 때문에 삶과환경은 사회적기업 인증 후에도 정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다.

‘현재 입찰방식은 투찰률에 가장 근접한 최저금액만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평가를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 어떤 기준으로 될 평가하는지)모르겠다. 업체들이 노동자 처우 개선을 잘 했든, 복리 후생을 잘 했든,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을 했든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업체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도 시정조치만 있을 뿐 이런 것도 (입찰과정에서 패널티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 향후 업체들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 ... 업체들 사이에 공식적으로 평가방식으로 가야한다는 합의를 이끄는 데만 4년이 걸렸다’(대표)

음식물 쓰레기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업체 대표들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삶과환경에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삶과환경에서만 공유하던 입찰서류 내용 등이 타업체 노동자들과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타 업체 입장에서 불만이 많아졌다.

‘왜 노조를 (인정했느냐) ... 만나면 이게 인사다. 삶과 환경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만도 많고, 노조가 노조 활동하는데 내가 못하게 할 권한도 없고 그랬다가 내가 쇠고랑차면 당신이 책임질거냐. 그냥 그렇게 반응하고 넘긴다’(대표)

노조가 출범하게 된 데에는 2007년 패널티로 구역이 나뉜 업체가 삶과환경이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계약이 불안정한 문제는 대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노동자협의회를 구성했고, 2007년 청주시 담당자를 만나 현재 일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고용보장, 즉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활동이 시작됐다. 업체 변경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을 계약서에 기입하는 것은 당시 청주시에만 없던 조항이라 추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계약을 토대로 형성되는 시장에서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획득하는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이후 계약

이 안정화되고 총회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이 안착되면서 노동자협의회 활동은 축소되었다. 2014년 노동조합으로 설립을 하게 된 계기 역시 입찰시스템으로 바뀐 후 재계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에서 대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환경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했을 때는 이미 청주시 전체를 아우르는 노동조합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동의에서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삶과환경 만의 노조를 생각한 건 아니고, 우리 굳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입찰에 의한 불안정한 계약은 대표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입찰 떨어지면 당장 노동자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걸 삶과환경 혼자 싸울 수도 없으니 청주시 업체가 8개니깐 전체로 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노조를 처음부터 염두한거고 ... 우리가 세팅하고 민노총에 의뢰해서... 우리 회사야 노조 만드는 게 무리가 없으니까 다른 회사 설득해서 노조원 확보해서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죠.’(전 사무장)

삶과환경은 노동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주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조직이다. 평가방식의 도입은 두 번째 사회적 목적과 연관된 것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조건임과 동시에 평가항목을 토대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업 자체를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제안되고 있다. 평가방식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삶과환경 기업 입장에서는 고유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타업체 대표,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를 제안하고 있다. 반면 노동조합은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평가방식을 통한 입찰방식 변경이라는 지향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면서 현장 노동자를 만나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목적과 노동조합의 활동이 평가방식 도입에 대한 아젠다를 확대하는데 있

어 상호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삶과환경과 노동조합이 동종산업에 미친 두 번째 영향은 타 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타 업체의 처우개선을 살펴보기에 앞서 삶과환경의 노동조건을 개략적으로 먼저 살펴보자. 삶과환경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에 근로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고 있다. 채용 결과 이들의 경제적 상황도 개선되었는데, 아래 <표 3>는 삶과환경 노동자들이 경제적 불안정 계층이었던 자활, 수급자, 차상위, 신용불량자의 지위에서 그렇지 않은 계층인 일반으로 전환된 비중을 보여준다.

<표 3> 삶과환경 노동자 경제적 지위 변화

구분	일반	신분	차상위	조건부	자활특례	총원
2004.12	5	3	4	3	1	16
2006.12	10	1	3	1	1	16

출처: 삶과환경(2015):19

또한 급여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타 구역보다 낙찰금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51,251,488원의 추가지급액으로 인해 직접인건비 연간 총액이 473,118,868(421,867,380+51,251,488)원으로 타 업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과환경의 추가지급액은 수거원 1인에 대한 인건비와 근속수당 그리고 직책수당을 추가한 금액이다. 삶과환경은 수거원 1인을 추가고용함으로써 노동 강도의 완화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했고 근속수당과 직책수당의 책정을 통해 임금체계를 효율화하고자 했다(장원봉 2016, 53).

<표 3> 삶과환경 노동자 경제적 지위 변화

	원가	가중치	기초금액	사정률	예정가격	투찰률	낙찰금액	차액
1구역	511,296,631	-0.23%	510,120,649	99.95%	509,871,439	86.90%	443,057,885	-30,060,983
2구역	511,296,631	-0.22%	510,171,778	98.56%	502,825,895	88.26%	443,809,220	-29,309,648
삶과환경	511,296,631	-4.14%	490,128,950	99.75%	488,906,198	86.29%	421,867,380	51,251,488
4구역	511,296,631	-1.38%	504,240,737	100.55%	507,018,172	86.16%	436,821,506	-36,297,362
5구역	511,296,631	-0.25%	510,018,389	100.01%	510,065,051	87.44%	446,011,082	-27,107,787
6구역	511,296,631	3.99%	531,697,367	99.77%	530,472,665	83.55%	443,231,131	-29,887,738

출처: 장원봉(2016):53 표4 재인용

삶과 환경의 예산은 환경부 규정에 의거해 청주시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위에서도 같이 필요 예산액이 예측가능하다. 타기업도 조건은 마찬가지일텐데 그렇다면 삶과환경은 어떤 방법으로 여타 수당을 제공하고 추가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걸까?

‘산출원가를 100으로 났을 때 그에 대한 항목이 이미 다 정해져있다. 직접인건비, 경비, 이윤 등. 이 항목은 반드시 지켜야지 안 지키면 범법행위다. 그럼 직접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경비와 이윤을 쪼개서 별도로 항목을 추가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회사에서 덜 갖겠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사회적기업가로서의 대표의 철학이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삶과환경의 초기 설립자체가 시민사회의 추동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삶과환경에서 일하는 현장직 직원 중 일부는 이런 방식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주체들이 노동조합 설립의 주요 주체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전에도 삶과환경은 총회를 통해 결

정하는 투명한 경영방식 때문에 이미 청주시와의 계약과정에서의 인건비, 수당책정 방식, 잉여 처리 방식 등에 대해 노동자들이 전반적으로 숙지하고 있었다. 삶과환경 노조가 청주지역 전체 노동조합을 염두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후, 삶과환경 내부에서만 공유되던 정보들이 타 업체 노동자들과 교류되기 시작했고, 역으로 타업체 노동자들로부터도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된다. 청주시 계약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타 업체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급여나 수당, 연금 등이 부족하게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업체에 항의를 하거나 시에 민원을 넣는 등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급여 및 노동조건이 향상되기 시작했다.

‘물어보면 먼저 얘기해요. “우리 50만원 올랐는데?” 원래 그만큼 받는 거예요. 우린 수당이랑 그것보다 더 받아요. 해도 “우린 이만큼이라도 다행이야” 뭐 이 소리.. 2년 쯤 한 달에 두 번 민주노총과 (타 업체에 노조설립을 제안하는) 홍보 사업을 해요. 현장에서 전단지도 나눠주고 ... 그러다보니 다른 회사에 얘기가 들어가고 시에서 알게 되기도 하고...’ (전 사무장)

청소 및 경비직의 임금수준은 모두 법정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이며, 연령 및 경력 상승에 대한 임금인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다(장원봉 2016, 47; 권혜자 2014 재인용). 대표적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업종에서 독보적으로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이를 타 업체에 확산시킨 것은 매우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성과를 확산시키고 무엇보다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조합들의 결성이 요구되지만 여전히 청주시 전체 노동조합으로 확산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담스럽게들 말하죠. 삶과환경이 (근무조건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

는데 뭘 우리가 굳이 노조를 만들어~ 사실 기업 내 다수가 결성하겠다면 괜찮은데 누군가 총대를 매야하니까..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 힘들어지니까.’ (전 사무장)

2015년 현재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은 10.2%이다. 노동조합의 결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기업 내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현실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실제 부당해고, 손배가압류, 직장폐쇄 등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에 대한 탄압사례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이 이와같은 어려움을 뒷받침해 준다.¹⁴⁾

이 외에도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서 진행된 교육과 외부 홍보활동 등은 노동자들의 인식 수준과 타업체 노동자들과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졌다.

‘노조 생기고 제일 당황스러워했던 건 예를 들어 노동교육을 받게 되는데... 삶과 환경에 전부터 사회운동에 관계된 사람은 서너명이고 나머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정권 비판하고 하는게 낯선거죠. 듣기 힘들어 하고, 그리고 다른 업체 사람들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욕하지 말고 인사하고 정보 서로 주자. 처음엔 너무들 낯설어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인사도 서로 잘 하고 정보도 잘 공유해요. 노조원 가입을 안 해서 그렇지’ (전 사무장)

사회를 보는 인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무엇보다 현장직 노동자들이 타업체 노동자들과 접촉할 때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입찰이나 재계약

14) 2010년 한국을 방문한 롤랜드 슈나이더(Roland Schneider) 노조자문위원회 선임정책위원은 한국의 노동기본권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노동기본권에 관한 문제를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 공식안건으로 다루고 한국에 대한특별감시과정 재개를 촉구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정부, 노동후진국으로 국제도마에 오르나?”, 민중언론 참세상, 2010. 5.13.

문제가 있으니 그전까지는 타 업체 노동자들을 경쟁업체로만 인식했었다. 구역이 다르니 마주칠 일이 별로 없지만 자원화시설¹⁵⁾에서 만나는 경우 물이 튀거나 그런 문제 등으로 소소한 갈등과 마찰이 있어왔다. 청주시 전체 노동조합을 지향하고 민주노총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타업체와의 갈등과 마찰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현재 노동조합은 자체 교육없이 충북지부의 교육 스케줄에 따라 약 2개월에 한 번 정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노동정책 및 사회 이슈 등 다양하다.

그렇다면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반기업과 비교해서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회사에 들어오면서 사회적기업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A씨). 잘은 모르겠지만 (A씨, D씨) ... 월급 조금 더 주고, 인간적 대우가 있다는 것 정도인 것 같다(A씨, C씨). 솔직히 나쁜 것 같지는 않다(D씨) ... 삶과 환경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급여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회적기업으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거의 수급자였는데 이렇게 안정된 것만 해도 그렇다(B씨) ... 대표가 외부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모른다(A씨, C씨).’

사회적기업 자체에 대한 이해는 다소 편차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삶과 환경이 외부로부터 포상을 받거나, 기부를 한 내용, 노동자가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임금과 노동조건이 양호한 편이라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노동자가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조직 내 상명하복 수직관계가 아니라 파트너나 대화상대로 인정되어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그리고 10년간의 활동은 현장의 중요한 문제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강화로 이어졌다. 특히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노조활동의 일

15) 자원순환과정은 배출(주민) - 수거(업체) - 집하, 퇴비화(자원화시설)의 순서이고, 삶과환경은 수거해서 자원화시설에 집하하는 것까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이다.

환으로 현장에서 타업체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보교환을 통해 이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보다 경험을 통해 감각적으로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것의 차이점을 감각적으로 체감하고는 있지만, 외부에서 삶과환경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필요하고 관련된 사안에 대해 총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내부구성원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 데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3)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사회적기업으로서 삶과환경과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주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지역사회에 이를 공개하여 환경부문 아젠다를 형성하고 이를 이슈화해 왔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활동이 자원순환포럼을 결성하고 지원한 일이다. 자원순환포럼을 기반으로 하여 음식물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청소행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 외에도 음식물 분리배출 홍보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홍보하거나 충북 NGO센터에 사회적기금 3천만원을 출연하여 사회적기업씨앗기금을 조성하고 청주 지역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과 2014년 각각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삶과환경의 사회적 목적 중 지속가능한 자원시스템 구축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사실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삶과환경 노조의 역할은 크지 않다. 그러나 그 이유는 노동조합이

활동을 하지 않아서라기보다 지역사회의 민간주체와 공공행정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구축 과정에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구조적 원인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삶과환경이 청주시 지역의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 미친 다양한 영향력이 이미 존재하며 노동조합 혹은 현장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주요한 아젠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노동조합 또한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민주노총 등과 활동을 확산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 향후 노동자 참여를 지역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보장받게 될 때 상호작용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삶과환경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노조 혹은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요했던 이슈나 혹은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용이하지 않았던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자원순환포럼을 중심으로 한 민간영역과 청주시 공공행정과의 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이 가능하다. 먼저 민간영역에서의 역할을 살펴보자.

삶과환경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자원순환포럼의 결성과 지원이다. 자원순환포럼은 청주시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와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 실업극복시민단체협의회, 폐기물 재활용 업체 미래자원, 음식물 수거 운반업체 삶과환경 등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각각의 활동을 펼쳐오던 단체들이 모여 2006년 6월 결성되었다(정현근 2015, 104). 삶과환경은 초기부터 자원순환포럼에 참여해 생활쓰레기 성장조사, 종량제 봉투 성장조사 등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운반 및 처리상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2008년 자원순환포럼의 활동이 점차 청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업체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자원순환 포럼은

활동이 중단되었고 삶과환경은 재계약과정에서 수거 지역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사업상 피해를 보게 된다. 결국 2008년 시민단체는 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실태에 대한 주민 감사¹⁶⁾를 청구하게 되고 충청북도의 청주시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삶과환경 2015, 37).

‘감사청구에서 구역을 반으로 쪼갠 것이 부당하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패널티를 받은 조건이 딱지를 붙여야 수거를 하는데 딱지 안 붙인 거 수거했다는게 이유. 그것도 딱 한 건. 단속도 한 번 잡힌 것도 한 번. 또 하나는 2005년 1월 1일 시행 첫날 차사고가 났어요.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받아서 그날 작업을 못했어요. 일을 못했으니 (집하장에) 반입을 못했지. 이걸 보고 일 안했다고 패널티를 받았어요. 도 감사에서도 황당한거죠. 이런 걸로 사업 구역을 쪼개는 건 과하다고 원상복귀하라고.’(대표)

충청북도 감사에서 삶과환경에 대한 구역 분배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구역을 나눠 유입되어 있는 업체를 없앨 수 없어 6개 구역의 배분을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 외에도 업체의 편법 수령을 수정하기 위해 계근시스템을 변화시켰고, 무게에 비례해 예산을 지급받는 방식에서 세대수와 지역 난이도를 고려해 월정액 개념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해 현재의 기초금액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것은 큰 변화였는데, 무게에 비례해 지급했던 방식에 비해 월정액 방식은 임금을 산출가능하게 했고 임금에 대한 기준선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임금에 환수규정을 두어 임금을 편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지자체에 환급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16)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 위탁업체들이 편법 수령한 수수료 환수, 편법 수령이 확인된 위탁업체에 대한 처벌과 계약해지 등의 조치, 기존 4개 업체에서 6개업체로 확대된 것에 대한 검증(삶과환경 문제 포함), 위탁업체 허가 과정에서 시의 조례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업무에 있어 시의 행정상 위법 부당성은 없는지 여부 등이다. “도, 청주시 음식물쓰레기 관련 주민감사청구 수리”, 뉴시스, 2008. 5. 19.

그렇지만 이 과정에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빠졌다는 것이 주요하게 문제제기 되었다. 자원순환포럼에서 다루는 아젠다들과 청소행정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 대행업체 선정 과정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장 노동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타 기업 현장 노동자 대표와 함께 시청에 들어가 담당 국장과 면담을 신청했다. ... 국장은 업체 대표들이 오는 줄 알았다고 담당 직원을 호출했고, 담당 직원들은 짜증을 내며 왜 왔냐는 식으로 억박지르며 다른데 가서 얘기하자고 했다.’(C씨)

자원순환포럼의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가 중심주의가 존재한다. 특히 삶과환경 자체가 실제 청주시 위탁사업을 하는 주체이다보니 완전한 협력적 파트너로 인식되는데 한계가 있다.

‘누차 얘기 했어요. 같이 현장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현장사람들은 지엽 말단적인 얘기를 한다는 인식을 깨는게 쉽지 않다. ... 게다가 포럼에서도 행정에서도 우리는 업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고, 특히 행정에서는 사장선에서 정리하고 사장들이 와서 얘기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대표)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청주시 공공행정은 자원순환포럼과의 마찰이 있어왔고 충청북도 행정감사 이후 자원순환포럼의 요구들이 대부분 반영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삶과환경은 패널티에 의한 구역변경이라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렇지만 행정이 현장의 전문성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이 관리감독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삶과환경은 현장으로부터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평가

방식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이다.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한다는 건, 이제 아무리 대표가 혼자 열심히 한다해도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고. 만에 하나 입찰에서 떨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새로운 업체에게 고용승계 해주시고, 이분들이 이런 처우 받았으니 여기에 준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고하는 정도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본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는데 내부에 모두 공감할 하게 되었다.’(대표)

실제 삶과환경 노조는 현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적 창구이다. 비록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앞에 지적이 있기도 하지만, 2007년 고용승계 조항을 청주시에 직접 요구하기도 했고, 노조가 설립된 2014년 이후에는 민주노총에서 공식적으로 재계약시점에서 현장인원이 제대로 되었는지, 고용승계는 제대로 되었는지를 요구한다. 또한 평가 방식을 통해 엄격하게 업체 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행정과의 관계는 조심스럽다.

‘삶과환경 외에 아직 다른 업체 소속 노조원이 없다. 노조원을 확대해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미 2007년 (구역 변경의) 경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노조가 있어 불이익을 받는 정황들이 많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도 조심스럽다. 삶과환경이 또 피해를 보게 될까봐. 최소한 입찰방식이 평가방식으로 바뀌어야 노조입장에서는 다양한 요구들을 할 수 있는거죠.’(전 사무장)

IV. 결론

본 논문은 사회적기업과 노동조합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청주의 사회적기업 삶과환경을 대상으로 단일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단일 사례이고 14명으로 구성된 규모가 작은 조직이며, 공공입찰이라는 상대적으로 예측가능한 시장에서 활동한다는 제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노동조합 활동은 사례 수집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알려진 바가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삶과환경의 사례는 사회적기업과 노동조합이 각각의 특성과 만나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점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는 사회적기업과 노동조합 상호 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이 분석을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동종 산업에 미친 영향,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의 세 범주를 활용하였다.

먼저 민주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총회-운영위원회 구조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구조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여 주요한 사안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험이 10년 간 축적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경험이 노동조합 결성 이후 현장을 노동조합 중심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자치운영을 통해 노동자 개개인의 의사결정 참여 권한이 확대된 것이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더 민주화할 수 있도록 한 상호영향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범주인 동종업계에 미친 영향은 업계 입찰방식을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안하는 과정과 타 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는 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으로서 삶과환경의 사회적 목적이 주요하게 작동했으며, 삶과환경 대표는 시민사회와 타 업체, 지자체를 설득하고, 삶과환경 노조는 타 업체 노동자들을 설득하여 타업체 노동자들이 각자 기업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함

께 구축해왔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슈와 연결된다. 현재까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노동조합의 역할보다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삶과 환경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삶과환경과 노동조합이 동종업계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주요한 이유로는 첫째, 노동자 주체성을 강조하는 기업대표의 철학과 지역사회의 관심, 둘째,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에 동의하고 노동조합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던 노동자 리더그룹의 존재, 셋째, 민주적 참여의 10년 경험을 통해 주체로 성장한 노동자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그 10여 년의 경험동안 실질적으로 소통해왔던 경영과 현장의 소통의 역동성이 이와 같은 긍정적 상호영향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삶과환경의 사례는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지만, 이런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내 노동조합이 활성화된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사회적기업이 노동조합 고유의 활동을 막는 기제로 작동하는 혐의가 발견되기도 한다.¹⁷⁾ 또한 삶과환경 사례의 경우, 이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청주시의 철학과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거업과 같은 공공서비스 영역은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피해 당사자는 시민 다수이기 때문에 가격입찰과 같은 시장은리보다 산업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삶과환경과 노조가 동시에 주장하는 재계약에 있어 평가방식으로의 변경은 청주시가 공공서비스 영역을 최저입찰제와 같은 가격경쟁의 시장논리로 바라보지 않는 근본적인 철학과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만 가능하

17) 정인탁(2011)은 원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위탁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 등을 넣도록 성과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위탁업체로 선정된 사회적기업에서 고유의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활용하여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 또한 삶과환경 노조가 노동자 권익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역할하고자 하는데 있어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이 공히 노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발견된다.

이상의 한계점으로부터 사회적기업과 노동조합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다음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첫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대표가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존중하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자체가 노동자들의 권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를 강조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을 저해하며 노동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한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목적임을 인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둘째,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이 실천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삶과환경에서 나타난 긍정적 상호작용은 10여 년간의 민주적 의사결정의 훈련과 직결된다. 이때 민주적 운영의 경험이 없는 한국 기업의 통상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노동자 주체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노총 등과 같은 기존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모색할 수 있다.¹⁸⁾ 주체성의 향상과 실질적 참여는 동시에 구축되어야 하는 지점일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 자체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행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공공 영역에서의 인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특히 삶과환경처럼 예측가능한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공공과의 재계약이 사업의 중요한 변수인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은 대단히 제약될 수 있으며 삶과환경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낸바 있고, 이와 같은 경험을 찾는 것은 사실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기도 하다. 넷째, 노동조합이 기업을 넘어 지역사회로 나가고자 할 때 지역의 민간 주체들이 이들을

적어도 그 영역에서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식의 확장 또한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권익을 넘어 사회로 시선을 돌리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질적 전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찾기 쉽지 않은 현상이다. 그러나 그런 전환의 과정에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비극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회적기업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제약점, 발생가능한 문제점, 필요한 개선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노동자 권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일반기업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보다 훨씬 당위적으로 용이함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차원에서 한국사회의 노동권 보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지금, 사회적기업과 노동조합의 선순환구조를 연구하고, 사회적기업 내 노동조합을 확산하는 것은 전체 산업에서의 노동조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18) 퀘벡 등의 사례에서 주요 기금을 형성하는 등 노동조합은 사회적경제 영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내 노동조합의 건설은 전체 지역차원에서 사회적기업과 노동조합이 만나는 중요한 매개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승호(2012),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조직 및 노사관계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 노대명(2008), 『이태리 사회적 기업법의 정책적 함의』, 국제사회보장동향 여름호: 30-46.
- 노대명(2009), 『한국 사회적기업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 시민과세계 제15호: 128-149.
- 문보경(2008),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1주년, 과제와 전망』, 월간 복지동향 제 120호: 27-32.
- 박봉휘(2001), 『병원노동자들이 기대하는 노동조합 역할에 관한 연구 - 인천지역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홍규(2008), 『노동조합기능에 대한 연구 - 서비스산업 호텔노동조합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배무기(1992), 『노동경제학』, 경문사.
- 삶과환경(2015), 『삶과환경 10년-발자취, 이슈, 사람들』.
- 신명호(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도시와빈곤 통권 89호: 5-45.
- 신원철(2008), 『사회적 기업을 통한 새로운 산업민주주의의 가능성』, 노동사회 통권제131호.
- 엄형식(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 장석인(2012), 『선진국의 사회적기업 국제비교 - 유럽3개국(프랑스·독일·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경영컨설팅 리뷰 3(2), p.79-95.
- 장원봉(2016), 『청소 분야 사회적기업 임금실태 및 개선방안』, 노동리뷰 통권 제 135호: 47-62.
- 정인택(2011), 『사회적기업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말할 수 없는가』, 노동과세계 6월.
- 정현근(2015), 『청주지역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식-청주지역 사회적기업 관계자 및 사회적 기업 삶과환경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4(2): 91-123.

- 최정운(2012), 『노동조합이 회계정보에 미치는 영향: 경영자 감시역할, 이익의 질, 감사보수, 부채비용』,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 칼 폴라니(1944), 홍기빈 역(2009), 『거대한 전환』, 도서출판 길.
- 한국노동연구원(2016), 『2015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Alter, K. 2007. 'Social Enterprise Typology'. *Virtue Ventures LLC*. <http://www.virtueventures.com>. 11-46.
- Alter, K. 2010. 'Social Enterprise Typology'. www.4lenses.org/setypology.
- Young, D.R. & Lecy, J. 2012. 'Defining the Universe of Social Enterprise: Competing Metaphors'. *Andrew Young School of Policy Studies*. Working paper 12-25.
- Defourny, J. 2001.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Defourny, J. and Borzaga, C.(ed.)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efourny, J. & Nyssens, M. 2006. 'Defining social enterprise'. Nyssens, M.(de.) *Social Enterpris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efourny, J. & Nyssens, M. 2012. 'The EMES approach of social enterpris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EMES Working paper 12/03.
- Draperi, J-F. 2005. Bryant, J.(trans.) *Making Another World Possible-social economy, cooperativ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Lessons from French and international experiences*. Prsses de l'Economie sociale.

국 문 초 록

사회적기업과 노동조합의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 청주시 사회적기업 삶과환경 사례를 중심으로 -

장효안(한신대학교 국가와시민사회(협) 박사수료)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고유의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의사결정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제공한다. 경제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이와 같은 위상은 정부 지원의 주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특히 핵심이해관계자인 노동자의 경우 이 구조를 통해 권익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조건이 향상되었거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된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본 논문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 조직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의 긍정적 가능성에 착목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사례로 분석한 삶과환경의 경우 사회적기업 고유의 사회적목적과 민주적 구조가 노동조합의 역할과 만나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지점들이 발견되었다. 분석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동종산업에 미친 영향,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는 세 개 범주를 활용하였으며, 이 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사회적기업, 노동조합, 삶과환경

Abstract

A Study for the interaction between social enterprise and trade union

- focusing on the case of Samgwahwangyeong in Cheongju-Si -

Jang, Hyoan(Ph.D. Candidat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State and civil society, Hanshin University)

Social enterprises are the organizations have an essential purpose to accomplish social purposes by operating activities of the business. Social enterprises also provide many stakeholders with different interests with the environment which they can democratically participate on decision-making process.

This elevated status of social business as an economic organization may lead to government support. Especially labours who are one of the core stakeholders have more possibilities expanding their rights and interests through these structures. Notwithstanding these structural circumstances, however, it could be difficult to find the basis in it, good working conditions and substantial participation of labours.

This essay focuses on the positive effect of trade union to accomplish social purposes of social enterprises and to run organization democratically. Especially Samgwahwangyeong has shown the interaction between social enterprise's own purpose and democratical structure and the role of the trade union. It will be addressed with five categories to define this analysis, the democratic management, the effects on industry and local communities.

Key words: social enterprise, trade union, Samgwahwangyeong

시나리오별 부산시 연안 침수 분석 및 피해 규모 산정 연구

여성준* · 이창현**

여
성
준
·
이
창
현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연안의 정의 및 특성
2. 연안역 기후변화
3. 선행연구 검토

III. 부산시 연안역 공간자료 구축

1. 부산시 연안역 범위
2. 연안역 인구 현황
3. 연안역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현황
4. 연안역 기반시설 현황
5. 연안역 건축물 현황
6. 연안역 사업체 현황

IV. 시나리오별 침수 현황 및 피해규모 산정

1. 연안역 사회·경제적 가치
2. 해수면 상승에 의한 피해규모

V. 결론 및 향후과제

* 부산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원

** 부산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전문위원, 교신저자(E-mail: leech9353@gmail.com, Tel: 051-860-8868)

I. 서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태풍, 강수 변동 등 다양한 기후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안지역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연안지역은 생태적인 중요성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국가의 다양한 기간산업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시의 주거·문화·관광·상업·산업 등 핵심적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해수면 상승의 문제와 함께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강력 태풍으로 인해 범람과 침수의 위험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연안역으로 이동하고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경제적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연안역의 다양한 개발을 통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연안역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기반시설과 산업시설들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의 연안역은 해수면 상승이나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부산시 연안역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9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과 2011년에 발생한 소규모 태풍에 의해서도 연안역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최근 2016년 태풍 차마로 인해서는 해운대 마린시티가 침수되면서 상가와 보도블록 파손 등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서울신문, 연합뉴스 2016).

향후 해수면상승과 태풍의 강도 및 빈도의 증가, 집중 호우 등 해양과 연안의 주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연안역은 직접적 영향권에 들면서 그 피해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역 피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후변화의 다양한 기준을 설정하여 피해 규모를 산정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침수규모와 침수 피해에 대한 정량적 평가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부산시 연안역에 미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연안역에 발생할 수 있는 침수 피해의 공간적 위치와 그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상시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m, 2m 상승 시 영향과 최악의 조건 시 대한민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와 향후 일어날 수도 있는 슈퍼태풍급에서의 피해를 알아보기 위해 총 4개의 시나리오를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연안역의 피해 예방 및 적절한 대응방안의 도출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연안의 정의 및 특성

우리나라의 연안에 대한 정의는 연안관리법 제2조에서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하며, 연안해역은 바닷가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바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km) 범위 안의 육

지지역을 말한다. 즉, 연안이란 해안선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의 육지와 바다가 합쳐진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황영우 외 2016).

연안역은 과거에서부터 오랜 시간동안 인간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현재에까지도 이용집약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연안지역이 상대적으로 평탄한 지형을 가지고 있고, 바다로부터 풍부한 수자원을 획득할 기회가 높으며, 타 지역과의 교류가 원활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연안지역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졌으며, 무역을 위한 전진 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연안역은 생활공간으로의 중요한 지역이며, 수산 및 해운의 중심지, 간척을 통한 농산물 생산의 공간, 산업단지를 통한 산업공간, 해안레저 및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자연적 환경의 우수성이 높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함께 바다로부터의 해일 등 해안재해에 취약한 지역이기도 하다.

2. 연안역 기후변화

지구의 기후변화는 기후온난화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지구는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평균적 기후 속성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과거 1만년 동안 지구의 평균온도가 1℃이상 상승하지 않았으나, 지난 100년간 평균온도가 0.74℃나 상승한 것은 큰 변화이며, 기후변화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한다(환경부 2010).

국내에서도 기상청에서 발간한 '2016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1·2·7·11월을 제외하고 모두 평년보다 1도 이상 기온이 높았다. 그 결과 전국 연평균기온은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12.5도를 기록하였다.

연안역에서의 기후변화는 해수면상승, 태풍 또는 해일 증가, 강우 증가, 태풍의 진로 변경 및 강도의 증가 등을 발생시키며, 이로 인해서 연안역의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계은행의 보고서(2011)에서도 연안도시의 경우 미래에 예상되는 중요한 세 가지 환경변화로 '집중호우 증가, 폭풍강도 증가, 해수면상승'을 지목하였다. 육근형 등(2012)은 이러한 환경변화의 발생가능성을 집중호우 증가 90% 이상, 폭풍강도 증가 66% 이상, 해수면 상승 99% 이상의 확률로 평가하였다.

2016년도에 발생한 태풍은 9월과 10월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으며, 특히 가을태풍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그 위력이 대단하였다. 2016년 10월 우리나라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6명이 숨졌고, 2,15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주택 3,500여동과 차량 2,500여대가 침수하였고, 도로는 55곳이 통제되었다.¹⁾ 이러한 피해는 대부분 연안역에서 발생한다.

3. 선행연구 검토

현재 해수면상승과 다양한 재난의 형태에 대한 연안역 침수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 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1세기 정도의 분석기간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해수면 상승의 경제적 영향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민동기 외 2013).

일반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의 침수 취약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수 지역에 대한 범위를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해안역 침수에 대해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그 피해

1) 세계일보, 2017년 1월 16일자

액을 도출하는 연구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피해액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사회적 손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입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강력하게 제기하기 위해서다.

이수연 외(2011)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분석하면서 해수면을 1m 단위로 최대 10m까지 상승시켰을 때 해운대구 지역의 침수지역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서 토지, 주택, 도로, 산업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산정하였다. 김정태 외(2015)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RCP 8.5, 목표기간 IV에 대한 강우증가와 해수면 상승량을 적용하여 80, 200년 빈도에 대한 홍수량 및 홍수위를 산정하고 홍수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이동욱 외(2011)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분석에 있어서 어떠한 요인들이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건물 및 시설물의 영향에 있어서 도로와 전체적인 건물의 침수면적을 산출하여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산정하였다.

한종규 외(2009)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기상현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풍 MAEAL의 이동경로에 슈퍼태풍이 내습한다고 가정으로 해수면 상승고를 산출하고, 항공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자료를 기반으로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지역의 침수등고, 침수면적 및 시설물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태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안역 침수지역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는 연구로 상기의 연구들과 일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다만, 선행연구들이 피해발생요인이 해수면 상승에 국한되어 있거나, 연구 대상지역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제적 손실도 시설적 측면에 한정되어 있다. 즉, 연구 대상지역이 해안역이라는 명확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구단위 행정구역이나 일부 표본적 지역을 추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역에 대한 피

해는 제한적 공간이 아닌 광범위한 범위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대비하고 대응하는 최소한의 단위는 시나도 단위가 되어야 하며, 거주민과 다양한 시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의 해안역이라는 대상지를 도출하고 해수면상승과 대규모 태풍에 따른 피해 발생지역과 각 요소별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였다.

III. 부산시 연안역 공간자료 구축

1. 부산시 연안역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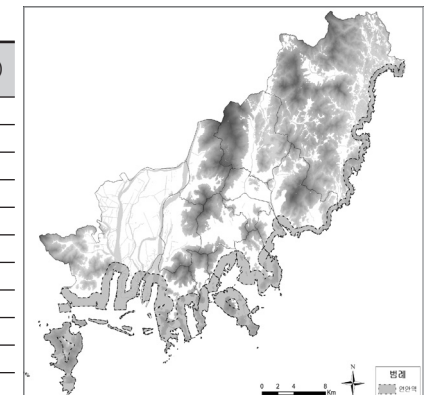
부산시는 부산지역의 연안육역을 「연안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각 법률 목적에 따라 적용되고 있으며, ‘부산시 연안종합관리계획(부산광역시, 2012)’에서는 「연안관리법」 규정에 따라 부산지역 연안육역을 구분하고 있다.

〈표 1〉 부산광역시 구별 연안역 현황

구분	면적(km ²)		비율(%)
	행정구역	연안역	
강서구	180.6	44.2	24.5
기장군	218.1	17.3	7.9
남구	26.8	16.1	60.1
동구	9.7	4.6	47.4
사하구	41.7	25.2	60.4
서구	13.9	5.7	41.0
수영구	10.2	4.0	39.2
영도구	14.1	13.0	92.2
중구	2.8	2.4	85.7
해운대구	51.5	6.5	12.6
부산시			

* 행정구역 : 부산광역시 통계연보

* 연안역 : 부산광역시 해양수산국



〈그림 1〉 부산광역시 연안역

부산시의 총 면적은 2015년 기준으로 769.82km²이며, 그 중 연안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138.9km²로 부산시 전체의 약 18.0%를 차지하고 있다.

연안육역 중 해안선이 가장 긴 강서구가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하구, 기장군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구역의 면적 대비 비율은 섬인 영도구가 약 90%가 넘는 면적이 연안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해안가에 위치하면서 구 면적이 작은 중구의 경우 약 86%가 연안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연안역 인구 현황

인구는 도시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해양도시인 부산시의 인구는 연안역내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분석을 위해서 연안역은 부산시 연안종합관리계획(부산광역시 2012)의 「연안관리법」 규정에 따라 부산지역 연안육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인구는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구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특성 상 5 미만의 자료는 누락되어 분석이 되기 때문에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다소 낮게 나타는 경향이 있었다.

부산시의 총 인구는 2010년 집계구 자료를 기준으로 3,346,693명이며, 그 중 연안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847,814명으로 부산시 전체의 약 25.3%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안역 기준으로 사하구가 2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남구, 영도구 순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나고 있었다.

구별 중 섬인 영도구의 경우 98.7%가 연안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안가에 위치하면서 구 면적이 가장 작은 중구가 81.4%로 2번째 높은 거주율을 보이고 있었다.

〈표 2〉 연안역 인구현황

구분	인구(명)		구별 기준 비율(%)	연안역 기준 비율(%)
	구	연안역		
합계	3,346,693	847,814	25.3	100.0
강서구	51,383	27,476	53.5	3.2
기장군	92,077	16,357	17.8	1.9
남구	287,478	169,788	59.1	20.0
동구	92,120	52,601	57.1	6.2
사하구	336,066	204,216	60.8	24.1
서구	114,786	54,535	47.5	6.4
수영구	166,883	82,369	49.4	9.7
영도구	137,048	135,249	98.7	16.0
중구	46,782	38,063	81.4	4.5
해운대구	402,177	67,160	16.7	7.9

자료 :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3. 연안역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현황

부산시의 전체 용도지역별 면적은 2013년 기준으로 주거 143.3km², 상업 25.2km², 공업 56.2km², 녹지 549.8km²이며, 그 중 연안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주거 34.3km², 상업 10.4km², 공업 25.3km², 녹지 66.5km²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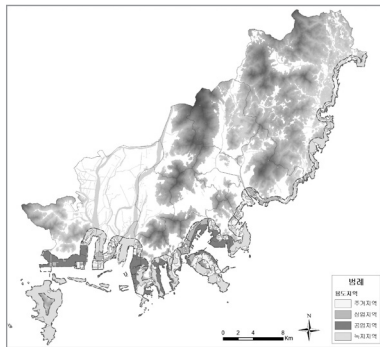
용도지역 중에서 연안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업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상업이 4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업지역이 평탄한 지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안지역의 매립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구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녹지를 제외하고는 남구, 동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의 경우는 공업용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강서구, 기장군, 수영구, 해운대구는 상업용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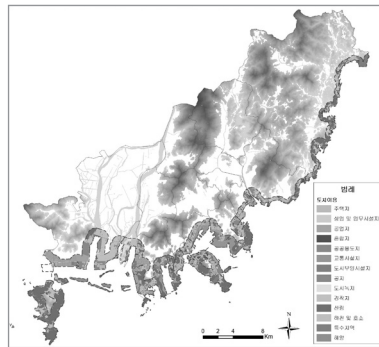
〈표 3〉 연안역 용도지구 현황

분류	부산시(km ²)				연안역(km ²)				비율(%)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부산시	143.3	25.2	56.2	549.8	34.3	10.4	25.3	66.5	23.9	41.3	45.0	12.1
강서구	17.5	3.0	21.1	141.8	5.9	1.7	7.6	28.3	33.7	56.7	36.0	20.0
기장군	16.2	1.0	6.8	194.6	4.5	0.2	0.2	11.9	27.8	20.0	2.9	6.1
남구	10.6	1.2	4.6	10.8	5.3	0.4	4.4	5.6	50.0	33.3	95.7	51.9
동구	2.5	2.9	1.8	3.2	0.8	2.0	1.7	0.1	32.0	69.0	94.4	3.1
사하구	10.3	0.6	9.9	20.3	5.4	0.4	8.6	10	52.4	66.7	86.9	49.3
서구	4.3	0.9	1.1	7.7	2.0	0.5	1.0	2.1	46.5	55.6	90.9	27.3
수영구	6.8	0.6	0.1	2.8	3.2	0.3	0.0	0.4	47.1	50.0	0.0	14.3
영도구	5.3	0.8	1.6	6.7	4.9	0.7	1.5	5.8	92.5	87.5	93.8	86.6
중구	0.9	2.20	0.2	0.5	0.6	1.7	0.2	0.1	66.7	77.3	100.0	20.0
해운대구	12.0	3.4	0.9	35.7	1.8	2.4	0.1	2.1	15.0	70.6	11.1	5.9

자료 : 2013년 국가토지정보시스템(KLIS) 용도지역



〈그림 2〉 연안역 용도지구



〈그림 3〉 연안역 토지이용

토지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도시생태현황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연안역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도시생태현황도와 행정구역간의 경계불일치가 있기 때문이었다.

부산 연안역의 토지이용 유형은 산림이 38.5km²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유형별 비율은 해양이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안역을 기준의 비율은 산림이 2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교통

시설지, 주택지, 경작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연안역 토지이용 현황

토지이용유형	부산시(km ²)	연안역(km ²)	유형별 비율(%)	연안역 기준 비율(%)
경작지	114.6	14.4	12.6	10.6
공공용도지	18.0	4.2	23.5	3.1
공업지	29.0	12.3	42.3	9.1
공지	23.5	6.6	27.8	4.9
교통시설지	55.1	17.5	31.8	12.9
도시녹지	24.2	4.6	19.1	3.4
도시부양시설지	4.9	2.5	51.3	1.8
산림	346.7	38.5	11.1	28.4
상업 및 업무시설지	17.7	5.5	31.1	4.1
주택지	71.8	16.4	22.8	12.1
특수지역	11.5	2.3	20.0	1.7
하천 및 호소	31.4	3.1	9.9	2.3
해양	4.3	3.8	87.8	2.8
혼합지	15.7	3.8	24.2	2.8
총합계	768.4	135.4	17.6	100.0

자료 : 부산시 도시생태현황도의 토지이용 기준(부산광역시, 2010)

4. 연안역 기반시설 현황

도로는 행정자치부의 2013년 도로명주소 지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세도로까지 포함되어 있어 부산광역시 통계연보와 비교해 도로연장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부산시의 총 도로 연장은 2013년 기준으로 5,183.7km이며, 그 중 연안역 내 도로 연장은 1,283km로 부산시 전체의 약 24.8%를 차지하고 있다.

구별로 보면 대부분의 도로가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영도구가 전체 지역내 도로의 94.6%가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구 79.85, 사하구 60.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별 연안역 기준의 비

율로 보면, 도로의 경우 강서구(16.8%)와 영도구(16%)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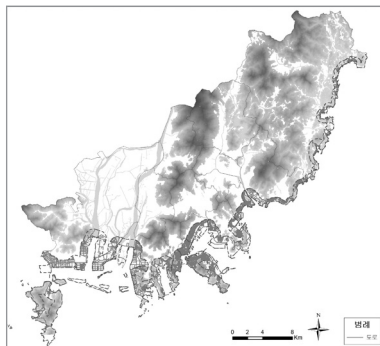
철도는 교통연구원 2013년 철도데이터와 부산광역시 2015년 도시철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부산시의 총 철도 연장은 2013년 기준으로 238km이며, 그 중 연안역내의 연장은 40.2km로 부산시 전체의 약 16.9%를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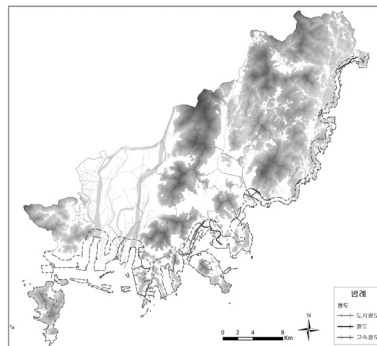
〈표 5〉 연안역 교통시설 현황

분류	부산시		연안역 내		구별 기준 비율		연안역 기준 비율	
	도로(km)	철도(km)	도로(km)	철도(km)	도로(%)	철도(%)	도로(%)	철도(%)
부산시	5,183.70	238	1,283.00	40.2	24.8	16.9	100	100.0
강서구	834.3	22.2	216.0	0.0	25.9	0.0	16.8	0.0
기장군	710.9	23.9	115.9	4.3	16.3	18.0	9.0	10.7
남구	313.5	9.1	143.2	5.8	45.7	63.7	11.2	14.4
동구	202.2	12.1	102.4	10.4	50.6	86.0	8.0	25.9
사하구	269.5	14.0	164.1	8.3	60.9	59.3	12.8	20.6
서구	232.6	3.1	105.0	1.1	45.1	35.5	8.2	2.7
수영구	201.5	6.3	85.6	2.7	42.5	42.9	6.7	6.7
영도구	216.9	0.0	205.2	0.0	94.6	0.0	16.0	0.0
중구	92.6	2.5	73.9	2.5	79.8	100.0	5.8	6.2
해운대구	319.0	21.9	71.5	5.1	22.4	23.3	5.6	12.7

자료 : 행정자치부, 2013년 도로명주소 지도자료, 교통연구원, 2013년 철도데이터, 부산광역시 2015년 도시 철도 자료



〈그림 4〉 연안역 도로



〈그림 5〉 연안역 철도

구별 연안역 기준으로 철도는 동구가 25.9%로 가장 높고, 사하구가 20.6%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5. 연안역 건축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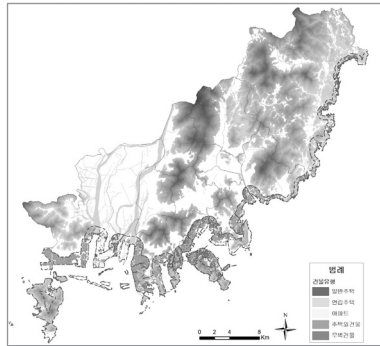
주택을 비롯해 공장, 상업시설 등의 건축물은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공간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지표로 작용한다.

부산시의 총 건물수는 2013년 연속수치지도 기준으로 441,126호이며, 그 중 연안역내의 건물수는 117,662호로 부산시 전체의 약 26.7%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연안역 건축물 현황

구분		전체		연안역 내		부산시 기준 비율		연안역 기준 비율	
		건물수 (호)	연면적 (㎡)	건물수 (호)	연면적 (㎡)	건물 비율(%)	면적 비율(%)	건물 비율(%)	면적 비율(%)
부산시		441,126	6,095	117,662	1,841	26.7	30.2	100.0	100.0
구	강서구	36,712	791	10,746	357	29.3	45.2	9.1	19.4
	기장군	32,071	394	8,293	75	25.9	19.0	7.0	4.1
	남구	34,513	428	15,691	231	45.5	54.1	13.3	12.5
	동구	20,572	200	10,278	116	50.0	57.9	8.7	6.3
	사하구	38,656	631	21,323	419	55.2	66.4	18.1	22.8
	서구	24,534	226	11,672	118	47.6	52.5	9.9	6.4
	수영구	18,379	245	6,652	103	36.2	42.0	5.7	5.6
	영도구	23,644	247	22,478	235	95.1	95.2	19.1	12.8
	중구	7,776	99	6,382	85	82.1	85.9	5.4	4.6
	해운대구	26,466	409	4,147	102	15.7	24.8	3.5	5.5
건 물 유 형	일반주택	241,781	1,720	62,374	407	25.8	23.7	53	22.1
	연립주택	16,337	349	3,659	85	22.4	24.4	3.1	4.6
	아파트	7,179	466	1,687	113	23.5	24.2	1.4	6.1
	주택외건물	157,490	3,409	44,630	1,182	28.3	34.7	37.9	64.2
	무벽건물	18,339	150	5,312	54	29.0	35.8	45.0	2.9

자료 : 2013년 연속수치지도 기준, 1인가구 최소면적인 면적 14㎡ 이하 건물은 제외한 수치



〈그림 6〉 연안역 건축물

연안역내 건물의 구별 비율은 영도구 19.1%, 사하구 18.1%, 남구 13.3%로 다른 구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연안역을 기준으로 건물유형을 살펴보면 일반주택이 53%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그 다음으로 주택 외 건물이 37.9%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6. 연안역 사업체 현황

사업체는 2012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집계구 자료로 분석하였으며, 연안역의 지역 총생산액은 구별대비 사업체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였다.

집계구 자료의 특성 상 5 미만의 자료는 누락되어 분석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체수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시의 사업체수는 2012년 기준으로 249,209개이며, 그 중 연안역내의 사업체수는 84,416개로 부산시 전체의 약 33.9%를 차지하고 있다. 구별 기준으로 영도구의 경우는 99.9%가 연안역내에 포함되었고 97.7%의 중구와 87.4%의 동구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가장군이 21.7%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연안역 기준의 비율로는 강서구가 18.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는 사하구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7〉 연안역 사업체 현황

구분	사업체수(개)		지역내총생산(억원)		구별 기준 비율(%)	연안역 기준 비율(%)
	부산시	연안역	지역내	연안역		
부산시	249,209	84,416	679,990	230,337	33.9	100.0
강서구	8,994	4,294	89,671	42,812	47.7	18.6
기장군	6,968	1,509	29,316	6,349	21.7	2.8
남구	14,426	8,912	39,308	24,283	61.8	10.5
동구	13,701	11,969	39,533	34,536	87.4	15.0
사하구	19,524	13,367	59,201	40,532	68.5	17.6
서구	9,257	6,074	23,170	15,203	65.6	6.6
수영구	12,148	7,564	16,810	10,467	62.3	4.5
영도구	8,306	8,298	15,975	15,959	99.9	6.9
중구	15,093	14,742	27,919	27,270	97.7	11.8
해운대구	20,850	7,687	56,935	20,991	36.9	9.1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12년 집계구 자료

IV. 시나리오별 침수 현황 및 피해규모 산정

1. 연안역 사회 · 경제적 가치

1) 연안역 주택가치 분석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주택유형별 m²당 평균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 하였다. 주택유형에서 아파트는 구별로 가격이 제공되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경우 중부산권(중, 서, 동, 영도,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부산권(해운대, 금정, 동래, 기장), 서부산권(북, 강서, 사상, 사하)으로 제공되고 있다.

연면적가격은 각 구별로 유형의 평균매매가격에 건물연면적을 곱해서 산정하였고, 건물가격은 연면적에 건물의 층수를 곱해서 가격을 산정하였다.

건축물 가격은 각 구별의 평균값으로 해운대구, 남구, 사하구 등 최근에 건설된 아파트단지의 경우 그 가격이 높아 실제 가격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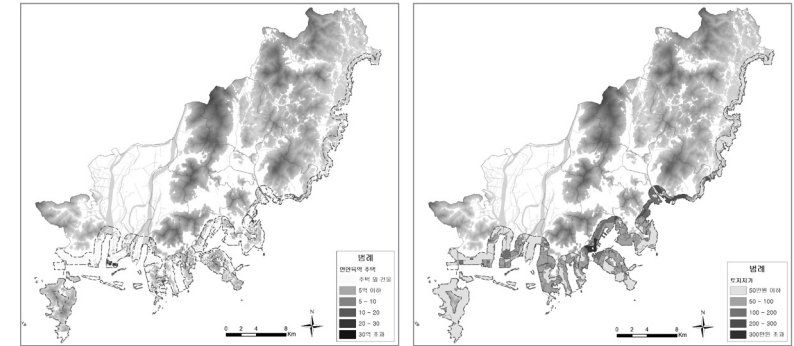
특히 마린시티 등에 위치한 고가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상업빌딩, 오피스텔 등은 가격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다 포함할 경우 건축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부산 연안역에 위치한 건물의 가치는 연면적 가격으로 약 84,930억원, 건물가격으로는 약 630,68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건물 유형별 가치는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아파트가 78.9%로 건물 가치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단독주택이 10.7%, 연립주택이 10.4%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8〉 연안역 주택가치 산정 결과

구분	단독주택(억원)		아파트(억원)		연립주택(억원)		합계(억원)	
	연면적 가격	건물 가격	연면적 가격	건물 가격	연면적 가격	건물 가격	연면적 가격	건물 가격
강서구	2,106	2,428	3,743	49,351	123	444	5,972	52,223
기장군	3,226	3,690	167	2,710	249	982	3,642	7,382
남구	7,192	11,065	5,078	111,755	2,886	14,464	15,156	137,284
동구	4,170	6,480	687	11,184	584	3,071	5,441	20,735
사하구	4,317	7,926	6,286	100,646	2,380	10,418	12,983	118,990
서구	5,420	8,521	699	9,515	865	5,311	6,984	23,347
수영구	3,147	5,561	4,074	61,380	2,111	9,636	9,332	76,577
영도구	10,906	16,053	3,224	42,477	1,755	8,979	15,885	67,509
중구	1,842	4,087	202	1,567	788	4,603	2,832	10,257
해운대구	996	1,418	4,091	107,279	1,615	7,681	6,702	116,378
총합계	43,322	67,228	28,251	497,862	13,357	65,590	84,930	630,680



〈그림 7〉 연안역 주택가치 산정

〈그림 8〉 연안역 토지가치 산정

연안역 건물 가치의 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남구가 가장 높은 건물 가격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하구, 해운대구 순으로 나타났고 기장군의 건물 가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연안역 토지가치 분석

토지지가의 경우 각 구별로 용도지역 공시지가를 취합한 다음 재계산하여 산정하였다.

우선 부산 연안역의 토지지가는 총합계 약 709,713억원으로 추정되고,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약 252,170억원, 상업지역이 약 213,814억원, 공원지역이 약 166,955억원, 녹지지역이 76,774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연안역을 기준으로 각 구별 비율을 확인한 결과, 강서구와 사하구가 1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남구와 해운대구 등의 순으로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다.

〈표 9〉 연안역 토지가치 산정결과

구분	공업지역 (억원)	녹지지역 (억원)	상업지역 (억원)	주거지역 (억원)	총합계 (억원)	연안역 기준 비율(%)
연안역	166,955	76,774	213,814	252,170	709,713	100.0
강서구	34,803	38,615	21,626	30,145	125,189	17.6
기장군	415	11,312	2,889	22,271	36,888	5.2
남구	28,172	4,525	8,461	47,840	88,997	12.5
동구	16,164	10	36,325	5,132	57,632	8.1
사하구	63,148	10,719	6,985	44,027	124,879	17.6
서구	8,432	2,062	8,821	14,511	33,826	4.8
수영구	-	567	7,026	37,036	44,630	6.3
영도구	13,822	6,326	9,456	32,270	61,874	8.7
중구	1,280	139	60,283	3,754	65,456	9.2
해운대구	720	2,497	51,942	15,183	70,342	9.9

2. 해수면 상승에 의한 피해규모

1) 산정 방법

미래 해수면 상승 및 폭풍해일 영향에 의한 침수예상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해수면 상승²⁾(1, 2m), 태풍 매미급, 슈퍼 태풍급³⁾ 등 총 4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하였다.⁴⁾ 침수예상지역은 태풍 내습 시 최고고조위의 최악 상황을 고려해서 실시했으며, 여기에 태풍영향 및 태풍해일고를 반영하였다.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는 평균 전 지구적 해수면 상승치를 고려한 RCP

2) 해수면 상승의 경우 IPCC에서 내놓은 2100년까지 0.59m~1m 상승기준을 고려하여 최악의 상태를 반영한 1m를 기준으로 적용하였음.

3) 슈퍼 태풍은 중심 최대풍속 67m/s 이상, 1000mm/day 이상의 강우를 동반하는 폭풍으로 정의됨. (윤종주 등, 2012)

4) 태풍 매미의 상승분은 허동수 등(2006)이 연구한 “부산연안에서 폭풍해일고 추정”을 인용하였고, 슈퍼태풍 상승분은 허동수 등(2008)이 연구한 “슈퍼태풍 내습 시 부산경남연안역의 폭풍해일고” 논문을 인용함.

〈표 10〉 RCP 8.5 시나리오에 대한 기간별 해수면 상승값(cm)

Name	2025년	2050년	2075년	2100년
RCP 8.5	16	38	76	136

자료 : 조광우 등, 국가해수면상승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I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표 11〉 부산시의 태풍 및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침수높이

관측지점	태풍해일고(cm)		태풍파랑고(cm)		극고 조위 (cm)	시나리오별 침수높이(cm)			
	매미	슈퍼 태풍	매미	슈퍼 태풍		1m 상승	2m 상승	매미	슈퍼 태풍
임랑(해)	75	304	40	65	157	257	357	272	526
칠암항	71	286				257	357	268	508
일광(해)	72	262				257	357	269	484
대변항	75	282				257	357	272	504
송정(해)	77	282				257	357	274	504
해운대(해)	81	330			174	274	374	295	569
광안리(해)	86	357				274	374	300	596
부산항	98	428				274	374	312	667
송도(해)	103	455				274	374	317	694
다대포(해)	108	478				274	374	322	717
괴정천하구	190	657				274	374	404	896
녹산/신호	169	642				274	374	383	881
가덕도천성	136	487			247	347	447	423	799

8.5 시나리오에 기준으로 시나리오별 침수높이를 산정하였다.⁵⁾

피해규모 산출을 위한 지형데이터는 2009년 부산광역시에 의해 측량되어진 Lidar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GPS 측량 자료로 보정하였다.

각 지역의 침수높이를 ArcGIS의 보간법 중의 하나인 Kriging 방식으

5) IPCC AR5에서 정한 대표농도경로(RCP) 시나리오 중 RCP 8.5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 IPCC AR5에서는 기후변화를 전망하기 위한 대표농도경로(RCP)를 이용한다. RCP는 하나의 대표적인 복사 강제력에 대해 사회·경제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대표(Representative)’라는 표현과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경로(Pathway)’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국립기상연구소 2012).

로 처리한 후, 부산시 전역에 걸쳐 시나리오 별로 해수면 보다 낮은 저지대 (침수예상지역)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저지대에서 연안의 지형이나 방호시설 때문에 태풍해일이 차단 될 경우 저지대라 할지라도 해일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난 것이라 판단해 침수예상지역에서는 제외하였다.

2) 시나리오 별 피해예상 지역

연안역의 총 면적은 138.9km²이며, 그 중 시나리오 별로 침수예상지역 면적을 살펴보면 1m 해수면상승 시 30.3km², 2m 해수면상승 시 49.3km², 2100년 매미급 태풍 강습 시 43.0km², 2100년 슈퍼태풍 강습 시 63.7km²로 나타났다.

구별 피해 면적을 살펴보면 평지지역의 강서구가 가장 넓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하구가 넓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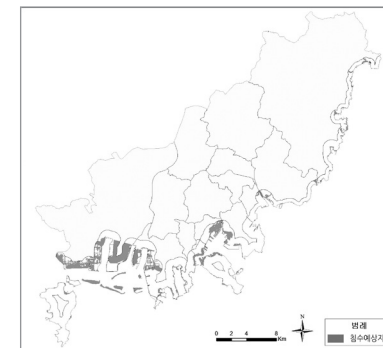
1m 수면상승 시 연안역에 위치한 주요 관광지인 해수욕장이 대부분 침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향후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100년 슈퍼태풍 강습 시 구별 연안역에서의 침수비율을 보면 동구가 약 73.9%, 강서구가 약 60%가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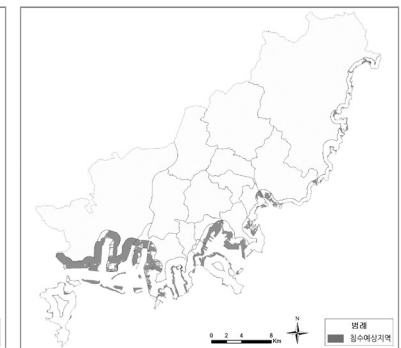
아래의 분석 결과는 부산시의 연안역에 대한 분석 결과로 그 범위를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그 피해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지며, 특히 평지지역인 강서구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슈퍼태풍 강습 시 그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표 12〉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 별 침수예상지역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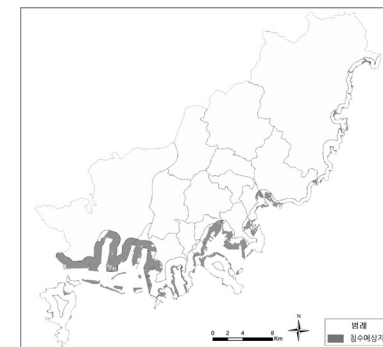
구분	1m 수면 상승 (km ²)	2m 수면 상승 (km ²)	2100년 매미급 (km ²)	2100년 슈퍼태풍 (km ²)
강서구	16.4	23.3	23.5	26.2
기장군	1.2	1.7	1.3	2.5
남구	1.4	5.4	1.8	7.2
동구	1.9	3.1	2.8	3.4
사하구	6.0	9.7	9.3	14
서구	0.6	1.1	0.9	1.4
수영구	0.3	0.9	0.4	1.7
영도구	1.2	1.8	1.3	2.6
중구	0.6	0.9	0.8	1.2
해운대구	0.7	1.5	0.9	3.3
총합계	30.3	49.3	43	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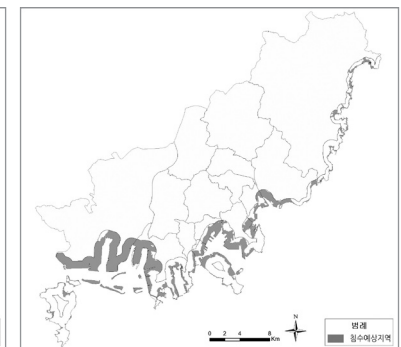
〈그림 9〉 해수면 1m 상승 침수예상지역



〈그림 10〉 해수면 2m 상승 침수예상지역



〈그림 11〉 2100년 매미 기준 침수예상지역



〈그림 12〉 2100년 슈퍼태풍 기준 침수예상지역

3) 침수예상지역 내 인구현황

연안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847,814명이며, 그 중 침수예상지역의 인구가 매미기준으로 237,745명, 슈퍼태풍 기준으로 432,312명으로 연안역 인구 대비 각각 28%, 51%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서구의 경우 연안역에 위치한 모든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태풍 강습 시 매미에 비해 약 2.7배 이상의 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침수예상지역 내 인구현황

구분	인구(명)			매미 인구비율(%)	슈퍼태풍 인구비율(%)
	연안역	매미	슈퍼태풍		
합계	847,814	237,745	432,312	28	51
강서구	27,476	25,515	27,476	93	100
기장군	16,357	14,057	14,464	86	88
남구	169,788	19,398	102,440	11	60
동구	52,601	19,471	23,540	37	45
사하구	204,216	74,804	95,078	37	47
서구	54,535	13,780	19,781	25	36
수영구	82,369	24,464	56,236	30	68
영도구	135,249	25,309	36,802	19	27
중구	38,063	4,751	11,816	12	31
해운대구	67,160	16,196	44,679	24	67

4) 침수예상지역 내 주택 분석

침수예상지역 내 건물의 연면적 가격은 매미 기준으로 11,307억원, 슈퍼태풍 기준으로 28,79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침수예상지역 내 건물 유형별 피해액은 매미기준으로 단독주택이 53%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슈퍼태풍기준으로 아파트가 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침수예상지역 내 피해액에 대한 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매미기준으로 사하구의 피해액이 3,30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서구(3,073억원), 동구(1,243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슈퍼태풍 기준으로는 강서구가 5,7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4,771억원), 사하구(4,617억원)로 나타났다. 슈퍼태풍 강습 시 매미에 비해 약 2.5배 이상의 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4〉 침수예상지역 내 주택현황

구분	단독주택(억원)		아파트(억원)		연립주택(억원)	
	매미	슈퍼태풍	매미	슈퍼태풍	매미	슈퍼태풍
합계	6,020	11,240	3,511	13,527	1,776	4,027
강서구	1,624	1,864	1,326	3,743	123	123
기장군	897	1,798	31	109	62	108
남구	220	1,715	31	1,717	39	1,339
동구	940	1,227	295	353	9	63
사하구	1,185	1,579	1,012	1,850	1,107	1,189
서구	173	355	119	198	61	79
수영구	220	841	321	2,601	82	585
영도구	587	1,170	154	392	149	307
중구	71	213	—	64	50	63
해운대구	103	478	223	2,500	94	171

* 침수구역 내 주택의 연면적 기준 피해액

5) 침수예상지역 내 토지가치 분석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토지가치는 매미기준으로 248,394억원, 슈퍼태풍 기준으로 425,71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15〉 침수예상지역 내 주택현황

구분	단독주택(억원)		아파트(억원)		연립주택(억원)	
	매미	슈퍼태풍	매미	슈퍼태풍	매미	슈퍼태풍
합계	6,020	11,240	3,511	13,527	1,776	4,027
강서구	1,624	1,864	1,326	3,743	123	123
기장군	897	1,798	31	109	62	108
남구	220	1,715	31	1,717	39	1,339
동구	940	1,227	295	353	9	63
사하구	1,185	1,579	1,012	1,850	1,107	1,189
서구	173	355	119	198	61	79
수영구	220	841	321	2,601	82	585
영도구	587	1,170	154	392	149	307
중구	71	213	—	64	50	63
해운대구	103	478	223	2,500	94	171

* 침수구역 내 주택의 연면적 기준 피해액

각 구별로 살펴보면, 매미기준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강서구(90,196억원), 사하구(44,371억원), 슈퍼태풍 기준으로 강서구(99,557억원), 사하구(75,489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슈퍼태풍 강습 시 매미에 비해 약 1.7배 이상의 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6〉 침수예상지역 내 토지가치 현황

구분	공업지역(억원)		녹지지역(억원)		상업지역(억원)		주거지역(억원)	
	매미	슈퍼태풍	매미	슈퍼태풍	매미	슈퍼태풍	매미	슈퍼태풍
합계	98,730	150,002	16,804	21,060	91,224	162,795	41,636	91,857
강서구	34,181	34,802	12,011	14,049	20,218	21,626	23,786	29,080
기장군	70	89	392	667	737	1,141	2,997	7,019
남구	9,056	25,752	66	508	1,572	4,716	1,214	17,556
동구	14,551	16,164	10	10	20,842	29,177	133	365
사하구	27,308	51,112	3,589	4,419	4,251	5,884	9,222	14,074
서구	4,819	7,696	41	98	2,687	4,155	244	522
수영구	—	—	131	149	225	1,863	3,023	17,328
영도구	7,515	12,512	156	358	3,108	6,018	259	2,097
중구	1,215	1,280	31	31	30,439	44,673	—	—
해운대구	15	595	375	771	7,144	43,543	759	3,814

6) 침수예상지역 내 사업체 현황

연안역에 위치한 사업체수는 129,267개이며, 그 중 침수예상지역 내 사업체수는 매미기준으로 42,824개, 슈퍼태풍 기준 60,243개로 연안역 내 사업체수 기준으로 각각 33.1%, 46.6%로 나타났다.

구별 침수예상지역의 사업체수를 살펴보면 매미기준으로 동구가 68.1%, 슈퍼태풍 기준으로 중구가 93.1%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슈퍼태풍 강습 시 매미에 비해 약 1.4배 이상의 피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침수예상지역 내 사업체 현황

구분	사업체수(개)			지역내총생산(억원)			비율(%)	
	연안역	매미	슈퍼태풍	연안역	매미	슈퍼태풍	매미	슈퍼태풍
합계	129,267	42,824	60,243	397,838	131,797	61,422	33.1	46.6
강서구	8,994	1,322	1,322	89,671	13,180	1,937	14.7	14.7
기장군	6,968	1,461	1,490	29,316	6,147	1,314	21.0	21.4
남구	14,426	1,584	6,005	39,308	4,316	1,797	11.0	41.6
동구	13,701	9,324	9,784	39,533	26,904	19,212	68.1	71.4
사하구	19,524	8,339	9,944	59,201	25,286	12,879	42.7	50.9
서구	9,257	3,536	4,041	23,170	8,851	3,864	38.2	43.7
수영구	12,148	2,833	5,131	16,810	3,920	1,656	23.3	42.2
영도구	8,306	3,717	4,726	15,975	7,149	4,068	44.8	56.9
중구	15,093	9,553	14,054	27,919	17,671	16,455	63.3	93.1
해운대구	20,850	1,155	3,746	56,935	3,154	567	5.5	18.0

7) 침수예상지역 내 교통시설 분석

연안역 총 도로 연장은 3,395km이며, 그 중 침수예상지역 내 연장은 매미기준 387km로 연안역 기준 약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슈퍼태풍 기준 612km로 연안역 기준으로 약 18%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8〉 철도 건설비용

(단위 : 억원/km)

구분	일반철도(단선, 도시부)	도시철도	고속철도
시설비	230	1,410	481
부대비	19	114	41
합계	249	1,524	522

자료 : 1) 일반철도 : 철도사업 비용책정 적정성 검토(KDI, 2007), 2011년12월 기준으로 E/S(1,248)
 2) 도시철도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건설교통부, 2007.12), '05년 비용단가를 '11년 비용단가로 갱신(GDP디플레이터 활용 ES=1,347)
 3) 고속철도 :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건설교통부, 2006.8), '06년 2분기 비용단가를 '11.4분기 비용단가로 갱신(GDP디플레이터 활용 ES=1,352)

〈표 19〉 침수예상지역내교통시설현황 및 피해액 산정

구분	연안역		매미		슈퍼태풍	
	도로(km)	철도(km)	도로(km)	철도(km)	도로(km)	철도(km)
합계	3,395	115	387	18.7	612	29.5
강서구	834	22	173	—	189	—
기장군	711	24	26	0	49	1.3
남구	314	9	11	2.3	52	4.1
동구	202	12	36	7.3	51	10.3
사하구	270	14	70	5.5	0	7.1
서구	233	3	13	0.2	99	0.3
수영구	202	6	9	0.9	21	1.1
영도구	217	0	23	—	39	—
중구	93	3	17	1.9	41	2.5
해운대구	319	22	8	0.6	31	2.8
패해 산정액	—	—	78,561억원	19,382억원	124,236억원	30,322억원

이를 건설비용으로 처리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면, 일반국도 4차선의 경우 km당 시설비 203억원⁶⁾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침수 교통시설현황에 적용하면, 매미기준의 경우 78,561억원, 슈퍼태풍의 경우 124,236억원의 피해액이 산출되었다.

6)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내부자료(2016), '11~'14년 공사발주된 국도사업의 설계단가 평균치로 특수구조물 및 연약지반이 과다하지 않은 일반적인 현황임.

연안역 총 철도 연장은 115km이며, 그 중 침수예상지역 내 연장은 매미 기준 18.7km로 연안역 기준 약 1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슈퍼태풍 기준 29.5km로 연안역 기준으로 약 25.7%를 차지하고 있다.

철도 피해액의 경우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의 건설비용을 각각 적용하여 시설비용을 산출하였다.

V. 결론 및 향후과제

풍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이로 인한 연안지역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연안역에 발생하는 본 연구는 온난화로 인해 지구 평균해수면이 상승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대규모 태풍해 규모와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부산시는 세계 대부분의 해안 도시와 마찬가지로 해수면 상승과 폭풍해일,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 및 잠수 현상과 같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주거 지역과 산업, 공항, 항구, 도로 등과 같은 대부분의 사회 기반 시설이 해안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영향은 사회 및 경제 부문에 매우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산정하여 부산시 연안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미래 기후 변화 영향은 IPCC 5차 보고서와 RCP 8.5 시나리오의 해수면 상승 기준을 바탕으로 하였고, 2100년을 대상연도로 하여 해수면 상승(1m, 2m)을 고려한 경우와 여기에 매미급과 슈퍼급 태풍 내습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피해 시나리오에 따른 침수 예상지역 및 피해액을 산출하

였다.

부산시 연안역의 인구, 건축물, 토지 등과 기반시설 등을 파악하여 공간 자료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가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안역 총 면적(138.9km²) 중 1m 해수면 상승 시 30.3km², 2m 해수면 상승 시 49.3km², 매미급 태풍 내습시 43.0km², 슈퍼급 태풍 내습 시 63.7km²의 면적이 각각 침수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연안역 인구대비 매미 기준으로 28%, 슈퍼태풍 기준으로 51%가 피해범위에 속하고, 건물 연면적 가격 기준으로는 각각 11,307억원, 28,793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가치는 매미 기준 248,394억원, 슈퍼 태풍 기준으로 425,714억원이며, 사업체 피해는 각각 42,824개소, 60,243개소, 지역총생산액은 131,797억원, 185,407억원으로 추산되었다. 교통시설은 매미 기준으로 도로 78,561억원, 철도 19,382억원, 슈퍼 태풍기준으로 도로 124,236억원, 철도 30,322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부산시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과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경우 그 영향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연안역에 중요 시설과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그 피해는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안역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침수예상구역은 각 시나리오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의한 저지대를 추출한 것이며, 현재 각 구군별로 관리하는 배수시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시나리오와 같은 상황이 발생 시 월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침투량, 지역별 강우량, 하천

을 통해 들어오는 유량 등 각종 침수요인을 산정하고, 각 구군의 토지이용에 따른 투수율과 배수시설능력 등을 고려해 침수될 수 있는 지역의 산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피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부화 할 필요가 있으며, 직접적 피해액 이외에도 간접적 피해액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분석이 된다면 보다 정확한 피해지역과 피해규모가 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김경태·김연수·최창현·김형수(2015), 「강우증가와 해수면상승을 고려한 홍수 피해액 산정」,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대한토목학회.
- 민동기·조광우(2013), 「해수면 상승에 따른 경제적 피해 비용 및 최적 해안 방어 비율 추정 -제주도를 대상으로-」, 자원·환경경제연구,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22권1호.
- 송교육·이창현(2015), 『부산 연안역의 기후변화 적응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어규·홍승진·강나래·이종소·김형수(2015), 「연안도시지역의 해수면상승과 범람에 따른 침수피해액 분석」,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대한토목학회, 2015. 10.
- 윤종주·전기천·신재설·박광순(2012),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최대 가능 태풍강도 추정 및 이에 따른 폭풍해일고 양상모의」,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15(4).
- 이동욱, 부양수(2011),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 따른 제주연안지역 건설시설물의 영향 분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이수연·최진무(2011), 「해수면상승과 경제적 손실」,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 한국정책평가연구원(2011), 『국가 해수면상승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II』.
- 한종규·김성필·장동호·장태수(2009), 「항공 LiDAR 자료를 이용한 슈퍼태풍 내습시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도심지역 침수 피해 규모 추정」, 한국공간정보학회 17권 3호.
- 홍성기·강영훈·이한석(2013), 「부산 영도 해안의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대책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 Vol. 37, No. 4.
- “이상기후 ‘몹살’.. 연중 한반도 덮쳤다”, 세계일보(2017. 1. 16). <http://v.media.daum.net/v/20170116192840039>

국 문 초 록

시나리오별 부산시 연안 침수 분석 및
피해규모 산정 연구

여성준(부산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원)
이창현(부산발전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전문위원)

부산은 세계 대부분의 다른 해안 도시와 마찬가지로 특히 해수면 상승, 폭풍 해일, 범람 등으로 인한 침수 및 침수 현상과 같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취약하다.

주요 산업, 공항, 항구, 도로, 주거 지역 및 서식지와 같은 대부분의 사회 기반 시설이 해안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악영향은 사회 및 경제 부문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미래 기후변화가 부산시 연안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미래 기후 변화 영향은 2100년을 대상연도로 하여 해수면 상승(1m, 2m)을 고려한 경우와 여기에 매미급과 슈퍼급 태풍 내습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피해 시나리오에 따른 침수 예상지역 및 피해액을 산출하였다.

연안 지역의 기후 변화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피해 규모와 범위가 점차 확대 될 것이므로 부산시의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경제적 손실

Abstract

A Study of coastal flooding and calculation of damage scale by scenario

Yeo, Sung Jun(Researcher, Busan Development Institute)

Lee, Chang Hun(Special Research Fellow, Busan Development Institute)

Like most other coastal cities in the world, Busan is especially vulnerable to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specifically, inundation and submergence caused by sea level rises, storm surges, flooding, etc.

Because most of social infrastructure, such as main industries, the airport, ports, and roads, residential zones, and habitats are located near the coasts,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will hit social and economic sectors the mo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act of future climate change on th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of the coastal area of Busan.

Future climate change impacts are calculated based on 2100 years of sea level rise (1m, 2m) and the estimated flooded areas and damages according to the worst damage scenarios that can occur during marsh and super typhoon storms.

It is expected that the strength and frequency of climate change in coastal areas will increase. Consequently, the magnitude and range of the damage will escalate more and more, so Busan City's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are urgent.

Key words: Climate change, Rising sea level, Economic loss

서울 강남지역 부모의 공감적 양육 및 청소년 자아탄력성에 대한 실태 분석*

박신영** · 양미라***

박
신
영
·
양
미
라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1. 부모 공감능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2. 부모 학습관여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3.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 양육의 관계
4.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1. 부모의 공감적 양육 실태
 - 1) 부모 공감능력 양상
 - 2) 부모 학습관여도 양상
 - 3)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능력 및 학습관여도의 차이
 - 4)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 공감능력 및 학습관여도의 차이
2. 부모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V. 결론 및 논의

I. 서론

서울 강남지역은 대표적인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 본 연구는 C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양육 실태조사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상담및생활지도 전공), 교신저자(E-mail: sheiscooo@hanmail.net)

*** C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과거 '8학군'에 속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적 요구나 투자비용이 높다고 알려진 곳이다. 강남과 강북 간에는 교육격차가 존재하며 강남 지역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과 기타 강남 지역 간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철 2004, 1). 윤병국(2012)에 의하면 교육 부분에서 이러한 강남3구 점유 비율은 더욱 높아졌으며, 격차는 완화되지 않았다. 하봉운(2005, 177)은 서울시 내 사설학원 수를 분석하였는데 서울시 전체의 25%에 달하는 3,041개 학원이 위 3개구 지역에 밀집해 있었고 가구 총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에 있어 25%이상 지출하는 비율이 강남권은 21.1%, 비강남권은 8.1%로 나타났다. 2003년 이후 강남3구의 사설학원 수는 계속 증가해서 2009년 기준 서울시내 가장 높은 강남구에만 1,698개소, 가장 낮은 지역구 119개소로 그 차이가 1,579개소에 달했다(윤병국 2012, 68). 이처럼 강남 지역 부모들은 비교적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바탕으로 대학입시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학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전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 '교육열'이라는 용어로 이해되듯, 부모들에게 자녀 학습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학습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왔다. 그런데 강남 지역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물질적 지원 등 양적 투자가 타 지역을 상위하는 데 비해, 보다 구체적인 면에서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고 지원하는 질적이고 정성적인 측면이 어떠한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적다. 부모가 학원에 가도록 지도하는 것이나 비용을 대는 것 외에도 학습에 대해 압박을 가하거나 자녀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종덕(2001)은 부모가 자녀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행사하는 모든 행동으로서 부모학습관여의 개념을 정의했다. 부모의 학습관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자녀인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영희 외(2008, 32)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부모의 기대와 과중한 성취

압력으로 인해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부모-자녀 갈등을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학업성적은 다른 요인에 비해 비중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이권오 2004; 강옥련·허철수 2011; 소영화·조한익 2015). 박영신(2016)의 연구에서 고등학생 이상의 후기 청소년과 부모와의 갈등에서 가장 심했던 문제는 성적 및 진로 문제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는 갈등과 재조정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문수경(2005)은 이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나 정보적 지원이 아닌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꼽았다. 김평화(2011, 82)에 의하면 부모의 교육적 관여 중 정서적 관여가 많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란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자녀의 감정을 공감하고 격려하며, 자녀의 안녕을 염려하는 부모의 태도를 의미한다(Johnson·Johnson, & Anderson 1983; 황혜연 외 2016 재인용). 이중 공감은 정서적 지원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자 방법 중 하나이다. 부모의 공감 능력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뿐 아니라 청소년이 더욱 수용 받는 느낌과 이해받는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공급하며, 나아가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적응을 돕는다.

부모의 자녀 학습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수준의 지원을 넘어 청소년의 심리적 현실에서 압박이나 강요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양면적 요소가 드러날 수 있는 부모의 학습관여와 공감능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보다 넓은 범위의 부모의 공감적 양육으로서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관심사이다. 그러므로 부모 학습관여가 사교육이나 비용적 지원의 물량적 측면을 넘어서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유효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녀의 자율성 존중 등

의 질적인 특성이 포함된 부모 학습관여도 및 공감능력을 알아봄으로써 서울 강남지역 부모의 정서적 지원 및 공감적 양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다. 또한 최나래와 신나나(2014, 94)에 의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녀의 발달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많은 연구에서 부모 공감적 양육의 전체적 영향력을 살펴보거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력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해 측정하고 서로 비교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심리적 강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아탄력성이라는 요인에 주목하였다.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조장하는 심리적 요인 중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요인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라 할 수 있다(임양미 2013). 이명순과 김중운(2014)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은 부모-자녀관계와 더불어 가정의 심리적 환경에서 발달하며, 특히 부모의 일관적인 양육방식,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이해 수준 등은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에 대해 김미향(2006)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개인의 과정이자 능력으로 정의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비해야 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강점으로서 자아탄력성의 발달은 더욱 강조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서울 강남지역 부모의 공감적 양육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이러한 요인이 청소년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지역 부모의 교육 열기에 대비되는 공감적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나타난 모습을 편견 없이 이해하며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 숙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파악된 필요성 및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부모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및 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부모 공감능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김인숙(2007, 5)에 의하면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자녀를 따뜻하고 애정적으로 대하므로 마음이 움직여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공감 능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다. Truax와 Carkhuff(1967)는 공감이란 '상대에 대하여 이해한 바를 의사소통하는 능력'이라 정의했으며, Barnett(1987)는 '다른 개인의 정서와 꼭 동일한 것이 아니더라도 부합하는 정서를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 하였다. 공감(empathy)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바탕(Redmond 1989)이라고 말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공감은 부모-자녀 관계로부터 모든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공감능력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 및 강점에 대한 연구와 행동 및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 및 강점 관련 연구로서 김복인과 김인수(2013)는 부모의 공감이 청소년의 자기수용과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또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김혜원 2009; 배은정 2011),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김기순·신선순 2011; 성순옥·박미단·김영희 2013) 보고되었다. 청소년 자녀의 행동 및 사회적응 영역에 관한 연구로서 어머니의 정서적 공감이 자녀의 문제행동과 정서조절에,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자녀의 친사회행동과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승미 2006; 박성희 2002; 최나래·신나나 2014). 이처럼 부모의 공감적 양육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성장과 사회적 적응을 위해 효과적이며 필수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은 부모의 공감과 부모와의 애정적 관계만을 원하기보다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조율하거나 재정의하는 시기이다(Hill 1980; 가영희·조민자·임성우 2008 재인용).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모와 정서적으로 가깝게 교감하면서, 동시에 부모로부터 큰 부작용 없이 분리되어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을 원한다. 임성우와 가영희(2007)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율성과 부모의 애착 모두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부모의 공감적 양육에 있어 자녀에게 자율성을 허용하는 정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부모 학습관여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Deci(1995)는 위와 같이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관여 형태를 학습선택권 부여, 민주적 규칙제공, 적정성과 추구, 학업진보 격려의 보다 긍정적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임은미(1998)가 학업정보 제공 요인을 추가한 부모 학습관여도 척도를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윤미선·홍창용 2006; 이수현·최해림 2007; 전태숙 2013; 박신재 2015). 한편, 송진숙(2001)은 부모학습관여의 요인을 학습에 대해 긍정적 지지, 학습 압박, 부모의 학습참여, 부모 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 등으로 구분하였고, 부모의 긍정적 지지와 자녀의 학습에 참여하기 등은 자녀 학습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부모의 학습 압박과 부모 주도적 학습 환경 등은 자녀의 학습에 위협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모학습관여 요인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학업 성취 관련 요인 연구와 심리정서적 요인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학업 성취 관련 요인 연구로서 부모의 긍정적 학습관여는 자녀의 학업자존감 및 자기주도학습 능력, 아동의 학업 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

로포부, 학업성취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윤미선·홍창용 2006; 남필교 2009; 성명희 2008; 양난미·이은경 2008; 이현희 2012). 심리정서적 요인 관련 연구로서 이수현·최해림(2007)은 부모학습관여와 고등학생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두 변인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 그러나 학업성취 관련 요인과의 관계성 연구에 비해 부모학습관여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3.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 양육의 관계

부모 양육방식과 태도는 부모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부모의 양육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또 이러한 차이가 다시 청소년의 심리적 자원과 강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Schaefer 외(1965)는 중류층 부모가 자녀의 요구와 충동에 더 관대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반면, 하류층의 어머니는 더욱 제한적이고 중류층의 부모보다 덜 협동적-애정적이었다고 보고했다. 이운경(2005)은 가정의 경제수준과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와의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해림(2016)은 중산층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분노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곧, 개인과 가족이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 또는 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애정적인 양육태도나 정서적 지지 등 공감능력 관련 변인과의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나 부모의 공감능력으로 특정된 변인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자녀 양육에 대한 연구는 자녀의 학업 성취

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에 대해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사회자본은 아동 및 학생의 학업성취와 언어발달 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민경 2005; 윤현선 2005; 윤홍수 2007). 특히,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교육경쟁이 치열해지고 부모 개입이 증가하는 현상과 이러한 부모개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도 보고되었다(남궁지영·김위정·김양분 2012). 이처럼 부모개입이 증가함에 따라 학습관여도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많지 않다. 다만 한민영(2013, 37)은 부모 학력과 경제수준에 따라 학습관여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학력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에 학습관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공감적 양육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4.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

자아탄력성은 1970년대 심리학자들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발달을 보여주는 아동이 상당수 있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개념이 출발했다. Garmezy(1983)와 Rutter(1985)는 열악한 환경과 스트레스 조건에서도 잘 기능하며 스트레스에 저항적인 아동들을 관찰하였고, 그러한 개인 내적 특성에 탄력성(Resilience)이란 용어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자아탄력성 개념을 발달시켰다. 김미향(2006)은 자아탄력성이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개인의 과정이자 능력으로서 주어진 상황적 요구에 융통성 있게 반응하며 적극적인 해결력을 구사하는 개인의 역동적 성격 특성으로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대상은 부모로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임양미 2013). Spaccarelli & Kim(1995)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곧 탄력적인 청소년들이 비탄력적인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가 더 지지적인 모습을 발견했다. 또한 김현옥(2010)에 의하면 학령기 아동에게 부모와의 관계는 좋은 사회적 관계망으로서 아동의 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명순과 김종운(2014)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보호요인으로 부모의 일관적인 양육방식과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가정의 분위기, 가족 구성권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이해수준과 부모-자녀의 친밀성을 들었다. 이처럼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의 양육 방식은 청소년 자녀의 자아탄력성 함양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공감능력은 자녀의 회복탄력성을 예측하는 요인으로(이현경 2012) 나타났으며 부모 학습관여도와 의미적 관련이 있는 자율적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류관열 2014) 보고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 1-1. 부모의 공감능력, 학습관여도의 양상은 어떠한가?
 - 1-2. 공감능력, 학습관여도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1-3.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공감능력, 학습관여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강남지역의 '8학군' 3개 지역구 중 하나인 C구 지역 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연령 범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통계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874	50.0	부모 연령	빈도(명)	평균(세)	표준편차
	여자	874	50.0		아버지	1602	47.5
					어머니	1616	44.7
학년	초5	325	18.6	부모 직업	아버지	사무직	701
	초6	317	18.1			관리직	207
	중1	200	11.4			전문직	444
	중2	173	9.9			자영업	229
	중3	180	10.3			서비스업	49
						숙련직	26
						비숙련직	9
						무직	12
	고1	170	9.7		어머니	사무직	298
	고2	188	10.8			관리직	81
	고3	194	11.1			전문직	230
						자영업	136
						서비스업	90
						숙련직	11
						비숙련직	10
						무직	837
경제 수준	하	16	1.0	부모 학력	아버지	초졸 이하	9
	중하	86	5.1			중졸	10
	중	615	36.5			고졸	152
	중상	779	46.3			대졸	960
	상	187	11.1			대학원 이상	517
					어머니	초졸 이하	3
						중졸	10
						고졸	245
						대졸	1033
						대학원 이상	365
							22.0

N=1,769

다. 청소년기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만 9세부터 24세까지 적용되나, 사춘기적 징후가 비교적 많이 보여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고생을 모두 포함하였다. C지역구 내 총 50개 초·중·고교 중에 동 단위 지역을 안배하여 표집하였으며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5개교의 총 17개교가 본 조사에 참여해 총 1,769명의 표본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연구 대상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강남지역 특성에 따라 경제수준이 '넉넉하다(중상)'와 '매우 넉넉하다(상)'로 응답한 청소년이 무응답을 제외한 전체 응답자 중 966명(57.4%)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편이다(중하)'와 '매우 어렵다(하)'는 102명(6.1%)로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 중 전문직이 444명(26.5%), 아버지 학력 중 대학원 이상이 517명(31.4%)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직업 중 전문직이 230명(13.6%), 가정주부인 무직이 837명(49.4%)으로, 학력은 대학원 이상 학력이 365명(22%)로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1) 부모 공감 능력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능력은 조용주(2010)가 개발해 윤미영(2012) 등이 사용한 척도로서 정서 지각, 관점 수용, 공감적 정서반응의 3요인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내 표정만 보고도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아시는 것 같다' 등의 정서 지각 관련 5문항과 '내가 시험이 끝난 다음 친구들과 노는 것을 이해해주신다' 등의 관점 수용 5문항, '나를 염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등의 공감적 정서반응 5문항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하위변인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는 정서 지각이 아버지 .89, 어머니 .87, 관점 수용은 아버지

.76, 어머니 .75, 공감적 정서반응은 아버지 .90, 어머니 .86으로 나타났다.

2) 부모 학습관여도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도는 Deci(1995)가 개념적으로 분류하고, 임은미(1998)가 요인을 추가해 개발, 김종덕(2001)이 수정·보완한 것을 한민영(2013)이 축소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습정보 제공, 적정성과 추구, 민주규칙 제공, 학습선택권 부여, 학업진보 격려의 5개 하위요인으로 Likert 5점 척도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하위변인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는 학습정보 제공(3문항)이 아버지 .86, 어머니 .83, 적정성과 추구(3문항)는 아버지 .80, 어머니 .77, 민주규칙 제공(3문항)은 아버지 .64, 어머니 .64, 학습선택권 부여(3문항)는 아버지 .76, 어머니 .73, 학업진보 격려(3문항)는 아버지 .56, 어머니 .54로 나타났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아버지 .91, 어머니 .90으로 나타나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청소년 자아탄력성

청소년 자아탄력성 문항은 O'Connell-Higgins(1983)가 연구한 자아탄력적인 아동의 특성과 Block & Kremen(1996)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여 박은희(1996)가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에게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를 신지연(2004)이 재구성하고 윤혜선(2010) 등이 적용한 척도로서 감정 통제에 관한 문항 5문항, 활력성 5문항, 대인관계 5문항, 낙관성 5문항, 호기심 5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는 감정통제 .71, 활력성 .82, 대인관계 .56, 낙관성 .71, 호기심 .58로 나타났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14년 5월 30일 00초등학교 5~6학년 2개 학급, 총 5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해 청소년들의 이해가 어려운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17개교에 학교당 120여부씩 총 2,0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1,858명이 설문 응답하였고, 1,769명의 표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은 PASW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모 공감능력, 부모 학습관여도, 자아탄력성 척도의 내적합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고, 조사대상자인 청소년 응답자들의 특성과 부모 공감능력, 부모 학습관여도, 청소년 자아탄력성 응답 빈도 및 평균값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 공감능력, 부모 학습관여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T검증,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감능력, 부모 학습관여도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부모의 공감적 양육 실태

1) 부모 공감능력 향상

〈표 2〉에 따라 부모 공감능력을 하위변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공감적 정서반응은 평균값 4.02/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관점수용이 3.94/5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변인은 정서지각 (3.55/5)으로 문항은 ‘내가 화났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아시는 것 같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아버지가 청소년 자신의 정서를 비교적 잘 알아채지 못한다고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공감적 정서반응이 4.1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관점수용(3.77/5)으로 ‘나와 다른 집 자녀들을 자주 비교하시는 편이다’ 등 어머니가 청소년 자신의 입장을 받아들여 준다는 면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다.

2) 부모 학습관여도 양상

아버지의 학습관여도의 경우 학업진보격려가 3.8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학습선택권 부여, 적정성과 추구, 민주규칙 제공,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변인이 학업정보 제공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학업진보 격려, 적정성과 추구, 학업정보 제공, 학습선택권 부여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아버지보다 학습에 관여하는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민주규칙 제공 부분은 평균 3.53/5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

3)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능력 및 학습관여도의 차이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부모의 공감능력과 학습관여도의 각 하위요인별로 아버지와 어머니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청소년 자녀의 정서를 지각하는 데 있어 어머니(3.82)가 아버지(3.55)보다 유의

하게 더 잘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에 반에 관점 수용은 아버지(3.94)가 어머니(3.77)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공감적 정서반응은 어머니(4.14)가 아버지(4.0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의 차이

부모 공감적 양육	하위변인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t	P
		M	SD	M	SD			
공감 능력	정서 지각	3.55	0.95	3.82	0.87	-0.26	-16.076***	.000
	관점 수용	3.94	0.81	3.77	0.84	0.18	10.748***	.000
	공감적 정서반응	4.02	0.85	4.14	0.77	-0.12	-8.132***	.000
학습 관여도	학업정보제공	3.35	1.09	3.68	0.98	-0.33	-15.259***	.000
	적정성과 추구	3.51	1	3.7	0.94	-0.18	-10.458***	.000
	민주규칙 제공	3.48	0.91	3.53	0.88	-0.05	-3.325**	.001
	학습선택권 부여	3.62	0.91	3.65	0.88	-0.02	-1.283	.200
	학업진보 격려	3.82	0.82	3.77	0.81	0.05	3.435**	.001

** $p < .01$, *** $p < .001$

학습관여도에 있어 아버지는 학업진보 격려를 제외하고 모든 하위변인에 어머니보다 낮게 나타났다. 단, 학습선택권 부여의 아버지와 어머니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인 학업정보 제공은 아버지(3.35)가 어머니(3.68)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진보 격려는 아버지(3.82)가 어머니(3.77)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4)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 공감능력 및 학습관여도의 차이

(1)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차이

〈표 3〉과 같이 성별과 학년에 따른 부모 공감능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부모의 공감능력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아

버지 정서지각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이 차이 없이 모두 비교적 낮게 평가했으나 어머니의 경우 3가지 하위변인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평가했다.

〈표 3〉 청소년의 성별, 학년에 따른 부모 공감 능력의 차이

공감 능력	성별/ 학년	아버지				어머니			
		N	M	SD	t/F	N	M	SD	t/F
정서 지각	남자	853	3.56	.92	.083	860	3.76	.87	-2.705**
	여자	851	3.56	.99		858	3.88	.86	
	초5	319	3.95	.92	29.438***	321	4.17	.81	24.442***
	초6	312	3.91	.88		314	4.10	.87	
	중1	190	3.60	.95		192	3.87	.88	
	중2	168	3.47	1.00		170	3.78	.90	
	중3	177	3.37	.83		179	3.56	.77	
	고1	164	3.31	.89		167	3.57	.79	
	고2	185	3.19	.89		184	3.54	.78	
	고3	188	3.11	.86		190	3.51	.84	
학년 차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초5,초6>중1~고3, 중1>고2~3, 중2>고3, 중3>고3 어머니 초5>중1~고3, 초6>중2~고3, 중1>중3~고3									
관점 수용	남자	853	3.85	.81	-4.981***	860	3.67	.84	-5.001***
	여자	851	4.04	.79		858	3.87	.82	
	초5	319	4.12	.78	7.826***	321	3.91	.85	3.091**
	초6	312	4.11	.74		314	3.86	.84	
	중1	190	3.95	.85		192	3.77	.86	
	중2	168	3.87	.89		170	3.68	.97	
	중3	177	3.81	.81		179	3.73	.82	
	고1	164	3.75	.88		167	3.63	.82	
	고2	185	3.82	.75		184	3.73	.70	
	고3	188	3.83	.71		190	3.70	.79	
학년 차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초5,초6>중2~고3 어머니 초5>고1									
공감적 정서 반응	남자	853	3.97	.83	-2.616**	860	4.05	.79	-4.730***
	여자	851	4.08	.88		858	4.23	.74	
	초5	319	4.32	.81	18.860***	321	4.40	.74	14.534***
	초6	312	4.28	.76		314	4.31	.74	
	중1	190	4.03	.87		192	4.19	.78	
	중2	168	4.00	.91		170	4.06	.82	
	중3	177	3.84	.79		179	3.94	.74	
	고1	164	3.82	.91		167	3.93	.77	
	고2	185	3.76	.81		184	3.98	.68	
	고3	188	3.73	.81		190	3.97	.75	
학년 차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초5,초6>중1~고3, 중1>고2~3 어머니 초5,초6>중2~고3, 중1>중3~고1									

*p<.05, **p<.01, ***p<.001

학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정서지각에 대해 초등학교 5,6학년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보다 높게 보고했고, 중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2,3학년 보다 높게 보고하는 등, 대체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버지의 정서지각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버지의 관점수용과 공감적 정서반응도 초등 5,6학년이 그 이후 학년의 아버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공감능력도 3가지 하위변인에서 인접한 학년을 제외하고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초등학교 5,6학년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비해 높게 보고했다.

〈표 4〉와 같이 성별에 따라 부모의 학습관여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아버지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버지의 학업정보 제공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였다. 민주규칙 제공, 학습선택권 부여, 학업진보 격려 부분에서는 여학생이 아버지의 관여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였다. 어머니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여학생이 부모의 학습관여도를 더 높게, 곧 더 긍정적으로 보고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 변인은 학업진보 격려 부분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 아버지의 학습관여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간의 차이는 영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아버지는 자녀에게 학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성적을 추구하며 민주규칙과 학습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업의 진보를 격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머니의 경우에도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습관여도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자율적인 학습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청소년의 성별, 학년에 따른 부모 학습관여도의 차이

학습 관여도	성별/ 학년	아버지				어머니			
		N	M	SD	t/F	N	M	SD	t/F
학업 정보 제공	남자	850	3.39	1.08	2.185*	856	3.65	0.98	-0.26
	여자	847	3.28	1.11		856	3.67	1.01	
	초5	319	3.76	1.04	31.078***	320	4	0.96	17.941***
	초6	312	3.75	1.07		315	3.89	0.99	
	중1	185	3.48	1.07		189	3.81	1	
	중2	169	3.14	1.06		171	3.56	1	
	중3	174	3.14	0.97		175	3.45	0.84	
	고1	161	3.02	1		164	3.38	0.95	
	고2	185	2.9	0.95		184	3.29	0.97	
	고3	189	2.81	1.05		191	3.43	0.92	

학년 차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초5, 초6> 중2~고3
어머니 초5, 초6> 중2~고3, 중1> 중3~고3

적정 성과 추구	남자	850	3.51	0.98	0.457	856	3.67	0.92	-0.586
	여자	847	3.49	1.02		856	3.7	0.97	
	초5	319	3.92	0.93	36.078***	320	4.13	0.85	38.163***
	초6	312	3.92	0.95		315	4.03	0.88	
	중1	185	3.66	0.99		189	3.9	0.94	
	중2	169	3.27	1.01		171	3.46	1.01	
	중3	174	3.22	0.92		175	3.42	0.78	
	고1	161	3.24	0.9		164	3.35	0.86	
	고2	185	3.07	0.89		184	3.26	0.88	
	고3	189	3.06	0.88		191	3.3	0.87	

학년 차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초5~중1> 중2~고3
어머니 초5~중1> 중2~고3

민주 규칙 제공	남자	850	3.41	0.89	-2.111*	856	3.47	0.85	-1.863
	여자	847	3.51	0.95		856	3.55	0.92	
	초5	319	3.75	0.93	18.261***	320	3.82	0.9	17.657***
	초6	312	3.75	0.87		315	3.75	0.89	
	중1	185	3.52	0.93		189	3.57	0.89	
	중2	169	3.26	0.94		171	3.32	0.94	
	중3	174	3.23	0.86		175	3.38	0.72	
	고1	161	3.24	0.89		164	3.29	0.87	
	고2	185	3.17	0.85		184	3.24	0.78	
	고3	189	3.28	0.81		191	3.28	0.81	

학년 차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초5, 초6> 중2~고3, 중1> 고2
어머니 초5, 초6> 중2~고3

학습 선택권 부여	남자	850	3.56	0.9	-1.957	856	3.59	0.89	-1.531
	여자	847	3.65	0.95		856	3.66	0.9	
	초5	319	3.73	0.95	5.254***	320	3.72	0.95	4.219***
	초6	312	3.8	0.96		315	3.81	0.97	
	중1	185	3.6	0.95		189	3.61	0.9	
	중2	169	3.49	1		171	3.52	0.94	
	중3	174	3.47	0.79		175	3.54	0.73	
	고1	161	3.43	0.92		164	3.45	0.85	
	고2	185	3.49	0.83		184	3.54	0.81	
	고3	189	3.53	0.85		191	3.57	0.83	

학년 차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초5> 고1, 초6> 중2~고3
어머니 초5, 초6> 고1

학업 진보 격려	남자	850	3.6	0.78	-6.035***	856	3.55	0.78	-6.314***
	여자	847	3.83	0.82		856	3.79	0.81	
	초5	319	3.82	0.8	5.825***	320	3.75	0.82	2.342*
	초6	312	3.88	0.77		315	3.76	0.85	
	중1	185	3.71	0.85		189	3.63	0.82	
	중2	169	3.53	0.91		171	3.56	0.82	
	중3	174	3.53	0.74		175	3.54	0.72	
	고1	161	3.67	0.91		164	3.66	0.85	
	고2	185	3.6	0.75		184	3.62	0.74	
	고3	189	3.75	0.74		191	3.69	0.78	

학년 차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초5> 고1, 초6> 중2, 중3, 고2 어머니 유의성 없음

* $p<.05$, ** $p<.01$, *** $p<.001$

(2) 부모 학력,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공감능력은 정서 지각과 공감적 정서반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5〉과 같이 전반적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경우 청소년은 아버지가 자신의 정서를 알아주고 공감적인 정서반응을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이를 사후검정을 통해 알아본

〈표 5〉 부모 학력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

공감 능력	부모 학력	아버지				어머니			
		N	M	SD	F	N	M	SD	F
정서 지각	중졸 이하	19	3.22	0.97	5.905**	13	3.52	1.02	8.588***
	고졸	150	3.4	0.94		243	3.66	0.87	
	대졸	945	3.54	0.93		1020	3.83	0.86	
	대학원 이상	503	3.7	0.94		359	4	0.82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고졸, 대졸<대학원 이상

어머니 중졸, 고졸, 대졸<대학원 이상

관점 수용	중졸 이하	19	3.96	0.59	1.481	13	3.47	0.75	3.140*
	고졸	150	3.9	0.76		243	3.79	0.76	
	대졸	945	3.93	0.81		1020	3.75	0.86	
	대학원 이상	503	4.02	0.8		359	3.89	0.83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유의성 없음 / 어머니 유의성 없음

공감적 정서 반응	중졸 이하	19	3.6	0.87	8.149***	13	3.68	0.84	10.452***
	고졸	150	3.87	0.8		243	4.01	0.76	
	대졸	945	4.01	0.86		1020	4.14	0.79	
	대학원 이상	503	4.17	0.8		359	4.32	0.68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중졸, 고졸, 대졸<대학원 이상

어머니 중졸, 고졸, 대졸<대학원 이상

* $p<.05$, ** $p<.01$, *** $p<.001$

결과 고졸과 대졸 학력보다 대학원 이상 학력의 아버지가 공감능력이 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의 어머니와 그 이하 학력의 어머니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학습관여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표 6>와 같이 전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 학업

〈표 6〉 부모 학력에 따른 학습관여도의 차이

학습 관여도	부모 학력	아버지				어머니			
		N	M	SD	F	N	M	SD	F
학업 정보 제공	중졸 이하	19	2.25	1.07	30.686***	13	3	1.26	38.226***
	고졸	149	2.88	1.02		241	3.19	0.94	
	대졸	927	3.32	1.07		999	3.73	0.96	
	대학원 이상	493	3.65	1.02		351	4	0.88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중졸, 고졸<대졸<대학원 이상 어머니 중졸, 고졸<대졸<대학원 이상									
적정 성과 추구	중졸 이하	19	2.53	0.98	35.196***	13	3.26	1.22	35.431***
	고졸	150	3.05	0.95		240	3.25	0.91	
	대졸	931	3.48	0.99		1001	3.73	0.87	
	대학원 이상	496	3.82	0.9		354	4.01	0.94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중졸, 고졸<대졸<대학원 이상 어머니 중졸<대학원 이상, 고졸<대졸<대학원 이상									
민주 규칙 제공	중졸 이하	19	2.84	0.77	12.287***	13	3.18	0.95	13.720***
	고졸	151	3.25	0.83		240	3.32	0.72	
	대졸	926	3.47	0.91		1001	3.53	0.89	
	대학원 이상	495	3.65	0.91		354	3.76	0.86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중졸, 고졸<대졸<대학원 이상 어머니 고졸<대졸<대학원 이상									
학습 선택권 부여	중졸 이하	18	2.98	0.82	9.815***	13	3.61	0.84	6.570***
	고졸	151	3.52	0.88		237	3.5	0.84	
	대졸	921	3.6	0.92		996	3.65	0.89	
	대학원 이상	495	3.8	0.84		353	3.82	0.85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중졸<대졸<대학원 이상, 고졸<대학원 이상 어머니 고졸<대졸<대학원 이상									
학업 진보 격려	중졸 이하	19	3.6	0.82	5.794**	13	3.46	0.95	4.741**
	고졸	150	3.74	0.72		236	3.7	0.73	
	대졸	914	3.78	0.82		975	3.74	0.84	
	대학원 이상	483	3.95	0.77		348	3.9	0.74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고졸<대학원 이상, 대졸<대학원 이상 어머니 고졸, 대졸<대학원 이상									

*p<.05, **p<.01, ***p<.001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성격을 추구하며 민주규칙과 학습선택권을 주고 학업진보를 격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차이는 대체로 중졸과 고졸보다 대졸 학력이 더 높게, 대졸 학력 보다는 대학원 이상의 학력에서 더 학습관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 7>에서와 같이 경제수준에 따라 아버지의 공감능력 하위변인 세 가지 모두에서 경제 수준이 높은 집단이 아버지의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어렵다’와 ‘어려운 편이다’등 인접한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매우 어렵다’와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아버지보다 ‘넉넉한 편이다’와 ‘매우 넉넉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아버지가 공감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공감능력 또한 하위변

〈표 7〉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 공감능력의 차이

공감 능력	경제수준	아버지				어머니			
		N	M	SD	F	N	M	SD	F
정서 지각	매우 어렵다(하)	16	3.21	1.2	31.634***	15	3.41	1.04	34.603***
	어려운 편이다(중하)	82	2.97	1.07		83	3.43	0.92	
	보통이다(중)	602	3.33	0.92		609	3.58	0.87	
	넉넉한 편이다(중상)	760	3.72	0.9		764	3.96	0.81	
	매우 넉넉하다(상)	182	3.94	0.92		185	4.23	0.76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하<상 중하<중, 중상, 상 어머니 하<상, 중하<중, 중상, 상									
관점 수용	매우 어렵다(하)	16	3.28	0.97	21.213***	15	3.53	1	16.278***
	어려운 편이다(중하)	82	3.61	0.93		83	3.52	0.92	
	보통이다(중)	602	3.79	0.84		609	3.61	0.86	
	넉넉한 편이다(중상)	760	4.07	0.72		764	3.87	0.78	
	매우 넉넉하다(상)	182	4.19	0.79		185	4.06	0.83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하, 중하<중상, 상 어머니 중<중상<상									
공감적 정서 반응	매우 어렵다(하)	16	3.48	1.06	33.424***	15	3.75	1.06	32.323***
	어려운 편이다(중하)	82	3.52	0.98		83	3.81	0.83	
	보통이다(중)	602	3.81	0.88		609	3.93	0.8	
	넉넉한 편이다(중상)	760	4.17	0.77		764	4.27	0.69	
	매우 넉넉하다(상)	182	4.37	0.76		185	4.48	0.67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하, 중하<중상, 상 어머니 하, 중하, 중, 중상<상									

*p<.05, **p<.01, ***p<.001

인 세 가지 모두에서 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에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관점 수용은 보통 이상의 인접한 경제 수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장 넉넉한 경제수준의 어머니는 중상 수준의 어머니보다 더욱 청소년 자녀의 관점을 수용해주는 양육을 하는 것으로

〈표 8〉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 학습관여도의 차이

학습 관여도	경제수준	아버지				어머니			
		N	M	SD	F	N	M	SD	F
학업 정보 제공	매우 어렵다(하)	15	3.2	1.17	36.418***	16	3.29	1.07	50.566***
	어려운 편이다(중하)	80	2.66	1.08		82	3	0.99	
	보통이다(중)	588	3.05	1.05		595	3.37	0.96	
	넉넉한 편이다(중상)	744	3.52	1.04		746	3.88	0.9	
	매우 넉넉하다(상)	178	3.86	1.06		181	4.18	0.9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중하<중<중상<상 어머니 하<상 중하<중<중상<상									
적정 성과 추구	매우 어렵다(하)	16	3.33	1.19	44.088***	16	3.21	1.11	54.258***
	어려운 편이다(중하)	80	2.76	1.02		81	2.98	0.95	
	보통이다(중)	592	3.22	1.01		593	3.4	0.95	
	넉넉한 편이다(중상)	748	3.71	0.9		754	3.91	0.84	
	매우 넉넉하다(상)	178	3.96	0.94		181	4.16	0.82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중하<중<중상<상 어머니 하<중상<상 중하<중<중상<상									
민주 규칙 제공	매우 어렵다(하)	15	3.09	1.04	31.076***	15	3.13	1.03	29.805***
	어려운 편이다(중하)	79	2.91	0.95		80	3.08	0.83	
	보통이다(중)	590	3.26	0.89		594	3.3	0.86	
	넉넉한 편이다(중상)	748	3.62	0.84		752	3.65	0.83	
	매우 넉넉하다(상)	177	3.85	0.98		183	3.92	0.92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하<상 중하<중<중상<상 어머니 하<상 중하, 중<중상<상									
학습 선택권 부여	매우 어렵다(하)	16	3.04	1.04	28.082***	16	3.17	0.98	24.898***
	어려운 편이다(중하)	80	3.12	1		81	3.2	0.89	
	보통이다(중)	591	3.42	0.93		592	3.46	0.87	
	넉넉한 편이다(중상)	744	3.78	0.83		749	3.78	0.82	
	매우 넉넉하다(상)	177	3.94	0.86		181	3.98	0.92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하<중상<상 중하<중<중상<상 어머니 하<상 중하, 중<중상<상									
학업 진보 격려	매우 어렵다(하)	16	3.46	0.93	14.444***	16	3.35	0.95	11.175***
	어려운 편이다(중하)	77	3.51	0.74		79	3.46	0.83	
	보통이다(중)	584	3.67	0.86		579	3.65	0.83	
	넉넉한 편이다(중상)	730	3.92	0.76		736	3.85	0.78	
	매우 넉넉하다(상)	176	4.02	0.83		176	3.94	0.79	
사후검정 : Bonferroni 아버지 중하, 중<중상, 상 어머니 하<상 중하, 중<중상<상									

*p<.05, **p<.01, ***p<.001

볼 수 있다. 또한 중상의 경우, 보통인 경우보다 관점 수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8〉과 같이 경제수준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습관여도 차이는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경제 수준이 중하 이상인 경우, 대부분의 급간의 상승에 따라 더 자율적인 학습 관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곧, 경제수준이 ‘어려운 편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보통이다’인 경우에 학습관여도가 높고, ‘보통이다’의 경우보다는 ‘넉넉한 편이다’인 경우에, ‘넉넉한 편’인 경우보다는 ‘매우 넉넉하다’인 경우에 학습관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세부적인 급간에서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학습관여도가 경제수준에 따른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공감능력 및 학습관여도와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부모 양육의 각 하위요인과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는 〈표 9〉와 같다. 부모의 공감적 양육 변인이 자녀인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기 위해 부모 양육 하위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요인들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설명력이 가장 높은 모델은 〈표 10〉과 같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의 정서 지각, 어머니의 공감적 정서반응, 어머니의 학습선택권 부여, 어머니 학업정보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전체 설명력을 뜻하는 수정된 R²은 .344로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약 34.4%를 위 변인들이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표9〉 부모 공감능력, 학습관여도와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																
2	.609**	—															
3	.786**	.701**	—														
4	.734**	.520**	.626**	—													
5	.442**	.660**	.490**	.600**	—												
6	.578**	.552**	.738**	.774**	.666**	—											
7	.609**	.389**	.560**	.475**	.291**	.418**	—										
8	.675**	.528**	.649**	.538**	.386**	.496**	.806**	—									
9	.668**	.655**	.680**	.557**	.490**	.546**	.625**	.726**	—								
10	.594**	.606**	.659**	.488**	.430**	.505**	.545**	.661**	.666**	—							
11	.535**	.617**	.611**	.472**	.462**	.502**	.446**	.592**	.638**	.631**	—						
12	.466**	.362**	.491**	.575**	.345**	.567**	.640**	.565**	.496**	.457**	.389**	—					
13	.545**	.469**	.544**	.658**	.503**	.627**	.582**	.728**	.591**	.540**	.489**	.766**	—				
14	.541**	.518**	.546**	.647**	.607**	.635**	.485**	.580**	.767**	.531**	.521**	.590**	.725**	—			
15	.436**	.437**	.486**	.574**	.582**	.609**	.402**	.497**	.492**	.726**	.488**	.508**	.630**	.631**	—		
16	.399**	.505**	.463**	.539**	.628**	.586**	.315**	.430**	.495**	.472**	.709**	.411**	.562**	.595**	.580**	—	
17	.484**	.398**	.475**	.502**	.380**	.498**	.421**	.453**	.462**	.439**	.411**	.440**	.487**	.469**	.443**	.389**	—

**p<.01

1. 아버지 정서지각 2. 아버지 관점수용 3. 아버지 공감적 정서반응 4. 어머니 정서지각 5. 어머니 관점수용 6. 어머니 공감적 정서반응 7. 아버지 학습정보 제공 8. 아버지 적정성과 추구
9. 아버지 민주규칙 제공 10. 아버지 학습선택권 부여 11. 아버지 학습진보 격려 12. 어머니 학습정보 제공 13. 어머니 적정성과 추구 14. 어머니 민주규칙 제공
15. 어머니 학습선택권 부여 16. 어머니 학습진보 격려 17. 청소년 자아탄력성

〈표 10〉 청소년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VIF
청소년 자아 탄력성	(상수)	2.048	0.058		35.233***	
	아버지 정서지각	0.131	0.014	0.244	9.582***	1.602
	어머니 공감적 정서반응	0.112	0.02	0.169	5.715***	2.154
	어머니 학습선택권 부여	0.094	0.015	0.162	6.151***	1.711
	어머니 학습정보 제공	0.081	0.013	0.155	6.068***	1.615
F		213.302***				
R ²		0.346				
adj. R ²		0.344				

***p<.001

β 값의 비교를 통해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 보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아버지의 공감능력 중 하나인 자녀에 대한 정서 지각이 청소년 자아탄력성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정서지각은 앞선 변량분석에서 비교적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청소년 자아탄력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공감능력의 하위변인으로서 어머니의 공감적 정서반응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공감적 정서반응은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보여줬던 변인으로 청소년 자아탄력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델에서 학습관여도도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유의미한 변인은 어머니의 학습 선택권 부여와 학습정보 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서울 강남지역 초5부터 고3까지 포괄적인 청소년 연령층을

대상으로 강남지역 부모의 학업지원 열기에 대비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감적 양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면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 요인이 청소년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정서적 성장을 위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양육 방법 및 사회적 지원 서비스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공감적 양육에 대해 하위변인별로 살펴보자면, 아버지의 관점 수용과 학업진보 격려 요인 2가지가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는 정서 지각과 공감적 정서반응, 학업정보 제공, 적정성과 추구 등 많은 부분에서 아버지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부모양육에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변인값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다만 김희성(2010)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감능력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관점 수용은 아버지가 높은 것으로, 정서 지각과 공감적 정서반응은 어머니가 높은 것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변은선(2012)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욱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욱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여러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의 양육 방식에서 아버지가 청소년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점을 수용하고 학업 등에 격려를 보내는 데 중점을, 어머니가 더욱 밀착적으로 공감과 애정을 전달하는 반면에 아버지보다는 통제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김희성 2010; 조용주 2010).

둘째,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공감적 양육의 차이가 검증되었다. 먼저 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부모의 양육을 다르게 지각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의 공감능력, 학습관여도에 대해 높게 지각했다. 이는 가영희 외(2008)의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양육에 대

해 더 통제적이고 거부적으로 인식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진 변인은 아버지의 학업정보 제공으로 남학생이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준의 비관여적 양육을 선호하는 데 따른 것이라 추론 가능하다.

또한 학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초5,6학년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부모의 공감능력과 학습관여도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와의 교류가 소원해지거나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흔히 ‘중2병’이라는 신조어가 있듯, 부모의 애정과 양육방식이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일 때에만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청소년의 어떤 변화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가 악화되고 이에 따라 대화시간이 줄어들며 이에 청소년은 부모에 대해 덜 애정적이며 덜 공감 받는 것으로, 또 학습관여에 대해 더 강압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공감적 양육에 문제가 시작되는 중학생 1,2학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의사소통을 높이며 적절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요청된다. 그리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양육에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중학교 1,2학년 남학생과 부모를 위한 대상 집중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부모 학력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가 대학원졸 이상일 경우 대졸 이하인 경우보다 정서 지각, 공감적 정서반응 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조사 지역이 서울 강남지역으로서 31.4%로 나타난 대학원졸 이상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더 공감적인 양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학습관여도는 대졸 이상 학력이 더 높은 경우 학습관여를 더 자율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도 대졸 이상 학력의 경우 공감능력과 학습관여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따른 부모 공감능력, 부모 학습관여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경제

수준이 높은 집단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공감도 더욱 잘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관여도도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이 더욱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hn(1969)은 중산층의 아버지는 아동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며 자율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반면, 중산층 이하의 아버지는 순응과 복종을 강조하며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어머니 역시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의 온정적 태도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Duncan & Brooks-Gunn 1997). 이운경(2005)의 연구에서도 가정의 경제수준이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그 이유로 어머니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을 느끼기 쉬우며, 그로 인해 자녀를 충분히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을 들었다. 이처럼 경제적 소득이 적은 가정의 청소년들은 물질적 지원의 결핍 뿐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과 양육의 결핍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의 학력과 경제수준은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를 형성한다. 이로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더 공감적인 양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러한 부모의 공감적 양육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모델의 설명력 R^2 은 .344로 청소년 자아탄력성 변량의 총 34.4%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임양미(2013)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또래, 교사 변인을 통합해 연구한 결과 27%의 설명력을 얻은 데 비해 부모 변인만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로써 서울 강남지역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는 부모의 공감 능력과 학습관여도가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변인별 상대적 영향력을 보면, 아버지의 정서지각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보다 수동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의 양육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해, 청소년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더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아버지의 양육 특성은 보다 감정적인 측면의 공감능력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최근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나래와 신나나(2014)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 변화를 지적하고 청소년 자녀의 적응이나 사회화에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청소년 자녀의 정서를 민감하게 지각하는 아버지의 역할은 청소년이 자아탄력성을 길러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임이 시사된다.

어머니의 학습선택권 부여와 학업정보 제공과 같은 자율적인 학습관여도도 부모 공감능력에 이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수현과 최해림(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의 학습관여도와 청소년 자아탄력성과의 정적 상관관계($r=.40, p<.01$)와 의미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침해적이거나 강요하는 방식의 학습 관여가 아니라 보다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관심을 가져줄 때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 학력과 경제수준에 따라 자녀 공감적 양육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청소년 문제와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서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원은 주로 가족 내 역할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자본이 문화적 자본, 그리고 심리·정서적 자원으로 직결됨을 볼 때 이러한 지원 또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공공 정책으로 구현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김미란(2010)은 일본의 사회격차론 분석을 통해 계층 간 학력(學力) 격차가 자기 효능감에 따른 의욕 격차로 귀결되며 이는 다시 계층격차 확대를 가져온다고 말하면서 사회심리적 요인과 문화자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곧, 경제수준의 차이는 부모와 청소년의 정서적인 측면에까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영역으로 맡겨두지 않는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청소년 대상 정서적 지원의 대표적 공공지원체계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이다. 심리 상담이나 진로 상담을 제공하며 필요 시 집단 프로그램 및 병원, 고용센터 등에 연계가 가능한 지원체계이다. 그러나 주로 ‘위기’를 전제로 위기청소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일반 청소년에게는 인지도나 접근성이 부족한 편이다. 위기 발생 시 가동할 안전망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서 정서적 지원과 양육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대상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가 필요하다.

또한 가족이 충족할 수 없는 정서적 지원을 학교교육 체계를 활용하여 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빈곤 지역 학교의 학습 규모를 축소하는 정책, 학생 일인당 교육비를 균등화하는 정책(성열관 2005) 등을 통해 학생 개인에게 주어지는 포괄적 영역의 지원을 늘리도록 하였다. 보다 작은 학교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으므로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학교 환경부터 작은 학교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형태 2013).

두 번째로 가족 지원 정책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접근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공감적 양육의 차이는 재교육과 평생 교육을 통해 양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특히 아버지들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 교육 기관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평생교육 정책이나 노동부 교육 정책과 연계하여 산업현장으로 찾아가거나 노동부 산하 교육 기관에 아버지 교육을 개설하는 것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방식의 차이에 따라 이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구분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어머니들에게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양육 방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며, 아버지들에게는 자녀의 정서적인 면을 이해하고 공감해줄 수 있는 감정코칭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버지의 정서지각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설명하는 가장 주요한 변인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서울 강남지역 부모의 학습관여도를 포함한 공감적 양육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봄으로써 교육 열기와 학습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부모의 공감적 양육의 일면을 분석했다는 데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의 양육 영역에서 축적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와 모의 차이를 통해 아버지의 공감 능력의 필요성과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학력 및 경제수준의 차이가 가져오는 부모 공감적 양육의 격차로 인해 청소년들이 받게 될 곤란과 불편에 대해 짐작해보고 이에 대한 사회서비스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가 부모의 학습관여도 변인과 자녀의 학습성취도 관련 연구 중심으로 행해졌던 데 비해 부모 학습관여도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던 것이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사회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곤란을 극복하기 위한 잠재적 능력 중 하나인 자아탄력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 부모 양육의 어떠한 변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것도 본 연구가 가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자면, 서울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다른 지역과 환경에 일반화시키거나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모든 변인이 청소년의 응답 결과로서 청소년 개인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편향 보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의미 있는 요소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청소년의 응답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실제적인 경제 수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가계 소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제안된다.

투고(접수)일 : 2017. 05. 02 심사(수정)일 : 2017. 05. 22 게재확정일 : 2017. 06. 14

참 고 문 헌

- 강옥련·허철수(2011), 「청소년기 부모의 자녀교육과 갈등 척도 모형 연구」, 상담학연구 12(6): 2007-2028.
- 가영희·조민자·임성우(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논문집 6(4): 31-42.
- 강민경(2005), 「학령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과 일반아동의 표현 어휘능력 비교 연구: 이름대기 및 정의하기 과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순·신선순(2011),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9(3): 94-111.
- 김미란(2010), 「일본의 사회변동과 교육 격차: 격차 사회론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 연구 20(2): 1-23.
- 김미향(2006), 「자아탄력성 증진 훈련이 중학생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복인·이인수(201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과 행복과의 관계: 자기수용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20(6): 195-218.
- 김영철(2004), 『KEDI Position Paper 1권 7호: 서울시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인숙(2007), 「중학생과 부모의 행복에 관한 연구: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덕(2001),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녀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평화(2011),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옥(2010),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이 역량지각 및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태(2013), 「고등학교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학교적응 요인 - 미국 유학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6: 269-296.
- 김혜원(2009), 「청소년의 부적응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 재조명」, 미래청소년학회지 6(3): 1-22.
- 김희성(2010), 「부모의 공감능력이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 및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궁지영·김위정·김양분(2012),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1-3주기 초·중·고등학교 종합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남필교(2009), 「부모의 학습관여, 학업자아존중감과 자기주도적학습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관열(2014), 「부모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학회 23(3): 289-298.
- 문수경(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한국가족복지학, 10(3): 105-125.
- 문승미(2006), 「어머니의 정서 공감과 유아의 문제행동 및 정서조절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희(2002), 「친사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변인 탐색」, 교육학연구 40(1): 51-74.
- 박신재(2015), 「부모의 학습관여형태와 고등학생 자녀의 학습태도 및 영어성취도의 관계 분석」,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0(1): 236-261.
- 박영신(2016), 「후기 청소년들의 부모-자녀갈등의 특징과 부모양육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2): 247-265.
- 박은희(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과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은경(2011),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1): 85-100.
- 변은선(2012),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꽃동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명희(2008), 「어머니의 학습관여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순옥, 박미단, 김영희(2013), 「청소년의 학교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0(8): 49-70.
- 성열관(2005), 「거주지 분화와 교육격차: 미국의 현실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주는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15(1): 139-161.
- 소영화·조한익(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부갈등, 부모-자녀갈등,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의 구조적 관계분석」, 아동연구 24, No. 2: 229-248.
- 송진숙(2001),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유아의 교육적 경험에 따른 유아의 지능」,

- 한국생활과학회지 10(2): 141-151.
- 신지연(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난미·이은경(2008), 「초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55-472.
- 윤미영(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공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능력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병국(2012), 「서울지역 자치구간 생활환경 격차변화와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지난 10년(2000년~2010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현선(2005), 「사회경제적 배경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전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선(2010),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 탄력성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희수(2007), 「가정의 사회자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분석: 인천시 고등학교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권오(2004),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순·김중운(2014), 「아동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1): 335-356.
- 이수현·최해림(200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형태,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21-337.
- 이운경(2005),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관련된 변인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기대 및 정서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경(2012), 「지각된 부모의 공감능력이 후기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양미(2013),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부모의 양육태도 및 또래·교사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5(2): 147-167.

- 임은미(1998), 「부모의 자율성증진행동과 청소년자녀의 학업성취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6(6): 133-150.
- 장해림(2016), 「중산층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3): 95-122.
- 전태숙(2013),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와 진로포부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10(2): 163-191.
- 조용주(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공감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나래·신나나(2014), 「부모의 공감적 양육과 청소년의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4): 91-118.
- 하봉운(2005), 「지방분권시대 지역간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행정학회 23(3): 167-193.
- 황혜연 외(2016), 「남자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정서적 지원, 성취압력과 수학 학습동기, 학습전략 사용, 학업성취의 관계」, 教育問題研究 60: 1-31.
- 한민영(2013), 「부모학습관여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arnett, M. A. 1987. *Empathy and related responses in children*. Jossey-Bass Inc Pub.
- Deci, E. L. 1975. *Intrinsic motivation*. NY: Plenum.
- Duncan, G. & Brooks-Gunn, J. (Eds.) 1990.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Garmezy, N. 1983. *Stressors in childhood*. In N.
- Kohn, M. 1969. *Class and conformity: a study in values*. Homewood, Ill., The Dorsey Press.
- O'Connell-Higgin, R. 1983.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apacity for intimacy. *Qualifying paper*.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Redmond, M. V. 1989. The function of empathy(decentrering) in *human relations*. Human Relations 42: 593-605.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no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 Spaccarelli, S., & Kim, S. 1995. Resilience criteria and factors associated with resilience in sexually abused girls. *Child Abuse & Neglect* 19: 1171 - 1182.
- Truax, C. B., & Carkhuff, R. R. 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국 문 초 록

서울 강남지역 부모의 공감적 양육 및 청소년 자아탄력성에 대한 실태분석

박신영(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상담 및 생활지도 전공)
양미라(C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본 연구는 서울 강남지역 부모의 공감능력 및 학습관여도를 포함한 공감적 양육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양육 특성이 청소년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먼저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모의 공감적 양육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초5~고3의 넓은 범위의 청소년 총 1,769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과 T검증, 일원배치변량분석(ANOVA)을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 양육 특성 중에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아버지는 관점 수용이 어머니는 정서지각과 학습관여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 공감능력, 학습관여도에 대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더욱 부정적이거나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학력과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일수록 높은 가정보다 공감적 양육이 더욱 부정적이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버지 정서지각, 어머니 공감적 정서반응, 어머니 학습선택권 부여, 어머니 학업 정보 제공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34%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R^2=.34$). 이 결과를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구분된 내용의 프로그램이 요구됨을 확인하였으며 경제수준 변인이 부모의 공감적 양

육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이나 사각지대 가족의 부모교육과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원 제공의 필요를 강조한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공감적 양육, 공감능력, 학습관여도, 자아탄력성, 사회경제적 지위

Abstract

A Study on Empathic Parenting and Adolescent's Ego-Resilience in Gangnam district in Seoul

Park, Shin-Young(Ph.D. Candidate, the Department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Yang, Mi-Ra(Section Chief, C district Youth Counselling & Welfare Center)

This study investigated empathic parenting including empathy, learning involvement, and difference in thes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grade, education and economic levels of the parents, and also analyzed effects on ego-resiliency of the adolesc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769 students between grade 5 to grade 12. T-test and ANOVA analy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analyze differences in thes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identify which among the parenting characteristics have effects on ego-resiliency of the adolescents. In the result, the father had higher acceptance of viewpoints than the mothers and the mother had higher emotional perception and learning involvement. The empathic parenting and learning involvement were either more negative or insufficient for higher grade students than for lower grade students, and for students from families of lower economic status and education level than those from families of higher economic status and education level. The factors that had the greatest effects on ego-resiliency of the adolescents were awareness of emotion of the father, emotional reaction of the mother, learning option grant of the mother, and provide academic information of the mother in the order, explaining 34% of the ego-resiliency of the adolescents. The findings show that,

for mothers' involvement in learning of the children, it is more helpful to encourage more autonomous and reasonable performance and give a choice to the children, and, for fathers, to be more sensitive and empathetic when interacting with the children. Also, in this study, the variable related to economic status of the families resulted in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areas of emotional support from the par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emotional support to students of lower economic status and less social privilege.

Key words: Empathic Parenting, Empathy, learning Involvement,
Ego-Resiliency, social economic status

지속가능한 사회와 문화예술

-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 뮤지엄의 역할 -

민경선*

민
경
선

I. 서론

II. 지속가능성과 문화예술에 대한 논의

1. 지속가능한 발전
2. 지속가능성 논의에서 문화예술의 강조
3. 지속가능성 맥락에서 문화예술의 공공성 부각

III. 문화예술은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1. 샤카 카간(S. Kagan)의 예술과 지속가능성
2. 존 듀이(J. Dewey)의 경험으로서의 예술과 지속가능성

IV.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 뮤지엄의 역할

V. 결론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생태환경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을 제일의 목표로 둔 신자유주의적인 삶의 방식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 방식과 상치된다는 논의와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발전과 미래 사회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초빙연구원, 교신저자(E-mail: minks87@naver.com)

상이 그러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초기 논의는 환경-경제-사회의 세 가지 차원이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핵심가치로 두고 발전 메커니즘의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예술의 차원은 주변부에 위치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점차 학제적으로 발전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문화예술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기 시작했고,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환경문제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와 예술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예술과 예술가들이 왜 이러한 문제에 개입해야 하고, 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정현이 2012, 298) 역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예술을 연계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부족하다. 또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문화예술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의 한 방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설명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설계에 힘을 실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미학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차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유현주(2013, 93)의 논문은 “지속가능성”의 개념, 즉 생태미학을 추동시키는 핵심개념으로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찰했다. 유현주(2013, 93)는 예술의 ‘지속가능성’을 ‘체계이론(system theory)’에 근거하여 발전시킨 독일의 생태미학자 사카 카간(S. Kagan)의 이론을 바탕으로 논지를 이끌어 나간다. 카간은 체계이론 중 생명체의 새로운 진화론적 생성 논의에서 발전된 ‘자기생산(autoopoiesis)’ 개념을 ‘환경관계적 생산(autoecopoiesis)¹⁾’ 개념으로 가져와 “인간의 의식과 무의

1) 생명체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는 받아들이지만, 내부 구성요소의 재생산은 자기 조직의 내적 논리를 따른다는 자기생산(autoopoiesis) 개념과는 다르게 내부 구성요소의 재생산이 외부

식에 지속적인 교란과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서 예술(예술가)의 역할”(유현주, 2013, 93)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설명이 어떻게 실제적 삶과 맞닿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지속가능성과 예술의 결합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국에서 논의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의 예술은 여전히 주변부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술이 어떻게 실제적 삶의 문제들과 만날 것인가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적 개입(artistic intervention)²⁾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이론적 수준에서 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제시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 문화예술이 지니는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연결시키는 뮤지엄의 매개자 역할을 제언수준에서 논의하였다.

II. 지속가능성과 문화예술에 대한 논의

1. 지속가능한 발전

1970년대에 등장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autoecopoiesis’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환경관계적 생산’으로 번역하였다.

2) ‘예술적 개입(artistic intervention)’은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의 베르토인 안탈이 사용한 ‘조직 내 예술적 개입’에서 가져왔다. ‘조직 내 예술적 개입’이란 예술분야의 사람이나 예술작품, 그리고 예술생산의 프로세스가 조직과 만나 조직의 창조적인 발전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각 조직은 나름의 목표를 갖고 예술적 개입을 시도하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스킬향상, 창의성 및 리더십 개발,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돕는다. 이는 상이한 두 분야가 융복합하기 위하여 상호간의 새로운 실험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기 때문에 조직과 예술 서로에게 도전을 가하는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도 사회적 진보(progress)와 예술이라는 다소 상이한 분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결합을 기한다는 점에서 ‘예술적 개입’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의 운영을 신뢰하며 국가의 경제개입을 최소화시킨 자유시장정책”(박재규 2001, 82-83)이다. 신자유주의의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해 무역·투자·금융을 비롯해서 기업 활동을 자유화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거시정책에서 인플레이션 통제를 우선시하는 통화정책, 건전재정주의를 내세운 재정정책, 그리고 복지 및 노동보호 정책을 축소함으로써 경제규율을 강화하는 것”(유종일 2007, 56)이다.

한편 신자유주의 경제체계가 추구하는 자본의 증식과 경제발전은 환경생태계의 자기생산 원리와 상충되는 논리를 따랐으나 경제체계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화석에너지 중 석유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부터도 세계화의 동력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기본 동력으로도 작용해 왔다(이필렬 2003, 69).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함께 언급되는 이유는 세계화를 작동시키고 규정하는 힘을 바로 ‘자유 시장경쟁 이념’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조명래 2008, 201).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석유를 둘러싼 분쟁은 이전보다 더 치열해졌고(이필렬 2003, 69), 이 체제 하에 세계 각 지역으로부터 자원채취와 개발이 급증하였으며, 투자와 생산 증대를 위한 에너지 사용량이 폭증함에 따라 상품의 유통 및 소비 증가에 의한 노폐물 발생량 또한 급증하는 등 환경문제가 악화되었다(조명래 2008, 106).

환경문제와 함께 경제발전이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 한다는 사실의 발견은 진정한 사회의 발전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제학자들이 성장의 척도로 활용해 온 GDP(Gross Domestic Product)가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개인 및 사회의 웰빙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 함을 지적한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Easterlin 1973), GPI(Genuine Progress Indicator)와 같은 대안적 척도의 개발을 촉진하였다. 이는 사회의 성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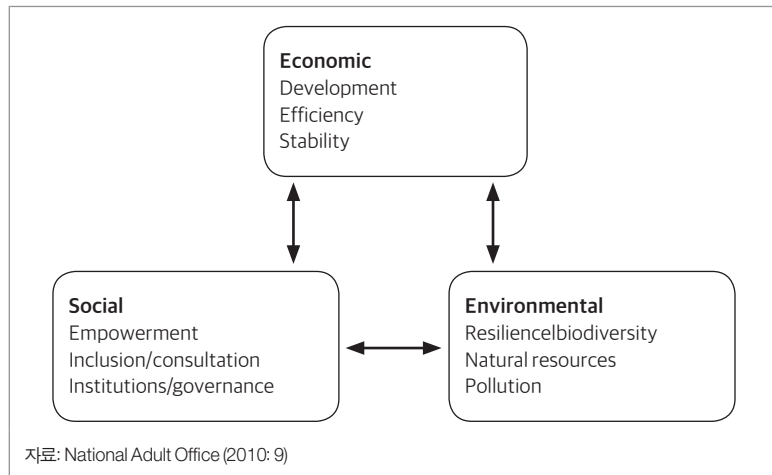
설명하는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함을 의미했고 장기적인 진보(progress)를 위한 새로운 인식이 도입되어야 함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맥락으로부터 발전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회의(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브룬트란드 보고서(Brundtland Report)로 알려져 있는 ‘우리 공동의 미래’를 발표하면서 사용된 개념이다.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 인간의 필요 여력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재세대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는 발전(WCED, 1987)”으로 정의된다. 이 개념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위원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로 이어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지구 헌장(Rio Earth Summit)’이 채택된 후 더욱 널리 알려졌다.

2. 지속가능성 논의에서 문화예술의 강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으로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의 세 가지 축이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함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생존은 환경에 의존적이고 경제적 안정과 성공은 건강하고 생산적 인구에 의존적이며 불안, 질병, 가난, 그리고 빈곤을 가진 사회는 오랜 기간의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 세 가지 측면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다(〈그림 1〉 참조).

1992년에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측면(환경, 경제, 사회)을 제시했을 뿐 문화예술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8년에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네스코 ‘문화의 힘(The Power of Culture)’ 컨퍼런스가 문화예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계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예술



〈그림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축

과 지속가능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더욱 구체화된다. 논의의 주요 내용은 문화가 우리 사회에 ‘가치 체계’를 제공하고 웰빙, 창의성, 다양성, 그리고 혁신에 기여하기 때문에 문화를 사회의 축에서 분리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존의 세 축에 ‘문화’라는 네 번째 축을 별도로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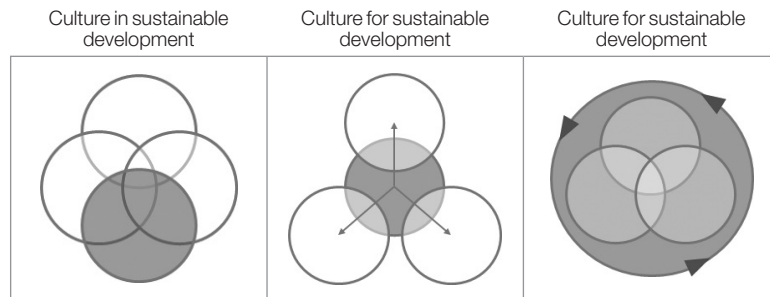
특히 호주의 문화이론가인 존 홉스(Jon Hawkes)는 『지속가능성의 네 번째 기둥: 공공계획에서 문화의 필수 역할(The Fourth Pillar of Sustainability: Culture's essential role in public planning)』(2001)에서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구성하던 환경, 경제, 사회의 모델을 수정하여 문화를 포함한 네 기둥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홉스(2001)에 의하면 문화는 사회의 가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가 발전되고 표현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즉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는 예술을 통해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표현해 왔고, 따라서 발전 방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도 가치를 표현하는 의미 있는 방식을 찾기 위해 예술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홉스의 이러한 주장은 이후 국제사회가 발전의 중

심에 문화예술을 위치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양현미 2014, 374).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독일에서도 비교적 빠르게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예술의 관계를 논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1년 4월에 이루어진 투칭엔 개신교 아카데미가 주관한 ‘지속가능성의 미학’ 컨퍼런스에 참석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정책과 문화예술을 긴밀하게 연계시킬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고, 이에 화답하듯 2004년 독일 정부가 발표한 ‘독일을 위한 전망: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조길예 2014). 독일연방환경청 초대 국장을 역임한 쉥켈(Werner Schenkel)은 ‘성장강박증’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 했고(조길예 2014), 이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세계관 즉 인식체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 것이었다. 인식의 전환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정신적 인프라와 가치를 형성하고, “다양한 가치들 사이의 소통을 이루는 작업은 문화와 예술적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조길예 2014)이다. 이어서 2010년에 멕시코에서 개최된 도시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 총회도 “문화: 지속가능한 발전의 네 번째 기둥”(Culture: Fourth Pillar of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정책선언을 채택했다(양현미 2014, 378). 도시지방정부연합은 여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 그리고 진정한 웰빙을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적 차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드세인 등(Dessein et al. 2015)은 문화가 단지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하나의 축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서의 문화(culture in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의 문화(culture as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세 가지 과정을 제안했다(〈그

림 2) 참조). 즉 문화는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 영역을 연결 및 매개하면서 이들 영역 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 분야에 새로운 인식적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Dessein et al. 2015, 31). 지속가능성의 문화란 지속가능한 사회의 비전, 삶의 새로운 가치와 방식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고, 이처럼 초기 논의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문화는 점차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가치로서 이야기되고 있다. 이것은 문화가 창의적 영역으로서 사회경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논의에서 나아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끄는 매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료: Dessein et al. (2015: 29)

주 : 진한 색 원이 문화의 영역을 의미함.

〈그림 2〉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의 3가지 역할

3. 지속가능성 맥락에서 문화예술의 공공성 부각

앞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가 문화예술의 역할을 강조하게 된 과정과 이유를 정리했다면, 여기에서는 문화예술의 영

역에서는 어떠한 맥락에서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사회 참여적 예술을 논의해 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영국의 미술평론가 러스킨(J. Ruskin)은 1857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영원한 즐거움』(A Joy for Ever)에서 예술이 갖는 도덕적·사회적·경제적 의미와 가치를 논하였다(정현이 2012). 그는 미학에서 출발하여 정치 및 경제적 문제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미학이 생태주의 윤리와 연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된다(정현이 2012). 이처럼 예술적 감수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적 사유가 형성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주장은 철학자 셸링(F. Schelling)의 논의에서도 나타난다(정현이, 2012). 그는 예술철학이 자연철학을 포용해야 함을 주장했는데, 이는 예술이 생태적 윤리관에 대한 사유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정현이 2012). ‘관계의 미학’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미학자 부리요(N. Bourriaud)는 예술을 이미 규정된 개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더욱 잘 거주하는 것을 배우기”(Bourriaud 2011, 21) 위한 노력이라 했으며, 예술가는 유토피아적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존적인 삶의 맥락을 “지속가능한 세계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현재가 제공하는 환경에 거주”(Bourriaud 2011, 21)한다고 했다. 독일의 예술가 프리간(Herman Prigann)은 문화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술에서 생태미학은 반성적이며, 사회적·환경적으로 구성된 활동”이라 주장했고(Kagan 2013, 223), 독일 예술가인 스트렐로우(Hike Strelow) 역시 생태 예술가들이 사회변혁의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Strelow et al. 2004, 111).

이처럼 사회 발전에서 문화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와 예술계에서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반성적 실천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을 도울 것이라는 논의가 만남을 이루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에서 이루어진 문화예술의 역할과 문화예술 영역에서 논의된 문화예술과 생태주의의 연

대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면, 예술가의 활동은 다양한 가치의 소개와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사회적 책임 및 생태 윤리의 감수성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새로운 감수성의 형성은 우리의 인식체계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곧 “세상에 더 잘 거주하기 위한”(Bourriaud 2011, 21) 반성적 실천을 이끌어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이행에 중요한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Ⅲ. 문화예술은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앞 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강조하게 된 정책적 논의와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논의된 공공성을 살펴보았다. 즉 앞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만남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면, 여기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예술의 결합이 이론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이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생태미학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발전시킨 독일의 생태미학자 샤카 카간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예술적 경험의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결속을 높이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예술의 역할을 제시한 존 듀이의 이론을 살펴보았다.

1. 샤카 카간(S. Kagan)의 예술과 지속가능성

카간은 예술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의 결합을 주장하는 독일의 미학자로, 지난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바람부는연구소가 주최한 예

술 아고라 포럼에서 ‘복잡성의 미학, 도시 인간계의 예술가들과 탄력적 공동체들 (Aesthetics of complexity, artists and resilient communities in urban anthropo-scenes)’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³⁾ 그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는 근본적인 가치 이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은 문명 진화로 나아가는 길을 탐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다(Kagan 2013, 95).

카간은 그의 저서 『예술과 지속가능성(Art and Sustainability)』(2013)에서 체계이론(system theory)을 수용하여 생태미학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논의하였다. 그는 체계이론에서의 진화론적 생성개념인 자기생산(auto-poiesis)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것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복잡계 이론의 환경관계적 생산(autoecopoiesis) 개념을 통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에 지속적인 교란과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서 예술의 역할을 논의”(유현주 2013, 93)하였다. 체계이론가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이론에서 등장하는 자기생산 개념은 루만이 생물학자 마투라나(Humberto Maturana)와 바렐라(Francisco Varela)의 이론에서 가져와 발전시킨 것이다. 자기생산의 개념에 따르면, 하나의 체계는 유기체를 이루는 세포처럼 체계의 단위 요소들이 지속적인 자기생산을 통해 존속되고 발전한다. 루만은 이러한 자기생산적 체계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결정될 수 없고 자극을 받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즉 여기에서 체계는 외부환경으로부터 에너지, 정보, 물질들을 받아들이는 개방체계(open system)이면서 체계의 작동 측면에서는 폐쇄체계(closed system)의 성격을 갖는다(이철 2010).

이어서 카간은 체계이론을 바탕으로 발전된 복잡계 이론을 설명한 에드가 모린(Edgar Morin)의 환경관계적 생산 개념이 자기생산개념을 수정할

3) <https://sachakagan.wordpress.com/2014/11/11/art-agera-2014-seoul-art-sustainability/>

수 있다고 본다. 즉 카간은 체계가 외부로부터 자극과 에너지를 받기는 하지만, 환경으로부터 독립성을 누리며 자기준거적 생산을 지속한다는 자기생산 개념에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자기생산의 개념이 구조적 안정성(structural stability)을 과도하게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 복잡계 이론에서의 체계는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통해 배우고 체계의 행동을, 즉 재생산과 조직화의 방식을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자기생산의 개념과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다. 인간의 의식체계에 관심을 둔 카간은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나타나듯 인간의 의식은 물리적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예로 들면서(Kagan 2013, 116) 인간의 자아는 환경과 분리된 체계이지만 내부에서 통제되지 않는 외부 영향의 투입들이 내부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에 필연적으로 수반된다고 했다(유현주 2013, 102).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기존의 관념에 의심과 혼란을 초래”(유현주 2013, 102)하고 습관적인 사고의 패턴들을 변화시키는 환경관계적 개입이라고 특징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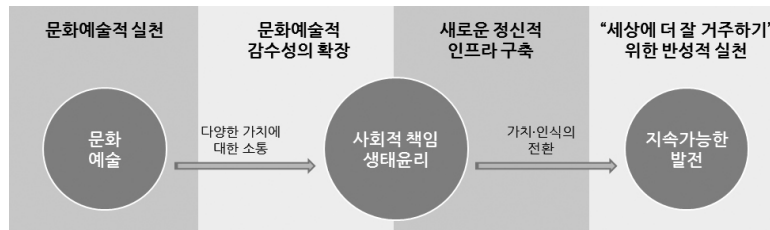
이처럼 그는 의미 있는 외부의 방해가 체계 내 조직의 관심을 받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의식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고 하면서(Kagan 2013, 125), 생태미학에 근간을 둔 예술이 인간의 의식에 의미있는 자극으로 작용해 지속가능성의 감각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성의 감각이란 ‘연결 패턴들’에 대한 감각을 의미하는데(유현주 2013, 107), 연결 패턴의 용어는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각 사회에 나타나는 공통된 속성을 연구했던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에게서 나온 용어이지만, 카간은 이것을 자신의 지속가능성 개념으로 가져와 전용하고 있다(유현주 2013, 107). 모린 역시 사회 변혁의 시급함을 주장하면서, 이 변혁은 단지 기후나 농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감각 없는 모더니티에 특정한 감각들을 다시 불어넣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Kagan 2013, 218). 이에 카간은 이 새로운 감각을 불어넣는데 예술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면서 지속가능성의 미학을 담은 예술을 통한 창의적 경험은 정신활동의 확장을 이끌고, 나아가 환경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를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Kagan 2013, 218). 예를 들어, “나무에 생수병을 매달아 나뭇잎과 줄기를 표현한 예술작품을 본 인간의 뇌는 나무와 물과 생명의 관계에 대한 이미지를 무의식의 공간에 저장”(유현주 2013, 102-103)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카간식으로 보면, 이는 “단순히 나무를 식물로 분류하는 것을 뛰어넘는 상상적·미적 경험”(유현주 2013, 103)이며, 예술이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인식체계에 가하는 개입인 것이다(유현주 2013, 103).

카간의 논의를 종합하면, 인간 의식의 외부환경으로서 ‘예술’은 우리가 예술을 경험할 때 의식에 자극과 영향을 주면서 의식체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환경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지구의 생물권에 속한다는 감각을 내포하는 지속가능성의 생태미학에 근간한 예술은 의식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앞서 설명한 드세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문화’와 연결시켜 볼 수 있고, 이 둘의 논의를 결합시켜 보면, 지속가능성의 미학을 바탕으로 한 예술의 경험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의식 체계에 자극과 변화를 줌으로써 경제와 사회체계 역시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존의 사고방식 전환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3〉은 지속가능성 맥락에서 카간의 이론과 예술의 공공성 논의를 결합시켜 도식화한 것이다. 이 도식에서 제시되었듯이 문화예술적 실천은 문화예술적 감수성의 확장을 도울 수 있다. 즉 지속가능성 맥락에서 이루어진 문화예술적 실천들을 통해 참여자들은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대한 소통을 이루고, 생태윤리라는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는 과정으로 나아간다. 카간식으로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문화예술은 인간의 인식체계에 지속적인 자극과 교란을 가하여 삶의 방식과 가치에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을 의미한다. 즉 드세인이 제시했듯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의 문화’ 단계로 문화예술의 기능이 확장될 때 “세상에 더 잘 거주하기 위한”(Bourriand 2011, 21) 반성적 실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인식적 토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3〉 지속가능성 맥락에서 카간의 이론과 예술의 공공성 논의의 결합

이어서 문화예술적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감수성을 확산시킨 관련 사례로서 〈노래하는 새〉 프로젝트와 〈제비는 어디로 갔을까?〉 전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들이 ‘새’라는 상징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비-인간 생물들과의 공생관계에 대한 감각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한다.

우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진행된 〈노래하는 새(SongBird)〉 프로젝트(1998-2002)는 카간이 논의한 인간의 인식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예술적 실천이었다고 분석된다. 정현이(2012)는 그의 논문 “통섭학으로서의 생태미술: 생태주의 미학의 새로운 전망”에서 예술가 카루터스(Beth Carruthers)가 주도해 1998년에서 2002년에 걸쳐 이루어진 〈노래하는 새〉 프로젝트⁴⁾를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생태적 관점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로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바빌론 정원 만들기(Babylon Gardens Habitat Challenge)〉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 지붕과 발코니에 새, 나비, 벌레 등에게 친

화적인 정원을 가꾸도록 독려했다. 진행팀은 워크숍을 열어 사람들이 어떻게 작은 공간에서도 정원을 잘 가꿀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일년에 한 번씩 자연친화적으로 정원을 잘 가꾼 사람들에게 시상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이 갖는 의미는 아파트로만 가득 찬 공간에서는 새들이 먹이와 물을 구할 수 없다는 문제를 공유하고, 이들과 함께 공생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이 집의 지붕과 발코니에 협력적으로 정원을 가꾸는 것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다른 생물, 즉 비-인간 공동체와 신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보다 더 큰 사회적 생태에 속해 있고, 그 생태를 보살필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정현이 2012, 314).

두 번째 프로그램인 〈살아있는 도시 포럼(The Living City Forum)〉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이곳에서 더 잘 살기 위한 논의를 위해 예술가, 과학자, 건축가, 환경주의자, 생물학자, 풍경 디자이너, 도시 계획가, 시인, 가수, 연기자, 안무가, 일반 대중 등을 초대해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냈다. 이 포럼은 우리는 서구의 문화가 세계 에너지와 환경생태계에 미친 거시적 차원의 영향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인식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들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된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도시의 활력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인간 개개인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기, 물, 지구, 그리고 수많은 종들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으며, 어떻게 이들과 관계 맺는가에 따라 우리의, 우리 자식들의, 그리고 자식들 자식들의 미래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인 〈새벽 합창단(The Dawn Chorus)〉은 인간이 ‘새’

4) <http://www.songbirdproject.ca/index.html>

로 대표되는 비-인간 생물과 공생해야 하는 관계에 있으며, 새가 살아가기 위한 생태계적 필요조건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였다(정현이 2012, 314). 마지막으로, 〈노래하는 새 오라토리오(SongBird Oratorio)〉는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카루터스와 그레이(Nelson Gray)가 도심의 교통 소음 속을 걷다가 생각해 낸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섯 명의 작곡가에게 지역의 새 소리에 영감을 얻은 곡 제작을 의뢰하고, 이들의 완성된 곡이 지역공연에서 연주되도록 했다. 이처럼 〈노래하는 새〉 프로젝트는 개념적인 시각미술도, 생태 치유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프로젝트도 아니었으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 및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이 비-인간 존재들과의 공생적 관계를 인식하도록 돕고, 우리의 인식 전환과 생활에서의 작은 선택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할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의의를 지닌다(정현이 2012, 314-315).

이와 유사한 예로, 2014년 8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커뮤니티갤러리에서 진행된 〈제비는 어디로 갔을까?〉⁵⁾ 전시가 있다. 이는 우체국공익재단이 주최한 업사이클링 전시로 제비를 비-인간 존재의 대표로 설정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이들과의 공생관계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전시는 SNS를 통해 ‘직접 찍은 제비사진과 관측 장소’, ‘직접 찍은 제비집이나 서식지 사진’,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새 사진’을 공유하는 “새(new, bird)도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예술은 언어적 의사소통의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인 자유를 지닌다는 카간의 설명처럼, 〈노래하는 새〉 프로젝트와 〈제비는 어디로 갔을까?〉 전시는 직접적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언급 없이도 새를 주제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공생하

고 있는 비-인간 생물들과의 관계를 인식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했을 것이라 예상된다.

본 논문은 단 두 가지 사례만을 제시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대안적인 문화예술적 실천이나 구체적인 정책발전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 했다는 점에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감수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하에 진행되어야 하기에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예술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결합이 한국사회에서 아직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국내사례를 찾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탐색적으로 찾아 제시한 〈노래하는 새〉와 〈제비는 어디로 갔을까?〉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새로운 문화예술적 시도를 주장한 카간의 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정책설계 및 반성적 실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작은 그림을 제공하는데 사례 제시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존 듀이(J. Dewey)의 경험으로서의 예술과 지속가능성

앞선 카간의 논의는 어떻게 예술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존 듀이(John Dewey)의 이론은 개인의 예술경험이 어떻게 사회적 논의로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듀이는 예술을 고립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했기 때문에 사회문제에의 예술적 개입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본 논문은 듀이의 미학 이론에 주목한다. 듀이가 『경험으로서의 예술(Art as Experience)』(2009)에서 경험을 강조한 이유는 그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포괄하는 의미적 차원(semantic demension), 더 나은 삶을 위해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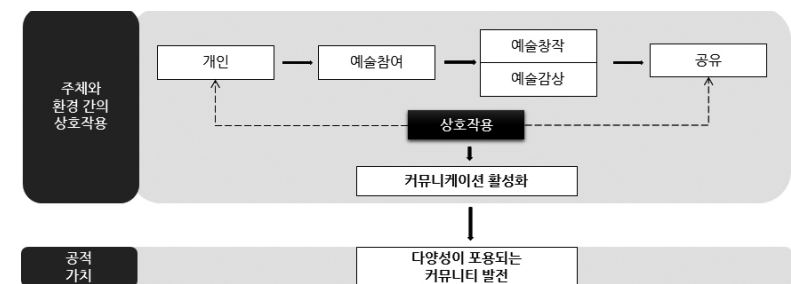
5) <https://neolook.com/archives/20140812e>

술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와 삶은 예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는 실천적 차원(practical dimension), 그리고 예술가 및 감상자가 행하고 겪는 경험의 현장성을 다루는 현상적 차원(phenomenological dimension)에 주목하기 때문이다(허정임 2013, 10). 듀이의 시각에서 삶은 환경 속에서, 환경 때문에,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존속되기에, 인간의 경험 자체를 맥락적(contextual)이라고 본다(허정임 2013, 10). 따라서 듀이는 미적 경험을 단지 ‘작품을 창작한다’ 혹은 ‘작품을 감상한다’에 국한하여 설명하기 보다는 작품의 창작 및 감상의 경험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했다. 또 그는 미적 경험이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예술과 일상적 경험을 결부시켜 이해했다(민주식 2013). 즉 예술창작이나 감상의 경험뿐만 아니라 일상적 맥락 속에서 “주체가 이상적인 목적 아래 최선을 다해 활동을 완수한다면 그러한 경험은 하나의 경험으로서 미적 경험”(허정임 2013, 10)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듀이는 예술과 민주주의적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연결시킨다. 즉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들의 미적 경험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타자와 사물 및 다른 문화와의 접촉이 심화되고, 이는 결국 다름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다양한 공중이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식 2013). 여기에서 듀이가 예술의 공적 가치에 주목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알렉산더(Thomas M. Alexander)는 듀이의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적 커뮤니티는 예술을 통해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Alexander 1987, 273).

이처럼 경험이라는 행위의 차원으로부터 예술을 정의한 듀이의 논의는 1960년대의 행위예술, 플럭서스(fluxus), 해프닝(happening)과 같은 미술 운동의 출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허정임 2013, 9). 그리

고 플럭서스와 같은 사회참여예술의 예술적 행위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수반하고, 일시적 재현이 아닌 사회적 관계의 깊이를 확장하며 참여자들의 역량과 비판적 사고를 촉진한다(Helguera 2013, 32-33).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회참여예술은 상징적인 진술로 사회에 특정한 행동을 제시하고 나아가 광범위한 논쟁을 촉발시킨다는 특징을 지닌다(Helguera 2013, 65-66).



〈그림 4〉 듀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예술의 공적 가치 발전 모형

그의 논의를 종합하면, 예술 경험은 주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될 수 있고, 인간의 일상적 경험과 미적 경험을 연결시킴으로써 예술이 민주적 커뮤니티의 형성과 실현에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이러한 듀이의 논의는 개인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에의 참여가 어떻게 사회적 차원에서의 공적인 가치를 내포하는 행위로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한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학적 차원의 연대는 예술을 통한 다양한 가치의 소통을 전제한다. 듀이의 이론에서도 문화예술의 공적 가치를 창작과 감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는 의사소통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공 예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요즘의 상황에서 예술이 환경·지역사회·공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것의 공적 가치를 발전시킨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고자 시도되고 있는 문화예술적 실천들에 주목하여 선행된 해외사례와 비교·분석을 하였다.

우선, 독일의 노이쾰른 지역에서 진행된 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노이쾰른은 베를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2000년에 이르러 노이쾰른 문화국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 자치구인 그로피우스(Gropiusstadt)의 이름을 따서 “그로피우스 2000”이라는 문화 프로젝트를 설계하였다. 조길예(2014)는 그의 논문 “생태위기의 시대와 독일이라는 모델: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대안과 시도들”에서 “그로피우스 2000” 프로젝트 중 〈그로피우스에서 보내는 인사〉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노이쾰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형성하고자 진행되었다. 노이쾰른 문화국은 지역주민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곳, 아름답다고 느끼는 곳, 발전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곳”(조길예 2014)을 사진 찍어 보내도록 독려했고, 수상작들은 도시 곳곳에 전시되었다. 이는 낙후된 도시 이미지만을 갖던 노이쾰른이라는 지역에서 긍정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민들이 제작한 ‘아름다운 곳’에 영감과 자극을 받아”(조길예 2014) 노이쾰른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이끌었다. 이렇게 〈그로피우스에서 보내는 인사〉 프로그램은 어떻게 외면 받던 지역이 문화예술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공동체를 강화시키는지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조길예 201).

2015년 강원도의 철원 지역은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지역으로 발돋움 하고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 및 실행하였다. 이 중 〈전환(Transformation)〉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철원의 미래지향적 모습을 컨텐츠화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그로피우스에서 보내는 인사〉 프로그램과 유사점을 공유한다. 우선 철원이라는 지역은 남한과 북한이 연결한 곳으로 비극적

인 한국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이면서, 또한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남북 간 이데올로기의 전쟁터가 된 한국 근대사의 상처를 담고 있는 지역이다(이채관 2015). 〈전환〉 프로그램은 철원이 과거의 굴레를 벗고 미래지향적으로 발돋움하게 하기 위해 ‘기억 아카이브’를 운영하는데, 이 아카이브는 미래 철원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 철원에 대한 과거 기억, 젊은 세대가 꿈꾸는 철원의 가치 등을 구술 및 채록의 방식으로 모은 후, 이것을 컨텐츠화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이채관 2015).

〈그로피우스에서 보내는 인사〉는 지역주민들이 찍어 출품한 사진을 통해 지역의 긍정성을 발견해 내면서 지역발전과 공동체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도시 발전의 방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전환〉 프로젝트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전환〉 프로젝트는 지역주민들의 구술 자료를 컨텐츠화 하여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진이라는 시각적 요소에 의한 호소보다 구술 자료를 컨텐츠화 하는 작업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보다 정교한 설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독일에서는 사회단체 및 예술가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문화적 교육이 토대가 된 역량이 젊은이들의 판단력을 강화시키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함께 형상화해 나가도록 고무”(조길예 2014) 시킬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철원의 〈공공미술 삼거리〉 프로그램에서 이와 유사한 맥락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고석정이라는 장소에서 아이들에게는 학습을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아이들과의 대화를 유도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환경에 대한 관계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이채관 2015).

이러한 사례들은 주민과의 소통에 가치를 두고, 그 참여를 유도하는 실

천적인 공공예술의 형태(김웅천·김재범 2014)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직접적·단기적이기 보다는 문화예술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나와 나를 둘러싼 사회 및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인간이 오래 전부터 문화예술을 통해 그 사회가 가진 가치를 표현해 왔다면, 사회 발전 방식에서의 전환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 문화예술은 성찰적 실천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우리사회에 전달할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

IV.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 뮤지엄의 역할

이 장에서는 뮤지엄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예술을 어떻게 매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예술의 결합에서 매개의 역할과 뮤지엄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속가능한 발전과 예술의 결합에서 지속가능성의 공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이 두 영역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또 다른 주체가 있어야 한다. 또한 21세기 뮤지엄의 패러다임은 점차 주민, 지역, 사회 및 사회 이슈,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온 만큼 뮤지엄에 예술의 언어와 사회 발전이라는 논의 하에서 생산되는 언어들을 서로의 영역에 전달하는 역할을 기대해 본다.

〈노래하는 새〉와 〈제비는 어디로 갔을까?〉와 같은 프로그램이 과연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냈는가를 엄격한 평가지표를 통해 관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에의 참여를 통해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생태계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사회발전 노선의 오류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에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노래하는 새〉와 〈제비는 어디로 갔을까?〉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에

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뮤지엄에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예술을 매개하는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역할에는 다양한 문화예술기관이 고려될 수 있겠으나 뮤지엄은 과거로부터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예술의 매개역할에 보다 적절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 뮤지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이에 따라 뮤지엄은 전시위주의 활동에서 나아가 해설, 강연회, 강좌, 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으로까지 역할을 확장시키고 있다(남경희·이정희 2013, 2). 그리고 뮤지엄에서의 전시와 다양한 교육활동은 “전통적인 학교 교육제도나 문화기관의 교육시설에서의 교육과정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수한 교육적 효과”(김형숙 2001, 67)를 갖는다고 평가된다. 또한 박물관학과 예술경영 연구에서는 뮤지엄이 사회변화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변화해야 한다는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민하(2014)는 공공미술에 연구관심을 두고, 공공미술의 실현은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루어진 공공미술을 활용한 지역재생사업은 관이 주도하는 수직적 사업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대부분 사업지침이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등 참여주체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문제를 지적한다(이민하 2014). 이에 따라, 이민하(2014)는 예술가와 지역주민이 동원되는 것이 아닌 협업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지속가능한 도심재생사업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내는 매개자의 역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왜 뮤지엄에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뮤지엄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를 소개하고, 이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뮤지엄이 공적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연구에서 뮤지엄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리한 양지연(2012)의 논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뮤지엄의 패러다임 변화를 설명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뮤지엄 상(像)을 제안한다. 양지연(2012)은 뮤지엄이 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 그리고 해석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나아가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서 그 의미와 유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 새로운 뮤지엄은 사회통합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며 민감한 사회 이슈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논의가 소통될 수 있는 담론의 장으로서 기능해야 함을 제안한다.

해외문헌을 보면, 『뮤지엄과 변화의 패러독스(Museums and the Paradox of Change)』(2013)에서 박물관학자인 마이클 에임스(Michael M. Ames)는 로버트 제인스(Robert R. Janes)가 뮤지엄의 현 상황 및 뮤지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31개의 명제로 정리하였다. 이 중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뮤지엄은 사회의 여러 방면의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는 현 사회의 빠른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2) 미래의 성공적인 뮤지엄은 변화의 힘에 맞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리포지셔닝(repositioning)하고 적응시키며 또한 그 변화보다 앞서고자 노력하는 조직이다, (3) (조직의) 구조는 반드시 전략을 따라야 한다, (4) 대부분의 혁신은 굉장한 발견에 의해서가 아닌 무수히 시도되는 작은 변화와 아이디어로부터 발생한다, (5) 뮤지엄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요인은 이것의 거버넌스와 리더십에 달려있다, (6)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또 다른 핵심요인은 “열린 통합성(open integrity)”으로, 뮤지엄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 및 대중들과 열린 의사소통을 이루어야 한다(Ames 2013, 4~5). 이러한 제인스의 명제는 뮤지엄이 사회에서 의미있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뮤지엄은 사회변화에 자유로울 수 없고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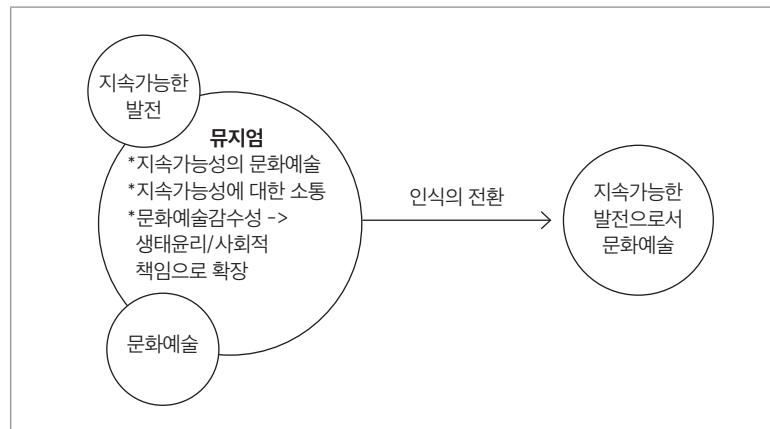
든 이해관계자들과 열린 의사소통을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뮤지엄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이와 같은 일관된 지적은 현대사회의 뮤지엄들이 점점 그들을 둘러싼 사회의 중요 문제들과의 관련성을 잃고 있다는 문제에서 기인한다. 즉 뮤지엄이 수익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뮤지엄의 역할은 사회와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기 보다는 관람객 수를 세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Søndergaard & Janes 2012). 제인스는 그의 저서 『Museums in a Troubled World』(2009)에서 세계가 전지구적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공공자원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뮤지엄은 지식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즉 제인스는 위협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뮤지엄의 역할은 관련 이슈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들이 그에 대해 지각하고 논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에 더하여 그는 지금까지 경제가 비성찰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결과 오늘날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뮤지엄은 지금의 결과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대신하여 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잠재력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함을 주장한다(Søndergaard & Janes 2012).

이를 위해 뮤지엄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자신의 미션을 검토해야 하고, 왜 자신들이 그 미션을 수행하고 실제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션을 바탕으로 수행한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Søndergaard & Janes 2012). 이어서 제인스는 뮤지엄이 단순한 작업과 이익이 주는 안락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공적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봤다. 즉 뮤지엄이 사회적 신념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뮤지엄은 커뮤니티가 지향할 바를 제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Janes 2013, 177). 이 외에도 2006년 미국 박물관 협회 회의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포터(Michael Porter)는 “뮤지엄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의 가치 체

인의 부분으로서 왜, 또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Koster 2013, 211). 그리고 린치(Bernadette Lynch)는 뮤지엄이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고취시킴으로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개방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보았다(Lynch 2013,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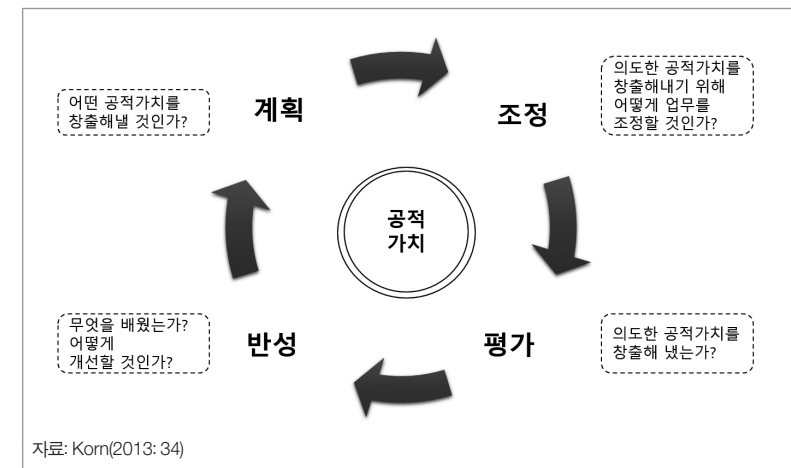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회변화 속에서 뮤지엄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목표와 문화예술 간 매개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5>는 이러한 뮤지엄의 매개역할을 도식화한 것이다. 앞서 드세인 등(Dessein et al. 2015)은 상이한 차원을 매개하며 이들 영역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정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를 제시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뮤지엄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목표와 문화예술을 매개하고 조정할 수 있다. 즉 지속가능성의 문화예술적 실천들을 지원하여 뮤지엄이 (카간의 논의처럼) 참여자들의 인식에 지속가능성의 자극과 기존의 가치체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그리고 이러한 환경관계적인 문화예술의 개입이 인식의 전환을 일으키는 장으로서 기능할 것을 제안한다.



〈그림 5〉 뮤지엄의 매개역할

이처럼 뮤지엄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근래의 논의를 살펴본 결과, 뮤지엄이 커뮤니티를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책무를 지닌 기관으로 보는 이들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도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예술의 결합이라는 시도에서 뮤지엄이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즉 이러한 시도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술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공공예술의 진행에서는 각자의 입장이 이해되고 소통되지 못한 채 서로 와해되고 결국 프로젝트가 방향성을 잃는 모습이 부단히 많이 목격되어 왔다. 따라서 각 참여 주체들의 언어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과도한 기능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예술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매개자로서의 뮤지엄의 역할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뮤지엄이 전략적 계획을 통해 예술의 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랜디 콘(Randi Korn)의 논의를 빌려 제안하고자 한다. 콘(Korn 2013, 33)은 뮤지엄의 경영에서 계획한 미션을 성공적으로



자료: Korn(2013: 34)

〈그림 6〉 공적가치 창출을 위한 계획의 사이클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사이클”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이클을 통해 어떻게 뮤지엄이 공적가치(public value)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그림 6>과 같이 제안했다.

우선 뮤지엄은 어떠한 공적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공적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 조직과 그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 이 렇게 조직과 업무의 배치를 조정 및 실행한 후에는 자신이 수행한 바에 대한 평가 단계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무엇을 배웠으며 선행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 어떠한 개선을 했을 때 공적 가치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은미와 정영기(2009)는 논문에서 뮤지엄이 조직의 최고 목표라 할 수 있는 미션을 세우고 그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연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조직의 업무를 배치 및 실행한 다음 수행된 내용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칠 때 기관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즉 콘(Korn)의 계획의 사이클의 각 단계를 하나로 묶는 것은 뮤지엄의 미션이다. 앞서 소개한 제인스(Janes)의 명제에서도 조직의 구조는 반드시 전략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듯, 뮤지엄의 조직과 업무는 반드시 뮤지엄의 미션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거꾸로 뮤지엄의 경영에서 미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발전과 예술 간의 매개자로서 뮤지엄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발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연계시키려 시도하기 보다는 변화하는 뮤지엄의 패러다임 속에서 지속가능성의 공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매개자로서의 정체성이 미션에 반영되고, 이를 중심으로 뮤지엄의 업무가 조정 및 수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V. 결론

인간중심주의적 사회가 낳은 기술·목적 합리성의 추구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생하지 못하는 지속불가능의 사회적 위기를 초래”(유현주, 2013)했다. 이러한 반성으로부터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발전의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이는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라는 체계 전체가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중심으로 발전의 전략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같은 총체적 변화에는 새로운 가치의 형성과 인식이 선행 및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문화적 전환을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예술을 결합시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흐름에 주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예술이 등장하게 된 과정, 문화예술 영역에서 이루어진 공공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과연 문화예술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과 예술을 매개하는 뮤지엄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우선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예술을 하나의 중심축으로 설정한 데에는 호주의 문화이론가 혹스의 『지속가능성의 네 번째 기둥: 공공계획에서 문화의 필수 역할』(2001)이 큰 역할을 하였고, 이를 비롯한 관련 논의들은 문화예술을 통해 구축된 새로운 가치와 사회적 이상을 토대로 사회가 발전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카간은 예술이 사회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감수성이 사회적 책임과 생태 윤리의 감수성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즉 예술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식체계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고 사회변혁의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Strelow et al. 2004, 111)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문화예술 참여가 생태윤리의 감수성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

하여 카간의 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맥락에서 예술 실천이 갖는 가능성을 검토했다. 본 논문은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술의 창작과 감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고 여기에서 다양성이 포용되는 커뮤니티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 모델을 제공했다. 그리고 나서 문화예술을 통해 활성화된 의사소통이 사회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의 문화예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역할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또한 문화예술과 지속가능성 논의의 결합이 예술에 대한 도구주의적 접근으로 흐르지는 않을까? 여기에서 본 논문은 지역의 뮤지엄들이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제안한다. 즉 뮤지엄이 정태적 태도에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예술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하기 보다는 현재 그 역할이 축소되어 있는 지역 뮤지엄을 매개로 예술과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예술의 도구화가 아니라 예술과 사회가 단절되어 있던 관계를 회복하고 문화예술이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사회 연계적 예술(socially engaged art; 사회 참여적 예술)’을 통해 ‘예술 연계적 사회(artistically engaged society)’로 나아가는,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로 발돋움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접수)일 : 2017. 04. 28 심사(수정)일 : 2017. 05. 31 게재확정일 : 2017. 06. 14

참 고 문 헌

- 김웅천·김재범(2014), 「예술 공론장 개념을 통한 예술의 공공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예술경영연구 29(2월호), 5-28.
- 노르베리-호지, 헬레나(Norberg-Hodge, H.)(2012), 『행복의 경제학』, Economics of Happiness(김영옥·홍승아 역), 서울: 중앙북스.
- 민주식(2013), 「예술의 뿌리로서의 공공성: 존 듀이 예술론의 새로운 해석」, 인문연구 68(8월호): 175-206.
- 박재규(2001),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한국의 사례」, 한국사회학 35(6): 79-104.
- 부리요, 니콜라(Bourriat, N.)(2011), 『관계의 미학』, Esthetique relationnelle(현지연 역), 파주: 미진사.
- 양지연(2012), 「뮤지엄의 성공 기준과 성과 지표에 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22(5월호): 171-194.
- 양현미(20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과 과제」, 『현대문명의 위기: 공생의 대안문명을 찾아』, 파주: 나남.
- 엘게라, 파블로(Helguera, P.)(2013), 『사회 참여 예술이란 무엇인가』, Education for Socially Engaged Art(고기탁 역), 서울: 열린책들.
- 유종일(2007), 「신자유주의, 세계화, 한국경제」, 『창작과 비평』, 35(3): 153-170.
- 유현주(2013), 「생태미학에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 연구: Sacha Kagan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미학예술학회지 37(0): 91-124.
- 윤강재·김계연(2010), 「OECD 국가의 행복지수 산정 및 비교」, 보건복지포럼 159(1): 86-98.
- 이민하(2014),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재생 전략: 공공미술프리즘의 〈덕이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30(5월호): 87-109.
- 이은미·정영기(2009),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미션 수립과 평가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14(5월호): 157-184.
- 이철(2010), 「루만의 자기생산 체계개념과 그 사회이론사적 의의」, 담론 201 13(3): 81-106.
- 이채관(2015), 「[철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환’ 역사, 기억, 그리고 재맥락화

- (Recontextualization)”, 웹진 아르코, vol.282. <http://webzine.arko.or.kr/load.asp?subPage=10.View&searchCate=02&pageType=Webzine&page=1&idx=426> (2015.04.03.)
- 이필렬(2003),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적 전환」, 창작과 비평 31(4): 68-84.
- 정현이(2012), 「통섭학으로서의 생태미술: 생태주의 미학의 새로운 전망」, 서양미술사학회논문집 37(8월호): 295-328.
- 조길예(2014), 「생태위기의 시대와 독일이라는 모델: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대안과 시도들」,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30(0): 409-432.
- 한준·김석호·하상웅·신인철(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1-24.
- 허정임(2013), 「존 듀이의 경험주의 미학에 입각한 예술교육」, 영남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Ames, Michael M. 2013. Introduction: Thirty-one Propositions on Changing Museums: An Introduction to the Glenbow Case Study, pp.1-7 in Janes, Robert R. (eds.), *Museums and the Paradox of Change*, Routledge.
- Alexander, Thomas M. 1987. *John Dewey's Theory of Art, Experience & Nature: The Horizon of Feeling*,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Dessein, J., Soini, K., Fairclough, G. & Horlings, L. (eds). 2015. *Culture in, for and as Sustainable Development: Conclusions from the COST Action IS1007 Investigating Cultural Sustainability*. University of Jyväskylä, Finland.
- Dewey, John. 2009. *Art as Experience*, Perigee Books.
- Easterlin, Richard A. 1973. Does Money Buy Happiness?, *The Public Interest*, 30: 3-10.
- Hawkes, J. 2010. *The Fourth Pillar of Sustainability: Culture's Essential Role in Public Planning*, Humanities.com.
- Janes, Robert R. 2013. *Museums and the Paradox of Change*, Routledge.
- Kagan, Sacha. 2013. *Art and Sustainability: Connecting Patterns for a Culture of Complexity*, transcript.
- Korn, Randi. 2013. Creating Public Value through Intentional Practice, pp. 31-43 in Scott, Carol A. (eds.), *Museums and Public Value: Creating Sustainable Futures*, Ashgate.
- Koster, Emlyn. 2013. Commentaries from the Field: New Needs for New times, pp. 205-215 in Janes, Robert R. (eds.), *Museums and the Paradox of Change*, Routledge.
- National Adult Office. 2010. Sustainable Development: Briefing for the House of Commons Environmental Adult Committee (July 2010), NAO, UK.
- Ruskin, John. 1980. A Joy for Ever, pp. 292-318, in Evans, Joan(eds.), *The Lamp of Beauty: Writing on Art by John Ruskin*, Cornell University Press.
- Strelow, H., Prigann, H. & David, V. 2004. *Ecological Aesthetics, Art in Environmental Design: Theory and Practice*, Birkhauser.
- Søndergaard, M. K. & Janes, R. R. 2012. What are museums for? - Revisiting “Museums in a Troubled World”, *Nordisk Museologi*, 2012(1): 20-34.
- Talberth, J., Clifford, C. & Slattery, N. 2007. *The Genuine Progress Indicator 2006: A Too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defining Progress.
- Veenhoven, Runt. 1989. National Wealth and Individual Happiness, pp. 9-32 in Grunert, K. & Oelander, F.(eds.), *Understanding Economic Behaviour*. Kluwer Academic Publisher, Dordrecht.
-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인터넷 자료

- <https://sachakagan.wordpress.com/2014/11/11/art-agora-2014-seoul-art-sustainability/>
- <http://www.songbirdproject.ca/index.html>
- <http://webzine.arko.or.kr/load.asp?subPage=10.View&searchCate=02&pageType=Webzine&page=1&idx=426>

국 문 초 록

지속가능한 사회와 문화예술

-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 뮤지엄의 역할 -

민경선(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초빙연구원)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서 문화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으며, 문화예술은 사회의 발전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고 인간이 환경과의 관계를 인식하도록 돕음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생태미학자 카간(Kagan)의 논의를 검토하여 문화예술적 감수성은 사회적 책임과 생태 윤리에 대한 감수성으로 확장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듀이(Dewey)의 이론에 따르면, 예술의 창작과 감상이라는 경험은 행위주체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화된 의사소통은 다양한 가치가 공유되고 포용되는 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서 예술이 환경, 지역사회, 공중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낸 인식전환의 계기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한 사례를 제시하고 최근 강원도 철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미술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정책에서 예술로 진행되는 일방향적 관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저해함을 주장하며, 이를 조정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지역 뮤지엄에 제안했다.

주제어 : 지속가능한 발전, 예술과 지속가능성, 공공예술프로젝트, 뮤지엄의 역할

Abstract

Sustainability and Culture

- The Role of Museums in Sustainable Society -

Min, Kyungsun(Researcher, Urban Management Research Division,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This paper is rooted i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ulture and arts could play a certain role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culture and arts in this study is claimed to have some contributions in a sustainable development by guiding the values which should be sought and encouraging the human-beings to recognize the relationship with an environment. Through the review of works from Sacha Kagan who is a German philosopher of eco-aesthetics, it argues that the artistic sensibility might be extended into social responsibility as well as ecological ethics sensitivity. Due to this kind of possibility for expansion, the change in recognition that aims for a sustainable development will take place. Moreover, according to Dewey's theory, the creation and appreciation of arts requires the interaction between actors and an environment. The expressed communication from these experiences is theoretically explained in terms of having a sphere in which various values are shared and embraced. Then, foreign cases that demonstrate the contribution of arts in the process of a sustainable society are presented. The cases can be seen as examples of changed awareness from the active interaction of arts with environments, local communities, and the public. To go hand in hand, a domestic case is also analyzed for the purpose of observing the similar possibility of arts. Specifically, the public arts project which has recently been taking place in Cheorwon of Gangwon-do, Korea will be examined. Lastly, the paper concludes with the argument that the un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arts and its related public

polices hinders the ability of arts in a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ll as the suggestion that the local museums should perform the role of a mediator.

Key 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Art and Sustainability,
Public Art Project, Roles of Museums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가로경관 선호도 분석

- 남태령 가로경관을 사례로 -

허한결* · 김호걸** · 김승호***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II. 연구범위 및 방법

1. 대상지
2. 사진촬영방법
3. 설문방법
4. 통계분석

III. 결과 및 고찰

1. 경관구성요소와 경관선호도의 관계
2. 경관형용사와 경관선호도의 관계 분석
3.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경관형용사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T검정) 결과

IV. 결론

1. 결과 요약 및 제언
2. 한계 및 의의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초빙연구원

*** 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E-mail: sunghokil@kangwon.ac.kr, Tel: 033-250-8342)

I. 서론

1. 연구의 배경

경관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도로의 가로경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변재상 등 1999; 김종구 2001; 정연구 등 2008; 신재윤 등 2011). 여러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와 같이, 도로경관에서는 도로 중앙 조정 공간과 가로 경관이 중요한 경관이다.

한편, 도로와 가로의 경관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용자는 운전자이다. 그러나 보행자 중심의 도시가로경관에 대한 평가(우상기 2009)는 그 사례가 있는 반면, 운전자의 관점에서 바라 본 도로 중앙의 조정 수목 및 가로경관에 대한 경관선호도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운전자와 관련된 경관의 평가는 고속도로(이송희와 주신하 2012), 터널(이혜령 외 2012) 등 운전자와 보행자가 공존하는 도시 가로경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와 보행자를 함께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도로 중앙 조정 수목과 가로경관에 대한 선호도 분석을 통해서 향후 도로 중앙의 수목 배치 및 가로경관 조성 또는 개선에 있어서 운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도로 중앙의 조정 수목과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경관에 대한 선호도를 운전자와 비운전자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경관 선호도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고, 운전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가로경관 조

성 및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1. 대상지

대상지는 사당역에서 남태령 사이의 도로로 선정하였다. 대상지는 왕복 8차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의 가운데에 관목, 아교목, 교목 등 다양한 수종으로 구성된 도로 중앙의 조정 수목이 식재되어 있다. 가로경관 또한 수목, 콘크리트 옹벽, 공사장의 철판 옹벽, 아파트와 상가 등의 건물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남태령은 출퇴근시간에는 항상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곳으로 차량통행량이 매우 많은 도로이다. 따라서 도로 중앙의 조정 수목의 다양성, 가로의 경관의 다양성, 또한 차량통행이 많은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였다.

2. 사진촬영방법

사당역-남태령, 남태령-사당역을 왕복하면서 차량에 탑승한 채로 도로 중앙 조정 수목 및 가로경관을 촬영하였다. 운전자가 좌측 대각선 방향을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촬영을 하였으며, 4차로 중 2차로로 운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하였다. 4차로 중 오른쪽 끝 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므로 운행이 불가하고, 1차로는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어 운행에 영향을 받기 쉽고, 3차로는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있어 운행에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운행에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 중앙에서 운전하려는 습성이 생긴다. 또한 1차로는 일반도로나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이동해

아하는 차들을 위해 비위돌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운행에 지장이 적고 많이 이용할 것이라 판단되는 2차로에서 촬영을 실시하였다. 사진기의 렌즈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35mm로 고정된 채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도로 중앙의 다양한 수목 구성, 가로경관의 다양성을 담을 수 있도록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뒤 설문에 적합한 사진을 선택하였다.

3. 설문방법

운전자와 비운전자로 설문대상을 나누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운전자로 선정된 설문지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경험이 다소 풍부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으며, 비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지에서 촬영된 사진 중에서 도로 중앙 조정 수목의 구성, 가로경관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29장의 사진을 선별하여 설문에 사용하였다. 특히 도로 중앙 조정 수목의 구성(교목, 아교목, 관목), 가로경관의 구성요소(수목, 바위, 콘크리트 옹벽, 철관 옹벽, 건물)을 고려하여 사진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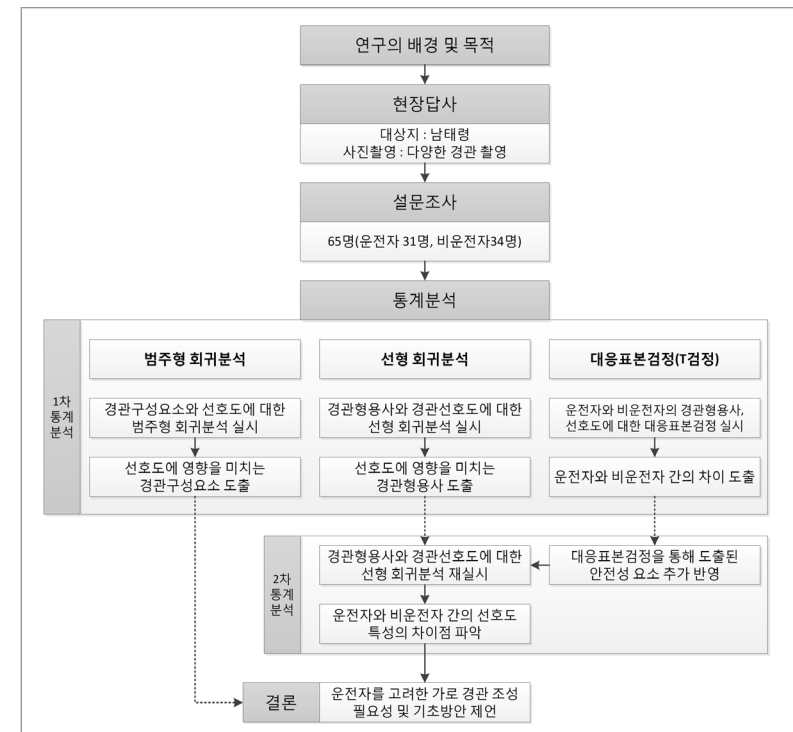
경관선호도를 분석한 주신하와 임승빈(2003), 송병화 등(2006), 박상희(2007), 허준 등(2007), 주신하(2008), 이영경 등(2010), Song Meijie(2011), 이송희와 주신하(2012), 이혜령 등(2012)를 검토하여 자연성, 개방감, 안전성, 심미성, 복잡성, 선호성의 총 7개 경관형용사를 도출하였다. 각 사진에 대하여 자연성, 개방감, 안전성, 심미성, 복잡성, 선호성에 대한 경관형용사를 선정하고 7점 척도를 주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경관형용사들은 운전자가 운행 중에 보게 되는 경관의 선호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표 1).

〈표 1〉 경관형용사 선정 근거

구분	형용사	출처
자연성	상쾌한 - 불쾌한	박상희(2007)
개방감	트여있는 - 막혀있는	이영경 등(2010)
안전성	안정적인 - 불안정한	Song Meijie(2011)
심미성	아름다운 - 추한	이영경 등(2010)
복잡성	경관이 단순한 - 경관이 복잡한	송병화 등(2006)

4. 통계분석

촬영된 사진의 특성을 파악해 본 결과, 각 사진은 도로 중앙 조정 수목의 구성 요소(교목, 아교목, 관목), 가로경관의 구성요소(수목, 바위, 콘크리트 옹벽, 철관 옹벽, 건물)를 고려하여 사진을 선정하였다.



〈그림 1〉 연구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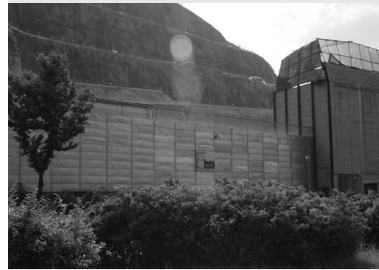
사진예시 1
도로 중앙 조경 수목: 교목, 관목
가로 경관: 수목, 콘크리트 옹벽



사진예시 2
도로 중앙 조경 수목: 교목, 관목
가로 경관: 수목, 콘크리트 옹벽



사진예시 3
도로 중앙 조경 수목: 교목
가로 경관: 수목, 차량



사진예시 4
도로 중앙 조경 수목: 관목
가로 경관: 수목, 철관 옹벽, 바위



사진예시 5
도로 중앙 조경 수목: 교목, 관목
가로 경관: 건물, 차량



사진예시 6
도로 중앙 조경 수목: 관목
가로 경관: 수목, 건물, 차량

〈그림 2〉 촬영사진 예시

트 옹벽, 철관 옹벽, 건물)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사진을 구성하는 요소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아, 사진 내 각 경관구성요소의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사

진에 대하여 경관 구성 요소의 존재(2)와 부재(1)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범주형 회귀분석 범주형 회귀분석이란 종속변수 혹은 설명변수가 범주형으로 관측된 경우 사용하는 회귀분석 방법이다. 범주형 회귀분석을 통해 자연성, 개방감, 안전성, 심미성, 복잡성, 선호성과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양경숙 2004).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유의성이 낮은 요소들을 하나씩 제외하면서 모든 변수가 유의성을 갖는 식을 도출하였다.

〈표 2〉 사진 별 도로 중앙 조경 수목, 가로경관의 구성

사진 번호	도로 중앙 조경 수목			가로경관					
	교목	아교목	관목	수목	바위	콘크리트 옹벽	건물	철관 옹벽	차량
1	X	X	O	O	X	X	O	X	X
2	O	X	X	O	X	O	O	X	O
3	O	X	O	O	X	O	X	X	X
4	X	O	O	O	X	O	X	X	X
5	X	O	O	O	X	O	X	X	X
6	O	X	X	O	X	O	X	X	X
7	X	O	O	O	X	X	X	X	X
8	O	X	X	O	X	X	X	X	O
9	X	O	O	O	O	X	X	O	O
10	X	X	O	X	O	X	X	O	O
11	X	O	O	O	X	X	X	O	X
12	O	X	X	O	X	O	X	O	O
13	O	X	X	O	X	X	X	O	O
14	X	O	O	X	X	X	O	X	O
15	O	X	X	O	X	X	O	X	O
16	X	X	O	O	X	X	O	X	O
17	O	X	X	O	X	X	O	X	O
18	O	X	O	X	O	X	O	X	O
19	O	X	X	O	X	X	O	O	O
20	X	O	O	O	X	X	O	O	O
21	X	O	X	O	X	X	O	O	O
22	O	X	X	O	X	X	O	O	O
23	O	X	O	O	X	X	O	X	X
24	X	X	X	O	X	X	X	X	O
25	X	X	O	O	X	X	X	X	X
26	X	O	O	O	X	X	X	X	O
27	O	X	X	O	X	O	X	X	X
28	O	X	X	O	X	X	X	X	X
29	X	O	O	O	X	X	X	X	X

※ 참조: 존재 = O, 부재 = X

III. 결과 및 고찰

총 65명(운전자 31명, 비운전자 34명)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1. 경관구성요소와 경관선호도의 관계

1) 자연성

가) 운전자

운전자에 대하여 자연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도로 중앙 조경 수목의 구성 요소(교목, 아교목, 관목), 가로경관의 구성요소(수목, 바위, 콘크리트 옹벽, 철관 옹벽, 건물, 차량)를 독립변수로 하는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3).

〈표 3〉 회귀분석 결과

계수(C)					
	표준화 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베타	표준 붓스트랩(1000) 추정값 오류			
수목	.363	.104	1	12.108	.002
철관옹벽	-.37	.166	1	4.965	.035
차량	-.445	.162	1	7.519	.011

종속변수: 자연성(운전자)

〈표 4〉 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요약				
	다중 R(M)	R 제곱	수정된 R 제곱	명백한 예측 오차
표준화 데이터	.836	.700	.663	.300

종속변수: 자연성(운전자)

예측자: 수목 철관옹벽 차량

운전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자연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경관 구성요소는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수목, 철관옹벽, 차량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목은 양의 계수를 가짐으로 자연성과 정비례하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철관옹벽과 차량은 자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R²값)은 0.7이다(표 4). 이는 운전자가 자연성을 느낄 때 수목은 자연성에 긍정적 역할을 하며, 철관옹벽과 차량은 자연성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비운전자

비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연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도로 중앙 조경 수목의 구성 요소(교목, 아교목, 관목), 가로경관의 구성요소(수목, 바위, 콘크리트 옹벽, 철관 옹벽, 건물, 차량)를 독립변수로 하는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표 5〉 회귀분석 결과

계수(C)					
	표준화 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베타	표준 붓스트랩(1000) 추정값 오류			
수목	.468	.117	1	16.010	.000
철관옹벽	-.47	.111	1	18.109	.000

종속변수: 자연성(비운전자)

〈표 6〉 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요약				
	다중 R(M)	R 제곱	수정된 R 제곱	명백한 예측 오차
표준화 데이터	.669	.447	.405	.553

종속변수: 자연성(비운전자)

예측자: 수목 철관옹벽 차량

비운전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자연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경관 구성

요소는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수목과 철관옹벽으로 나타났다. 비운전자의 경우에도 수목은 자연성에 양의 계수를 가짐으로 자연성을 높이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철관옹벽은 자연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운전자와는 달리 자연성에 대하여 차량이 미치는 기여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 차이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조사 이외의 변수 또는 변수 측정 방식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R²값)은 0.447이다(표 6).

2) 개방감

가) 운전자

운전자에 대하여 개방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도로 중앙 조정 수목의 구성 요소(교목, 아교목, 관목), 가로경관의 구성요소(수목, 바위, 콘크리트 옹벽, 철관 옹벽, 건물, 차량)를 독립변수로 하는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7).

〈표 7〉 회귀분석 결과

계수(C)					
	표준화 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베타	표준 붓스트랩(1000) 추정값 오류			
관목	-.499	.169	1	8.713	.007
차량	-.399	.171	1	5.465	.027

종속변수: 자연성(운전자)

〈표 8〉 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요약				
	다중 R(M)	R 제곱	수정된 R 제곱	명백한 예측 오차
표준화 데이터	.524	.275	.219	.725

종속변수: 개방감(운전자)

예측자: 관목 차량

운전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개방감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경관 구성요소는 도로 중앙에 있는 조정 수목 중 관목과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차량으로 나타났다. 관목과 차량은 개방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R²값)은 다소 낮은 0.275이다(표 8).

나) 비운전자

비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개방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도로 중앙 조정 수목의 구성 요소(교목, 아교목, 관목), 가로경관의 구성요소(수목, 바위, 콘크리트 옹벽, 철관 옹벽, 건물, 차량)를 독립변수로 하는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9).

〈표 9〉 회귀분석 결과

계수(C)					
	표준화 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베타	표준 붓스트랩(1000) 추정값 오류			
관목	-.514	.148	1	11.993	.002
차량	-.483	.152	1	10.048	.004

종속변수: 자연성(비운전자)

〈표 10〉 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요약				
	다중 R(M)	R 제곱	수정된 R 제곱	명백한 예측 오차
표준화 데이터	.575	.331	.280	.669

종속변수: 개방감(비운전자)

예측자: 관목 차량

비운전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개방감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경관 구성요소 또한 관목과 차량으로 나타났다. 관목과 차량은 개방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R²값)은 다소 낮은 0.331이다(표 10).

3) 안전성

가) 운전자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도로 중앙 조정 수목의 구성 요소(교목, 아교목, 관목), 가로경관의 구성요소(수목, 바위, 콘크리트 옹벽, 철관 옹벽, 건물, 차량)를 독립변수로 하는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11).

〈표 11〉 회귀분석 결과

계수(C)					
	표준화 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베타	표준 붓스트랩(1000) 추정값 오류			
수목	.331	.114	1	8.428	.008
철관옹벽	-.426	.170	1	6.273	.019
차량	-.37	.180	1	4.235	.050

종속변수: 안전성(운전자)

〈표 12〉 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요약				
	다중 R(M)	R 제곱	수정된 R 제곱	명백한 예측 오차
표준화 데이터	.795	.632	.588	.368

종속변수: 안전성(운전자)

예측자: 수목 철관옹벽 차량

운전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안전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경관 구성요소는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수목, 철관옹벽, 차량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목은 양의 계수를 가짐으로 자연성과 정비례하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철관옹벽과 차량은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R²값)은 0.632이다(표 12).

나) 비운전자

비운전자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도로 중앙 조정 수목의 구성 요소(교목, 아교목, 관목), 가로경관의 구성요소(수목, 바위, 콘크리트 옹벽, 철관 옹벽, 건물, 차량)를 독립변수로 하는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13).

〈표 13〉 회귀분석 결과

계수(C)					
	표준화 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베타	표준 붓스트랩(1000) 추정값 오류			
수목	.392	.121	1	10.466	.004
콘크리트옹벽	-.238	.108	1	4.909	.036
철관옹벽	-.347	.154	1	5.08	.034
차량	-.447	.172	1	6.749	.016

종속변수: 안전성(비운전자)

〈표 14〉 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요약				
	다중 R(M)	R 제곱	수정된 R 제곱	명백한 예측 오차
표준화 데이터	.787	.619	.556	.381

종속변수: 안전성(비운전자)

예측자: 수목 콘크리트옹벽 철관옹벽 차량

비운전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안전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경관 구성요소는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수목, 콘크리트옹벽, 철관옹벽, 차량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목은 양의 계수를 가짐으로 자연성과 정비례하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콘크리트 옹벽, 철관옹벽, 차량은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운전자와 다르게 나타난 점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운전자와는 달리 비운전자가 콘크리트 옹벽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성이 낮아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R²값)은 0.619이다(표 14).

4) 심미성

가) 운전자

운전자에 대하여 심미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도로 중앙 조경 수목의 구성 요소(교목, 아교목, 관목), 가로경관의 구성요소(수목, 바위, 콘크리트 옹벽, 철관 옹벽, 건물, 차량)를 독립변수로 하는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15).

〈표 15〉 회귀분석 결과

계수(C)					
	표준화 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베타	표준 붓스트랩(1000) 추정값 오류			
수목	.331	.110	1	9.063	.006
철관옹벽	-.426	.162	1	6.923	.014
차량	-.37	.162	1	5.218	.031

종속변수: 심미성(운전자)

〈표 16〉 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요약				
	다중 R(M)	R 제곱	수정된 R 제곱	명백한 예측 오차
표준화 데이터	.795	.632	.588	.368

종속변수: 심미성(운전자)
예측자: 수목 철관옹벽 차량

운전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심미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경관 구성요소는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수목, 철관옹벽, 차량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목은 양의 계수를 가짐으로 심미성과 정비례하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철관옹벽과 차량은 심미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심미성에 대한 범주형 회귀분석 결과가 안전성에 대한 결과와 변수가 동일하고 계수 또한 거의 같은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

전자가 가로경관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안전성과 심미성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R²값)은 0.632이다(표 16).

나) 비운전자

비운전자에 대해서도 심미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도로 중앙 조경 수목의 구성 요소(교목, 아교목, 관목), 가로경관의 구성요소(수목, 바위, 콘크리트 옹벽, 철관 옹벽, 건물, 차량)를 독립변수로 하는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17).

〈표 17〉 회귀분석 결과

계수(C)					
	표준화 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베타	표준 붓스트랩(1000) 추정값 오류			
수목	.484	.115	1	17.708	.000
철관옹벽	-.494	.102	1	23.356	.000

종속변수: 심미성(비운전자)

〈표 18〉 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요약				
	다중 R(M)	R 제곱	수정된 R 제곱	명백한 예측 오차
표준화 데이터	.697	.486	.447	.514

종속변수: 심미성(비운전자)
예측자: 수목 철관옹벽

비운전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심미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경관 구성요소는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수목과 철관옹벽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목은 양의 계수를 가짐으로 심미성과 정비례하는 요소로 나타났으며, 철관옹벽은 심미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운전자와는 달리 차량은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성과 심미성을 유사하게 느끼는 반면, 비운전자는 안전성과 심미성에 대해서 다르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콘크리트 옹벽과 차량을 보고 있으나, 심미성에서는 콘크리트 옹벽과 차량에 대해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R²값)은 0.486이다(표 18).

5) 복잡성

가) 운전자

운전자에 대하여 복잡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도로 중앙 조정 수목의 구성 요소(교목, 아교목, 관목), 가로경관의 구성요소(수목, 바위, 콘크리트 옹벽, 철관 옹벽, 건물, 차량)를 독립변수로 하는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19).

〈표 19〉 회귀분석 결과

계수(C)					
	표준화 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베타	표준 붓스트랩(1000) 추정값 오류			
수목	.254	.124	1	4.170	.051
차량	-.649	.107	1	36.768	.000

종속변수: 복잡성(운전자)

〈표 20〉 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요약				
	다중 R(M)	R 제곱	수정된 R 제곱	명백한 예측 오차
표준화 데이터	.762	.580	.548	.420

종속변수: 복잡성(운전자)

예측자: 수목 차량

운전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복잡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경관 구성요소는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수목과 차량으로 나타났다. 복잡성은 1점이 복

잡함을 의미하고, 7점이 단순함을 의미한다. 수목은 양의 계수를 가지므로 수목이 있으면 경관이 단순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량은 음의 계수를 가지므로 차량이 있으면 경관을 복잡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R²값)은 0.580이다(표 20).

나) 비운전자

비운전자에 대하여 복잡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도로 중앙 조정 수목의 구성 요소(교목, 아교목, 관목), 가로경관의 구성요소(수목, 바위, 콘크리트 옹벽, 철관 옹벽, 건물, 차량)를 독립변수로 하는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21).

〈표 21〉 회귀분석 결과

계수(C)					
	표준화 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베타	표준 붓스트랩(1000) 추정값 오류			
차량	-.662	.107	1	38.681	.000

종속변수: 복잡성(비운전자)

〈표 22〉 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요약				
	다중 R(M)	R 제곱	수정된 R 제곱	명백한 예측 오차
표준화 데이터	.662	.439	.418	.561

종속변수: 복잡성(비운전자)

예측자: 차량

비운전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복잡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경관 구성요소는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차량으로 나타났다. 차량이 음의 계수를 가지므로 차량이 있으면 경관을 복잡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경관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R²값)은 0.439이다(표 22).

6) 선호성

가) 운전자

운전자에 대하여 선호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도로 중앙 조경 수목의 구성 요소(교목, 아교목, 관목), 가로경관의 구성요소(수목, 바위, 콘크리트 옹벽, 철관 옹벽, 건물, 차량)를 독립변수로 하는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23).

〈표 23〉 회귀분석 결과

계수(C)					
	표준화 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베타	표준 보스트랩(1000) 추정값 오류			
차량	-.472	.156	1	9.094	.006
수목	.301	.11	1	7.489	.011
철관옹벽	-.339	.15	1	5.138	.032

종속변수: 선호성(운전자)

〈표 24〉 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요약				
	다중 R(M)	R 제곱	수정된 R 제곱	명백한 예측 오차
표준화 데이터	.803	.645	.602	.355

종속변수: 선호성(운전자)

예측자: 차량 수목 철관옹벽

운전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선호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경관 구성요소는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차량, 수목, 철관옹벽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존재는 경관에 대하여 선호를 느끼게 하는 반면, 차량과 철관옹벽은 경관에 대한 선호를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R²값)은 0.645이다(표 24).

나) 비운전자

비운전자에 대해서도 선호성을 종속변수로 하고, 도로 중앙 조경 수목의 구성 요소(교목, 아교목, 관목), 가로경관의 구성요소(수목, 바위, 콘크리트 옹벽, 철관 옹벽, 건물, 차량)를 독립변수로 하는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25).

〈표 25〉 회귀분석 결과

계수(C)					
	표준화 계수		자유도	F	유의확률
	베타	표준 보스트랩(1000) 추정값 오류			
수목	.372	.112	1	10.967	.003
콘크리트옹벽	-.237	.130	1	3.319	.081
철관옹벽	-.395	.171	1	5.324	.030
차량	-.42	.189	1	4.920	.036

종속변수: 선호성(비운전자)

〈표 26〉 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요약				
	다중 R(M)	R 제곱	수정된 R 제곱	명백한 예측 오차
표준화 데이터	.786	.618	.554	.382

종속변수: 선호성(비운전자)

예측자: 수목 콘크리트옹벽 철관옹벽 차량

비운전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선호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경관 구성요소는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수목, 콘크리트 옹벽, 철관 옹벽, 차량으로 나타났다. 수목의 존재는 경관에 대하여 선호를 느끼게 하는 반면, 콘크리트 옹벽, 철관 옹벽, 차량은 경관에 대한 선호를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옹벽은 유의확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운전자와 비운전자가 선호하는 도로 중앙 조경 수목 및 가로경관은 유사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R²값)은 0.618이다(표 26).

2. 경관형용사와 경관선호도의 관계 분석

1) 운전자

운전자가 판단한 경관형용사와 경관선호도에 대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경관선호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심미성을 제외한 경관형용사 4개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선택법(stepwise)으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7).

〈표 27〉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F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474	.162		-2.931	.007
	자연성1	.577	.168	.544	3.438	.002
	안전성1	.522	.185	.446	2.824	.009

〈표 28〉 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요약c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Durbin-Watson
1	.984b	.968	.965	1.479

예측값: (상수), 자연성(운전자), 안전성(운전자)

종속변수: 선호성(운전자)

운전자의 경관선호도에 기여하는 경관형용사는 자연성과 안전성으로 나타났다. 자연성과 안전성 모두 높을수록 경관에 대한 선호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R²값)은 0.968이다(표 28).

2) 비운전자

비운전자가 판단한 경관형용사와 경관선호도에 대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경관선호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심미성을 제외한 경관형용사 4개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선택법(stepwise)으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9).

〈표 29〉 회귀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F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491	.119		-4.11	.000
	자연성2	.777	.087	.735	8.929	.000
	복잡성2	.308	.095	.266	3.228	.003

〈표 30〉 회귀분석 모형 요약

모형 요약c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Durbin-Watson
1	.992b	.983	.982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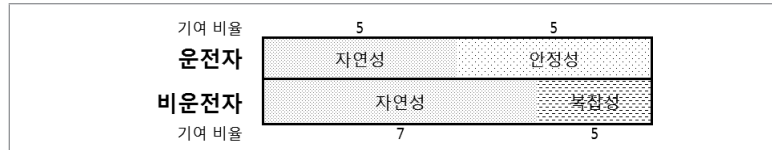
예측값: (상수), 자연성(비운전자), 복잡성(비운전자)

종속변수: 선호성(비운전자)

비운전자의 경관선호도에 기여하는 경관형용사는 자연성과 복잡성으로 나타났다. 자연성과 복잡성 모두 높을수록 경관에 대한 선호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R²값)은 0.982이다. 운전자의 경관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안전성은 비운전자에 비해 높은 계수를 나타냄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아야 운전자의 경관선호도가 높게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0).

운전자와 비운전자 간 경관선호도에 영향을 준 요인은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운전자와 비운전자 모두 자연성이 높은 경우 경관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운전자는 복잡성 보다는 안전성을, 비운전자는 안전성보

다는 복잡성이 경관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3〉 경관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운전자와 비운전자 차이

운전자와 비운전자 간 경관선호도에 영향을 준 요인은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운전자와 비운전자 모두 자연성이 높은 경우 경관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운전자는 복잡성 보다는 안전성을, 비운전자는 안전성보다는 복잡성이 경관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3.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경관형용사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T검정) 결과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경관형용사 설문 결과에 대하여 대응표본검정(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31). 연구가설은 ‘운전자와 비운전자 간의 경관형용사 설문결과에 대한 차이가 있다’이며, 귀무가설은 ‘운전자와 비운전자 간의 경관형용사 설문결과에 대한 차이가

〈표 31〉 대응표본 T 검정 결과

대응표본 검정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	표준편차			
대응 1	자연성1 - 자연성2	.06618	.23773	1.499	28	.145
대응 2	개방감1 - 개방감2	-.05853	.28477	-1.107	28	.278
대응 3	안전성1 - 안전성2	-.12802	.29809	-2.313	28	.028
대응 4	심미성1 - 심미성2	.05261	.25563	1.108	28	.277
대응 5	복잡성1 - 복잡성2	-.22718	.29156	-4.196	28	.000
대응 6	선호성1 - 선호성2	.06367	.23960	1.431	28	.164

없다’이다.

대응표본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은 안전성과 복잡성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게 되므로,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설문결과에서 안전성과 복잡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자와 비운전자에 대해서 경관선호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존의 선형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기여를 한다고 나타난 자연성과 안전성에 복잡성을 추가하여 선형 회귀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본 회귀분석에서는 변수는 입력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운전자와 비운전자에 대한 경관선호도와 안전성, 복잡성, 자연성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2).

〈표 32〉 경관선호도와 안전성, 심미성, 복잡성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대응차	유의확률	R제곱	수정된 R제곱
		B			
운전자	(상수)	-.542	.003	.970	.966
	자연성	.588	.002		
	안전성	.419	.043		
	복잡성	.112	.172		
비운전자	(상수)	-.512	.000	.983	.981
	자연성	.775	.000		
	안전성	.276	.019		
	복잡성	.039	.542		

안전성은 운전자와 비운전자 모두 유의하다고 나타났으며, 계수를 살펴보면 운전자는 계수가 0.419로 나타난 반면, 비운전자는 계수가 0.276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운전자에 비하여 운전자가 경관선호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안전성에 대해 더욱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복잡성에 있어서도 운전자는 계수가 0.112로 나타났고, 비운전자

는 계수 0.039로 나타났으며, 복잡성은 비운전자에게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운전자가 비운전자에 비해 경관선호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복잡성에 대해 더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며, 복잡성이 경관선호도에 미치는 유의성이 운전자의 경우에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선호하는 가로경관의 조성을 위해서는 특히 안전성과 복잡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33〉 운전자의 안전성과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구성요소

경관형용사	요소	계수	유의확률
안전성	수목	.331	.008
	철관옹벽	-.426	.019
	차량	-.370	.050
복잡성	수목	.254	.051
	차량	-.649	.000

앞서 범주형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 중, 운전자가 판단하기에 안전성과 복잡성에 대하여 높은 기여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요소는 다음과 같다(표 33). 안전성의 경우, 수목, 철관옹벽, 차량이 기여하는 바가 높았으며, 복잡성의 경우, 수목과 차량이 기여하는 바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남태령의 가로경관을 안전성, 복잡성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로경관에 있어서 수목의 비율을 높이고, 공사장과 일부 상업시설의 철관옹벽의 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진에서 차량이 있는 경우에 안전성과 복잡성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도로 중앙에 수목을 조성함으로써 반대편의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차단하는 차폐수목의 조성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차폐수목을 통해서 낮아질 수 있는 개방감은 앞서 도출된 경관선호도에 대하여 기여도가 낮다고 파악되었으므로, 개방감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차폐수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1. 결과 요약 및 제언

앞서 도출된 경관형용사와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구성요소간의 회귀모형을 정리해보면 〈표 34〉와 같다. 이는 남태령에서 운전자와 비운전자가 가로경관에 대한 선호를 경관형용사와 선호성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남태령 가로경관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표 34〉 경관 형용사별 회귀분석 결과

경관 형용사	운전자/비운전자	회귀모형	R 제곱
자연성	운전자	$Y = 0.363x_1^* - 0.370x_2^{**} - 0.445x_3^{**}$	.700
	비운전자	$Y = 0.468x_1^{***} - 0.47x_2^{***}$	.447
개방감	운전자	$Y = -0.399x_3^{**} - 0.499x_4^*$	.275
	비운전자	$Y = -0.483x_3^* - 0.514x_4^*$	.331
안전성	운전자	$Y = 0.331x_1^* - 0.426x_2^{**} - 0.37x_3^{***}$	.632
	비운전자	$Y = 0.392x_1^* - 0.347x_2^{**} - 0.447x_3^{**} - 0.238x_5^{**}$	.619
심미성	운전자	$Y = 0.331x_1^* - 0.426x_2^{**} - 0.37x_3^{**}$	.632
	비운전자	$Y = 0.484x_1^* - 0.494x_2^*$	.486
복잡성	운전자	$Y = 0.254x_1^{***} - 0.649x_3^*$	.580
	비운전자	$Y = -0.662x_3^*$	.439
선호성	운전자	$Y = 0.301x_1^{**} - 0.339x_2^{**} - 0.472x_3^*$	.645
	비운전자	$Y = 0.372x_1^* - 0.395x_2^{**} - 0.42x_3^{**} - 0.237x_5^{***}$	.618
※변수 참조 x_1 = 수목 x_2 = 철관옹벽 x_3 = 차량 x_4 = 관목 x_5 = 콘크리트옹벽		※유의성 참조 $*$: $p < 0.01$ $**$: $0.01 < p < 0.05$ $***$: $0.05 < p < 0.1$	

운전자와 비운전자 간의 대응표본검정을 통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형용사를 파악하였다(표 34). 검정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난 안전성과 복잡성을 고려하기 위해 안전성, 복잡성을 포함하는 선형 회귀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선형 회귀분석 결과, 운전자가 경관선호도를 인식함에 있어서 안전성과 복잡성의 기여도가 비운전자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전자의 시각에서 경관선호도가 높은 도로 중앙 조경 수목 및 가로경관의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성, 복잡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복잡성, 심미성에 영향을 주는 경관 구성 요소인 수목, 철판 옹벽, 차량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남태령의 가로에는 공사를 목적으로 하거나, 채석과 같은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철판으로 높은 옹벽을 세운 경우가 많다. 연구결과, 철판 옹벽은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시각 모두에서 안전성과 심미성을 해치는 경관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따라서 철판 옹벽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경관 구성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로경관을 구성하는 수목의 확대 조성일 것이다. 또한 차량의 경우에는 안전성과 심미성을 저해하고, 복잡성을 높이는 요소로서 적절한 차폐수목을 통해 차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차폐수목으로서 활용되는 관목이 개방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났기 때문에 관목을 조성함에 있어서 개방감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할 것이다.

자연성, 개방감, 안전성, 심미성, 복잡성, 선호성 7가지 경관형용사 모두에서 운전자와 긍정적, 부정적 응답을 이끌어낸 요소가 비운전자에게 부정적 응답을 이끌어낸 요소인 경우는 없었으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즉, 운전자와 비운전자에 관계없이 동일한 경관 요소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로경관 조성 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목은 모든 경관 형용사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판옹벽, 차량, 관목, 콘크리트 옹벽 등은 모든 경관형용사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운전자와 비운전자를 모두 고려한 가로경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한계 및 의의

연구의 피설문대상자 선정에 있어 실제 남태령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나, 실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받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운전자와 비운전자는 아니지만 남태령과 사당 일대의 가로 경관을 경험해본 사람으로 피설문자를 구성하였으나, 이는 실제 남태령에서 운전자와 비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연구결과, 도로 중앙의 조경 수목은 대부분의 경관형용사나 경관선호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진 촬영 시 조경 수목이 근거리에 있어서 사진의 초점이 맞지 않아 사진에서 주목이 되는 요소가 아니었고, 배경으로 촬영된 경관 구성요소들이 설문자들에게 훨씬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진 촬영 시에 운전자의 시각을 고려하고자 차량의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한 채 좌측의 경관을 촬영하였으나, 실제 운전자가 도로 중앙 조경 수목 및 가로경관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면에서 약간 벗어난 좌측의 경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운전자의 시각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도로 중앙 조경 수목이 경관형용사와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같은 관점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촬영방법을 통해 설문에 적합한 사진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운전자에 의한 가로경관 평가는 사진보다 동영상 제시에 의한 평가 방법이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진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고, 향후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경관 선호도 연구는 더 유의미한 운전자 관점에서의 경관 선호도 평가를 위해 동영상을 이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통해 운전자와 비운전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안전성과 복잡성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운전자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도로 중앙 조정 수목 조성 및 가로경관 조성 시 운전자의 시각을 고려한 경관 조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Song Meijie(2011), 「중국 강남 전통 수향 하천경관의 시각적 특성 및 선호요인 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구(2001), 「가로경관의 선호도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36권 제6호.
- 박상희(2007), 「도심내 문화공간의 경관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재상 외(1999), 「도시가로경관요소가 시각적 선호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27권 제2호.
- 송병화 외(2006), 「도시경관보전을 위한 예비조망점의 시각구조 및 경관선호도 분석」, 한국조경학회 춘계학술논문 발표회 논문집 제25권 제29호.
- 신재윤 외(2011), 「계절별 가로 경관이미지 및 선호도 평가 -벚나무류 가로를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제39권 제3호.
- 양경숙 (2004), 「SPSS 최적범주형 자료분석」, SPSS 아카데미.
- 우상기 (2009), 「보행자 중심의 도시가로경관 평가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10권 제2호.
- 이송희 외(2012), 「고속도로 터널 경관요소에 대한 경관 선호도 분석 -원통절개형 터널 입구 경관을 중심으로 -」, 한국경관학회지 제4권 제2호.
- 이영경 외(2010), 「태양열시설이 전통사찰의 경관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8권 제3호.
- 이혜령 외(2012), 「컨조인트 분석에 의한 터널 내 조명시설 설치조합별 경관 선호도 분석」, 한국도로학회 논문집 제14권 제6호.
- 정연구 외(2008), 「도심 내 가로경관 유형별 시각적 속성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강릉시 중앙로를 대상으로-」, 한국환경과학회지 제17권 제3호.
- 주신하 외(2003), 「도시경관분석을 위한 경관형용사 목록 작성」, 한국조경학회지 제31권 제1호.
- 주신하 (2008), 「현대 대표 도시공원에 대한 평가 -만족도 및 경관이미지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조경학회지 제 36권 4호.
- 허준 외(2007), 「산지훼손 유형에 따른 경관 선호의 변화」, 한국조경학회지 제35권 제4호.

국 문 초 록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가로경관 선호도 분석

- 남태령 가로경관을 사례로 -

허한결(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김호결(인천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길승호(강원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조교수)

가로경관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가로경관 선호도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로 중앙의 조경 수목과 도로 가장자리의 가로경관에 대한 선호도를 운전자와 비운전자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운전자와 비운전자의 경관 선호도에 대한 차이를 파악하고, 운전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가로경관 조성 및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진은 운전자의 시각을 고려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운행하면서 촬영하였으며, 설문은 운전자 31명, 비운전자 34명을 대상으로 촬영한 사진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시 사용된 사진은 다양한 경관구성요소를 포함하도록 선정하였으며, 각 사진별로 자연성, 개방감, 안전성, 심미성, 복잡성, 선호성을 조사하였다. 설문결과에 대하여 범주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구성요소를 도출하였고, 경관형용사와 선호도 간의 관계를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운전자와 비운전자 간의 선호도에 있어서의 차이를 대응표본검정을 통해 파악한 결과, 안전성과 복잡성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경관형용사와 경관선호도에 대한 선형 회귀분석을 재실시한 결과,

운전자가 비운전자에 비하여 안전성이 높고 복잡성이 낮은 경관에 대하여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추후 가로경관 조성에 있어서 운전자의 시각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복잡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경관선호도, 경관형용사, 가로수, 가로경관

Abstract

Preference Analysis for Driver and Non-driver

- A Case study on Namtaeryeong -

Heo, Han Kyul(Doctoral Post-Graduate Student,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Ho Gul(Researcher,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Kil, Sung-Ho(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logical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spite the fact that many studies on the street landscape have been made, there was insufficient researches on the preference of street landscape viewed from the driver's point of view. We analyzed the preference of driver and non-driver for street landscape of road edge and the trees in the center of the road.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ed the method of a basic measure for constructing and improving street landscape considering different preference between driver and non-driver. The photographs were taken while driving the vehicle in order to take the driver's viewpoint.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31 drivers and 34 non-drivers. The photos used in the questionnaire were selected to include various landscape. For each photograph components, the naturalness, openness, safety, aesthetics, complexity, and preference were asked from respondents whether to be good or not for each landscape adjective. The categorical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find landscape factors that affect street landscape prefere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andscape adjectives was derived by linear regression analysis. Also, the differences in the preference between driver and non-driver were found through the paired t-test, a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safety and complexity. Furthermore, as

a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driver prefer safe and low-complexity scenes. Therefore, in the later landscape composition, it is considered that safety and complexity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reflect driver's viewpoint.

Key words: Landscape Preference, Landscape Adjectives, Street Tree, Street Landscape

부록 설문지

설문지

본 설문은 설문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주의사항

1. 본 설문은 운전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경관에 대한 설문이므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지금부터 보시게 되는 사진자료들은 운전 중에 촬영한 것이며, 실제 운전 중에 보게 되는 경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설문에 임해주시면 더 좋은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3. 본 설문에서 사용되는 7점 척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갖습니다.

의미	매우 그렇다			보통			매우 그렇다
점수	1	2	3	4	5	6	7

※ 예시

	7점 척도							
	1	2	3	4	5	6	7	
불쾌한	✓							상쾌한
막혀있는			✓					트여있는
불안정한				✓				안정적인
추한				✓				아름다운
경관이 복잡한					✓			경관이 단순한
경관이 싫은							✓	경관이 좋은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인천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

신상준**

신
상
준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삶의 질 측정에 대한 논의
2. 개인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3. 사회자본과 삶의 질

III. 연구설계

1. 연구 모형
2. 조사 설계

IV. 분석결과

1.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2. 각 변수별 평균 및 상관관계
3.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V. 결론 및 시사점

* 이 논문은 신상준의 석사학위논문(2012)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832).

** 성균관대학교 공존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교신저자(E-mail: sangjoon415@gmail.com, Tel: 02-740-1835)

I. 서론

국내외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질적 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각종 사회문제가 출현함으로써 삶의 질은 오히려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 삶의 질을 설명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들은 삶의 질을 객관적 혹은 주관적 지표로 설명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객관적 지표는 비교연구에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특정 상황에 대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한다(김재홍 외 1998). 반면, 주관적 지표는 해당 시민들의 상황에 따른 특수한 맥락을 알 수 있는 장점을 가지지만, 비교 연구를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통합적 접근방식은 두 가지 접근법의 장점을 취하여 삶의 질을 연구하려는 하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김진욱 2000).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군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을 설명한다고 주장하거나(Easterlin 1974), 심리학자들은 신체의 건강 요인을 중요하게 참고하기도 하고(Diener & Diener 1995), 일각에서는 가족 만족도 역시 삶의 질을 설명하는 변수로 제시하곤 한다(Sirgy et al. 2000). 한편,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사회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지역현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Myers 1987).

최근에는 사회적 관계를 알아보는 사회자본 변수가 삶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사회과학에서의 사회자본 연구들은 시민 개인들의 삶에 있어서 사회자본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사회자본은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집합적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한다(Evans 1996, Ostrom and Ahn 2003; Kay 2006). 삶의 질과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흐름에서는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있다(Requena 2002; Helliwell and Putnam 2004; 한세희 외 2010). 특히 경제적인 만족감보다는 사회자본이 더 크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거나(Bjørnskov 2003),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의 요인이 결합할 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증명한 연구들이 있다(박희봉·이희창 2005).

다만,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 요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 두 요인을 삶의 질을 설명하는 변수로 상정하여 연구하는 흐름은 많지 않은데, 이는 사회자본이 단순히 집단행동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간주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컸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은 한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어떠한 관계를 주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측정을 위해서 사회자본과 개인의 생활환경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개인의 생활환경은 개인이 인식하는 특정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고, 사회자본은 ‘개인을 통해 매개된 사회’인 신뢰와 네트워킹으로 인식한다. 주지하듯 주관적인 삶의 질 측정은 지역별 비교연구가 아닌,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연구할 때에 장점을 보이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함에 있어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사회자본 요인 역시 삶의 질을 설명하는 변수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전제는 개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8년 6월 건강 자료(Health Data)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국이며, 전체 사망자 중 51.4%가 자살로 죽은, 10년째 자살률 1위 국가다.

인이 인식하는 생활환경과 사회자본 변수가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가진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는 2011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인구가 약 280만 명이며, 외국인은 약 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²⁾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변수별 영향관계를 규명한다. 한편, 인천광역시의 시민들을 상대로 삶의 질 측정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 이 연구가 도시연구 차원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삶의 질 측정에 대한 논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배경에는 대공황 이후 경제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빈곤문제가 여전히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사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일부 서구국가에서는 경제적 성장에 대한 회의가 나타났고, GDP 중심의 경제 성장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삼는 삶의 질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이희길·심수진 2010).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보편적으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의 삶은 복잡한 구성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삶의 질을 정책적 측면에 적용하여 실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이 도래하고 있어서,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조경호·김미숙

2000). 삶의 질에 대한 연구경향은 대체로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 번째로 객관적 생활조건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인데, 이러한 방식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으로 삶의 질은 개인을 둘러싸는 환경적인 자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Veenhoven 2002). 두 번째로 주관적인 지표로 측정해야 한다는 접근법은 객관적 지표가 시민의 진정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부적합하며, 개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은 객관적 지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여 등장한 방법이다(이영균·김동규 2007).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경향이다. 이 접근법은 객관적 삶의 지표는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주관적 삶의 질은 국가 혹은 지역간 비교를 진행할 경우에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방식이다(김진욱 2000).

첫 번째로 객관적 삶의 질로 접근하는 연구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삶의 환경이 인간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 의해 출발한다(하혜수 1996). 객관적인 삶의 질을 옹호하는 접근법은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한다. 또한 주관적 지표의 사용은 특정 지역의 삶의 질 분석에는 유용하지만, 지역간 혹은 국가간의 삶의 질을 비교분석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를 요청한다(김재홍 외 1998). 이러한 접근법을 따르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체로 국가간 혹은 지역간에 비교연구를 진행한 경향이 강하다(Liu 1974; Slottje 1991; 김재홍 외 1998; 김진욱 2000; 서승환 2005).

주관적인 삶의 질로 접근하는 연구들은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지표로 삶의 질을 측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객관적 삶의 질이 개인의 성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은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지표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임희섭

2)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1년 하반기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인구를 2011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1996).³⁾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경제수준의 타 국가에 비해 삶의 질이 낮다는 점도 주관적 지표로 삶의 질을 측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이희길·심수진 2010). 아울러 Veenhoven(2002)은 정책결정자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관적 지표로 삶의 질을 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입각한 연구들은 개인이 인식하는 환경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조경호·김미숙 2000; 박종민·김서용 2001; 박길성 2002; Helliwell & Putnam 2004; 오영석·이곤수 2006; 이영규·김동규 2007; Yip et al. 2007; 송건섭·권용현 2008; 한세희 외 2010).

마지막으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 방법이다. 통합적 접근법이 등장한 이유는 객관적 삶의 지표와 주관적 삶의 질 측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즉, 객관적 삶의 질 지표는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주관적 삶의 질 측정은 국가 간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다(김진욱 2000). 통합적인 접근법은 개인의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및 불만의 정도로 삶의 질을 정의하여 연구하며(한석태 2008),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임희섭 1996; 김미숙·조경호 2000; Requena 2002; Drukker et al. 2003; 한석태 2008).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한정되어 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연구하기 위해 주관적 지표를 활용하고자 한다. 삶의 질은 객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삶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인지한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삶의 질을 연구

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삶의 지표로 측정하는 방법이 타당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주관적인 지표로 측정한다.

2. 개인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삶의 질은 행복과 주관적·심리적 안녕, 웰빙 등 여러 가지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된다. 다만 이러한 개념들의 차이점과 유사점, 이들 간의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으나, 이 개념들의 혼용범위가 넓어 이들의 관계를 모두 규명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삶의 질과 행복의 개념에 한정하여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김병섭 외 2015). 여러 논자들은 주관적인 삶의 질과 행복을 동일하게 규정한다(Blanchflower & Oswald, 2004; Easterlin 2005). 앞선 논의에서 확인하였듯이, 삶의 질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한정시킨다면, 이는 분명히 행복과 구별되는 개념이다(Erikson 1993). 다만 객관적인 삶의 질을 주관적인 부분과 구별된다면, 주관적인 삶의 질은 행복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선행연구의 특징이다(구교준 외 2014). 이 연구는 삶의 질을 주관적인 지표로 측정하기 때문에 행복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자하고, 이후 선행연구의 검토 과정에서도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지표는 행복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개인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설명변수 중에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소득과 주관적인 삶의 질의 관계는 Easterlin(1974)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소득과 주관적인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소득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진 소득의 상대적인 위치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구교준 외 2014, 324). 즉, 개인의 소득은 절

3) 임희섭(1996)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기대수준(internal referent)과 외재적인 준거(external referent)는 다르다고 언급한다.

대소득의 기준이 아닌,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상대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국내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소득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있다(오영석·이곤수 2006; 송건섭·권용현 2008).

소득과 더불어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신체적인 건강 요인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고려된다. 신체의 건강과 주관적인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제법 확인이 이루어졌다(Diener & Diener 1995; Hellwell & Putnam 2004; Subramanian et al. 2005). 국외 연구와 마찬가지로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건강에 대한 만족감이 전반적인 삶의 질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영규·김동규 2007; 한세희 외 2010). 이들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존감이나 성격,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에 대한 만족감 등이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실증적으로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역시 주관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된다.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Sirgy et al. 2000), Donovan & Halpern(2003)은 영국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자가 독신자에 비해 더 긍정적인 삶의 질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한준 2015, 74에서 재인용).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중·고령자와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은 가족관계가 중요한 영향변수임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실증분석으로 확인되었다(조경호·김미숙 2000; 강소량·문상호 2012; 한준 2015).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도시연구 측면에서도 확장되어 진행되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도시계획(urban planning)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보인다. 가령, 지역사회의 질(community quality of life)을 측정하기 위해 경제적 요인에 집중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현안이 무엇인지 분석한다(Myers 1987). 그리고 Sirgy et al.(2000; 2008)은 삶의 질 연구를 통해 한 지역 내에 공공서비스의 도출과 서비스 개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공환경에 초점을 둔 삶의 질 연구들은 정부의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거나, 한 지역의 개선이나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명철·최상옥 2012).

국내에서도 공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삶의 질 연구가 실증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변수로는 ‘안전·보건·복지’와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행정과 참여)’(김태룡 외 2000), 그리고 지역사회의 만족도(조경호·김미숙 2000)와 공공서비스 수준(이영규·김동규 2007) 등이 연구되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서비스나 생활편의시설 등이 높을수록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송건섭·권용현 2008; 이태종 외 2005; 송건섭 2008; 고명철 2013).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개인의 환경적인 만족도와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 가설1: 소득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건강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가족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사회자본과 삶의 질

사회자본은 개인들 간의 집단적 행동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한다(Evans 1996; Requena 2002; Ostrom and Ahn 2003; Kay 2006). 사회자본은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개인들 간의 협동이 어떠한 동기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였다(유석춘·장미혜 2002). Coleman(1988)은 사회자본이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 배태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른 자본과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이후 Putnam(1993)이 사회자본을 공적·정치적 영역으로 확장시켰는데, 그는 사회자본을 집단행동을 촉진시키는 신뢰와 규범, 네트워크로 정의하였다.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집단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자본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사회자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첫 번째로 개인의 연결망에 배태되어 있는 자본으로 보는 입장이다(Burt 1997; Granovetter 1973; Lin 1999; 2001). 이러한 입장은 사회자본을 개인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사회관계에 개인이 어떻게 투자하고, 관계망에 배태된 자원을 어떻게 차지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Lin 1999; 2001).⁵⁾ 그리고 Granovetter(1973)는 약한 연대

(weak tie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강점을 제시하였고, Burt(1997)는 구조혈(structure hole)에 위치한 사람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연결망에 배태된 자본을 연구하였다. 즉, 이들은 사회자본을 개인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았으며, 개인은 사회자본으로 어떠한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Glaeser et al. 2002).

두 번째로 사회자본을 집단행동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이나 경제·사회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혹은 문화 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North 1990; Grootaert and Bastelater 2002; Ostrom and Ahn 2003; 김태룡 2006). 이러한 입장은 집단적 차원에서 멤버들의 삶을 어떻게 강화시키는지에 초점을 둔다. North(1990)는 공식적인 제도능력에 따라 집단적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집단의 능력은 공식적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사회자본의 개념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기 때문에 단적으로 개념화하기에는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Portes 2000; Ostrom and Ahn 2003; 소진광 2004).

사회자본을 다양하게 정의하는 만큼, 이를 측정하기 위한 구성요소 역시 연구마다 상이하다. 사회자본을 사회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관계와 연결망, 결사체의 참여 요인으로 바라보거나, 타인을 신뢰하는 수준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전자의 입장은 사회자본을 네트워크로 인지하는 관점으로 Granovetter(1973)⁶⁾의 연구에서 출발할 수 있다(Woolcock and Narayan 2000). 그는 약한(weak) 연결망과 강한(strong) 연결망의 차이는 약한 연결망이 비용 측면에서 저렴하고 넓은 유대관계를 지닌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Woolcock and Narayan(2000)은 사회자본에서의 네

4) Putnam(1993)은 이탈리아의 북부와 남부지방을 연구하면서 북부는 시민참여 네트워크가 활발하고, 호혜성의 규범이 확정되어 있어 수평적 연대가 가능하고 이러한 연대를 통해 경제발전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사회정치적 관계가 수직적 형태를 이루고 있어 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5) Lin(2001)은 개인의 지위(position), 연대(tie), 위치(location) 등의 특징으로 사회자본에 접근하는 수준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이 더 나은 사회자본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연대가 강할수록 자원의 공유와 교환이 많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6) Granovetter(1973)의 약한 유대의 강함(The Strength of Weak Ties)에서 강한 유대관계(strong ties)는 약한 유대보다 상대적으로 집단행동을 형성하지 못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사례분석으로 약한 유대관계를 지닌 도시가 상대적으로 원활한 집단행동을 실시하여 해당 지역의 도시재개발에 성공적으로 저항하였음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트위크 관점은 수직적·수평적 연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그들에 의하면 공동체와 집단 내의 결속을 이어주는 수직적 연대 없이는 행복을 증진시킬 수 없으며, 아울러 수평적 관계가 없다면 중요한 정보와 집단행동 실시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사라진다고 언급한다. 이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네트워크는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Harpham et al 2002).

다음으로 사회자본을 타인의 신뢰 수준으로 인식하는 접근이다. 신뢰는 한 행위자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할 것으로 평가하는 주관적 확률의 수준으로 정의한다(Ostrom and Ahn 2003). Kay(2006)는 집단행동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였고, 나아가 시민 협력 거버넌스의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숙종 외, 2008).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하며,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로는 개인이 인식하는 네트워크와 신뢰로 규정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박길성 2002; Requena 2002; Bjørnskov 2003; Helliwell and Putnam 2004; Gundelach and Kreiner 2004; 박희봉·이희창 2005; Mulder et al 2005; Yip et al 2007; 한세희 외 2010).⁷⁾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논의에 따라,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신뢰와 네트워크로 선정한다. 신뢰는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으로 보고, 네트워크는 단체참여와 지인으로 분류하였다. 국내외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타인을 신뢰할수록 삶

의 질을 높인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박길성, 2002; Yip et al 2007). 그리고 단체참여가 많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졌으며(Bjørnskov 2003; Helliwell and Putnam 2004), 국내 연구에서는 단체참여와 지인의 네트워크가 주관적 안녕감(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한세희 외 2010).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관계 변수인 사회자본을 삶의 질을 설명하는 변수로 선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⁸⁾

가설6: 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지인 네트워크가 많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단체참여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생활환경 만족도와 관계변수인 사회자본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경제적’ 측면과 ‘지역사회·행정’ 측면으로 나누어 개인의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을 측정하였고, 사회자본은 ‘신뢰’와 ‘네트워크’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

7) 각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삶의 질로 측정하였으나, 몇몇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행복으로 선정하거나(Gundelach and Kreiner 2004), 주관적 안녕감(well-being)으로 측정하기도 하였다(한세희 외 2010). 엄연하게는 이들 모두 상이한 개념이지만,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로 인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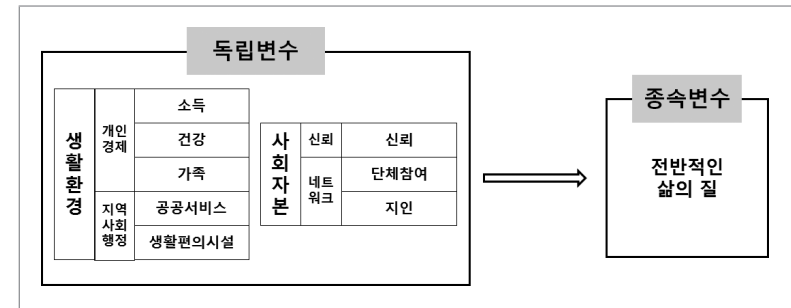
8)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사회자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Gundelach and Kreiner 2004; Mulder et al 2005; 박희봉·이희창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인천광역시 시민들 역시 동일한 연구결과가 나오는지 분석함으로써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수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독립변수인 생활환경에 대한 하위변수로 선정한 개인·경제적 측면은 소득·건강·가족으로 분류하였고, 지역사회·행정 변수는 공공서비스·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하였다.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소득·소득의 적정수준·자립도·소비수준·수입원·미래준비·저축 수준 등으로, 건강 만족도는 영양상태·건강에 대한 자신감·건강관리·보험·의료 서비스·체중관리·정신건강 등으로, 가족 만족도는 의사소통·친척관계·가정생활·가족간 공유시간·가정 분위기·가족간 도움·결혼 생활 등으로 측정하였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행정 차원의 만족도는 공공서비스와 생활편의시설로 구분하였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교통·치안·쓰레기·상하수도·공무원친절·경찰·도로망 등으로, 생활편의시설 만족도는 음식점·주거 공간·공원·시설 안전·도서관·문화시설·운동시설 등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자본의 하위변수로는 신뢰와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신뢰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사회공동체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로 측정하였다. 네트워크는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와 단체참여의 수를 구분하였다. 지인에 대한 네트워크는 주위에 도움을 줄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알고 지내는 이웃이 많은지, 돈을 빌려 줄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단체참여의 수는 각 단체의 가입여부를 묻고, 가입한 단체의 수를 알아보았다.⁹⁾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은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삶의 질로 측정하였다(Diener 2009). 이 변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까이

9) 단체의 종류는 10가지를 질문하였다. ①총친회, ②동창회·향우회, ③지역활동(반상회·부녀회 및 분리수거 등), ④직장 내 친목단체, ⑤종교단체, ⑥문화·취미동호회(인터넷 동호회 포함), ⑦교육·교사·학부모 단체, ⑧시민단체, ⑨정부관련 활동(공청회·자치위원회 등), ⑩정치단체(정당 등)이다.

살고 있는지, 좋은 조건에서 사는지, 인생에 만족하는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소유해왔는지, 지금 현재의 삶을 바꾸지 않을 것인지를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림 1> 분석모형

이러한 측정변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사용하여 각 요인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각 변수간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독립변수인 생활환경 지표 5개와 사회자본 3개의 요인 등을 구분하여 삶의 질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조사 설계

본 연구는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인천광역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¹⁰⁾ 인천광역시의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각 구별 인구비율에 따른 표본추출 방법인 비례층화표본추출(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의 <표 1>에서 2011년 6월 기준으로 각 지역구별 인구와 비율, 그리고 본 연구의 표본과 비율을 명시하였다.

10) 인천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인천에 위치한 지하철역, 커피숍 등 여러 인원이 밀집해 있는 장소와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표 1〉 지역 인구와 표본 비율

	부평구	남동구	남구	서구	계양구
인 구 (명)	570,817	501,696	426,943	430,368	349,141
비 율 (%)	20.2	17.7	15.1	15.2	12.3
표 본 (명)	65	49	37	52	39
표본비율(%)	21.7	16.3	12.3	17.3	13
	연수구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인 구 (명)	286,882	97,528	80,856	67,458	19,163
비 율 (%)	10.1	3.5	2.9	0	0
표 본 (명)	30	19	9	0	0
표본비율(%)	10	6.3	3	0	0

이 논문에서의 전체 표본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300명의 시민으로 다음의 〈표 2〉과 같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그 특성을 제시하였다. 남성이 129명(43%)이고, 여성이 171명(57%)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

〈표 2〉 인구통계학 분석

변수	구 분	빈도 (명)	비율 (%)	변수	구 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129	43	직업	대학(원)생	48	16
	여성	171	57		전문직	28	9.3
연령	20대	92	30.7		행정, 사무직	64	21.3
	30대	51	17		사업, 자영업	31	10.3
	40대	68	22.7		생산, 기술직	49	16.3
	50대	73	24.3		가정주부	47	15.7
	60대 이상	16	5.3		무직	10	3.3
소득	200만원미만	75	25	주거	기타	23	7.7
	200-400만원	108	36		단독주택	54	18
	400-600만원	75	25		아파트	171	57
	600만원 이상	22	7.3		연립주택	57	19
	잘 모르겠다.	20	6.7		상가주택	11	3.7
종교	기독교	104	34.7	학력	기타	7	2.3
	불교	40	13.3		고졸 이하	136	45.3
	천주교	41	13.7		대졸	152	50.7
	무교	109	36.3			12	4
		6	2			300	100

령대로는 20대가 92명(3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0대가 73명(24.3%), 40대가 68명(22.7%) 순이었다. 소득은 월 200만원에서 400만원에 포함되는 인원이 108명(36%), 종교는 기독교가 104명(34.7%)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가장 많은 직업군이 행정·사무직으로 64명(21.3%)이었다. 거주하는 곳은 아파트가 171명(57%)으로 절반이 넘었고, 학력은 대졸이상이 152명(50.7%), 고졸이 136명(45.3%)으로 조사되었다.

IV. 분석결과

1.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각 변수들을 구성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에 대하여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다음의 〈표 3〉에 제시하였다. 설문문항에서 독립변수는 소득, 건강, 가족, 공공서비스, 생활편의시설로써 각 변수를 7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런데 이 중에서 건강 문항은 3개, 생활편의시설 문항의 2개가 요인 적재량의 기준치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였다.¹¹⁾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각 문항이 변수들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이후 내적 일관성(신뢰도)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두 0.6 이상으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각 변수들의 측정문

11) 요인적재량이 0.4 미만이면 공통성이 낮기 때문에 요인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송지준, 2015: 82). 이 과정에서 문항이 제거되면 해당 변수를 측정하는 정밀도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건강과 생활편의시설 만족도의 문항들에 대한 내적 일관성이 모두 적합하게 도출되었기 때문에 제외하지 않았다.

항들의 평균점수를 요인 값으로 사용하여 변수간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표 3〉 측정변수의 요인 적재량 및 신뢰도 계수

구분	측정변수	최종 문항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소득	현재의 수입원에 만족	0.807	0.916
	일한만큼 보상을 받음	0.763	
	가족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음	0.769	
	소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	0.798	
	안정된 수입원을 갖고 있음	0.806	
	교육과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함	0.796	
	저축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	0.762	
건강	건강하다고 생각	0.859	0.818
	건강에 대해 자신 있음	0.879	
	건강관리 방법을 알고 규칙적으로 운동 함	0.683	
	적절한 체중을 유지 중	0.598	
가족	가족 간 의사소통이 순조로움	0.814	0.929
	친척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	0.714	
	가족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	0.854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 적당함	0.769	
	가정에 들어가면 편안함과 행복을 느낌	0.842	
	가족 간에 서로 적절히 도와주고 있음	0.852	
	가족을 위한 희생은 즐거움	0.779	
공공서비스	거리 교통안전 대책에 만족	0.59	0.894
	거리범죄가 없어 안심하고 생활함	0.813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만족함	0.788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음	0.774	
	행정 공무원의 친절에 만족	0.818	
	경찰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음	0.751	
	주변 도로의 연결망이 잘 되어 있음	0.654	
생활편의시설	적절한 공원 시설이 있어 만족	0.78	0.885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잘 되어 있음	0.639	
	주변에 도서관이 있어 만족	0.765	
	공연장이나 극장을 이용하기에 편리함	0.753	
	주변에 운동시설이 있어 만족	0.864	

삶의 질	대체로 나는 내가 꿈꾸던 삶에 가깝게 살고 있음	0.69	0.905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음	0.695	
	내 인생에 만족함	0.707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을 얻어 왔음	0.658	
	현재와 같은 삶을 다시 살고 싶음	0.741	
신뢰	가족을 신뢰	0.615	0.829
	친구를 신뢰	0.792	
	주위사람들을 신뢰	0.836	
	일반사람들을 신뢰	0.587	
네트워크	주위에 도움을 줄 사람들을 알고 있는 편	0.565	0.679
	알고 지내는 이웃이 많은 편	0.722	
	주위에서 돈을 빌려 줄 사람들을 알고 있는 편	0.779	

2. 각 변수별 평균 및 상관관계

다음의 〈표 4〉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추출한 8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각 변수

〈표 4〉 각 변수별 상관관계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상관관계								
			소득	건강	가족	공공	생활 편의	신뢰	지인	단체 참여	삶의 질
소득	4.83	1.88	1								
건강	5.81	1.77	.367**	1							
가족	6.68	1.74	.216**	.316**	1						
공공 서비스	5.25	1.64	.259**	.269**	.229**	1					
편의 시설	6.21	1.93	.239**	.243**	.186**	.477**	1				
신뢰	7.02	1.6	.254**	.257**	.571**	.231**	.164**	1			
지인	5.77	1.93	.130*	.201**	.331**	.263**	.196**	.389**	1		
단체 참여	3.5	2.9	−0.025	−0.054	0.02	0.099	0.016	0.012	.138*	1	
삶의질	5.37	1.82	.556**	.444**	.418**	.386**	.481**	.383**	.278**	0.04	1

*p < 0.05, **p < 0.01에서유의함

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10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단체참여는 단체참여의 수를 물었다. 10점 척도로 측정한 독립변수 중에서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게 나타났으며(4.83), 신뢰가 7.02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가족 만족도(6.68), 생활편의시설(6.21), 건강(5.81), 네트워크(5.77), 공공서비스(5.25) 순으로 평균이 도출되었다. 종속변수인 삶의 질은 5.37로 중간점수를 상회하였다.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은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변수가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네트워크 수와 단체참여에서는 다수의 관계가 유의미한 관계가 아니었다.¹²⁾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r=0.8$ 이상이면 다중공선성 문제에 직면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변수들간 상관관계가 모두 $r=0.6$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에서는 자유로웠다.

3.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표 5>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민의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고, 삶의 질과 사회자본을 각각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별과 학력, 직업, 연령 등의 변수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회귀모형은 F값이 $p=.000$ 에서 28,642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모형은 54.7%($R^2=.547$)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¹³⁾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통제변수에서는 성별과 학력 등이 유의미하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성별이 남성일수록 삶의 질이 낮아졌으며($\beta = -.329$), 학력은 대학교를 졸업할수록 그 이외의 학력을 지닌 자들보다 삶의 질이 높아졌다($\beta = .288$).¹⁴⁾

<표 5> 인천광역시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분석

		삶의 질				
		표준오차	β	t값	유의확률	
통제변수		성별	.165	-.329*	-1.993	.023
		학력	.169	.288*	1.700	.045
		직업	.181	-.032	-.176	.430
		연령	.071	-.103	-1.459	.073
독립 변수	생활 여건	소득	.044	.326***	7.448	.000
		건강	.048	.147**	3.074	.001
		가족	.053	.197***	3.707	.000
		공공서비스	.054	.070	1.288	.099
		생활편의시설	.045	.227***	4.998	.000
	사회 자본	신뢰	.058	.100*	1.711	.044
		지인	.043	.029	.671	.251
		단체참여	.029	.065*	2.229	.013
		모형적합성		• R=.627, • R2=.547, • Adj. R2=.528 • F=28.642, • Sig=.000***, • Durbin-Watson=2.218		

a) 계수는 비표준화

b) 성별: 0=여자, 1=남자

c) 학력: 0=대졸 이외, 1=대졸

d) 직업: 0=행정·사무직 이외, 1=행정·사무직

* $p < 0.05$, ** $p < 0.01$, *** $p < 0.001$ 에서 유의함¹⁵⁾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생활여건 중에서 공공서비스 만족도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12) 단체참여는 소득·건강·가족·공공서비스·생활편의시설·신뢰·삶의 질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13)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Durbin-Watson은 2.218로 2에 가까워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본 연구에서의 학력은 대졸이 152명으로 가장 많고, 직업은 행정·사무직이 64명으로 많아서 이를 기준지표로 선정하였다. 즉, 학력이 고졸이하 혹은 대학원 이상이면 '0'에 속한다. 직업 역시 행정·사무직 이외라면 '0'에 속한다.

15) 이 연구에서는 가설을 단측검정으로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들의 유의확률(p)을 2로 나눈 값으로 가설 채택 유무를 결정하였다. 통제변수의 유의확률 역시 편의상 2로 나누었다.

있었다. 우선 소득의 만족도($\beta=.326$)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시설 만족도($\beta=.227$)였고, 가족의 만족도($\beta=.197$), 건강만족도($\beta=.147$)의 순으로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자본 변수 중에서는 신뢰변수($\beta=.100$)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단체참여가 많을수록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065$).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가설 1,2,3,5,6,8 등을 채택하였고, 가설4와 7은 기각되었다. 다음의 <표 6>에서 가설의 검증 여부를 제시하였다.

<표 6> 가설설정

분류	가 설	결과
1	소득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	건강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	가족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4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5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6	신뢰가 높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7	지인 네트워크가 많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8	단체참여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구별로 비례를 할당하여 표본을 표집하는 비례층화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고, 설문지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설을 검증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과 건강·

가족·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생활환경의 만족수준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자본 변수에서는 타인을 신뢰할수록, 그리고 단체에 참여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 중에서 개인·경제적 측면을 측정한 3개의 변수들 중에서 소득과 건강, 가족 등이 모두 유의미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있었다. 한편 지역사회·행정 측면의 변수인 공공서비스와 생활편의시설 만족도 중에서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생활환경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국내 선행연구와의 결과와 유사하다(박종민·김서용 2001; 이영균·김동규 2007). 특히 본 연구에서 진행한 지역사회·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통해서 정부차원에서 주변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수치상으로는 긍정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인천지역사회의 편의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민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자치단체의 목적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도시가 소득이나 일자리 등의 경제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와 여가시설이 특화된 지역적 특징이 현대사회에서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이다(고명철·최상옥 2012, 110)

둘째, 인천광역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자본의 확충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단체참여의 수가 많을수록 삶의 질의 향상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이다.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개인의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Requena 2002; Bjørnskov 2003; Mulder et al. 2005; 박희봉·이희창 2005),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러한 결과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에 하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인데(Verba and Nie 1972), 다양한 사회계층이 여러 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하위계층부터 상위계층에 이르기까지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홍보를 실시함으로써(이승중·김혜정 2011),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에 사용된 표본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표본에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인천에 거주한 외국인들을 분석대상에서 누락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각 구별 표본비율이 일정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 변수는 서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즉, 개인의 생활환경이 사회자본에 영향을 주거나, 이 두 관계가 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을 참작하여 이루어진다면,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의의를 가진다. 더불어 본 연구가 인천광역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접수)일: 2017. 04. 24 심사(수정)일: 2017. 05. 11 게재확정일: 2017. 06. 14

참 고 문 헌

- 강소량·문상호(2012), 「가족관계 사회자본이 중·고령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6(3): 271-298.
- 고명철·최상옥(2012), 「삶의 질(QoL) 연구의 행정학적 함의와 제언」, 한국행정학보 46(4): 103-126.
- 고명철(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 영향관계 분석」, 한국행정학보 47(2): 1-30.
- 구교준·임재영·최슬기(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 317-339.
- 김미숙·조경호(2000), 「공무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20(2): 86-122.
- 김병섭·최성주·최은미(2015), 「국민행복,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관계 연구」, 한국행정학보 49(4): 97-122.
- 김재홍·이은우·이재기(1998), 「다년도·다차원 거리지표 모형을 이용한 한국 도시의 삶의 질 비교연구」, 지방연구 14(1): 21-45.
- 김진옥(2000), 「서울과 OECD 국가의 도시간 삶의 질 비교 분석」, 서울도시연구 1(1): 3-18.
- 김태룡·오승석·주기남·안희정(2000),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수준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2): 135-155.
- 김태룡(2006), 「시민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0(3): 27-51.
- 박길성(2002),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아세아연구 45(2): 109-139.
- 박종민·김서용(2001), 「한국인의 삶의 질: 전체, 개별영역 및 비교기준」,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43-458.
- 박희봉·이희창(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분석-경제·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3): 709-728.
- 서승환(2005),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환경의 질에 관한 비교분석」, 서울도시연구 6(2): 21-38.
- 소진광(2004),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1): 89-117.
- 송지준(2011), 『SPSS/AMOS 통계분석방법』, 서울: 21세기사.

- 송건섭·권용현(2008), 「광역도시권의 「삶의 질」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4): 87-107.
- 오영석·이근수(2006), 「삶의 질 관점에서 본 도농통합의 형평성 효과: 경주시 사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159-180.
- 유석춘·장미혜(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8: 87-125
- 이숙중·김희경·최준규(2008),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1): 149-170.
- 이승중·김혜정(2011), 『시민참여론』, 박영사.
- 이영규·김동규(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4): 223-250.
- 이태중·이근수·송건섭·이승철(2005), 「광역생활권내 자치단체간 「삶의 질」의 비교 평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2): 211-229.
- 이희길·심수진(2010), 「사회지표 개편 탐색」, 한국사회 11(1):47-77.
- 임희섭(1996), 「삶의 질의 개념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5(1): 5-18.
- 조경호·김미숙(2000), 「공무원과 민간기업종사자 간 삶의 질 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보 34(3): 27-45.
- 하혜수(1996), 「도시정부의 '삶의 질' 결정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0(2): 81-95.
- 한석태(2008), 「노인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42(3): 441-461.
- 한세희·김연희·이희선(2010), 「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44(3): 37-59
- 한준(2015), 「한국인 삶의 질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정관리연구 10(2): 67-94.
- Bjørnskov, C. 2003. The happy few: Cross-country evidence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56(1): 3-16.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7): 1359-1386.
- Burt, R. 1997.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2(2): 339-365.
- Coleman, J.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120.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53.
- Diener, E. (Ed.) 2009. *The science of well-being*. New York: Springer.
- Donovan, N. and D.S. Halpern, 2003. *Life Satisfaction: The State of Knowledge and Implications for Government*.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한준(2015)에서 재인용.
- Drukker, M., Kaplan, C., Feron, F., & Van Os, J. 2003. Children'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neighbourhood socio-economic deprivation and social capital. A contextual analysis. *Social science & medicine* 57(5): 825-841.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89: 89-125.
- _____. 2003. Explaining happines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0: 11176-11183.
- _____. 2005. Feeding the illusion of growth and happiness: A reply to Hagerty and Veenhoven. *Social indicators research* 74(3): 429-443.
- Evans, P. 1996. Government action, social capital and development: reviewing the evidence on synergy. *World development* 24(6): 1119-1132.
-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1360-1380
- Grootaert, B and Bastelater, T. V. 2002. *Understanding and Measuring Social Capital* World Bank
- Gundelach P and Kreiner S. 2004.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Cross-Cultural Research* 38(4): 359-386.
- Glaeser, E. L., Laibson, D., & Sacerdote, B. 2002. An economic approach to social capital. *The Economic Journal* 112(483): F437-F458.
- Harpham, T. et als. 2002. Measuring Social Capital within Health Surveys. *Health Policy and Planning* 17(1): 106-117.
- Helliwell, J. F., &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1435-1446.
- Kay, A. 2006. Social Capital, the Social economy and community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1(2): 160-173.
- Lin, N. 1999.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Connections* 22(1): 28-51.
- _____. 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P.
- Liu, BC. 1973. Quality of Life Indicators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 187-208.

- Myers, D. 1987. Community-Relevant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a Focus on Local Trends. *Urban Affairs Review* 23(1): 108-125.
- Mulder K and Costanza R and Erickson J. 2006. The contribution of built, human, social and natural capital to quality of life in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communities. *Ecological Economics* 59(1): 13-23
- North, D.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strom, E., & Ahn, T. K. 2003. *Foundations of social capital*. Edward Elgar Publishing.
- Portes. A. 2000. *The Two Meanings of Social Capital*. *Sociological Forum* 15(1): 1-12.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equena, F. 2002. Social Capital,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the Workpla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61(3): 331-360.
- Slottje. DJ. 1991.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Across Countr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3(4): 684-693.
- Sirgy, M. J., Rahtz, D. R., Cicic, M., & Underwood, R. 2000. A method for assessing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based services: a quality-of-life perspec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49(3): 279-316.
- Sirgy, M. J., Gao, T., & Young, R. F. 2008. How does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s influence quality of life(QOL) outcome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3(2): 81-105.
- Subramanian, S. V., Kim, D., & Kawachi, I. 2005. Covariation in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self rated health and happiness: a multivariate multilevel analysis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n the USA.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9(8): 664-669.
- Veenhoven. R. 2002. Why Social Policy Needs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Series* 11(1): 33-45
- Verba, S., & Nie, N. H.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Harper & Row.
- Woolcock, M & Narayan D. 2000. Social capital: implication for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policy.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5(2): 225-249.
- Yip, W., Subramanian, S. V., Mitchell, A. D., Lee, D. T., Wang, J., & Kawachi, I. 2007. Does social capital enhance health and well-being? Evidence from rural China. *Social science & medicine* 64(1): 35-49.

국 문 초 록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인천광역시 시민을 대상으로 -

신상준(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공존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자본이다. 개인의 생활환경은 소득, 건강, 가족, 공공서비스, 생활편의시설 등이고, 사회자본 변수는 신뢰, 단체참여, 지인 네트워크 등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표본은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구별 비례층화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취합하였다. 설문 취합 후,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의 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생활환경 변수 중에서는 소득의 만족도가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생활편의시설, 가족, 건강 등의 순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자본 변수는 신뢰변수가 가장 크게 삶의 질에 영향을 주었으며, 단체참여가 많을수록 삶의 질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분석결과를 근간으로 제시한 시사점은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점검과 확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사회자본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회계층이 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홍보활동의 필요성 등이다.

주제어 : 인천광역시, 삶의 질, 생활환경, 사회자본

Abstract

Factors Influencing Individual living environment and Social Capital on the Quality of Life

- Focusing on the citizens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

Shin, Sangjoon (Senior Researcher, The East Asia Collaboration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is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individual living environment and social capital on the quality of life for Incheon citizens. The factors that explain the citizens' quality of life are the personal living environment and social capital. Individual living environment factors consist of the satisfaction with income, health, family, public service, and living facilities. Social capital factors are composed of trust, group participation, and acquaintance network.

The survey data was collected by using 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 method for residents in Incheon.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with the SPSS 18.0 program.

As a result, the satisfaction of income had the greates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living environment variables, and the quality of life was affected by the satisfaction of living facilities, family, and health. The factors of trust among social capital variables had the greates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quality of life tended to increase as the group participation increased.

Based on the findings, I suggested that the social infra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by inspecting and securing the living facilities. Besides, government need to implement

the activities for public relations so that various social groups can join in some organizations to expand social capital.

Key words: Incheon Metropolitan City, the quality of life,
living environment, social capital

도시리포트

- | 통합창원시의 인구변화:
인구구조, 이주, 교통량을 중심으로 임동근
- | 지방도시 도야마 시의 도전:
공공교통 친화 도시 윤혜영



통합창원시의 인구변화: 인구구조, 이주, 교통량을 중심으로

임동근*

1. 통합창원시의 인구구성변화 (1998-2016)
2. 도시 통합에 따른 이주패턴 변화 (2005-2016)
3. 목적별 지역교통량의 변화 (2010-2015)

기존의 행정구역 개편은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도시(시)와 농촌(군)의 통합인 도농복합시 신설이었다. 반면, 통합창원시는 첫번째 도시간 통합의 성격을 띤다. 2008년부터 정부는 다시 대규모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시도하였고, 그 일환으로 2009년 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마산, 창원, 진해 3개시의 통합논의는 정부의 지원논의가 발원하던 2008년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있었지만¹⁾ 2010년 7월 특별법이 제정되고 통합창원시가 출범한다.²⁾

통합창원시는 정치학, 행정학에서 다뤄졌으며(이태근 2016; 유재원 2015; 양고운·박형준 2013; 김영철·이우배 2013), 토지이용 차원에서의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4-Zero' 지향 국토공간창조 사업단 BK교수

1) 통합과정에서의 갈등과 관련해서 김영철·이우배(2013), 이태근(2016)을 참조하라.

2)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52호, 제정 2010.3.12., 시행 2010.7.1.

변화 및 주택가격변화를 통합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가 있다(정경숙 2017; 정삼석·정상철 2014). 반면 인구학적 변화와 통근·통학 등 교통량의 변화는 통합에 따른 생활권 변화 및 도시구조의 변화를 보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아직 이를 다룬 논문은 없었다. 이런 문제인식에 따라 본 논문은 연령별 인구구성과 이주 특성과 목적별 교통량의 변화를 통해 통합창원시(마산, 창원, 진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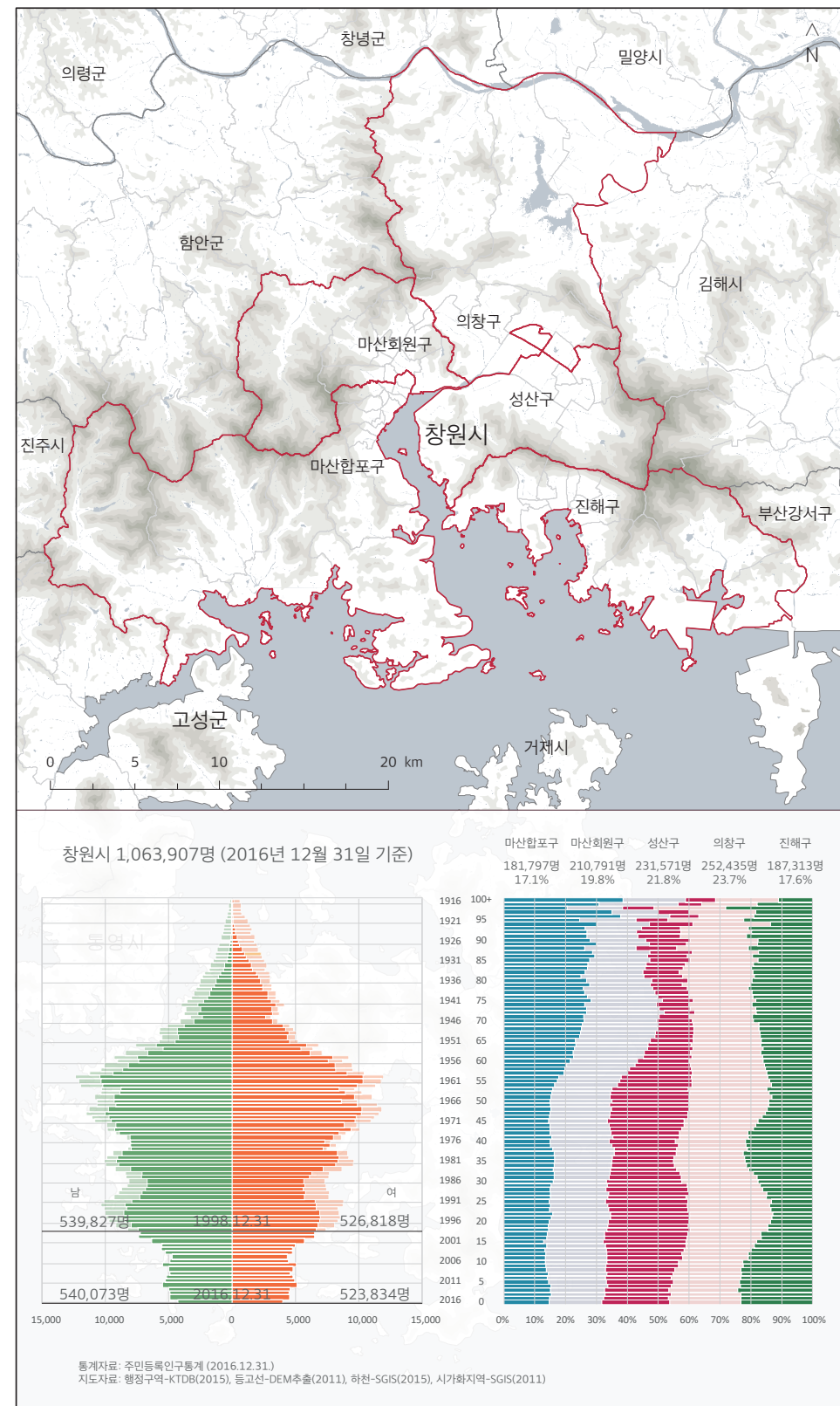
1. 통합창원시의 인구구성 변화 (1998-2016)

통합창원시는 통합당시인 2010년 7월말 기준 108만 명의 인구를 가졌다. 이후 인구가 조금 감소하여 약 6년이 지난 2016년 12월 31일 기준 통합창원시의 인구는 106만 명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광역시를 제외하고 100만을 넘는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세 도시이며, 100만에 근접한 도시는 성남시 용인시가 있다. 통합창원시는 인구규모로 전국의 85개 도시(특별시, 광역시 포함) 중 10위권 안이다.³⁾

통합이전의 마산, 창원, 진해 세 도시의 인구 비중은 각각 통합창원시의 36.9%, 45.5%, 17.6%로 창원시의 비중이 가장 크다. 옛 마산시 지역(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의 경우 통합창원시 66세 이상의 노년층의 50%가 거주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30%를 조금 상회한다. 반면 옛 진해시 지역(진해구)은 유소년층 및 이를 부양하는 40세 전후의 인구가 약 20%이며, 통합창원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령대별로 상이한 편이다.

통합창원시 전체로 보았을 때 국가적인 유소년 인구 층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의 출생자들은 연령대별로 약 1만명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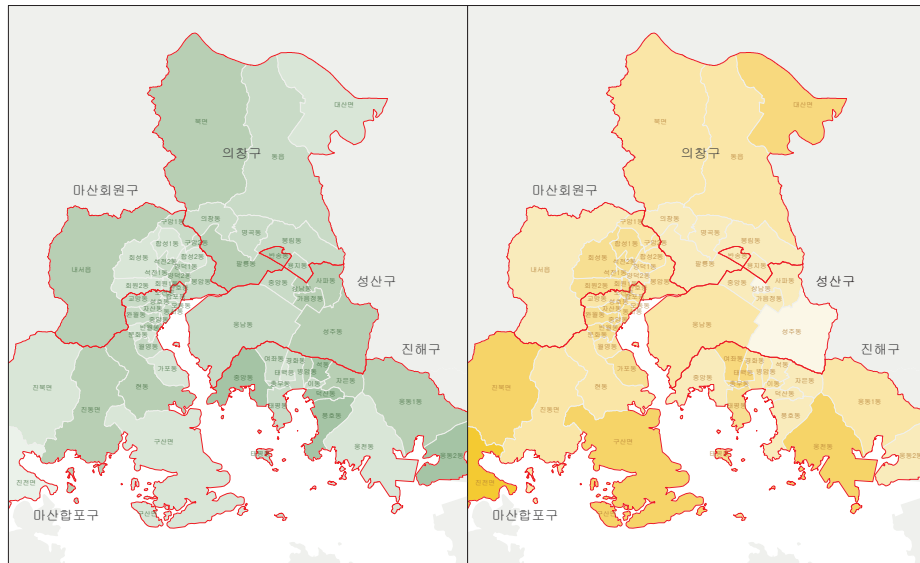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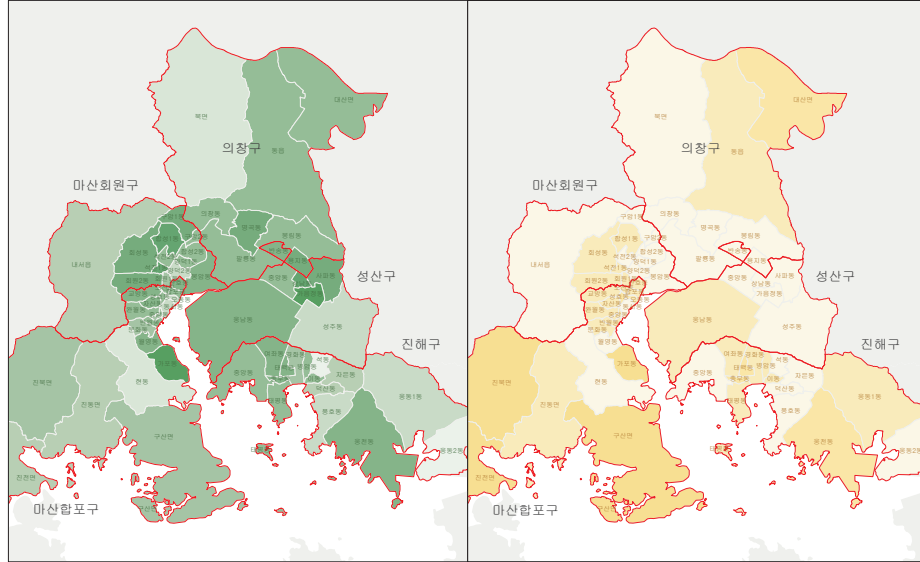
3) 통합창원시의 면적은 부산광역시 면적(769.86km)보다 조금 작은 747.12km로 전국 85개 도시 중 26번째이다.



통합창원시 동별 인구구성 변화 (1998-2016)

0세-15세 인구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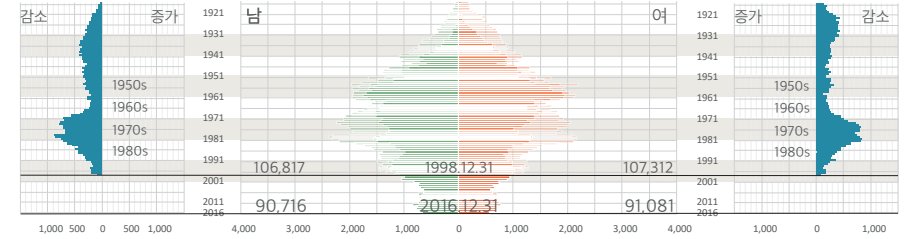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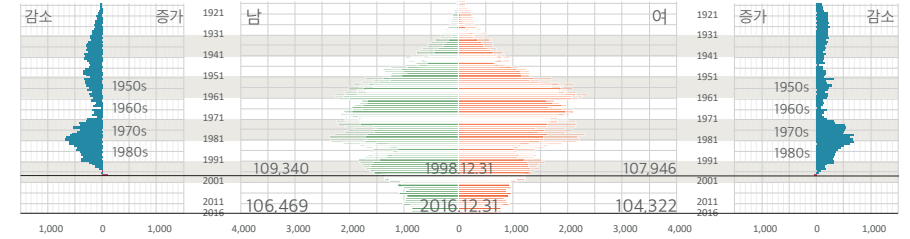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 1998.12.31; 2016.12.31

통합창원시 구별 인구구성 변화 (199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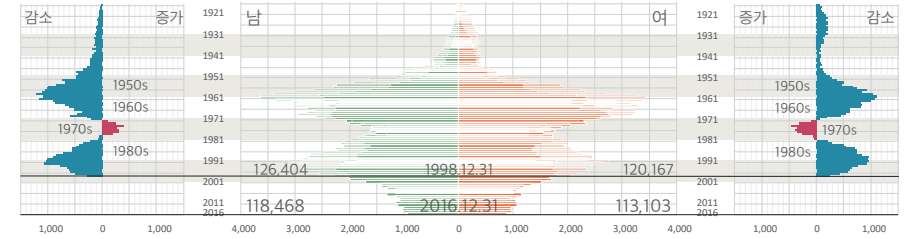
마산합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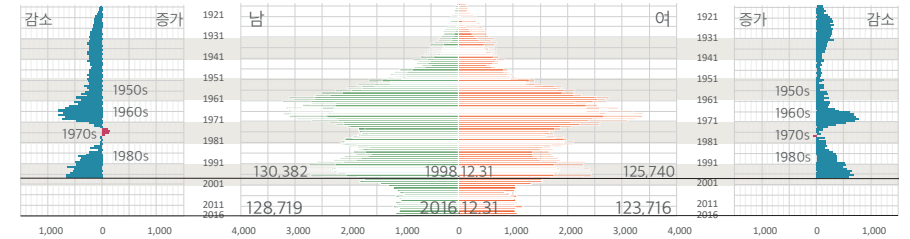
마산회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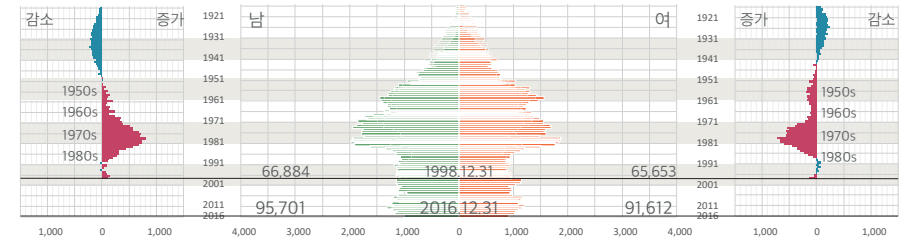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 1998.12.31; 2016.12.31

조금 못 미치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 창원시 전체에서 유소년 비율은 20% 미만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유소년 비율의 감소가 노년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인구 비중을 높였다. 옛 시역과 상관없이 통합창원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는 70~80% 수준으로 1998년보다 오히려 증가한다. 그러나 이런 증가는 1960년대 생이 60세를 넘기 시작하는 2020년부터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년별로 인구분포를 보면 이런 역동을 확인할 수 있다. 구별 인구피라미드 그림에서 출생년별로 1998년과 2016년 말의 인구코호트를 겹쳐 놓았다. 양 옆의 그래프는 18년간 출생년별 인구의 변화를 보여준다. 지금의 경제활동인구인 1950년대 생부터 1980년대 생까지의 변화를 보자. 옛 시구분에 따라 지역별 특징들을 뽑을 수 있다.

옛 마산 지역에서 지금의 경제활동 코호트 대부분이 감소하였고, 그 감소폭은 1950년대, 60년대 생보다 1970년대 80년대 생이 더 크다. 특히 1970년대 생의 경우 1998년에 마산에 있었던 코호트 중 많게는 1/3 가량이 마산을 떠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옛 창원 지역에서 1970년대 생은 소폭 증가하고, 변화의 폭은 1950년대 생과 1960년대 생이 크다. 현재 50대부터 창원시 거주자들이 크게 줄었고 이들의 한 세대 아래인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비율이 같이 연동하여 감소했다.

진해구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현재 30~40대에 속하는 1970년대, 80년대 생이 급증하고 있고 이들의 다음세대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앞의 마산과 창원에서 유소년층 연령대가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연령대의 1/2에 불과한 반면 진해구의 경우 60~70%를 유지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

비율이 감소한다. 마산시의 경우에도 현동은 유소년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내서읍은 소폭 증가하며, 나머지 동들은 모두 감소하였다. 특히 진전면, 구산면은 유소년 비율이 5%, 진북면과 창원시의 대산면은 6~7%대로 떨어지며 현재 농촌의 인구구성과 유사해진다.

렇듯 옛 시역에 따라 상이한 지역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 지난 시기의 이주 패턴을 분석한다.

2. 도시통합에 따른 이주패턴의 변화(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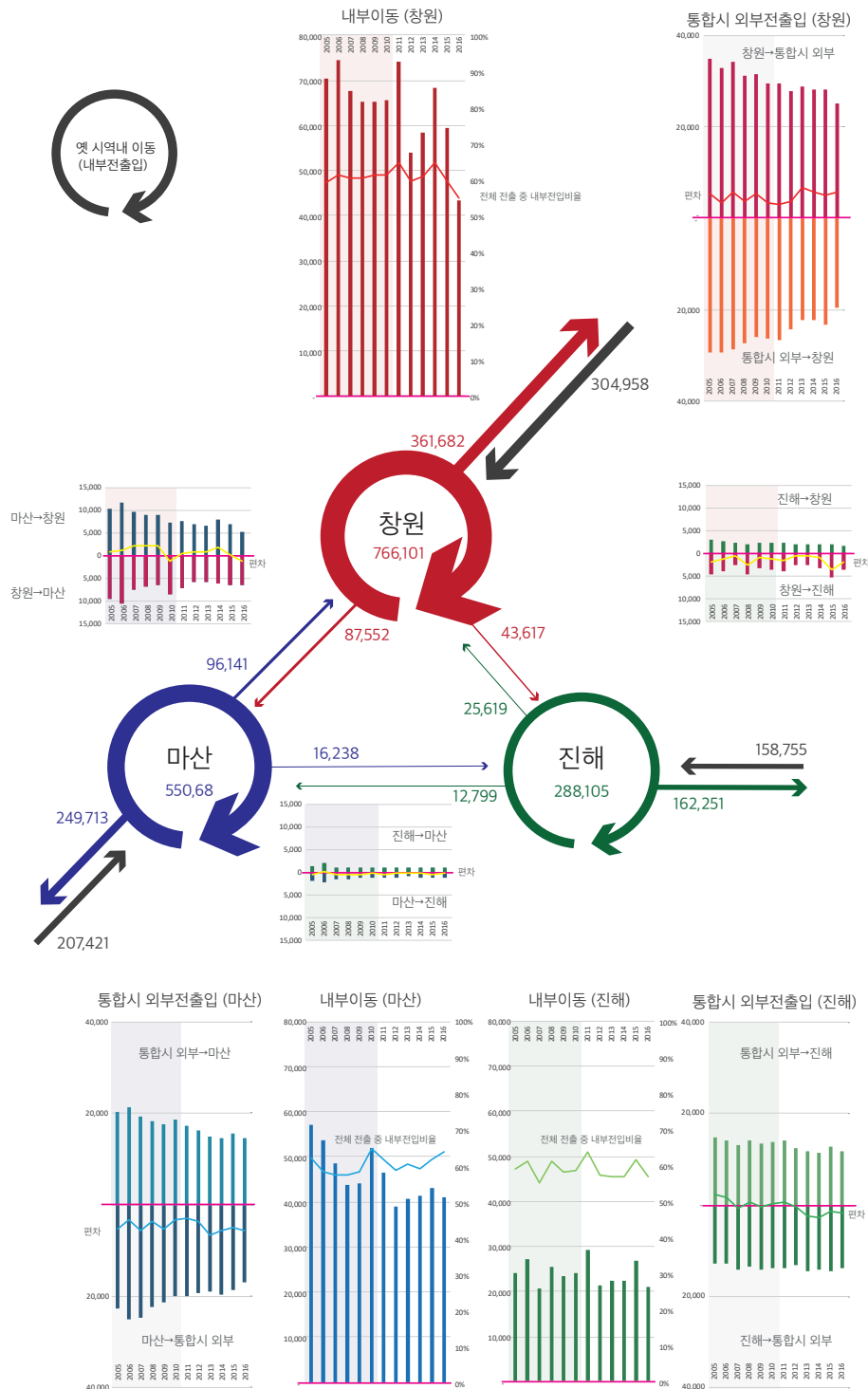
2010년 통합시점을 전후한 2005~2016년 12년간 마산, 창원, 진해시의 전출입 통계를 통해 지역의 이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도시들의 이주패턴은 동일 시군구내의 이주가 전체 전출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통합창원시 또한 다르지 않다. 옛 시역을 기준으로 마산, 창원, 진해시 모두 전출입이 같은 지역인 내부이동의 비율이 50~60%를 차지한다. 즉, 이사 가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동일한 시역으로, 이사 온 사람들의 반 이상이 동일한 시역에서 이사 온 사람들임을 뜻한다.

우선 2010년 통합시점을 고려해 세 지역의 차이를 보자. 옛 창원시의 내부전출입자는 2010년 전까지는 매년 6~7만 명 수준이었지만 통합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는 4만4천명이었다. 내부전출입을 또한 2010년 약 60%를 유지하였지만 현재 53%까지 내려갔다. 이런 이주자 감소는 외부와 옛 창원시 지역 간의 전출입자 수에서도 나타난다. 창원시에서 외부로 전출하는 사람들이 매년 3만 명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외부에서 창원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3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창원과 마산 지역의 인구이동은 마산에서 창원, 창원에서 마산 두 방향의 이주 모두 감소추세이다. 순이동으로는 마산에서 창원으로의 이주가 평균 1,000명 정도 많지만 연별로 편차가 심하다. 반면 창원과 진해지역 간 이동은 두 방향의 차이가 있다. 진해에서 창원으로 이주하는 자들은 연 2,000명 수준으로 일정한 편이고, 창원에서 진해로 이동하는 숫자는 시기별로 변화가 있다. 지난 12년간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진해에서

통합창원시 전입전출자수 (2005-2016, 12년 합계)

통합창원시의 인구변화: 인구구조, 이주, 교통량을 중심으로 | 임동근



창원으로 이주하는 사람보다 창원에서 진해로 이주한 사람이 많았다.

세 지역의 이동을 보았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마산, 창원, 진해 세 지역 간 인구 이동보다 각 지역과 외부와의 인구이동이 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마산지역의 경우 지난 12년간 내부 전출입자가 55만 명 수준이지만 창원으로 이주한 사람이 약 10만 명, 진해로 이주한 자가 1만6천명에 불과하다. 이런 편차는 창원과 진해도 마찬가지여서 전출자 중 옛 지역이 아닌 통합시 지역으로 전입하는 비율은 전체 전출자 중 10% 내외이다. 특히 진해는 8%수준까지 떨어진다.

여기서 진해의 다른 점들을 살펴봐야 한다. 앞서 인구구조에서도 진해는 마산, 창원과 다르게 경제활동인구의 순 유입이 관찰되었다. 인구가 동 면에서도 진해는 마산, 창원과 비교해 여러 다른 점을 보인다. 우선 내부이동자 수가 마산, 창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진해의 내부이동자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이는 진해 내부의 거주자들이 특정 주거지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사를 다닌다는 점이다.⁵⁾ 이런 현상은 유소년을 부양하는 경제활동인구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즉 생애주기에 따라 출산, 육아, 교육 등의 시기를 겪으며 각 시기에 적합한 주거지로 근거리 이동하는 패턴이다.

진해의 또 다른 특징은 외부와의 전출입 변화이다. 창원과 마산 지역은 외부로 전출하는 사람도 외부에서 전입하는 사람도 모두 감소하고 있고, 순 전입을 보아도 외부로 나가는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보다 언제나 많았다. 특히 2010년 통합 이후 시점부터 외부와의 순전출자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진해 지역은 통합이후 외부로 이사한 사람이 외부에서 이사 온 사람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전출입자의 규모가 줄지 않았다. 즉, 진해는 외부와 인구이동의 영향을 주고받는 동적인 상황

5) 이는 주로 교육과 관련된 인구이동으로 추정되나, 본 논문에서는 인구학적인 변화만을 설명하기에 자세한 내용은 추후 살펴볼 문제다.

세대별 이주지역의 변화 (2005-2016)



자료: 주민등록인구이동통계 2005.1.1~2016.12.31

통합창원시의 인구변화: 인구구조, 이주, 교통량을 중심으로 | 임동근

이 계속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통합시내 다른 지역인 마산과 창원보다 그 규모도 크고⁶⁾ 리듬도 다를 수 있다.

두번째로 지역별이 아닌 통합창원시의 인구이동을 세대별로 보자. 그림은 현재 경제활동 인구인 1950년대 생부터 1990년대 생까지 통합창원시의 전출입지역분포이다. 우선 그림의 가운데 그래프는 내부 전출입자 수와 전출자 중 내부전입자 비율, 전입자 중 내부전출자 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1950년대, 1960년대 생의 내부전출입비율은 약 80%로 주로 통합시 내부에서 인구가 이동함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생은 65%에서 75%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1980년대 생은 60%가 통합시 내부이동이다. 반면 1990년대 생은 경제활동인구에 진입하기 전 연령에서는 80%를 유지하다가 경제활동 인구에 진입하는 시기부터 내부이동비율이 낮아진다.

외부와의 전입, 전출에서도 이런 세대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그림의 왼쪽은 통합창원시 전출자의 전입지역이고, 오른쪽은 통합창원시 전입자의 전출지역이다. 통합창원시 내부를 제외한 1950년대 및 1960년대 생의 통합창원시 전출자의 행선지는 50%가 경남지역이며, 부산이 15~20%, 서울이 10% 정도 차지한다. 창원으로 전입하는 1950년대 및 1960년대 생의 전출지역 분포도 이와 유사하나 전출과 비교했을 때 경남지역의 비중이 다소 낮다. 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 생의 경우 통합창원시 전출자들의 행선지 중 서울과 부산의 비중은 각각 15~20%까지 올라간다. 특히 1980년대 생은 서울지역의 비중이 20에서 15%로 낮아지고 있으나 1990년대 생의 경우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980년대 생과 비교해 경북으로의 전출이 상대적으로 적다. 창원 전입자의 이전 거주지역 또한 1990년대 생의 경우 서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종합해 그 특징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시 내부에서 이

6)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순전입 변화의 리듬은 세 지역 모두 유사하고 2012년 이후 세 지역 모두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많다.

동하는 전출입자는 1980년대 생을 제외한 전 세대에서 감소하지만, 전체 전출자 중 내부 전출입자의 비중은 유지가 된다. 둘째, 경제활동인구 전세대에 걸쳐 경남과 부산으로 전출입이 일어나고 있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서울로 가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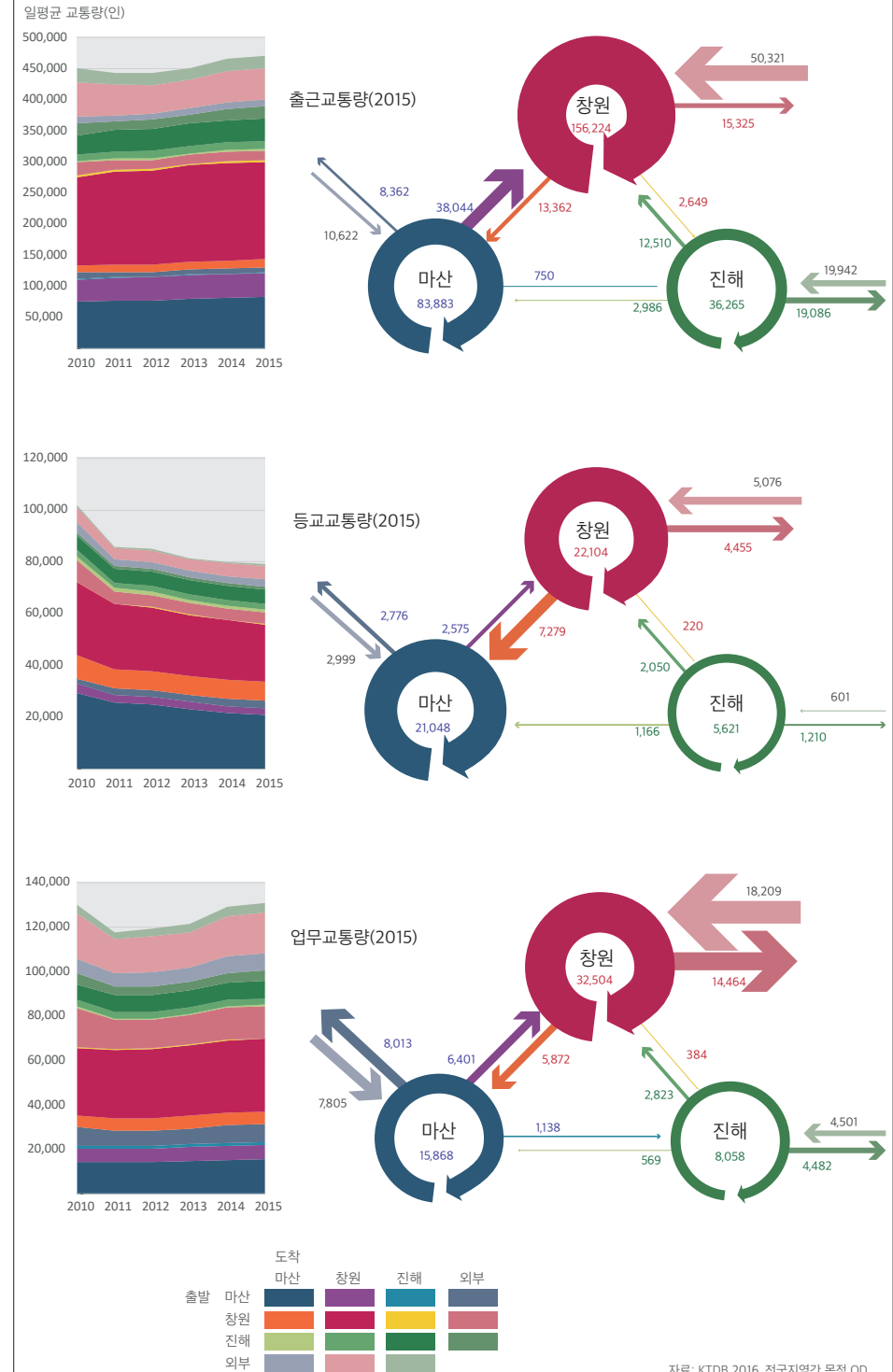
3. 목적별 지역교통량의 변화 (2010-2015)

앞에서 2010년 통합 이후에 마산, 창원, 진해시 옛 시역 경계를 넘는 이주는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았다. 이는 동일한 생활권이 형성되어 이주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일 수 있으며, 지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이주를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절에서 보는 지역별 교통량을 살펴보는 것은 옛 시역간 이주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목적별로 지역간 교통량을 보자. 목적별 교통량은 전국 252개 지역(시군구)을 대상으로 유출-유입(O-D) 일평균 통행량을 나타낸다. 목적은 크게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친교오락, 기타로 구분된다. 그림은 목적 중 다른 교통량의 역방향으로 해석되는 귀가를 제외한 6개 목적의 통합창원시 교통량을 보여준다. 시기적으로 6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출근 및 기타교통량은 다소 증가하였고, 업무, 쇼핑, 여가교통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등교 교통량이다. 앞에서 본 유소년층이 감소한 것을 보았듯, 등교 교통량은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낮아졌고 현재는 감소하는 속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는 진해 지역의 등교량이 소폭 상승하며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며 마산 및 창원의 등교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반면 창원에서 마산으로 이동하는 7천여 명의 등교교통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목적별로 지역간 교통량을 보자. 우선 출근교통량은 마산의 경우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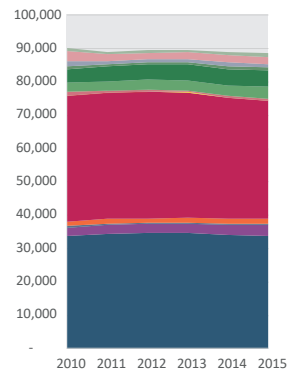
통합창원시 교통량 (2010-2015, 일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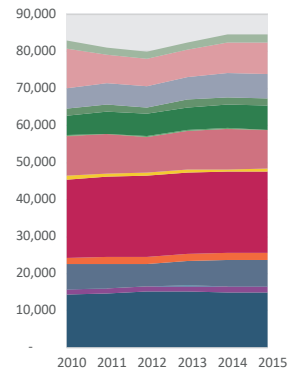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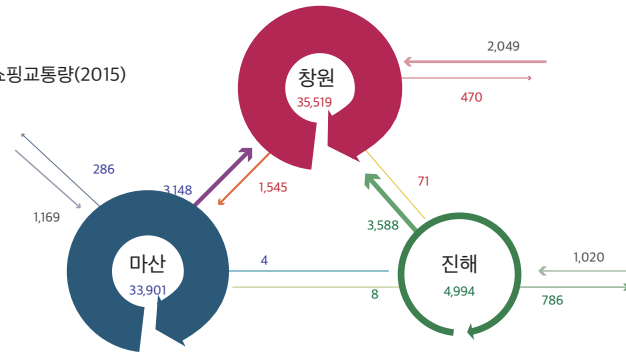
통합창원시 교통량 (2010-2015, 일평균)

통합창원시의 인구변화: 인구구조, 이주, 교통량을 중심으로 | 임동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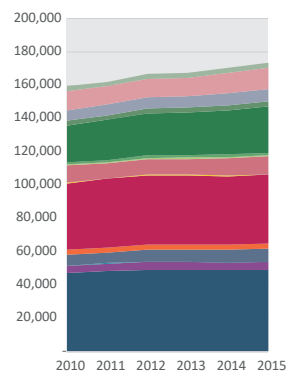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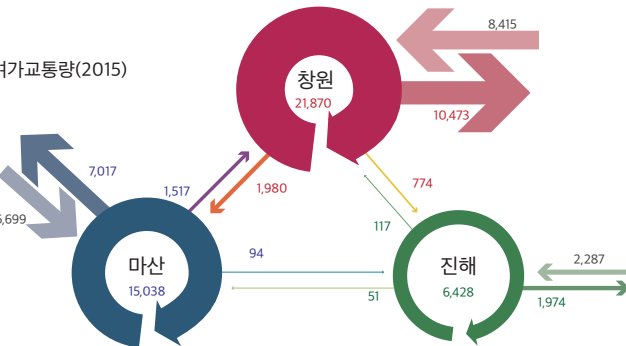
일평균 교통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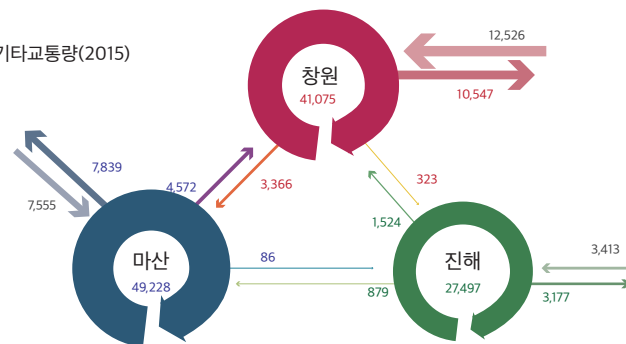
쇼핑교통량(2015)



여가교통량(2015)



기타교통량(2015)



출발	도착
마산	마산
창원	창원
진해	진해
외부	외부

자료: KTDB 2016, 전국지역간 목적 OD

산 내부로 출근하는 비중이 64%이며 창원으로 30%가 간다. 반면 창원은 83%가 창원시 내부로 출근하고, 진해는 51%만이 내부이며 통합창원시 외부로 출근하는 비중이 27%에 달한다. 외부에서 통합창원시로 들어오는 출근 교통량은 창원이 62%로 제일 많고 다음이 25%의 진해 지역이다.

등교 교통량은 마산, 창원 지역의 경우 출근과 반대로 마산 내부에서 움직이는 교통량이 80%이고 창원은 65%이다. 창원에서 출발하는 등교 교통량 중 21%가 마산으로 가고 있다. 진해의 경우 내부 비중은 56%이지만 출근과 달리 외부의 비율은 12%로 다른 지역과 비슷하고, 대신 창원으로 가는 등교 교통량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업무교통량은 창원 지역에서 출발하는 교통량이 통합창원시의 반이상을 차지하며, 외부와 창원지역 간의 교통량이 마산과 진해 지역 전체 내부 교통량보다 많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옛 시역 내부에서 움직이는 업무교통량은 창원 61%, 마산과 진해가 51%이며 세 지역 모두 외부로 나가는 업무교통량이 전체의 26~2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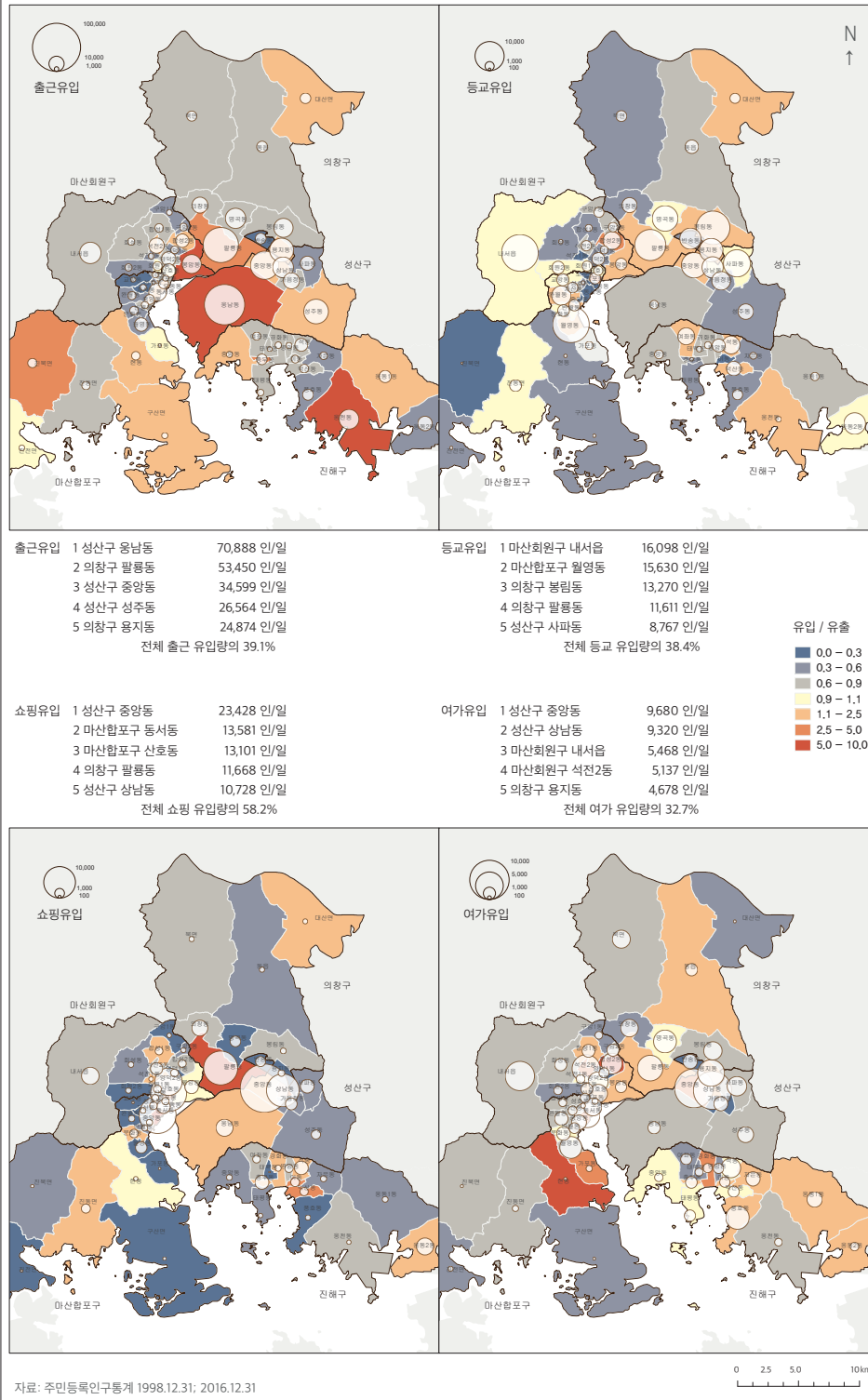
마산과 창원지역의 구매(쇼핑) 교통량은 지역내에서 움직이는 교통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각각 91%, 95%). 진해지역은 내부 이동이 54%에 불과하며 전체 구매 교통량의 37%가 창원으로 이동한다. 구매 교통량의 가장 큰 특징은 세 지역 모두 외부로 가는 비중이 다른 목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마산과 창원은 1%만이 구매목적으로 외부로 나가며 진해의 경우도 8%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산-창원-진해 지역간 여가 교통량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마산에서 창원, 창원에서 마산이 각 지역의 여가 교통량에서 약 6%를 차지할 뿐이다. 특히 외부로 나가는 교통량이 마산, 창원 모두 지역 발생 전체 여가 교통량의 30%이다(진해 23%).

여러 목적별 교통량을 보았을 때 세 지역간 옛 시역을 넘는 교통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출근교통량은

통합창원시 목적별 유입교통량 (2015, 일평균)

통합창원시의 인구변화: 인구구조, 이주, 교통량을 중심으로 | 임동근



창원지역이 주요 행선지가 되지만 진해지역은 창원보다 외부로 오고가는 교통량이 더 많고, 등교 교통량은 마산으로 유입되는 양이 많으나 진해지역의 경우 창원으로 더 많이 간다. 업무는 마산, 창원과 외부지역과 이어지는 교통량이 많지만 마산에서 진해로, 진해에서 외부 및 창원으로 가는 교통량 또한 존재한다. 구매 교통량은 옛 시역 내부에서 움직이나 마산과 진해에서 창원으로 일평균 3,500여명이 움직인다. 여가 교통량의 경우 세 지역 모두 외부와의 교류가 더 많다.

동읍면별로 목적별 유입되는 교통량을 보면 통합창원시의 공간구조를 그려볼 수 있다. 그림에서 동읍면 면적의 색은 유입/유출의 비를 나타낸다. 유입이 유출보다 많을수록 붉은색이며 유출이 많을수록 파란색이다. 동읍면 위의 원크기는 유입교통량의 양을 나타낸다. 우선 출근을 보면 성산구 웅남동 일대가 출근교통량의 주요 유입지역이며 바로 인접한 지역이 유입/유출비가 낮은 유출지역이 된다. 반면 등교 교통량은 마산지역으로도 많이 유입된다. 구매 교통량의 유입 또한 마산과 창원 지역으로 유입되고, 특히 유입 교통량이 많은 상위 5개 동이 전체 구매 교통량 유입의 58.2%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집중도를 보여준다. 반면 교통량은 적으나 진해지역의 경우 구매교통량 집중 지역이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가 교통량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산된 패턴을 보인다. 그림에서 유출입비가 높은 지역이 있으나 이는 유출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여가 교통량의 특징 중 하나는 진해지역에서 다른 목적에 비해 여가 교통량 발생 및 유입이 높다는 점이다.

도시지역이 통합되어 광역시를 제외한 도시 중 세번째로 큰 인구규모를 가진 통합창원시를, 본 논문은 연령별 인구구성, 인구 이동의 추이, 교통량의 분포를 보았다. 인구의 분포와 이동을 분석하는 것은 지역의 구조와 역동을 살피는 첫 단계이자 기초적인 토대이다. 하지만 그 분석은 출발지점

이지만 쉽고 간단한 분석이 아니다.

분석의 내용면에서 인구는 연령과 세대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역의 전 세대가 인구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고령화되는 역동을 가진다. 즉, 세대의 공간적 고정성은 지역의 연령구조별 변동을 의미하며, 반대로 지속적인 인구이동이 지역의 연령구조를 유지시킨다. 반면 인구이동은 교통량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교통량의 변화가 인구이동을 유발 혹은 방지하기도 한다. 이렇듯 세 측면이 서로 물린 순환고리를 파악해야 지역의 구조와 역동을 개괄이 가능하다.

두번째 어려움은 인구의 분포와 이동은 지역분석을 위한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크게는 공장이전 등 일자리의 변화와 주택단지 개발 등 주거지역의 변화의 결과로서 인구가 분포하고 이동하며, 학군의 조정, 상가의 개발, 교통망의 발전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즉, 인구는 인구 이외의 다른 많은 요인들에 따라 변하는 결과이며, 역으로 인구의 이 변화가 다른 사회경제적 환경에 변화를 주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그렇기에 인구분석 그 자체로는 현상을 보여줄 뿐 역동을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인구분석은 지역분석의 결론을 내리는 작업이 아니라, 변화의 징후를 파악하고 다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출발지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이 파악한 통합창원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5년동안 마산지역에서는 현재 경제활동인구의 30~40대를 담당하는 1970년대 및 1980년대 생이 줄어들었으며, 이들은 통합창원시의 다른 지역인 창원, 진해로 간 것이 아니라 통합시 외부로 이주하였다. 창원지역은 50~60대에 해당하는 1950년대 및 1960년대 생이 줄었고, 진해지역은 현재 경제활동인구 전 세대가 다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소년층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매년 새로 출생하는 세대가 늘고 있다. 따라

서 통합창원시의 향후 경제활동인구는 진해지역의 비중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30대를 제외한 전 세대에서 이주의 강도가 점차 줄어들며, 보다 젊은 세대일수록 내부이주가 아닌 통합창원시 외부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80%에 달하던 통합창원시 내부이주비율은 젊은 세대(1990년대 생)의 경우 60%까지 떨어지고 있으며, 이주지역 또한 인접한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지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서울지역에서 전입해오는 젊은 세대의 증가는 서울로의 전출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이는 새로 진입하는 통합창원시의 경제활동인구의 유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주와 교통량의 흐름을 보았을 때 옛 시역의 마산, 창원, 진해의 공간적 상호작용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생활권 및 주택관련 공간구조로 인해 옛 시역 경계를 넘는 이주가 실제 상호작용 정도보다 작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경계를 넘는 교통량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의 공간적 통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 지역과 외부와의 교통량이 통합시 내부의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점은 다른 연구를 위해 사회적, 경제적 경계를 설정할 때 통합창원시 외곽까지 함께 고려해야함을 뜻한다. 즉, 경제, 교육, 의료, 등등 분야별, 활동별로 설정되는 공간적 경계가 통합창원시역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창원시 내부 세 지역간의 단절이 예상됨으로, 지역을 분석할 때 통합창원시를 하나로 집합화된 자료를 사용한다면 보다 큰 주의가 필요하다. 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래 5~6년 동안의 인구 분포 및 이동 자료에서는 통합이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찾을 수는 없었으며, 여전히 마산, 창원, 진해 지역의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 이태근(2016),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지역간 갈등의 영향요인 연구- 창원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3권 제3호: 347-368.
- 정경숙(2017), 「행정구역 통합과 도시공간분포 변화분석-통합 창원시 사례」,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4호: 345-364.
- 유재원(2015), 「자치단체 통합의 이해-정치모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제49권 제2호: 249-272.
- 유재원·손화정(2009), 「시군통합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 단절적 시계열모형 (ARIMA)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제43권 제4호: 285-306.
- 양고운·박형준(2013), 「지방정부 간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의 성공요인 탐색-퍼지집합 질적비교분석(fsQCA)의 적용」,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5권 제1호: 91-116.
- 김영철·이우배(2013),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경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1호: 181-204.
- 정삼석·정상철(2014), 「행정통합에 따른 아파트가격 분석과 지역간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통합창원시(구 창원 마산 진해시)를 중심으로」, 부동산학보 제50집: 276-290.
- 박종민·양승정·이현희(2014), 「공간통사론에 의한 진해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30권 제11호: 89-96.
- 이재민·김희호(2015), 「역내 및 역외간 인구이동과 경제성장의 관계 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85권: 99-117.

지방도시 도야마 시의 도전: 공공교통 친화 도시

윤혜영*

1. 도시의 과제, 인구와 도시구조의 변화
2. 컴팩트한 도시만들기: 도시계획과 공공교통
3. 컴팩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거주 유도
4. 자동차에서 공공교통으로, 도시 내 공공교통 충실화
5. 컴팩트한 도시구조로의 도전: 성과와 과제

연구
현
장

1. 도시의 과제, 인구와 도시구조의 변화

일본 혼슈 북부에 위치한 도야마시(富山市). 도야마 현의 현청소재지이며 현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도시는 산이 풍부하다(富山)는 그 이름과 같이 북알프스 다테야마 연봉(立山連峰)과 도야마만(富山灣)으로 둘러싸여있고 그 사이로 진즈강(神通川)과 죠간지강(常願寺川)으로 형성된 평야가 펼쳐진 풍부한 자연경관으로 이름이 높은 곳이다. 예로부터 풍요로운 평야지대에서 농업이 이루어져왔고 강을 통한 교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근대기부터는 제약과 기계 산업, 화학업으로

.....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도 유명하여 지금도 세대 당 수입이 일본 내 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사시사철의 경계가 뚜렷하여 모든 계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도야마의 특징이다. 도야마는 국내 여행객들에게 아주 익숙한 여행지는 아니지만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제조업과 함께 특히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 만들어 지는 대계곡(雪の大谷)과 스키 등 겨울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산업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림 1〉 도야마시 위치(왼쪽), 시 전경(오른쪽 위)과 눈의 대계곡(오른쪽 아래)

1995년 지방자치의 강화와 권한 이양,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이행에 대한 대비, 일상생활권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한 합병특례법에 의해 '헤이세이의 대합병(平成の大合併)'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시정촌 통합이 시작되면서 도야마시는 1996년 핵심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7개 시정촌이 합병되어 1,241.77km²의 거대한 면적을 가진 도시가 되었다. 이 규모는 도야마 현의 약 1/3이고 일본 내에서도 시즈오카 현 시즈오카시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넓으며, 인천광역시의 면적(1,046.27km²)보다도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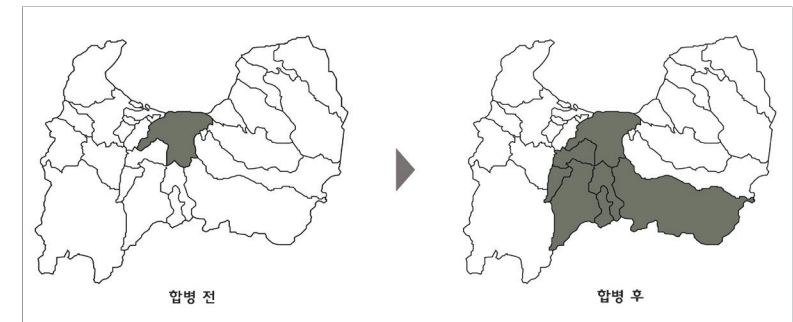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야마 시의 인구규모는 크지 않다.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도야마시 전체인구규모는 총 417,633명으로 발표되었다. 합병 전 도야마시에는 총 면적 208.81km²에 약 32.2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지

만, 합병 후인 2005년 4월의 결과를 보면 면적은 약 여섯 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전후의 인구는 32.2만 명에서 41.7만 명으로 약 십만 명 정도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와 면적의 변화를 통해 도야마시의 인구밀도는 합병 전인 2000년 1km²당 약 1540명이었지만 2005년에는 1km²에 약 336명으로 감소하였다. DID(인구집중지수) 밀도도 1헥타르(ha)당 약 41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1〉 합병전후의 인구와 면적변화

연도	면적(km ²)	인구(명)	세대 수	인구밀도(명/1km ²)	비고
1995	208.79	320,588	107,577	1535.46	1995.03
2000	208.81	321,521	115,214	1539.78	2000.03
2005	1,241.85	417,465	151,100	336.16	2005.04 (7개 시정촌 합병)
2010	1,241.85	417,697	160,263	336.35	2010.01
2015	1,241.77	419,709	170,859	338	2015.01
2017	1,241.77	417,633	174,463	336.32	201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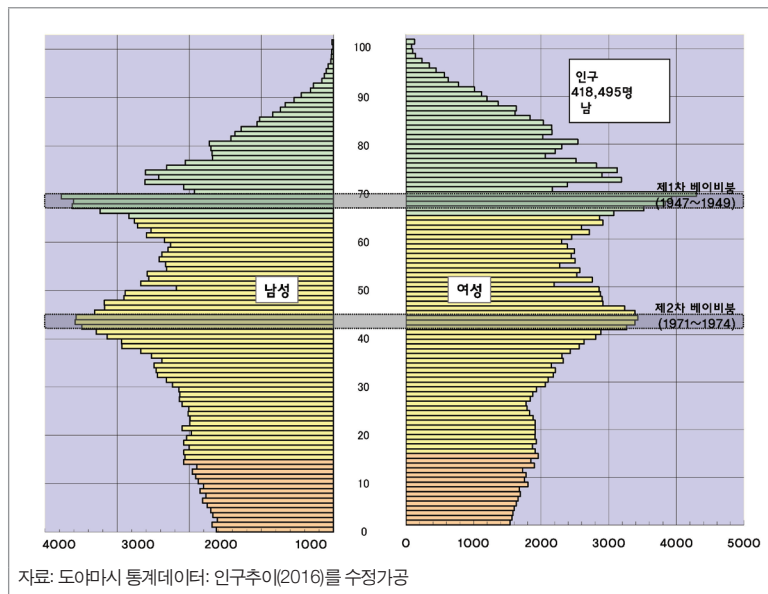
자료: 도야마시 통계연보 (<http://www.city.toyama.toyama.jp/kikakukanribu/johotokeika/tokei/tokeisho/>)



〈그림 2〉 합병 전후의 지역 면적 변화

인구밀도 외에 또 다른 환경 변화는 바로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다. 물론 이것은 도야마시만의 과제는 아니다. 일본의 빠른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이며, 실제로 2016년 일본 총무성의 인구백서는 일본의 고령화율을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20%를 훌쩍 넘는 26.7%인 것으로 기록하

고 있다. 이 백서는 고령화 진전의 원인을 평균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의 두 가지로 크게 진단하고 있지만 지역 간의 편차 역시 다양한 세부 과제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일본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아키타 현은 32.6%, 가장 낮은 곳인 오키나와 현은 약 19.0%으로 두 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함이 나타내는 것은 산업구조나 인구의 대도시집중, 도시 편의성과 기회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 도야마시의 고령화율은 27.8%로 일본 평균을 상회하며, 인구피라미드형태에서도 가장 두터운 층인 60~65세 층 다음으로 40세 전후의 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많은 것을 제외하면 다수의 고령자 층에 비해 청년층과 19세미만의 청소년인구 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그림 3〉 도야마시 인구피라미드(2016)

이러한 제반의 환경 변화에서 도야마시가 직면하게 된 또 다른 과제는 바로 고령화, 지역 인구밀도의 감소와 교외화에서 파생되는 비용의 문제

이다. 도야마시는 도야마만의 평탄한 평야를 기반으로 하여 자동차 운행이 편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세대 당 평균 수입도 일본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가나 자동차의 소유비율도 높다. 2005년 도야마시의 세대 당 소유 자동차 대수는 이미 1.73대로 일본 전체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야마현 거주민의 1인당 거주 실면적(단위: 다다미 수) 역시 1998년 14.74, 2003년 15.91, 2008년 16.47, 2013년에는 17.11로 이 수치는 일본 평균은 물론이고 일본 전체 현 중에서도 단연 1,2위를 다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낮은 지가도 주요인이지만 좁고 남아가는 도심을 뒤로 하고 적은 비용으로 넓고 쾌적한 자가에서 살 수 있는 교외로 계속해서 진출한 결과이기도 하다.

〈표 2〉 1인 일본 평균 및 도야마시 1인 거주 실면적 비교

(단위: 다다미(90x180cm) 수)

	1998	2003	2008	2013
도야마현	14.74	15.91	16.47	17.11
일본평균	11.24	12.17	12.83	13.54

출처: 일본 통계국(2013), 주택토지통계조사

도시화가 진행되고 도심 대신 교외로의 거주를 택하면서 시가지가 확산되었고, 불편한 대중교통대신 자동차교통이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상업시설 등의 이전 역시 도심공동화, 교외화의 가속 원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상태에서 도시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도시가 저밀도화 되는 합병이 이루어졌고, 점차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기 어려워진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의료와 복지, 편의 등의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2. 콤팩트한 도시만들기: 도시계획과 공공교통

합병이 이루어지기 2년 전인 2003년, 도야마시는 일 년간의 연구 끝에 ‘컴팩트한 마을만들기 사업조사연구보고’를 발표하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4가지로 제시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서 ‘도야마지역 합병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이는 자주적인 합병을 유도하였던 헤이세이의 대합병에 대해 새로운 도야마시로의 통합을 준비하는 동시에 합병 이후의 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보고에서 제시한 4가지의 정책방향은 첫째, 기존스톡의 활용을 통한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마을 조성, 둘째, 도보로 생활이 가능한 마을 조성, 셋째, 도시의 ‘얼굴’로서의 중심시가지 조성, 넷째, 시가지 주변의 녹지 보전과 환경부담 경감을 통한 환경공생으로, 정책 방향으로는 크게 독창적인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시안으로서 ‘따라서 콤팩트한 도시를 형성한다.’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간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부 대도시나 특별한 추진 요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외부인구의 유입을 이끌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방도시인 도야마시 역시 인구증가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현재의 고령화되어가는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고령자도 편리하게 살아가 수 있는 도시의 형태로 도시구조를 재조직하고, 공동화된 도심을 되살려 다시 도시의 중심으로 하는 콤팩트한 도시 구조로의 이행과 공공교통망과의 연계, 확충을 구상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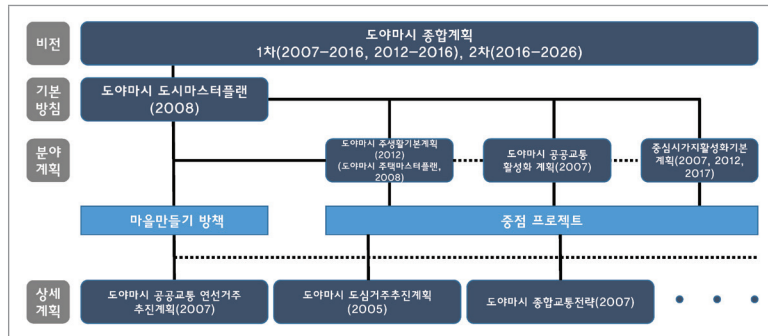
〈표 3〉 도야마시 콤팩트한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및 관련사업

연구결과	주요내용	관련계획, 사업
기존 스톡의 활용을 통한 효율적, 매력적인 마을	기존의 저·미활용된 용지 및 도시시설 유지·개선·기능향상, 공공공간 복합이용, 역사·문화적 환경 및 물과 녹지 보전 활용 등 기존 도시스톡을 가능한 유효 활용하여 효율적·매력적 마을 추진	도시마스터플랜, 마을 내 거주추진계획, 공공공간 활용교류축진, 지역커뮤니티 주제 교류공간 정비
도보생활이 가능한 마을	누구나 용이하게 쇼핑을 하고 복지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을이 일상생활의 장이 되어 애착이 가는 환경을 만들고, 양호한 지역 사회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인구 회복 도모 등 도보로 생활할 수 있는 주환경 조성	도시마스터플랜, 주택마스터플랜, 공공교통활성화계획, 마을 내 거주추진계획, 공공교통 연선거주추진계획, 노면전차확충
얼굴로서의 중심시가지의 조성	시민의 지역 귀속의식배양, 교류확대, 도시 활력 충실을 위한 주민의 상징으로서의 공간을 공유하고 상업, 서비스 등의 집적을 통해 새로운 창업, 기업이 일어나는 배경으로서의 중심시가지 형성	도시마스터플랜, 마을 내 거주추진계획, 중심시가 지활성화 ¹⁾
환경부담 경감을 통한 환경공생	자연자원보존과 자동차교통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시가지 확산을 억제하고 의식주가 도보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마을을 조성하여 도보나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 시가지 인구밀도를 일정 이상으로 확보하여 버스나 노면전차 등 공공교통의 수요밀도를 높여 환경에 공생하는 마을조성	도시마스터플랜, 환경미래도시계획, 공공교통 연선거주 추진계획, LRT 조성, 버스노선확충, 안전한 경스마트 모델가로조성, 지속가능에너지활용사업

출처: 도야마시 콤팩트한 마을만들기 연구회(2003), 콤팩트한 마을만들기 사업조사연구보고, 국토교통성, 마을재생사례데이터베이스, LRT 가 달리는 콤팩트한 마을-도야마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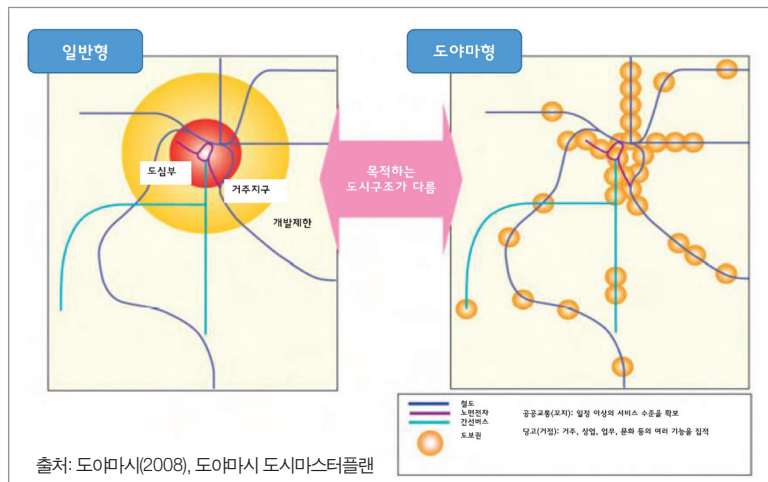
도야마시는 이렇게 설정된 구상을 바탕으로 도시의 기본 구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도야마시종합계획과 우리의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하는 도시마스터플랜, 도심 내 거주와 고령자 배려 등 시의 목표를 주 생활로 연결시키기 위한 중점 시책을 담은 주생활기본계획, 콤팩트한 마을(거점)의 축으로서의 공공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교통활성화계획 등에 그 내용을 담아 실현을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1) 합병을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도도부현에 대한 합병페턴을 작성하도록 하여 압박하는 한편 시정촌 합병 시 지방교부세 비감액 기간의 연장, 합병 후 새로운 지자체의 마치즈쿠리 원리금 상환금의 70%를 지방교부세로 보충하는 지방채 제도화(합병특별국채) 등의 인센티브를 두어 시정촌의 합병을 유도하였음



〈그림 4〉 도야마시 주요 도시계획 및 사업 위계

도야마시가 도시마스터플랜을 통해 구상한 도시의 전체 형태는 일본 전 통과자인 ‘당고’와 ‘꼬치’의 형태를 닮아 그 이름 그대로 ‘당고와 꼬치’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이 당고꼬치의 형태는 갈다란 나무꼬치에 동글동글한 떡을 여러 개 꽂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당고와 꼬치의 도시구조는 말 그대로 기다란 철도연선을 설정하고, 그 역을 중심으로 한 도보권(거점, 당고)에 사람을 집적시키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 도야마시가 목표하는 도시구조와 일반적 도시구조의 차이

이렇게 공공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거점에 거주인구와 서비스 시설을 집 중시킴으로서 지금까지 다른 장소에 있는 병원, 복지, 행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 교통을 이용해 온 것에서 점차 공공교통과 도보를 통해 다른 거점 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한 것이다. 또한 이미 공동화된 도심에 한 번 더 사람들을 집적, 거주하도록 구상하여 도심과 거 점으로 이루어진, 지금까지는 보기 어려운 독창적인 도시 구조 형성을 장 기 계획으로 수립하였다.

3. 콤팩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거주 유도

이미 만들어진 도시를 콤팩트한 도시구조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상은 일견 인 구감소에 대한 타당한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 행정에서 직접 추진이 가능한 것은 공공교통의 확충사업 정도일 뿐 주민의 거주이동이나 서비스 시설의 집적, 거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건설이나 건축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규제를 통한 도시계획은 거주가 점적으로 분 포하고 대규모시설이 입점하기 힘든 상황에서 의미가 없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야마시의 콤팩트한 도시를 위한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흩어져 살고 있는 주민을 거점으로 이주하도록 하는 유도책과 건설사로 하여금 양질의 주택을 거점 내에 건축하도록 하는 거주유도계획이고, 두 번째는 공공교통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확충과 연계계획이다.

우선 거주 유도계획으로는 도심이주를 위한 도심거주추진계획과 공공 교통 거점에서의 이주를 목표로 하는 공공교통연선거주추진계획을 수립 하였다. 2005년에 수립된 도심거주추진계획은 도야마시종합계획신세기

〈표 4〉 도야마시 콤팩트한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및 관련사업

대상	사업명	개요	지급한도
시 민	도심주택 임대료조 성사업	- 도심 외에서 도심 내의 민간임대주택으로 전입 & 전거하는 세대에 대해 3년간 임대료조성 - 소득요건, 도심 외 대상지역 요건, 거주 후 반년 이후 지급	1만엔/월
	도심주택 취득지원 사업	- 일정수준 이상의 주택 신축 또는 구입시 또는 분양형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보조 - 구입시 전용면적 75㎡ 이상, 녹화, 내진기준 적합 필요 - 공동주택구입시 일정 내진수준에 적합해야함	50만엔/호
	도심리품 보조사업	- 도심거주추진지구내 중고주택리폼시 공사비보조 - 소득기준 있으며 자가, 단독주택으로 주택부문면적 75㎡ 이상 - 주택리폼공사비가 100만엔 이상, 1981년 이후 착공한 주택	30만엔/호
	멀티해비 테이션추 진사업	- 다지역거주를 위해 도야마시 도심에 단독주택을 건설 & 구입하거나 분양형 공동주택을 구입 취득한 도야마 현 외 거주자에 대한 보조 - 도야마현 외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 소득세비과세 세대자가 아닌 사람, 도심거주추진지구내에 스스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건설 &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 보조금지급물건 전매, 임대불가(3년), 2014년 이후 주택 취득	주택취득보조 25만엔/호 시내에 고령자 친 족이 있을 경우 10만엔 추가 지급
건 축 자	도심공동 주택건설 촉진사업	- 도심내 주택·거주환경지침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주택 수, 주택전용면적, 녹화, 공개공지 등 요건 있음	100만엔/호 (일반형) 50만엔/호(독신형)
	도심주택 전용지원 사업	- 도심 내 업무 & 상업주택을 개수하여 공동주택으로 전용하려는 사업자에게 보조 - 주택 수, 주택전용면적, 설비 등 요건 있음	100만엔/호 (일반형) 50만엔/호(독신형)
	주택병설 점포정비 지원사업	- 공동주택 건설치 저층부에 점포, 의료, 복지시설 등을 병설하여 건축하려는 사업자에게 보조 300평방미터 이내 지원	2만엔/평방미터
	도심택지 정비촉진 사업	- 도심지 내 일정수준 이상의 택지개발시행자에게 보조 - 면적 1,000㎡ 이상, 도로정비수반, 구획면적 200㎡ 이상, 전용주택용지·병설주택용지필요, 주택건축시 1/10 녹화 등	1구획당 70만엔

출처: 도야마시 주택사업(<http://www.city.toyama.toyama.jp>)

플랜(2001)에서 정한 436ha의 도심지구와 그 주변의 10개 소학교구로 구성된 도심부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도심지 외부에서 내부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임대료 지원, 주택 취득 지원, 도심주택리폼사업, 멀티 해비테이션 추진사업²⁾ 등 요건과 지원범위가 다양한 도심거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주요 유도책은 보조금 지급이다. 도심거주추진사업의 대상은 거주자만이 아니다. 도야마 시 도심에 공동주택, 전용주택, 점포 병설주택 등을 건축하거나 택지정비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자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공공교통연선거주추진사업 역시 사업의 큰 체계는 도심거주추진사업과 다르지 않다. 도야마시 공공교통거점지구 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거점 내 거주자가 주택을 리폼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본 사업에 있어서는 한부모 세대가 공공교통연선거주추진보조대상지구 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주거취약계층의 복지와의 연계도 도모한 점, 외부지역 거주자를 유입하기 위한 시책 등이 눈에 띈다. 한편 공공교통 연선 거주촉진지구 내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택지를 정비하는 건설사업자 역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활동을 유도하였다.

4. 자동차에서 공공교통으로, 도시 내 공공교통 충실화

두 번째 전략은 거점과 도심, 외부를 연결하는 공공교통망의 확충이다. 거주추진사업과 더불어 거점간을 연결하는 교통망의 확충, 충실화를 통해 거주여건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이주를 고려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도야마시는 이를 위해 공공교통망 형성을 위해 종합적 도시교통체계 마스터

2) 여러 지역에 거주지를 가진 사람 중 거주지 한 곳을 도야마 시의 도심 내에 건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보조하는 사업

플랜, 공공교통활성화계획, 지역공공교통종합연계계획, 종합교통전략, 지역공공교통망형성계획, 입지적정화계획 등 다양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도야마시 공공교통의 기본체계는 철도로 연결된 공공교통축, 그리고 철도망과 지역 생활 거점간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이다. 우선 철도망은 동서와 남북으로 연결되어 도야마시 내·외부를 잇는 JR 선과 도야마 역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의 네트워크 구조로 구성된 도야마시 내의 노선으

〈표 5〉 도야마시 주요 공공교통 개요

분류	개요
철도	JR호쿠리쿠선
	2015년 개통, 도야마시를 동서로 관통하며 시외로 연결하는 신칸센
	JR타카야마선
	2008년 개통, 기후 현~도야마시를 잇는 지방교통선
	지철
LRT(Portram)	2012년 개통, 지철본선, 타테야마선, 지철 후지코·카미타카선, 지철시내궤도선 등
	2006년 개업, 도야마항선의 노선을 활용하여 도야마 항에서 시내 도심부를 연결하는 트램노선
	시내궤도선 (Centram)
버스	2009년 개통, 도심부를 환상형으로 연결하는 노면전차
	노선버스
	도심부로부터 방사형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외-도심부를 연결하는 주요 9개 노선
버스	피더버스
	주요 철도역과 지역거점 내를 운행하는 버스
버스	커뮤니티버스
	도야마시도심부 외 2개 지역에서 운행하며 역과 주요시설을 순환하는 버스



도야마시 라이트레일



도야마시 커뮤니티버스

사진출처: 국토교통성, 도야마시 홈페이지

〈그림 6〉 주요 교통 이미지

로 나누어져 있다. 트램을 적극 활용한 점도 특징이다. 옛 도야마항선을 LRT(Light Rail Transit) 으로 변경하여 도야마항으로부터 도야마역까지 연결했고 다시 시내에는 노면전차인 시내전차환상선(Centram)을 구축했다. 이 두 개의 트램노선들은 도야마시의 경관형성에도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철도망이 공공교통축의 뼈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버스 노선들은 철도망과 지역생활거점, 도심부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선버스는 도야마시 중심부에서 방사형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외와 도심부의 상업 업무시설을 연결하였고 방사형을 이루는 주요 노선 9개는 운행 빈도를 최대 30분에 1대를 확보하도록 했다. 도심부는 커뮤니티버스를 운행하여 공공교통 공백지역이 없도록 하는 한편 고령자의 편의를 위해 디텐드 형의 택시도 운행하고 있다. 도심부 뿐 아니라 도시 내의 간선교통의 단말교통의 역할을 하는 피더버스를 도입하여 주요 역에서 지역생활거점까지를 버스교통으로 연결, 지역생활거점에서의 편의성 확보 역시 도모하였다. 저상버스 운행, 버스정류장 정비, 주요 역 주차장 정비, 고령자 운임할인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되었다.

5. 컴팩트한 도시구조로의 도전: 성과와 과제

합병을 통해 현재의 도야마시의 형태를 갖추고 거주추진과 공공교통연계를 통해 컴팩트한 도시구조의 형성과 함께 시민의 생활을 바꿔보고자 시도한지 10년이 넘어가는 지금, 도야마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앞서 정리한 두 가지 구상 외에도 중심시가지 활성화 계획 등을 통해 도야마시 도심부의 거리정비와 공원과 문화시설 등의 확충이 추진되었으며 시가지 재개발사업과 상업·업무지구관련 민간투자도 증가했다. 도심부의 보행자

수의 경우 2006년에 비해 2012년 약 32.3% 증가했으며 중심시가지 내 빈 점포의 경우에도 2009년 대비 2012년 1.5% 감소경향을 나타냈다. 도심지 및 연선거주추진지구에 거주하는 인구 규모는 2015년 약 15만9천명으로 전체의 약 38%이며 도심부 인구는 2010년 대비 2015년에는 9%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책 초기부터 도심부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에 비해 공공교통연선거주추진지구의 인구추이는 최근에 이르러 서야 증가하기 시작한 것을 볼 때 개인의 거주 자유에 대한 유도전략만의 한계점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각 거주추진사업의 수치적인 성과로서는 도심거주추진사업이 2005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888건 2,104호, 공공교통연선거주추진사업의 경우 2007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572건 1,270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공공교통의 경우, 도야마 LRT는 도야마항선 시기(2005)와 비교하여 2006년부터는 평일 약 2.1배, 휴일은 3.4배의 이용증가를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이용증가를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간별, 연령별 이용객 수 변화에 있어서는 11시부터 17시 사이, 50대 이상의 증가율이 높았다. 도심부의 노면전차 역시 60대 이상의 증가율이 2010년 기준 2014년 평일 약 23%, 휴일 약 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0대 이하의 세대에서의 이용률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살펴보아야 할 점이다. 버스노선의 경우 2008년 약 3만 4천명 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약 8만 4천명이 이용하여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의 5천 7백대에서 2014년 1만4천대로 비슷한 비율로 증가한 운행편수 확충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당면 과제인 일본은 도야마시의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이러한 구상을 지방 도시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왔다. 한편 10년이 지난 지금 도야마시의 변화속도,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세대별로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른 것에 대해 실패를

〈표 6〉 도야마시 버스운행실적

	운행실적	이용자수	1대당 평균 승객	운행경비	시부담액
2008	5,744	34,132	5.94	11,141,712	-212,488
2009	5,744	41,715	7.26	15,552,900	3,000
2010	5,272	42,780	8.11	15,272,770	-27,000
2011	14,414	70,678	4.9	35,322,264	12,212,718
2012	16,730	82,495	4.93	42,134,239	16,890,065
2013	15,058	78,967	5.24	45,921,547	17,815,543
2014	14,290	84,623	5.92	49,438,400	미확정

출처: 인구감소시대의 마치즈쿠리와 지역공공교통 재구축 세미나(2016) 자료를 수정가공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강제를 가하지 않고,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면서, 느린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도야마시의 정책적 도전은 저출산 고령화가 더 이상 타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에게도 생각하게 하는 바가 크다. 지속가능한 도시구조에 대한 논의와 합의의 시점이 다가와 있다.

참 고 문 헌

1. 문헌

芦澤英治(2016), 富士宮市の市営公共交通, 第17回 都市経営セミナー人口減少時代のまちづくりと地域公共交通の再構築.

神田昌幸(2014), 富山市におけるコンパクトなまちづくりの進捗と展望, 北陸地域連携プラットフォーム.

森雅志(2016), コンパクトシティ戦略による富山型都市経営の構築, コンパクトシティと交通網の近代化 パラレルセッション.

横道清孝(2006), 日本における市町村合併の進展, 自治体国際化協会, 政策研究大学院大学.

国土交通省(2013), 富山市における公共交通を軸としたまちづくり.

富山市(2007), 富山市総合計画.

富山市(2007), 富山市公共交通活性化計画～富山市公共交通戦略～.

富山市(2012), 富山市 環境未来都市計画 コンパクトシティ戦略による富山型都市経営の構築～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あふれる持続可能な付加価値創造都市を目指して～.

内閣府(2015), まちなか居住推進事業.

富山市(2016), 地域公共交通網形成計画(案).

2. 웹사이트

일본통계국 <http://www.stat.go.jp>

일본수상관저 <http://www.kantei.go.jp>

일본국토교통성 <http://www.mlit.go.jp>

도야마시 <http://www.city.toyama.toyama.jp>

도야마시역 합병협의회 <http://www.think-t.gr.jp/ryoukin/04toyamashi2.html>

서평

| 『확장도시 인천』

박해천 기획, 마티, 2016

한수경



『확장도시 인천』

(박해천 기획, 마티, 2016)

한수경*

수도권의 관문도시이자 항구와 공항의 배후도시로서 인천의 발전경과를 설명하는 말로 ‘확장도시’만큼 절묘한 수식어는 없을 것이다. 태생적으로 서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리적 위상 덕에, 인천은 20세기 후반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의 중심에 서서 도시 공간의 수평적(행정 통합, 매립), 수직적 확장(고층 아파트 건설)을 거듭해왔다. 물리적으로 늘어난 공간과 함께 인천의 인구는 끊임없이 증가하여 2016년 10월, 300만 명을 돌파했다. 적어도 인천에서만은 인구감소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 들린다.

『확장도시 인천』은 이러한 인천의 변화상에 주목한다. 이 책은 다양한 분야의 필진들과 리서치 팀이 진행한 ‘도시 문화 리서치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20세기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팽창해온 인천의 내외부를 조망하면서 산업화와 개발의 흐름에 따라 신시가지가 터전으로 삼아 등장한 중산층 문화의 다양한 형태들을 분석(p.38)”하고 있다. 많은 도시 연구들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못한 채 사장(死藏)되고 마는 현실 속에서, 연구 결과의 대중화를 시도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폭넓은 문헌 및 통계 자료,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인천의 변화상을 탄탄하게 기술하면서도 다양한 시각 자료들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쉽고 흥미롭게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강점이다.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강사

인천은 다차원적인 확장도시의 면모를 보여준다. 여러 가지 특성들이 혼재되어 정체성이 모호한 인천은 도시의 이질적인 모습들을 조각조각 이 어붙인 패치워크 도시(patchwork city)의 형태로 다가온다. 따라서 인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여러 각도, 여러 스케일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다차원적 렌즈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 연유로 이 책의 필자들은 도시계획 연구자, 문화 연구자, 부동산 연구자, 건축가, 디자이너, 예술가, 데이터 분석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각기 다른 렌즈를 통해 인천을 들여다보고 각자의 방식으로 ‘인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책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 중 하나는 치밀한 문헌조사와 방대한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 거시적 차원의 작업들이며, 또 다른 하나는 내밀한 개인적 체험에 기반한 미시적 차원의 작업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 사이사이에 인포그래픽, 사진 자료 등 시각적 정보들이 적절히 삽입되어, 인천의 면면을 좀 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먼저,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인천의 변화상을 거시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적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현우는 「경인선: 혼잡 연대기」에서 인천-서울 간 핵심 교통수단이 되어온 경인선의 ‘혼잡’에 주목하여, 이를 주변 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도시의 공간 구조가 교통 발달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경인선을 인천의 공간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축으로 삼은 것은 참으로 적절해 보인다. 필자는 경인선뿐만 아니라 지선버스, 광역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관련 자료들도 방대하게 수집·분석하여, 경인선의 혼잡이 곧 주변 도시공간의 변화상과 그 맥을 함께 했으며, 1960~90년대 초반까지 인천의 성장이 경인선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해석한다. 일례로, 경인선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최대 혼잡도가 308%에 도달하여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쓴 바 있는데, 이때의 승객 폭주는 “경인선 주변의 토지 대부분이 도시화되고 인구가 격증한 덕분(p.61)”이다. 이처럼 과거 인천 확장의 중심에 있었던 경인선은 현재 구도

심 도시재생 논의에서도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더 심도 있는 경인선 연구가 요구된다.

김윤환과 신수현은 「확장하는 외지인의 도시 part1」에서 도시 개발 정책과 신시가지 건설을 통한 끊임없는 도시 확장 속에서 이루어진 중산층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필자들은 인천의 도시 확장이 제물포·주안·계산(1970년대 부평, 주안 국가수출공단 조성) → 구월동(1985년 시청 이전) → 부평(1985~1990년대) → 연수동(1990년대 초반) → 송도(2000년대)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부평과 연수, 송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인천의 주거 문화와 중산층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부평 일대에서 대기업에 의한 고층 대단지 아파트들이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대형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의 재산 증식을 통한 중산층 형성(p.175)”이 가능했고, 연수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재산형성뿐 아니라 문화적 자산(p.175)”을 갖춘 중산층이 나타났다. 이후 송도신도시는 “인천과는 다른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 시작(p.167)”하면서 ‘송도 사람’을 ‘인천 사람’으로부터 구분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울에서 이루어진 ‘아파트=중산층’ 형성 과정이 인천에도 이식되어왔다는 필자들의 분석 내용이 흥미롭게 다가온다.

필자들은 이어지는 「확장하는 외지인의 도시 part2」에서, 앞서 part1을 통해 파악한 확장 공간들이 어떤 사람들로 채워졌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한다. 종종 ‘외지인의 도시’로 불려온 인천은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 성장을 경험해왔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신생 인천 사람들’의 내부 이동에 의해 신도시 공간들이 점유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인천은 1970년대 수도권 최대 공업도시로 발달하면서 일자리를 찾아 몰려온 충남과 호남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팽창했으나, 한 세대가 지나 첫 번째 외지인들이 비로소 인천 사람이 되어 2000년대 이후 인천의 신도시들(영종 하늘도시, 송도국제도시, 에코메트로, 검단 마전·원당·당

하지구, 청라국제도시 등)을 채워나갔다. 국제도시를 표방하며 “새로운 도시의 동력으로 ‘외국인’이라는 새로운 외지인들을 받아들여(p.220)”한 ‘송도’를 채운 것도 결국 ‘인천 사람’이었다. 필자들은 이러한 점에서 인천이 가지고 있던 ‘외지인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앞의 세 연구들이 도시 공간 구조의 전반적인 확장 역사에 주목했다면, 박해천은 「인천, 노동자들의 도시 1968~1986」에서 초기 인천 확장을 견인한 산업화와 노동자 문화에 초점을 맞춘다. 필자는 산업화에 따른 인구 이동과 노동자 문화 형성에 대한 내용을 다양한 문헌 속에 등장하는 관련자 증언들을 인용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고 가감 없이 전달한다. 이러한 증언 모음식의 서술을 따라가다 보면, 1970년대 동일방직과 같은 경공업에 종사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 1985년 부평공단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조직적 파업 등으로 인천은 한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발상지로 점지(p.251)” 되었으나, 오늘날 그러한 흔적은 거의 퇴색되어 버렸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박해천이 초기 인천 확장의 역사에 주목했다면, Society of Architecture는 「송도신도시: New City for None Place on the New Place」를 통해, 가장 최근에 인천 확장을 견인하고 있는 송도의 모습을 조명한다. 과거 수도권 공업을 견인하면서 노동자의 도시로 성장했으나, 변화되는 흐름 속에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송도를 주축으로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인천의 변화상이 대조적으로 다가온다. 필자들은 국제도시로서의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던 송도가 결국 지역화 전략을 통해 ‘K-신도시화’를 택한 과정을 추적한다. 송도는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보장받는다든가 명분으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미국계 개발회사와 설계사무소를 내세웠으며, 전 세계 유명 도시들의 특징들을 반영한 ‘참조도시(reference city)’ 전략을 적극적으로 취하였다. 이에 따라 송도는 “배치뿐 아니라, 도시의 스카

이라인과 주요 건축의 상징적 형태, 공간감에 대한 감각도 선행 도시들에서 빌려(p.378)”오게 된다. 하지만 송도는 국제자본 유치가 상당 부분 실패 혹은 지연됨에 따라 한국 신도시의 성공문법인 ‘교육’과 ‘쇼핑(유통)’에의 집중 전략을 취하게 되었고, 결국 ‘국제도시가 아닌 인천의 또 다른 신도시’로 전략하게 되었음을 필자들은 지적한다.

한편 인천이 변모하는 과정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다 생생하게 그려낸 작업들의 경우, 대부분 외지인이었던 부모 밑에서 나고 자란 ‘인천 토박이’들의 인천 살이 경험담을 기반으로 한다. 이들은 인천 생활의 기억 속에서 편안하지만 만족할 수 없는 곳으로서 인천에 대한 모순된 감정을 드러내며, 인천을 탈출하고 싶은 욕망과 서울이나 더 큰 도시에 대한 동경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백한다.

안은별은 「어떤 ‘인천 살이’의 즐거움, 1997~2015: 맛집, 백화점, CGV, ‘센팍」에서 도시 중심축 이동에 따른 일상 소비문화의 변화를 추적한다. 흥미로운 점은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학술 논문, 단행본, 신문기사, 웹사이트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이러한 변화 과정을 마치 소설처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필자는 연수동의 아파트단지에 거주해온 A와 그의 부모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중산층 가정의 일상 소비문화를 묘사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신도시란 아직은 대규모 주거지 이상의 기능을 하지 못했고, 인천이란 도시는 가뜩이나 ‘뭐가 없는’ 상태(p.294)”로서 그러진다. 하지만 1997년 가장 일반적인 여가활동이 ‘외식’이었던 인천에서 송도는 “‘기분 내려’ 찾아갈 수 있는 외식지(p.297)”로 부상했으며, 백화점, 대형 할인점들이 본격 진출하기 시작한 구월동에서는 “하나의 건물 안에서 소비로 연쇄되는 방식의 여가 활동(p.301)”을 최초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구월동은 2000년 들어 멀티플렉스 형태의 CGV를 갖춘 인

천의 가장 핵심적인 상업지구로 성장하면서 “인천의 강남”이라는 수식어(p.304)가 붙게 된다. 하지만 가장 최근 인천의 핫(hot)한 소비문화를 선도하는 곳은 단연 송도다. 필자는 송도로 들어가는 경험이 “인천 ‘밖으로’ 나가는 감각을 동반(p.311)”하며, ‘센팍(센트럴 파크)’ 등 ‘외국’을 닮은 도시 경관이 색다른 일상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해석한다.

한편 안인용은 「사라진 아이들」에서, 1980년대 초~1990년대 중반까지 중산층 아파트 키드(kid)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경험했던 거주지 이동과 교육 체험을 생애사적 관점에서 풀어낸다. 필자는 유치원, 초·중학교를 거치는 동안 인천 내에서 소위 좋다는 학군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했으며, 심지어 부족한 외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 압구정동을 드나들기도 했다고 회상한다. 결국 필자는 서울에 있는 외국어고 진학을 계기로 인천을 떠나면서 ‘사라진 아이들’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10년 후 다시 찾은 인천의 모습에서 고향이라는 친숙함보다는 낯설음과 답답함을 느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서해연은 「어쩌면 서울, 아마도 인천」에서, 서울의 위성도시 성격을 가진 인천에 살면서 몸소 느낀 체험담을 K라는 화자를 내세워 담담하게 풀어낸다. K에게 인천에서의 모자란 것들에 대한 갈망은 늘 서울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졌다. K는 갑갑한 삼화고속에 몸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반사적으로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인천 버스에서 흘러나오는 서울의 ‘57분 교통 정보’를 들으면서 인천이 ‘서울 속 인천’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필자에게 인천은 ‘지분이 없는 도시’, ‘광장이 없는 도시’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인천은 진입 장벽이 낮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필자는 결국 “인천에서 배웠지만 인천을 배우지는 않았(p.350)”으며 “인천은 그저 떠나야 할 곳(p.350)”으로만 여겼음을 깨닫고, 인천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박다함과 정세현의 「1999, 인천-홍대앞 왕복 4시간」은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인천에 거주하면서 서울을 수시로 드나들며 문화·예술적 자양분을 쌓아온 예술가들의 이야기다. 특히 박다함은 10대 시절부터 신문, PC통신, 케이블 티비 등을 통해 서울 문화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홍대를 제 집 드나들 듯 드나든다. 예술영화 전용관, 인디음악 공연장, 문화 미술 공간, 인디 영화관은 당시 인천에서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제 30대가 된 인천 토박이들은 인천에 살면서도 인천이 아닌 다른 곳, 특히 서울의 문화적 기회에 목말라하며, 활동반경을 인천 밖으로 넓혀 왔다. 이들의 문화적 인프라에 대한 갈증 표출은 질적 확장을 담보하지 못한 채 양적 확장을 추구해온 인천이 끊임없이 서울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적 한계를 드러낸다. 하지만 서해연의 주장처럼, 이제는 인천을 ‘집’으로 삼는 이들이 인천을 그저 떠나야 할 곳으로 여기기보다는 인천에 대해 스스로 배우는 자세를 통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시점으로 보인다.

앞서의 방대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역사적인 기술들과 개인적 체험에 기반 한 내밀한 이야기들은 Optical Race의 통계자료를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이강혁과 신경섭의 사진 작업들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의 작업은 앞의 글들을 효율적으로 보완하면서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구성을 잠시 끊어주는 유희유 역할을 하고 있다.

Optical Race는 「1000, 1000000, 1000000000000 Thousand, Million, Trillion」을 통해, 서울·인천·수도권 신도시의 인구 변화와 통근자 추이, 전국 지역내총생산의 연도별 차이 등을 가시화한다. 다른 필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펼쳐보면, 인포그래픽의 의미가 더욱 효과적으로 다가온다. 신경섭은 「Incheon Project 2015」에서 기존의 도시조직과 아파트 단

지가 이질적으로 섞여 들어가 있는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Incheon Project 2016」에서는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보다 아파트 단지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송도의 경관을 보여 준다. 한편 이강혁의 「부평공단-청천동」은 부평공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서민주택가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 허름하고 좁은 골목길, 한때는 여러 가구가 살았을 낡은 단독주택들, 이제는 거의 지워져 희미해진 오래된 간판들의 모습과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방치된 빈집의 모습도 관찰된다.

이상의 작업들은 일정한 형식에 맞춰 순차적으로 배열되기보다는 상당히 자유롭게 엮여 있으면서, 서로의 빈 이야기들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인천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렇기에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서야 각 필자들의 주요 논점들이 연결되고 꿰어지면서 인천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윤곽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책은 손 가는 대로 뒤적거리며 구미가 당기는 내용부터 읽어도 무방하다. 이왕이면 책의 앞뒤를 종횡무진 하면서 각 장의 내용들을 점차적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자유로운 읽기를 권한다.

인천의 확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도시는 대규모 개발에서 소규모 개발, 단계별 개발, 사용자 위주의 개발로 변모해 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인천은 양적 확장을 적절히 관리해 나가면서 어떻게 질적 확장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첫 번째 외지인들의 정착 이후 한 세대가 지나고 그들의 자녀들이 인천 토박이로 성장한 지금, 이들이 인천의 질적 확장의 주역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주목된다. 앞으로 이들에 의해 도시의 변화 순간을 기록하고 담아두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소 거친 편집으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과 자료들을 동원하여 우리가 잘 몰랐던 혹은 무시했던 인천이 가진 독특한 면모에 대하여 풍부한 정보들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이 책

은 충분히 유용하다. 이 책을 계기로, 앞으로 개별 도시에 대한 실증적이고 대중적인 연구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IDI 도시연구』 규정

- | 『IDI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 | 『IDI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 | 『IDI 도시연구』 논문심사 규정
- | 『IDI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

『IDI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2007년 3월 12일 제정
2008년 4월 25일 개정
2008년 8월 20일 개정
2011년 5월 6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2017년 2월 16일 개정

I. 『IDI 도시연구』의 성격과 구성

1.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IDI 도시연구』라 칭한다.
2. 『IDI 도시연구』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로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은 창의적인 연구결과 및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동향·전망을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을 말한다.
3.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IDI 도시연구』의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II. 논문투고 및 게재절차

1. 원고는 상시접수하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본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2. 논문 투고지는 심사용 논문출력본 4부(그림, 표, 사진 등이 포함된 원고)와 논문이 수록된 CD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메일(E-mail)을 통해 원고를 제출한 투고지는 원고출력본과 원고가 수록된 CD를 제

출하지 않아도 된다.

3. 투고자는 본지의 투고신청서에 논문제목, 목차, 주저자의 이름, 소속 및 직급/직위,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와 함께, 원고의 주요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 뒤에는 참고문헌과 국문초록 및 영문 초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4.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이름, 교신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한다.
5. 접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IDI 도시연구』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인천발전연구원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Ⅲ. 논문의 기본요건

1. 투고자는 『IDI 도시연구』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파일, 논문투고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투고신청서에는 논문제목(한글·영문), 필자명(한글·영문), 소속기관과 직위, 주소(주택 및 직장), 전화 및 팩스번호(E-메일 주소 포함),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
2.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출간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원고는 연구원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논문의 내용은 제목(한글), 저자명(한글), 차례,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주제어, 영문초록(Abstract), 영문주제어(Keywords)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4. 주제어는 5개 이내로 한정한다.

5. 논문의 본문 원고분량은 글, 그림 및 표, 사진을 포함해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로 한정한다. (단, B5용지1매는 (81Columns × 27Lines 기준) 원고지 4매에 해당)
6. 도시리포트 및 서평의 원고분량은 글, 그림 및 표, 사진을 포함해 200자 원고지 70매 이내로 한정한다.
7. 원고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초록은 B5용지 15행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며, 논문명, 저자명, 초록 및 주제어는 모두 국문과 외국어(영어)로 표기해야 한다.
9. 모든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의 편집체제를 따라 작성해야 한다.

편집 용지	용지 B5, 단면, 좁게 여백 : 상/하 15, 좌/우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문단 모양	본문	• 여백 : 좌/우 0, 상/하 0 • 줄간격 : 160 • 들여쓰기 : 2 • 양쪽 혼합, 낱말간격 0
	직접인용	• 여백 : 좌/우 20, 상/하 0 • 줄간격 : 160 • 들여쓰기 : 2 • 양쪽 혼합, 낱말간격 0
글자 모양	큰제목	• 글꼴 : 신명조 (또는 휴먼명조), 진하게 • 크기 : 18 point • 장평 : 100, 자간 : 0
	중간제목	• 글꼴 : 신명조 (또는 휴먼명조), 진하게 • 크기 : 14.5 point • 장평 : 100, 자간 : 0
	본문	• 글꼴 : 신명조 (또는 휴먼명조) • 크기 : 10 point • 장평 : 100, 자간 : 0
	직접인용	• 글꼴 : 신명조 (또는 휴먼명조) • 크기 : 9 point • 장평 : 100, 자간 : 0
	기타	• 각주크기 : 9 point • 이 름 : 14 point • 목차크기 : 10 point

IV. 논문 구성요소별 작성요령

1. 저자표기 및 저자약력작성

- (1) 국문제목 밑에 국문저자명을 기재한다.
- (2) 저자가 1인일 경우, 국문저자명의 오른쪽 위에 *를 입력하고, 각주에 소속 및 직급/직위를 표기한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주저자가 맨 앞에 오도록 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구분한다(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 기입 가능)
- (3) 저자의 약력에는 주요 저자의 현재소속기관과 부서(또는 학과), 직위(또는 직급), 최근 주요연구분야(관심분야) 및 대표논저를 순서대로 작성한다.

2. 내용목차의 번호는 I. 1. 1) (1) ①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3. 표와 그림에는〈표1〉, 〈그림1〉 등과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표 제목은 해당표의 상단 중앙에 맞추기로, 그림제목은 해당그림 하단에 중앙 맞추기로 표기해야 한다.

4. 본문 주는 내용 주와 참고문헌의 주로 구분된다.

- (1) 내용 주(content notes)는 본문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체에 걸쳐서 일련번호를 매기고 본문 하단에 각주로 처리해야 한다.
- (2) 참고문헌 주(references)는 인용 또는 참고한 자료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본문 중에는 괄호 안에 저자의 이름, 출간연도, 인용한 쪽을 제시하며 그 자료에 대한 완전한 문헌정보는 논문의 말미에 첨부해야 한다.

5. 참고문헌의 작성양식

- (1)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으로 구분하며, 저자의 성에 따라 한글 및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해야 한다.

- (2) 참고문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저자(출판연도), 제목, 권, 호, 쪽, 출판장소와 출판사명 등이다.

- (3) 서명은 한글 및 동양문헌은 『』로 묶고, 서양문헌은 이탤릭체(기울림체)로 표기한다. 논문(학위논문, 기사포함)은 출판연도 다음에 해당 논문 명을 「」로 묶어 표기해야 한다.

- (4) 참고문헌 속의 모든 외국 저널은 약어대신 풀어서 써야 한다.

6. 초록 작성법

- (1) 국문초록의 경우 국문제목-국문저자명-국문요약본-국문주제어순으로 작성한다.
- (2) 영문초록의 경우 영문제목-영문저자명(성, 이름)-영문요약본-영문주제어순으로 작성한다.

V. 기타사항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때는 풀어쓰고 그 다음 번부터는 약어를 사용하여도 된다.
2. 필자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을 지칭할 때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필자의 이름을 적어 밝혀야 한다.
3. 국문원고의 경우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와 외국어는 괄호 안에 표기해야 한다.

VI. 발간

1. 원고교정

- (1) 편집위원회는 오탈자, 비문(非文), 논리 전개의 오류 등을 교정하거나,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원고의 게재순서

- (1) 원고의 게재순서는, 기획논단의 경우 계획된 목차에 준하여 게재

하고, 일반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 확정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료 지급

- (1) 채택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단, 원고료는 실제 게재된 후에 지급하고, 게재 당시의 연구원 일반 예산-학술지 발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행 횟수와 시기

- (1) 본지는 1년에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지 편집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2)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정한다.

5. 저작권

- (1) 『IDI 도시연구』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6. 발행 부수

- (1) 본지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연구원에서 정한다.

『IDI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2007년 7월 15일 제정
2010년 5월 20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2017년 2월 16일 개정

1.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연구원 내·외 인사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학술간사와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2. 임무

-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편집, 발간 등 『IDI 도시연구』의 발행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2) 또한 『IDI 도시연구』의 편집 및 발간 규정, 편집위원회 회칙 등 『IDI 도시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제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3.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선출기준

- (1) 편집위원장은 인천발전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의 구성은 특정 지역 및 전공분야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4. 편집위원장 및 위원, 간사의 역할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모집, 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발간 등 『IDI 도시연구』의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자 추천 및 의뢰,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중재,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원고수정의뢰 및 원고 수정보완 여부 확인, 최종게재논문의 선정, 게재순서의 결정, 본지의 발행부수의 결정, 원고 게재료 및 심사료 수준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 (3)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 (4) 학술간사는 기획논단의 구성, 필진 추천 및 섭외, 학술지의 대외홍보 업무를 담당하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투고원고 접수, 편집위원장이 최종 승인한 심사결과의 통보, 『IDI 도시연구』의 출간·배포, 원고 게재료 및 심사료 지급서류 작성 등 『IDI 도시연구』발간에 따른 제반 회계 및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5.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1)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편집위원을 추천받은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편집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단 임기는 잔여임기에 한해 편집위원으로 활동한다.
- (3) 위원장의 부재가 생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며, 원장의 허락을 통해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단 임기는 잔여임기에 한해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한다.

6. 편집위원회 회의

- (1) 편집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의 결석시에는 출석위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진행한다.
- (3)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위임 포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4) 출석하지 못한 위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인원에는 산입하되, 의결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5) 해외 거주 편집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우므로 개의를 위한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6)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7. 회의비 지급

- (1) 편집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인천발전연구원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IDI 도시연구』 논문심사 규정

2008년 9월 10일 제정
 2011년 5월 6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2017년 2월 16일 개정

1. 심사대상

- (1) 『IDI 도시연구』에 게재하려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2) 도시설계 및 서평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할 수 있다.

2. 심사절차

- (1) 투고된 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 (2) 논문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총평과 함께 심사결과(A, B, C, D)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요구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결과 통보 및 수정요구서’를 즉시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4) 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 수정요구가 수반되는 경우, 투고자는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수정사항과 수정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사항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5) 심사위원 평가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되었을 경우, 필자가 수정한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 (6) 재심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심사절차 과정에 의해 심사를 진행한다.
- (7) 심사결과에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장은 제출된 이의 내용 검토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출석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편집위원 전원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다수결에 따라 재심여부를 의결한다.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 심사결과를 적용한다.

3. 심사위원 선정

- (1) 편집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공자 중에서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인천발전연구원 직원이 투고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발전연구원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3인을 위촉하며, 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각각에 대하여 익명으로 처리한다.
- (5)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경우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 (6) 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4. 논문심사 기준

- (1)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

도록 하되 본지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맞춰 다음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본지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방법의 준수 여부
- 주제의 독창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연구자료의 신뢰성
- 논문의 학술적 또는 정책적 기여도
-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타도시, 국가의 연구
- 논문 및 체제의 일관성
- 표·그림·사진·지도·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 선행연구의 검토
- 국문·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2)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의 익명성

-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6. 논문심사 판정 기준

(1)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아래와 같다.

① 게재가(평점평균 3.3점 이상)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A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B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B로 평가한 경우

② 수정 후 게재(평점평균 3.0점)

-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A, B,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B로 평가한 경우

③ 수정 후 재심사(평점의 평균 2.0점 이상 2.7점 이하)

- 심사위원 3인 중 2명이 B로 평가하고, 1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A, B,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A, C,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B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B로 평가하고, 2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B, C,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④ 게재불가(평점의 평균 1.7점 이하)

-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C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B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C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D로 평가한 경우

※ 논문심사 판정 기준표

유형 번호	평가 결과			총점	평균	판정	비고
1	A	A	A	12	4.0	게재가	게재확정
2	A	A	B	11	3.7		
3	A	A	C	10	3.3		
4	A	B	B	10	3.3		
5	A	A	D	9	3.0	수정 후 게재	필자가 논문을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고 게재
6	A	B	C	9	3.0		
7	B	B	B	9	3.0		
8	B	B	C	8	2.7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필자는 논문을 수정하고, 수정 논문과 수정 사항 개요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3인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평가결과 평점의 평균 3.0점 이상이면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후 게재
9	A	B	D	8	2.7		
10	A	C	C	8	2.7		
11	A	C	D	7	2.3		
12	B	B	D	7	2.3		
13	B	C	C	7	2.3		
14	B	C	D	6	2.0		
15	C	C	C	6	2.0		
16	A	D	D	6	2.0		
17	C	C	D	5	1.7	게재 불가	
18	B	D	D	5	1.7		
19	C	D	D	4	1.3		
20	D	D	D	3	1.0		

7. 소요기간

- (1) 논문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10일 내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투고논문이 『IDI 도시연구』의 성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2주 내로 기간을 연장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2) 1차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후로부터 2주 내로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 하에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거절, 심사 지연 등의 이유로

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3) 재심사: 심사위원은 재심사를 의뢰받은 후로부터 10일 내에 심사 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 하에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연락 두절, 사망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4) 논문 수정보완: 1차 심사결과 ‘게재불가’를 제외한 수정보완 요구 사항이 있는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보완 의뢰를 받은 후로부터 10일 내에 수정보완 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정보완 기한을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5) 논문 수정확인: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다시 제출한 논문이 수정보완 요구대로 수정되었는지 확인한다. 1차의 경우 10일 내에, 2차 이후에는 7일 내에 검토의견서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토의견서 작성이 지체될 경우, 투고자에게 일정을 통지하고 연장할 수 있다.

『IDI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

2009년 4월 15일 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제1장 연구윤리규정 제정 배경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가 능동적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술지 『IDI 도시연구』를 발간한다. 『IDI 도시연구』의 발간은 도시정책 관련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성과를 소개함으로써 지역 아카데미즘의 기초를 마련하고 인천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또한 『IDI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의 제정은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하여 『IDI 도시연구』의 편집위원은 물론 연구논문의 저자와 평가자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수준을 명백히 밝혀줌으로써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함이다.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으로 지켜져 오고 있는 규정들을 정리한 것이지만, 모든 관련자에게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편집에 대하여 연구원이 추구하는 윤리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2장 연구논문 윤리규정

제1조(사회적 책임)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 활동을 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의 복원, 창출, 보호 관리 등의 연구활동이 사회 공익적 책임을 수

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 연구윤리)

연구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활동 수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3조(보편성의 원칙)

연구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을 수 없으며,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조(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제5조(법령의 준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명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조(연구대상의 존중)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자연환경의 복원, 창출, 보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7조(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

연구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8조(저자 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 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

제9조(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10조(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연구 및 지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연구의 독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자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

제11조(연구환경 조성)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 자유, 공정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적극 참여한다.

제12조(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 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윤리위원회

제13조(구성과 의결)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위원장 1인을 두며, 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 위반보고가 있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 보고자, 제보자에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에게 그에 대한 진술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제보나 보고가 없는 경우에도 윤리규칙 위반의 의혹이 있는 경우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협조)

윤리위원회로부터 윤리규칙 위반으로 조사를 요청받은 대상자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해 위반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16조(소명)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 위반으로 보고된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제척)

윤리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피조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자격이 일시 상실된다.

제18조(제재조치)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은 윤리규칙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행할 수 있다.

- (1) 투고 논문 및 그 저자에 대해서는 그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게재 이후 위반판정이 밝혀질 경우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한다.
-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 (3) 제재조치의 결과에 대하여는 대상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보호)

윤리위원회 위원 기타 윤리규칙 위반 여부의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는 조사의 대상이 된 의혹 내용이나 피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저자 윤리규정

제20조(표절, 위조, 변조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연구 업적의 명기)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 논문의 순서는 저자의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하며 단순히 특정 직책 또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22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

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제23조(재투고)

『IDI 도시연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다만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연구의 방법’, ‘자료의 해석’, ‘논리 전개방식’ 등 상당부분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투고를 인정한다.

제24조(인용 및 참고 표시)

-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주석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냐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25조(기본자세)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논문 투고자의 인격과 양심 및 전문성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6조(형평의 원칙)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 투고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출신 등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소성을 배제하여 동등한 시각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의뢰)

심사의뢰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투고자와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적대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8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투고자의 인적사항 및 심사위원 등에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논문심사자 윤리규정

제29조(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0조(저자의 독립성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되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31조(중복심사)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또는 중복심사 중인 경우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

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2조(심사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심사자는 심사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전에 심사논문의 내용을 타 연구에 인용해서는 안 된다.

- 부 칙 -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IDI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창수(인천발전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센터장)

편집위원 권전오(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김문주(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김종형(인천발전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실장)
노시훈(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리순청(李順成, 중국 산둥사범대학교 도시관리학과 교수)
문진영(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제헌(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서봉만(인천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서영표(제주국립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쑤춘르(孫春日, 중국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 원장)
심진범(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왕기(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조 우(상지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진종현(공주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차철욱(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최영화(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학술간사 최영화(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편집간사 김혜영(인천발전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초빙연구원)

통권 제11호 **IDI 도시연구**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Urban Research

발 행 2017년 6월 30일

발 행 인 남기명

발 행 처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775 팩스 032)260-2669

홈페이지 www.idi.re.kr

편집·인쇄 도서출판 다인아트

ISSN 2508-4666
